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사회학박사 학위논문

한국 자유주의 담론에 대한 비판적 연구, 1945~1970

『사상계』를 중심으로

2021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최 민 석

한국 자유주의 담론에 대한 비판적 연구, 1945~1970

『사상계』를 중심으로

지도교수 정 근 식

이 논문을 사회학박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0년 11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최 민 석

최민석의 박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21년 2월

위 원 장 박 명 규 (인)

부위원장 장 경 섭 (인)

위 원 박 태 균 (인)

위 원 신 진 욱 (인)

위 원 정 근 식 (인)

국문초록

이 연구는 한국 자유주의 담론의 특징으로 권위주의 정권에 항거해 정치적 자유를 요구하는 동시에 국가 개입에 의한 균분을 주장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러한 특성은 국가를 필요악으로 간주하는 고전적 자유주의의 입장에서는 나올 수 없다. 서구에서 자유주의는 자유의 적을 새롭게 규정하면서 혁신되었다. 자유의 주적은 처음에는 국가였지만(고전적 자유주의), 20세기 초반에는 빈곤이었고(사회적 자유주의), 냉전에 접어들면서 공산주의로 변화했다(냉전 자유주의). 해방 이후 한국에서는 이 세 가지가 모두 강력한 자유의 적이었다. 그러나 빈곤으로부터의 자유를 위해 국가의 개입이 필요했고, 공산주의로부터 자유를 수호할 구심도 국가일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지식인들은 국가로부터의 자유를 주장하기보다 빈곤 탈피와 반공 투쟁을 수행할 수 있는 공정하며 강력한 국가를 요청하는 경향을 보였다. 강한 국가와 개인의 자유, 생존권을 조화시킨다는 구상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이 시기 자유주의 담론에서 공통된 것이었다.

한국에서 자유주의는 서구적 근대화의 원리로 수용되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에 들어서면서 자유주의는 현실적인 의미를 갖기 어려웠다. 일제강점기에 자유주의는 지식인들의 교양으로만 존재할 수 있었다. 특기할만한 점은 일제강점기에 지식인들이 20세기 초반 영국에서 나타난 사회적 자유주의를 습득했다는 것이다.

영국의 사회적 자유주의는 고전적 자유주의가 한계를 보이면서 태동했다. 자유주의가 약속한 정치적 권리들이 보편화된 반면, 자유방임 자본주의가 불평등을 확대하면서 자유주의 정치세력의 입지가 약화되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개인의 기회 균등을 목표로 개인과 공동체, 자유와 평등의 조화를 도모하는 사상으로서 사회적 자유주의가 나타났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국가에 의한 재분배였다.

일제강점기에 지식으로서 수용되었던 사회적 자유주의는 해방 이후에 현실적인 국가 구상으로서 입지를 가질 수 있었다. 특히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모두에 거부감을 가졌던 지식인들에게 사회적 자유주의는 절충적 이념으로 인식되었다. 특히 중간파 지식인들을 좌우, 남북으로 양극화된 정치지형을

종합할 수 있는 사상으로서 사회적 자유주의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소개했다.

해방 정국의 중간파가 견지했던 사회적 자유주의는 전쟁 후 『사상계』에서도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기에 앞서 개인과 공동체의 상호의존성이 우선시되었고, 방향성있는 자유만이 긍정되었다. '진리'와 합치하는 자유만이 가치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진리를 이해하고 있는 지식인의 역할이 중요했다. 『사상』과 『사상계』의 출발점 자체가 지식인에 의한 계몽 기획의 일환이기도 했다.

1950년대 『사상계』의 '자유' 담론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경제'였다. 『사상계』에는 사회적 자유주의에 근거해 경제적 자유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되었다. 반면 경제적 효율성과 국가 권력의 축소를 위해 경제적 자유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나타나기도 했다. 1950년대 후반 근대화를 위한 경제체제를 모색하면서 이들의 주장은 충돌하기도 하고 수렴되기도 했다. 『사상계』에서 개진된 경제체제론은 대체로 자유경제 체제의 확립을 위해 일정 기간 국가 계획이 필요하다는 방향으로 종합되는 양상을 보였다. 빈곤 탈피를 위한 국가 개입은 복지국가론에 의해 정당화되기도 했다. 물론 후진국의 입장에서 복지국가의 역할은 재분배보다는 개발에 있었다.

그러나 1960년대 총량적 경제성장이 경제적 종속과 불평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개되면서 국가의 도덕적 책임을 요청하는 담론이 확산되었다.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담론은 사회과학적 논리보다는 휴머니즘적 윤리에 바탕을 두고 있었다. 장준하를 비롯한 『사상계』 지식인들은 윤리적 견지에서 국가 개입을 요구했다.

서구에서 자유주의는 애초에 국가에 대한 저항 이념으로서 탄생한 것이었다. 그러나 한국에서 자유주의 담론은 국가의 권한 축소를 요구하기보다 권력의 도덕적 사용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한국의 자유주의 담론이 고전적 자유주의에 충실하기보다 사회적 자유주의의 영향을 받은 데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지식인들은 국가 권력의 범위와 강도를 문제로 여기기보다 그것을 운영하는 통치자의 도덕적 자질을 중시했다. 박정희 정부에 항거하면서, 국가의 경제적 개입을 긍정하는 입장은 이러한 맥락에서 나올 수 있었다.

1963년 이래 『사상계』의 '자유' 담론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개념은

‘민주’였다. 『사상계』는 1963년부터 1970년 5월 “오적” 필화로 폐간될 때까지 자유민주주의의 복원을 위한 정권교체에 몰두했다. 『사상계』는 자유민주주의를 준거로 박정희 정부를 비판하고, 정권교체를 위한 동원을 촉구했다. 이 과정에서 자유민주주의는 정권교체와 동일시되기도 했다. 물론 자유민주주의 개념이 처음부터 정권교체와 연관되어 있지는 않았다. 자유민주주의는 논자마다 의미를 달리하는 모호한 개념이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는 정치적 준거로서의 지위를 얻으면서 권위주의 정부에 대한 반대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될 수 있었다.

1963년부터 본격화된 『사상계』의 전환은 군사정부에 대한 장준하의 입장 선회와 그에 대한 박정희 정부의 공식적, 비공식적 탄압이 맞물리면서 증폭된 결과였다. 박정희 정부에 대한 입장차로 지식인들이 분화되면서 『사상계』의 담론은 지사적 지식인을 표방한 인사들에 의해 주도되었다. 이들은 국가로부터의 자유를 요구하기보다 정권교체를 통해 양심적 통치자가 국가를 장악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회복의 관건이라고 보았다.

박정희 정부를 악으로 규정하고 전면적인 투쟁에 돌입하면서 정권교체를 위한 동원과 참여는 종교적 정의를 실천하는 일로 의미 부여되었다. 반면 현대 국가가 공동체의 통합과 생활의 안정을 위해 방대한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에는 이의가 없었다. 문제는 국가를 운영하는 통치자의 양심이었다. 지식인들은 통치자의 자질이 높고 양심이 올바르다면 강한 국가가 오히려 더 많은 자유를 가져올 수 있다고 믿었다. 통치자의 성격에 따라 국가의 성격도 변화한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국가 권력의 강도를 문제 삼기보다는 정권교체에 모든 명운을 걸었다. 강한 국가에 대한 열망과 정권교체에 대한 절박감이 공존했던 것이다.

1970년대 이전까지 한국 자유주의 담론의 또 다른 특징으로 언급할 수 있는 것은 엘리트주의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지식인들은 대중을 불신하면서 계몽과 동원의 대상으로만 간주하는 성향을 지속적으로 보였다. 자유주의를 지지할 부르주아 교양 시민의 부재를 지사적 지식인의 리더십으로 대체하면서, 대중의 역할은 그에 호응하는 것으로 한정했다. 이러한 엘리트주의는 집단적 목표에 자유주의가 종속될 때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사상계』는 지식인 리더십에 순종하는 주체를 형성하고자 했다. 지식

인이 지시한 공공선을 지향하는 행위만이 '참된 자유'로 규정되었다. 『사상계』가 강조한 정신적 개조는 공공선에 대한 각성을 의미했다. 물론 공공선은 상황 맥락에 따라 변화했다. 레지스탕스, 후진성 극복을 위한 근로의욕, 정권교체 등 『사상계』는 국면마다 다른 초점을 가진 공공선을 제시했고, 대중들의 각성을 촉구했다. 『사상계』 지식인들은 엘리트주의적 관점에서 유순한 대중을 요구했다. 그러나 현실의 대중은 그러하지 않았다.

『사상계』는 정권교체의 당위성을 설파하는 데 주력했다. 그러나 『사상계』 지식인들의 자유주의는 지식인과 학생을 넘어서는 동원 논리로 확장되지 못했다. 이는 대중의 구체적 삶의 모습에 관심을 기울이기보다 자유의 방향성을 논하며 추상적인 계몽주의로 일관한 데 기인했다. 이러한 한계는 비판적 지식인들이 민중과의 합일을 시도하는 1970년대부터 조금씩 극복되어 갈 것이었다.

주요어 : 『사상계』, 사회적 자유주의, 경제적 자유, 자유민주주의, 이승만, 박정희, 냉전 자유주의, 개발주의

학 번 : 2011-30054

목 차

제1장 서 론 ····· 1

제1절 문제제기 ····· 1

제2절 선행연구 검토 ····· 6

1. 한국 자유주의 연구 ····· 6

2. 『사상계』 연구 ····· 10

제3절 이론적 자원 ····· 17

1. 담론의 지식사회학 ····· 17

2. 개념사와 관념사 ····· 21

제4절 연구 방법 ····· 24

1. 내용분석과 군집분석 ····· 24

2. 담론분석 ····· 26

제5절 연구 자료 소개 및 『사상계』 자료 검토 ····· 28

1. 자료 소개 ····· 28

2. 『사상계』내용분석 및 시기구분 ····· 30

제6절 분석틀과 논문의 구성 ····· 43

1. 분석틀 ····· 43

2. 논문의 구성 ····· 45

제2장 20세기 전반기 자유주의의 유입과 전개 ····· 47

제1절 20세기 초반 자유주의의 혁신: 사회적 자유주의 ····· 47

1. 자유와 자유주의: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 ····· 48

2. 영국의 사회적 자유주의 ····· 51

제2절 일제강점기의 자유주의 담론 ····· 58

1. 고전적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의 비판 ····· 59

2. 사회적 자유주의의 수용 ····· 61

제3절 해방 정국의 자유주의 담론 ····· 64

1. 냉전 자유주의 ····· 65

2. 사회적 자유주의: 『신천지』의 중간파 ····· 68

제3장 『사상계』의 경제적 자유론:
경제체제론에서 도덕적 책임론으로 ····· 75
제1절 1950년대 경제적 자유를 둘러싼 입장들 ····· 75
1. 휴머니즘적 자유론: 도덕적 평등주의 ····· 77
2. 사회민주주의: 자유경제론 비판 ····· 84
3. 민주당 신파의 자유경제론 ····· 89
4. 질서자유주의: 자유경제를 위한 국가 개입 ····· 96
제2절 경제계획론으로의 수렴 ····· 99
1. 4월혁명에 대한 인식: 후진성 극복의 계기 ····· 100
2. 4월혁명 이후의 경제체제론 ····· 106
3. 5·16쿠데타 이후의 경제계획론 ····· 112
4. 복지국가론의 개발주의적 변용 ····· 117
제3절 경제적 자유의 새로운 쟁점들 ····· 123
1. 경제 담론의 부차화 ····· 124
2. 한일협정과 자립경제론 ····· 126
3. 복지국가론으로부터의 탈피 ····· 128
4. 독점재벌 비판과 생존권 담론 ····· 131

제4장 『사상계』의 자유민주주의론:
전체주의 비판론에서 정권교체론으로 ····· 136
제1절 냉전 자유주의와 자유민주주의 ····· 137
1. 비판 담론으로서 냉전 자유주의 ····· 137
2. 4월혁명의 자유주의 담론 ····· 140
제2절 반공주의적 자유민주주의론 ····· 145
1. 한태연의 자유민주주의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 145
2. 박정희의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 149
제3절 혁신계의 자유민주주의 비판 ····· 154
1. 혁신계의 민주당 비판 ····· 154
2. 민족주의로 전유된 사회민주주의 ····· 156
3. 『청맥』의 반(反)자유주의적 민족주의 ····· 160

제4절 자유를 위한 동원, 동원을 위한 자유 ····· 165
1. 정치적 준거로서 자유민주주의 ····· 165
2. 자유민주주의와 정권교체론 ····· 168
3. 자유주의적 동원 담론: 4월혁명의 재현 ····· 173
4. 동원의 좌절과 대중에 대한 환멸 ····· 178

제5장 결론 ····· 182
제1절 연구 결과 요약 ····· 182
제2절 연구의 의의와 한계 ····· 185

부록: 의미연결망 분석 ····· 188

참고문헌 ····· 211

Abstract ····· 222

표 목 차

[표 1-1] 『사상계』 편집위원의 학문적 배경 변화 ····· 31
[표 1-2] 『사상계』에서 '자유' 개념과 공출현한 개념의 빈도 순위 ··· 36
[표 1-3] 『사상계』 시기별 '자유' 개념과 공출현한 개념의 빈도순위 ·· 38
[표 1-4] 『사상계』에서 '자유' 개념이 포함된 주요 복합 개념의 빈도 ·· 39
[표 1-5] 1기 군집분석 결과 ····· 40
[표 1-6] 2기 군집분석 결과 ····· 41
[표 1-7] 3기 군집분석 결과 ····· 41
[표 1-8] 분석틀: 『사상계』 자유주의 담론의 쟁점 ····· 44
[표 3-1] 1950년대 경제적 자유를 둘러싼 입장들 ····· 77
[표 부록-1] 『사상계』 1기 중심성 분석 결과 ····· 190
[표 부록-2] 『사상계』 2기 중심성 분석 결과 ····· 192
[표 부록-3] 『사상계』 3기 중심성 분석 결과 ····· 193
[표 부록-4] 대통령연설문에서 '자유' 개념과 공출현한 개념의 빈도순위 ····· 200
[표 부록-5] 대통령연설문에서 '자유' 개념이 포함된 주요 복합 개념의 빈도 ···· 201
[표 부록-6] 이승만 연설문 중심성 분석 결과 ····· 203
[표 부록-7] 박정희 연설문 중심성 분석 결과 ····· 204
[표 부록-8] 1961~67년 박정희 연설문 중심성 분석 결과 ····· 208
[표 부록-9] 1968~72년 박정희 연설문 중심성 분석 결과 ····· 209

그 림 목 차

[그림 1-1] 『사상계』 편집위원의 학문적 배경 변화 ····· 32
[그림 1-2] ‘경제’와 ‘민주’의 비중 변화 ····· 36
[그림 1-3] ‘개인’과 ‘국민’의 비중 변화 ····· 37
[그림 3-1] “복지사회로 가는 길” 속표지 ····· 121
[그림 부록-1] 『사상계』 전체의 의미연결망 시각화 ····· 196
[그림 부록-2] 『사상계』 1기의 의미연결망 시각화 ····· 197
[그림 부록-3] 『사상계』 2기의 의미연결망 시각화 ····· 198
[그림 부록-4] 『사상계』 3기의 의미연결망 시각화 ····· 199
[그림 부록-5] 이승만 연설문의 의미연결망 시각화 ····· 206
[그림 부록-6] 박정희 연설문의 의미연결망 시각화 ····· 207

제1장 서론

제1절 문제제기

해방 후 한국에서 ‘자유’ 개념을 당명에 포함한 주요 정당들은 모두 반공 보수주의를 표방했다. 이승만의 자유당부터 민주자유당, 자유민주연합, 자유선진당 근래의 자유한국당까지 ‘자유’는 정치적으로 보수, 특히 반공과의 의미연관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었다. 정당 이름에서 ‘민주’ 개념이 정치적 지향과 큰 관련 없이 쓰였다면, ‘자유’ 개념은 특정한 지향성을 갖고 있었다. 물론 자유를 표방한 정당들이 개인의 권리 증진을 우선시하는 자유주의적 가치를 중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자유한국당의 경우에는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즉 국가 개입 축소와 시장자유 확대라는 원칙을 반영한 작명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정당 명칭에 포함된 ‘자유’ 개념은 대개 반공을 상기시키기 위한 의도로 사용되었다.

물론 정치 담론에서 ‘자유’ 개념이 반공의 의미로만 사용된 것은 아니다. ‘자유’ 개념이 반공과 의미가 중첩된 것은 해방 이후 세계적 냉전의 고착화와 그것이 한국에서 야기한 분단과 전쟁의 산물이다. 그럼에도 개인의 권리, 특히 불가침의 기본적 권리를 의미하는 자유주의적 판본의 ‘자유’ 개념 또한 지속적으로 사용되었다. 특히 권위주의 정부에 저항하는 세력들의 담론에서 권리로서의 자유 개념이 적극적으로 사용되었다. 4월혁명의 기치는 자유와 민권이었으며, 1960년대 박정희 정부에 대한 저항의 목소리는 언론의 자유와 학원의 자유를 요구하는 데 집중되었다. 1970년대의 저항운동 또한 ‘인권’ 개념을 중심으로 자유주의적 권리 회복을 요구했다.

기존 연구들도 해방 이후 한국의 자유주의에 대해 두 가지 상반된 평가를 보여준다. 선행연구들은 자유주의를 지배 이데올로기로서 간주한 연구와 저항의 이념으로 규정한 연구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전자의 연구들은 한국의 자유민주주의가 해방 후 좌익의 도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 빠르게 반공주의와 결합하고 보수화되었다고 평가한다(강정인, 2008; 김진기, 2005; 정승현, 2017). 자유주의는 지구적 냉전과 한반도의 정세 속에서 반공에 전유되었다는 주장이다. 권위주의 통치자들은 자유의 수호를 위해 반공투쟁이

필요하다는 담론을 지속적으로 유포했다. 하지만 현실에서 그러한 담론들은 반공으로의 동원을 정당화하는 데 기여했을 뿐이다. 자유주의적 권리들은 반공이 완수된 이후에 온전히 보장될 수 있는 것으로 상정되었다. 권위주의 시대에도 헌법적 규범으로서 자유주의가 존재했지만, 통치 이념으로서 자유주의가 존재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다른 한편으로 자유주의가 저항의 이념으로서 한국 사회의 민주화를 이끌어 낸 사상적 자원이었다는 점을 강조한 연구들도 있다(문지영, 2011; 장은주, 2012; 정태욱, 2006).[1] 통치 세력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헌법적 규범으로 제시했으나, 현실의 통치는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방향으로 수행되었다. 한국의 저항적 민주화 운동은 자유민주주의의 헌법 규범과 현실 정치의 간극을 메우라는 요구로 점철되었다. 1980년대 이전까지 권위주의 정부에 저항한 지식인들의 담론은 자유주의적 요구에 집중되었다.

권위주의 정부는 자유와 반공을 동일시하면서 권력 강화를 기도한 반면, 그에 저항하는 세력들은 헌법에 명시된 자유주의적 가치를 준거로 권력의 정당성을 공격했다고 정리할 수 있을까? '자유' 개념이 지배와 저항의 명분으로 모두 사용되었다는 점 자체는 새로울 것이 없다. 주요한 정치적 개념이 상이한 이념에 접합되고 정치 투쟁에 동원되는 일은 흔하다(박명규, 2018: 144). 이 과정에서 사회적 상황이 반영되고 주체의 욕망이 투영되어 개념의 의미와 용법이 변화하는 것은 자연스럽다고 할 것이다. 지배세력과 저항세력 모두 '자유'와 '민주' 개념을 활용해 스스로를 정당화하고 상대 세력의 정당성을 공격했다는 점 자체는 특이할 것이 없다.

그렇다면 한국 자유주의의 특징은 무엇인가? 한국 자유주의의 특성으로 자주 지적되는 것 중 하나는 공동체와 개인의 관계 설정에서 공동체의 우위가 확연하다는 점이다. 그 공동체란 대개의 경우 민족 또는 국가였다(강정인, 2008: 141). 이는 국권의 위기 상황에서 자유주의가 수입되었고, 이후 식민통치를 당하게 된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사고방식으로 볼 수 있다. 일제강점기에 개인의 자유는 국가의 자의적 통치에 의해 억압된 것이 아니라 민족국가를 갖지 못했기에 억눌린 것이었다. 개인에게 공동체가 침해할 수 없는 불가침의 권리가 존재한다는 생각은 익숙하지 않았다.

---

1) 문지영(2011)은 한국의 자유주의가 지배의 이념이자 저항의 이념으로 양면적 성격을 가졌다고 보았다. 그럼에도 전반적인 초점은 저항 이념으로서 자유주의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 두었다.

하지만 공동체에 대한 강조는 대부분의 탈식민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심지어 식민화의 주체였던 일본도 그러했다(강정인, 2008: 140). 외세에 대항해 부국강병을 도모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자유주의를 선택한 국가들에서는 민족의 자유와 이익이 개인의 자유보다 우선시되었다(박찬표, 2008: 155). 민족의 자유 없이 개인의 자유도 있을 수 없었다. 민족 중심의 생존과 탈식민화가 지상 목표인 후발 국가에서는 자유주의든 사회주의든 민족주의적 목표와 결합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처럼 공동체의 우선성을 강조하거나 공동체와 개인의 조화를 낙관한 것이 한국 자유주의에 독특한 성격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해방 이후 한국의 자유주의의 역사를 연구한 문지영(2011: 322)은 한국 자유주의 담론의 특징으로 여섯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자유와 민권에 대한 분명한 요구를 보였고, 둘째, 개인보다는 집단 주체에 초점을 두었으며, 셋째, 경제적 자유보다는 협동, 조화, 분배 정의를 강조했고, 넷째, 제한 정부보다는 복지국가의 이상을 추구했으며, 다섯째, 민족주의적 지향을 보였고, 여섯째, 반공주의와 자유주의를 동일시하는 담론을 비판했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 개인보다 공동체와 민족을 우선시하는 관점은 한국 자유주의의 독특한 특징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자유주의적 가치를 중시한 지식인들이 반공을 근거로 자유의 유보를 명한 권위주의 정권에 맞선 것도 특이하다고는 할 수 없다. 냉전 시대에 자유주의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대부분의 '자유진영'에서 반공주의와 결합했다. 이른바 냉전 자유주의(cold war liberalism)다. 자유주의적 가치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자유까지 보장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냉전 자유주의의 원칙이었다. 냉전 자유주의에 충실한 지식인들은 공산주의뿐 아니라 여타 독재 체제에도 비판적이었다. 따라서 냉전 자유주의의 입장에서 반공을 앞세운 권위주의 정치를 비판한 것 또한 한국 자유주의의 특성이라고 하기보다는 냉전 시기 자유주의의 일반적 성격이라고 할 수 있다(박주원, 2003: 136-137).

앞선 논의들을 참조할 때 한국 자유주의 담론에서 나타나는 가장 독특한 특징은 권위주의 정부에 대한 저항을 고취하는 동시에 균분을 위한 국가개입을 요구했다는 점이다. 한국과 유사한 경험을 한 대만의 자유주의적 지식인들은 정치적 자원뿐 아니라 경제적 자원까지 장제스와 국민당으로 집중되는 것을 비판하기 위해 고전적 자유주의에 가까운 담론을 펼쳤다. 대만의

지식인들은 하이에크를 적극적으로 인용하면서 정치적 자유는 경제적 자유 없이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조경란, 2011: 130). 정치와 경제 모두에서 국가 권한의 축소를 요청했다는 점에서 대만의 비판적 자유주의자들은 한국의 지식인들과 달랐다. 반면 제3세계 국가들의 경우 민족주의를 동원해 국가 주도의 경제성장과 분배 정의를 도모한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런 국가들에서 지식인들은 대개 자유주의에 회의적이었다. 『사상계』의 표현을 빌린다면 한국은 "반공의식에 투철하고 자유에 대한 동경심이 강렬하다는 점에 있어서" 다른 아시아·아프리카 국가들과 달랐다.[2)]

정치적 자유를 요구하는 동시에 분배 정의를 위한 국가 개입을 요청한 한국 자유주의 담론의 독특한 특징은 어떻게 나타났는가? 국가 개입을 강조하는 담론을 과연 자유주의의 범주에 포함할 수 있는가? 해방 이후 한국에서 자유주의 담론은 어떠한 수행적 효과를 갖고 있었는가? 과연 한국에 일관된 자유주의자가 존재했는가? 이 연구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나름의 답을 찾고자하는 의도에서 수행되었다. 자유주의 담론은 식민지 경험, 미국 헤게모니 하의 냉전, 분단과 전쟁, 경제적 후진성, 권위주의 정부의 지속 등 다양한 구조적, 상황적 맥락 속에서 표출되었다. 또한 자유주의 담론은 그러한 구조와 상황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로 활용되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이 연구는 해방 이후 지식인들의 담론에 주목한다. 지식인 담론을 잘 보여주는 자료로는 대중 계몽을 지향한 잡지를 들 수 있다. 특히 『사상계』는 1950년대부터 '자유'를 둘러싼 지식인들의 담론 지형을 보여주는 대표적 매체였다. 자유는 『사상계』가 다룬 핵심 주제 중 하나였다. 『사상계』는 자유를 주제로 한 특집만 다섯 번 편성하면서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계몽하는 데 많은 지면을 할애했다. 각 특집은 1955년 8월 "자유의 본질, 자유의 과제", 1957년 1월 "자유의 장래", 1958년 12월 "자유와 질서", 1959년 3월 "자유를 위한 투쟁", 1961년 10월 "자유의 재인식"이라는 제목으로 구성되었다. 『사상계』는 자유 특집을 통해 개인의 자유가 그 자체로 존재할 수 없으며 공동체와의 관계 속에서만 진정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1950년대의 또 다른 잡지인 『새벽』은 대만의 지식인들처럼 경제적 자

---

2) 박준규, "韓國·美國·日本: 韓·美·日의 3國關係는 과연 자유평등 국가간의 모범적인 友好均衡關係인가?", 『사상계』 102호(1961. 12), 98쪽.

유와 정치적 자유를 모두 요구했고, 1960년대 혁신계의 입장을 담은 잡지였던 『청맥』은 제3세계 민족주의에 경도되어 자유민주주의에 회의적이었다. 이에 반해 『사상계』는 자유민주주의의 보편타당성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면서, 효율성과 공정성을 겸비한 경제체제를 지속적으로 모색했다. 물론 『사상계』에는 다양한 관점의 글들이 게재되었고, 자유와 자유주의에 대해서도 여러 관점이 혼재했다. 각각의 입장들은 역사적 경험과 얽히면서 경합, 수렴, 분화되었다. 자유주의 담론의 한국적 특성은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형성되었다.

이 연구는 『사상계』 지식인들을 자유주의자로, 그들의 이념적 지향을 자유주의로 규정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유주의적 가치를 존중했지만, 그것이 공공선과 충돌한다고 판단될 때는 공공선을 우선시했다. 일례로 장준하는 개인이 민족을 위해 희생될 수 있다고 여겼다(김일영, 2008: 393). 기존 연구들 또한 한국의 자유주의에서 개인주의적 요소가 결여 또는 지체되었다고 지적했다(김일영, 2008: 397; 문지영, 2011: 323). 자유주의의 핵심이 개인주의라고 할 때, 개인주의가 결핍된 사상과 이념을 자유주의의 일종으로 간주할 수 없다. 박정희의 '한국적 민주주의'가 민주주의가 아니듯, 개인주의 없는 자유주의란 형용모순이다. 엄밀한 의미에서 해방 이후 한국에서 일관된 자유주의자로 칭할 수 있는 지식인, 정치인을 찾아보기 쉽지 않다.

한국의 자유주의 담론에서 개인주의가 결여된 원인은 동양적 전통 또는 유교 문화의 지속에서 찾을 수도 있고(강정인, 2008: 139; 김일영, 2008: 397; 이나미, 2000: 24), 국권 상실의 역사적 경험에서 유추할 수도 있을 것이다(문지영, 2011: 52; 정승현, 2017: 263-264). 또한 자유주의가 '사상'이라기보다 서구적 근대화를 위한 '제도'로서 여겨졌다는 점도 그 이유로 자주 언급된다(문지영, 2011: 26-27; 박찬표, 2008: 155; 윤해동, 2018: 115). 그 원인이 무엇이든 한국에서 자유주의는 집단적 목표 달성을 위한 담론적 자원에 가까웠다.

이 연구는 한국 지식인들을 자유주의자로 분류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루지 않는다. 반면 자유주의에 내재된 논리와 가정들에 기반을 둔 담론, 즉 자유주의 담론이 한국의 지식인들에게 어떻게 활용되었는지에 주목한다. 그래서 이 연구는 자유주의 연구가 아닌 자유주의 담론에 대한 연구이다. 또한 지식인들이 자유주의를 자원으로 삼아 무엇을 정당화하고, 어떤 주체를 만

들고자 했는가를 분석하려 한다는 점에서 비판적 지향성을 갖는다.

이 연구에서는 『사상계』를 중심으로 해방 후 한국 자유주의 담론의 특성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보이는 데 중점을 둘 것이다. 담론의 특정 성격만을 자의적으로 부각시키는 오류를 탈피하기 위해 '자유' 개념의 용법을 중심으로 분석의 틀을 정하여 실증적으로 한국 자유주의 담론의 특징을 밝히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제2절 선행연구 검토

1. 한국 자유주의 연구

여기서는 한국의 자유주의를 다룬 주요 연구들을 연구대상의 시기에 따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한국에서 자유주의 담론의 전반적 흐름을 그려볼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언급할 것은 개화기 자유주의의 수용과 관련한 이나미(2000)의 연구이다. 그녀는 『독립신문』에 나타난 '자유' 담론을 분석하여, 『독립신문』의 핵심 개념을 "자유와 독립"이라고 정리했다. '자유' 개념은 유교적 바탕 위에 수용됨으로써 처음부터 의(義)로움의 한계를 넘어설 수 없었다. 『독립신문』은 특히 '독립' 개념을 통해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인민을 강조했다. 이를 이나미는 자본주의적 주체 형성의 시도로 보고 있다. 『독립신문』의 관권 비판도 자의적 재산권 침해에 집중되어 있다고 해석했다. 다른 한편 당대에 자유주의를 주장한 지식인들은 민권 개념을 강조하면서도 우민관(愚民觀)을 갖고 있었다. 엘리트 지식인들이 주장한 민권은 지킬 것이 있는 이들의 민권이었으며, 그 외의 대중들은 민권의 주체로 간주되지 않았다.

이나미에 따르면 한국에서 자유주의는 엘리트 지식인들이 자신의 정치, 경제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활용한 사상적 자원이었다. 지식인들은 구시대의 지배층에 대항하는 논리로 자유주의를 활용하는 한편, 자유의 자격요건을 설정함으로써 대중들을 철저히 계몽의 대상으로 전락시켰다. 물론 지식인들의 계몽주의적 태도는 국권 침탈의 위기 상황에 따른 초조함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개화기 지식인들이 자유주의 제도를 이식하고자 한 이유는 부국강병을 위해서였다(강명희, 2014: 232-233). 그들은 서구의 제도적 요소들을 모방하고 따라잡고자 했고, 그것이 권력의 변동 — 자신들의 권력 확대 — 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유주의적 제도들이었지 개인의 자유를 증진시킨다는 자유주의의 원칙은 아니었다. 신지식인들은 자유주의를 통해 제도적 서구화와 자신들의 권력 강화를 동시에 도모했다.

식민화 위협에 처하면서 개인의 자유는 국권의 보장 없이 불가능하다는 관념이 뚜렷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다(강명희, 2014). 개인의 자유와 권리는 천부적이라 할지라도 국가의 법에 의해 보증되지 않는 한 보장될 수 없었다. 식민화 과정에서 자유주의 담론에는 개인의 자유 증진이라는 목표가 희석되고 민족주의적 지향이 강하게 반영되었다. 식민지 상황에서 자유의 주체로서 개인보다 민족이 훨씬 더 강조된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의 조화, 자유와 평등의 조화를 추구하는 사회적 자유주의가 지식인들의 관심을 받기도 했다.

해방 정국에 들어서면서 일제강점기에 유입된 사회적 자유주의[3]가 자유와 평등이 조화된 국가 건설의 전망으로 제시되기도 했다(양승태·전재호, 2007; 황병주, 2018). 자유와 평등, 개인과 공동체의 조화를 구상한 사회적 자유주의의 영향은 특히 경제 영역에서 자유방임적 자본주의에 대한 거부감과 평등주의적 지향으로 표출되었다. 물론 분단에 따른 체제 경쟁 측면에서 이를 해석할 수도 있으나, 좌우를 막론하고 국가의 경제개입과 균분에 대한 전반적인 합의가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문지영, 2011: 84-85; 양승태·전재호, 2007; 황병주, 2018). 이러한 지향은 제헌헌법의 이익균점 조항에 반영되기도 했다.

다른 한편으로 정부 수립 이후 국내의 국지적 무력 충돌과 세계적 냉전을 반영한 '공산주의로부터의 자유'가 중요한 문제로 등장했다. '자유' 담론은 미국의 영향력과 그 아래에서 오른쪽으로 재편된 정치 질서에 영향을 받

3) 19세기 말 ~ 20세기 초 영국에서 주도된 자유주의의 혁신적 경향을 당시에는 '사회적 자유주의'(social liberalism)라고 부르기보다 '신자유주의'(new liberalism)로 칭하는 경우가 훨씬 많았다. 그러나 여기서는 20세기 후반에 나타난 또 다른 '신자유주의'(neo-liberalism)와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사회적 자유주의' 개념을 사용하고자 한다. 사회적 자유주의의 주요 내용은 후술할 것이다.

을 수밖에 없었다. 특히 우익 정치인들의 '자유' 담론은 반공을 정당화하면서 국민 정체성을 주조하거나 미국과의 진영적 일체감을 나타내는 내용을 담았다. 헌법의 경제 조항들이 사회적 자유주의의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었다면 '자유' 담론의 또 다른 축인 반공주의는 국가보안법으로 제도화되었다(문지영, 2011).

한 가지 지적할 것은 이 시기 반공주의에서 나타나는 '자유' 담론을 반공자유주의 또는 냉전 자유주의로 규정하는 평가가 다수의 연구에서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 시기 주류 정치세력의 지향을 자유주의로 개념화하기는 어렵다. 냉전 자유주의를 자유주의의 타락으로 규정할 수도 있겠지만(Arblaster, 2007: 590-591), 매카시즘과 동일한 것으로 취급해서는 안된다. 매카시즘이 냉전 자유주의의 개념들 — 스탈린주의, 전체주의 등 — 을 차용하면서 정치 공세를 편 것은 맞지만, 냉전 자유주의자들은 공산주의와 매카시즘 둘 다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위험으로 인식했다(Radosh, 2000: 550). 그렇기 때문에 냉전 자유주의는 자유주의적 신조의 중요한 부분을 폐기했음에도 여전히 자유주의'들'에 포함될 수 있다(Anderson, 2011: 226). 냉전 자유주의는 개인주의에 대한 방어적 입장에서 공산주의는 물론 매카시즘과도 거리를 두고 있었다. 공산주의가 국가 안보에 대한 실질적 위협으로 여겨진다면, 공산주의자에 대한 자유의 제한을 자유주의의 자기부정으로만 평가할 수는 없다. 다만 국가 안보와 개인의 자유가 실제로 상충되는 상황인지, 실제로 상충될 경우 개인의 자유는 어느 정도로 제한되어야 하는지, 이 모든 결정을 누가 내리는지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 한국의 권위주의 정부는 개인의 자유를 최상의 가치로 하되 반공이라는 제약을 두었다기보다는, 개인의 자유가 국가의 존재이유라는 의식을 갖지 않았다.

시드니 후크(Sidney Hook) 같은 미국의 냉전 자유주의자들은 공산주의자들과 협력자들의 공직 취업 제한에는 동의했으나 그들에게도 여전히 사상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adosh, 2000: 566). 냉전 자유주의자들이 자유주의 원칙에 중대한 예외를 설정했다는 점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매카시즘과 달리 개인의 자유에 대한 옹호를 원칙으로 하되 공산주의라는 예외를 설정했기 때문에 자유주의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는 않았다.

해방 정국에서 냉전 자유주의자에 가까운 면모를 보였던 세력은 자유민주주의 정부 수립을 위해 단정에 참여했던 중도우파였다고 할 수 있다(문지

영, 2011). 정치 세력의 주류를 이룬 이승만과 한민당은 자유주의적 수사를 사용했지만 자유주의의 범주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들은 권력의 독점을 위해 미국이 이식하고자 한 자유민주주의 제도에도 거부감을 보였으며(박찬표, 2007; 381), 다만 '자유' 담론을 통해 미국과의 진영적 일체감을 과시하고자 했다. 다시 말해 해방 정국에서 이승만 등 주류 정치세력은 '자유' 개념을 활용하여 미국을 배후에 두는 반공주의적 국민국가 건설을 도모했다.

해방 이후 자유주의를 분석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가장 유사한 문제의식과 연구대상을 담은 것으로는 문지영(2011)의 연구를 들 수 있다. 그녀는 자유주의를 역사적으로 이해할 것을 제안하면서 서구적 표준의 자유주의 상에 맞춰 한국의 자유주의가 그것에 미달 또는 이탈한 것으로 재단해서는 안 된다고 전제했다. 문지영(2011: 9)은 "한국에서 자유주의는 공식 지배 이념으로 제도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 '지배'와 '제도'에 맞서는 저항 이념으로 작동하기도 했"으며 "한국 자유주의의 특유한 성격은 이 같은 공식 지배 이념으로서의 면모와 저항 이념으로서의 면모가 상호 침투적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형성되어 갔다"고 간명하게 정리했다.

한국의 역대 권위주의 정권들은 자유주의를 지배 이념으로 내세우면서도 개발과 안보 담론 속에서 자유주의적 가치들을 배제하고, 특히 자유주의를 국가 중심의 반공주의로 환치시키면서 실제로는 자유주의를 억압했다. 권위주의 정권에 도전한 저항 세력은 개인의 자유와 민권을 공동체 — 민족과 민중 — 의 가치 지향과의 조화 속에서 중시하고, 사회적 자유주의의 전통에서 국가에 의한 경제적 재분배를 요구했으며, 반공주의의 틀을 벗어나지는 않았으나 반공을 구실로 삼은 민권 탄압에 맞섰다. 자유주의는 미국의 영향 때문에 규범으로서 공식화되었지만 지배 세력은 이를 현실에서 무력화시키고자 했다. 반면 저항 세력은 현실에서도 자유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요구했다.

선행연구들은 한국에서 자유주의가 각 시대별로 수용되고 확산된 양상을 잘 보여준다. 그러나 해방 이후 한국 자유주의가 왜 한편으로 국가로부터의 자유를 요구하고 다른 한편으로 국가 개입에 의한 성장과 분배를 요구하게 되었는지에 관해 배경적 설명만을 제시하고 있다. 물론 권위주의 정부의 존재는 자유주의가 저항 이념으로 기능하게 된 중요한 조건이었다고 할 수 있

다. 또한 사회적 자유주의의 전통은 균분을 요구하게 된 맥락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것으로 설명이 충분치 않다. 권위주의 정부에 대한 반대는 반드시 자유민주주의 노선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사회적 자유주의의 전통이 있다고 해서 지식인들이 경제에 대한 국가 개입을 옹호하게 되는 것도 아니다. 앞서 언급했듯 대만의 자유주의적 지식인들 또한 평등주의적 입장을 가졌지만, 장제스와 국민당의 전횡이 본격화된 1950년대에 하이에크를 수용하여 경제적 자유를 요구하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이는 상황적 요소만으로 한국 자유주의의 특징을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해방 이후 한국의 자유주의 담론은 균질적이지 않았다. 특히 1950년대 『사상계』에는 경제적 자유를 둘러싼 다양한 입장들이 제기되었다. 각각의 담론들은 대립, 수렴, 분화를 거쳤다. 1960년대에는 자유민주주의와 산업화의 우선 순위를 놓고 지식인들의 균열이 나타나기도 했다. 한국 자유주의의 특성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구조적 조건과 상황적 맥락, 역사적 사건들이 담론과 얽히는 과정을 다층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2. 『사상계』 연구

이 연구의 가장 핵심적인 자료는 『사상계』이다. 따라서 연구의 방향 설정을 위해 『사상계』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사상계』 지식인들의 지적 배경은 선행 연구들이 중요하게 다룬 부분 중 하나다. 이용성(1997)과 김건우(2003)는 『사상계』 지식인들이 문화적 민족주의의 계보를 잇고 있다고 보았다. 김건우(2003: 57)는 문화적 민족주의를 “목표로서 민족의 근대화, 그 모델로서 서양, 방법으로서 교육과 계몽, 행위 주체로서 지식인 엘리트, 그 기반으로서 정신주의”라고 요약하고, 『사상계』 지식인들이 일제강점기 문화적 민족주의를 주창한 지식인들과 학연, 지연으로 연결되어 있었으며 그들의 정신을 계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사상계』 지식인들은 문화적 민족주의 성향을 견지하면서 현실에 대응했다고 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사상계』 지식인들에 미친 사회(민주)주의의 영향력에 주목하는 연구(윤상현, 2013; 정영진, 2015; 조경란, 2011), 기독교적 자유주의

및 평등주의의 내면화에 주목하는 연구들(김명임, 2015; 이철호, 2013)이 있으며, 『사상계』를 미국 헤게모니의 냉전 전략에 강하게 종속된 로컬 행위자로 이해하는 연구들(권보드래, 2011; 김경숙, 2018; 김복순, 2013; 장규식, 2014) 또한 존재한다. 연구자들마다 강조점이 다르기는 하지만 큰 틀에서 본다면 미국 헤게모니 하의 냉전이라는 상황에서 문화적 민족주의의 노선에 따라 점진적 개혁을 추구하는 입장이 『사상계』의 대체적 분위기였다고 종합할 수 있다.[4] 최소한 1950년대 『사상계』는 이런 맥락에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지적 배경에 관한 논의들을 제외하면 『사상계』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사상계에 게재된 글의 성격과 편집진의 성향을 시계열적으로 분류하여 '잡지'로서 『사상계』의 성격을 분석한 것이다. 둘째, 특정 범주의 담론 — 예를 들면 자유주의, 민주주의, 민족주의, 과학주의, 생산력주의 등 — 을 중심으로 『사상계』를 독해하고 평가한 것이다. 셋째, 앞의 두 가지와 중첩되기도 하지만, 국문학계를 중심으로 『사상계』에 실린 문학 작품 및 평론을 자료로 삼아 당시의 문단과 지식사회의 분위기를 분석한 것이다. 여기서는 문학 중심의 연구들은 따로 정리하지 않고 『사상계』의 잡지 성격 분석과 관련된 선행연구과 『사상계』의 '자유' 담론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1) 『사상계』의 성격 변화

먼저 잡지로서 『사상계』의 성격을 다룬 연구들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사상계』는 처음에 학술 교양 성격이 강한 지식인 잡지로 기획되었다(이용성, 1997: 55). 대중지로서의 면모보다는 지식인 공론장의 성격이 강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상계』는 1955년에 중대한 변화를 모색하게 된다. 편집위원회를 두어 전문성을 보강하는 동시에, 대학생을 중심으로 독자층을 확대하고자 한 것이다(김미란, 2012). 독자 확대의 노력은 문학 작품과 시사성 있는 글들의 수록으로 나타났고, 이는 큰 성공을 거두게 된다.

4) 김건우(2003)의 연구가 1950년대에 국한되어 있다는 점은 1960년대 이후에는 문화적 민족주의의 영향이 소실되어 간다는 것을 암시한다. 1960년대에 들어서면 『사상계』는 문화적 민족주의 특유의 점진론적 분위기에서 벗어나 정치적 동원을 중시하는 논조를 보이게 된다.

1955년 이후 『사상계』는 대중 계몽지로서의 성격을 뚜렷이 드러내게 되었는데(마상윤, 2016), 계몽의 핵심은 서구적 근대화였다.

이승만 정권에 대한 비판도 '자유와 민권'을 근대화의 정치적 지표로 삼으면서 본격화되었다. 이승만 정권 말기에 가면 『사상계』에는 대항 잡지로서의 성격이 가미된다. 『사상계』가 제시한 저항의 이념은 4월혁명으로 결실을 맺었다. 4월혁명을 서구의 시민혁명에 대당되는 것으로 이해한 『사상계』 지식인들이 그 다음 과제로 생각한 것은 경제적 근대화, 즉 산업화였다(정용욱, 2004: 167-168). 정치적 근대화는 부분적으로 완수했으니, 경제적 근대화에 진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준하를 위시한 『사상계』 지식인 일부가 민주당 정부의 국토건설본부에 참여한 것은 이러한 사고방식에서 나온 결과였다(장준하선생20주기추모문집간행위원회 편, 1995: 38).

그러나 4월혁명에 대한 『사상계』 지식인들의 환희는 점차 환멸로 바뀌었다. 4월혁명을 계기로 그동안 억눌려 있던 다양한 요구들이 분출되었다. 『사상계』 지식인들은 이를 무질서와 혼란으로 규정했다. 낮은 민도에 따른 계몽되지 않은 자유로 여겼던 것이다. 새롭게 집권한 민주당은 이러한 상황을 질서 있게 통제할 역량을 갖지 못했다(전상숙, 2010). 이러한 불만 속에서 "퇴폐한 국민도의와 민족정기"를 바로잡고, "절망과 기아선상에서 허덕이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겠다고 한 5·16쿠데타는 『사상계』의 환영을 받을 수 있었다. 『사상계』는 집권기의 민주당 및 그에 이은 군사정권과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정치 평론에 주력했다(노종호, 1995: 212-213; 마상윤, 2016: 177).

그러나 1963년 초 박정희 의장이 민정이양 약속을 번복하려하자 『사상계』는 박정희 정부과 대립하게 되고, 이는 1964~65년의 한일협정 반대 투쟁에서 극에 달하게 된다. 1963년 이후 『사상계』는 저항의 논리적, 감성적 근거를 제공하는 대항 잡지로서의 면모를 뚜렷이 보이게 된다(이용성, 2003: 200). 이 과정에서 『사상계』는 미국을 한일협정의 배후 세력으로 규정하고 규탄하는 등 기존의 서구 추종적 입장을 일부 교정하는 모습도 보였다(장세진, 2013: 70).

이후 『사상계』는 정권의 탄압과 내부 역량의 고갈로 영향력이 약화되고, 1970년 5월 김지하의 "오적" 필화로 인해 폐간되었다. 『사상계』는 자유민주주의론과 매판경제론 등을 통해 박정희 정부를 비판했지만, 근대화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에는 이르지 못했다. 탈후진 근대화의 과제는 박정희 정부와 『사상계』가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김보현, 2003).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상계』는 시대적 소명을 마감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사상계』는 학술 교양 중심의 지식인 잡지로 시작해 대중 교양지로의 변화를 겪고, 이후 점차 정치 참여의 성격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문화적 민족주의의 인식론에 뿌리를 둔 계몽을 통한 근대화라는 구상은 『사상계』를 일관했다고 할 수 있으나, 그 방법이 실력양성에서 동원과 참여로 변했고 서양에 대한 입장도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일부 교정되고 있었다. 이는 『사상계』가 박정희 정부와 대립하면서 변모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사상계』의 자유주의 담론의 많은 부분은 국가 권력과의 관계 변화 속에서 파악해야 할 것이다.

선행 연구들은 대체로 『사상계』의 담론 변화와 관련하여 4월혁명과 1964년 한일회담 국면을 중요한 계기로 보고 있다. 이런 관점이 크게 잘못되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실증적으로 뒷받침되고 있지는 않다. 이 연구에서는 『사상계』의 편집위원회의 변화와 '자유' 개념의 용법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사상계』의 담론 변화가 어떤 양상으로, 어떤 이유에서 나타나게 되었는지 추적해볼 것이다.

(2) 『사상계』 담론분석

다음으로는 『사상계』 관련 선행연구 중 '자유', '개인',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사상계』 담론을 분석한 연구들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윤상현(2019)은 '개인' 개념을 중심으로 『사상계』의 담론 변화를 분석했다. 그에 따르면 『사상계』는 1950년대에 여러 글들을 통해 '개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계몽하고 있었다. 논자와 시기에 따라 그 개인은 때로는 공동체와 조화를 이루는 사회적 자유주의의 '개인'이기도 했고, 때로는 서구의 냉전 자유주의를 통해 되살아난 고전적 자유주의의 '개인'이기도 했다.[5] 이

5) 냉전 자유주의의 특징 중 하나는 "불확실성의 확실성"을 추구했다는 데 있다(Müller, 2008: 51). 특정한 방향성을 추구하는 이념은 전체주의라는 파국으로 귀결될 수 있으며, 정치에서 변치 않는 도덕적 진리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 냉전 자유주의의 주장이었다. 이런 관점에서 냉전 자유주의는 자유를 고전적 자유주의의 의미, 즉 원하는 바를 수행함에 있어 외부로부터 간

승만 정권이 국가보안법 날치기 개정(소위 2·4파동), 경향신문 폐간 등의 자의적 통치를 강화해가던 1950년대 말로 갈수록 “자연권적 ‘개인’ 관념”이 두드러지는데(윤상현, 2019: 173), 이는 자유주의적 저항권의 행사를 강조한 것과 연관되어 있었다. 즉 고전적 자유주의의 ‘개인’ 개념이 4월혁명의 이념적 자원으로 활용되었다는 것이다. 윤상현은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후진성에 대한 의식이 다른 관념들을 압도했고, 개발과 동원의 시급성이 다른 문제들보다 우선시되었다고 보았다. “1960년대 이후 자기완결적이고 자기충족적인 “개인” 담론은 드물게 나타났”으며 “‘민주주의’ 담론은 넘쳐났지만 권리 주체인 ‘개인’은 형해화되었다”는 것이다(윤상현, 2019: 177).

한영현(2014)은 『사상계』의 시민사회론을 분석하여 윤상현과 유사한 결론을 내리고 있다. 1950년대 『사상계』는 서구의 시민사회를 모델로 수용하면서 그것을 번역, 소개하는 데 치중했다. 4월혁명 국면에서 『사상계』의 시민사회론에는 변화가 나타났다. 시민사회의 저항권과 시민적 자유가 부각된 것이다. 그러나 1960년대 중반에 이르면 경제발전과 시민사회의 관계에 주목하는 방향으로 담론의 전환이 나타났다. 4월혁명 국면에서 개인 또는 시민의 가치가 주목되었으나, 이후 후진성에 대한 문제의식이 전면화하면서 『사상계』의 시민사회론은 후진성 극복을 위해 “개인의 자유와 평등마저도 일정 정도 유보할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보이게 되었다(한영현, 2014: 132). 국가로부터 독립적인 시민의 모습은 4월혁명 국면에서 일시적으로 부각되었지만 196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약화되었다는 것이다.

정영진(2015)은 1950년대 『사상계』의 자유주의 담론을 분석하면서 1950년대 중반에 일어난 지적 전환에 초점을 맞추었다. 1950년대 초반에 『사상계』에 의해 소개된 자유주의는 공동체주의적 제약과 도덕적 방향성이 결부되어 있는 경향이 강했다면, 1950년대 중반부터 국가로부터의 자유라는 소극적 자유 옹호론이 확대되었다. 1950년대 『사상계』에서 사회과학에 입각한 정치적 자유주의 담론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경향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담론은 1950년대 말에 민권론으로 전면화되면서 4월혁명으로 귀결되는 사상적 흐름을 만들어냈다고 평가했다.

위의 연구들을 정리해보면, 『사상계』는 창간 이래 1950년대 중반까지 서구의 자유주의 담론을 번역, 소개하는 데 주력했다. 그러나 1950년대 후

섭 받지 않는 상태로 규정하고자 했다(Berlin, 2014 참조).

반에 이르면 자유주의 담론은 한국의 현실 속에서 비판의 준거로 활용되기 시작했다. 이승만 정부 말기에 『사상계』가 국가로부터의 자유를 주장하는 고전적 자유주의의 개인과 시민을 부각시켰다는 것이다. 자유와 민권은 특권과 관권에 대응하는 담론으로써 현실적 함의를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들은 『사상계』가 4월혁명의 기치로 내건 '자유와 민권'의 이미지를 과도하게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사상계』는 1958년 4월 편집위원회 확대 개편을 통해 사회과학의 비중을 크게 늘렸고, 그 결과 정영진이 말한 것처럼 정치적 자유주의 담론의 영향력이 확대되었다. 그럼에도 『사상계』에서 다수의 '자유' 담론은 여전히 도덕적이고 공동체주의적인 틀 속에 제약되어 있었다. 『사상계』가 호소한 정치적 저항은 국가로부터의 자유라는 문제의식에서 나온 것이라기보다 공동체에 대한 기여 차원에서 요구되었다. 4월혁명으로 치달아가는 시점에 시민의 저항권을 환기시키는 글이 『사상계』 지면에 다수 등장했다. 그렇지만 『사상계』가 공동체적 제약으로부터 벗어난 개인과 시민의 자유를 내세우지는 않았다. 4월혁명에서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기치로 내걸었던 것처럼 자유는 정의, 진리라는 공동체적 가치와 결부되어 있었다.[6)]

이 점은 최창근(2016)이 적절하게 지적한 바이기도 하다. 그에 따르면 1950년대에 『사상계』는 실존주의와 휴머니즘을 매개로 자유를 해석했다. 실존주의는 방향성 없는 자유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비판의 대상이었으나, 차츰 휴머니즘에 의한 제한 속에서 실존주의적 자유를 긍정하는 방향으로 논조가 변했다. 여기서 휴머니즘은 일종의 공동체성과 유사한 것으로서 지식인이 전유한 "보편적 상식과 질서"의 틀을 의미했다(최창근, 2016: 272).

이런 맥락에서 4월혁명 이후 자유의 확대에 따른 사회 분위기에 『사상계』 지식인들이 과민반응을 보인 것은 당연했다. 공동체와의 관계 속에서 자유의 위상을 설정한 담론은 4월혁명 과정에서도 변하지 않았다. 4월혁명 이후의 혼란상은 '낮은 민도'에 자유가 주어졌기 때문이라고 규정되었다. 공공선으로 수렴되지 않는 자유는 제한되어야 했다. 『사상계』 지식인 다수가 5·16쿠데타를 긍정한 것은 공공선을 지향하지 않는 자유는 억제되어야 한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했다(마상윤, 2016: 186).

---

6) 고려대학교 학생들은 4월 18일 "자유 정의 진리 드높이자"는 구호가 적힌 플랜카드를 앞세워 행진했다.

다른 한편 1960년대 『사상계』의 자유주의와 관련해 중요하게 언급되어야 할 것은 이상록(2010)의 연구이다. 그는 김건우(2003)의 연구를 수용하여 『사상계』 지식인들이 문화적 민족주의의 영향을 받아 서구지향적, 계몽적, 점진적, 반공적 성향을 가졌다고 전제했다. 그에 따르면 당시의 지식인들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민족/국가'의 공동체의 번영이라는 목표 아래 조화시키려는 태도"를 보였으며, 그러한 번영의 문제, 즉 "'탈후진'의 과제를 자유민주주의와 결부시켜 사고"했다(이상록, 2010: 3-4). 이는 쉽게 말해 산업화와 자유민주주의 간의 관계로 정리될 수 있는데, 『사상계』에는 이 두 목표 간의 관계에 대해 세 가지의 분화된 담론이 존재했다. 첫째는 자유민주주의와 산업화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병행론"이다. 둘째는 자유민주주의가 산업적 후진성이라는 조건에서는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에서 산업화를 선행 과제로 보는 "산업화 우선론"이다. 셋째는 함석헌을 중심으로 전개된 정신주의적 민중론에 근거한 "민중 중심의 민주주의론"이다. 함석헌에게 물질적 개발의 정도는 사회적 목표가 될 수 없었다.

병행론이 자유민주주의의 보편타당성을 긍정하는 입장이었다면, 산업화 우선론은 한국의 후진성, 분단 상황, 전통적 요소를 근거로 자유민주주의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당대 지식인들은 산업화와 민주화의 병행 가능성을 두고 분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사상계』에는 두 입장이 혼재하고 있었지만, 1963년을 전후하여 병행론의 입장에 선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사상계』의 논조가 정리되었다.

이상록의 연구는 『사상계』의 자유주의와 관련한 쟁점의 한 축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그러나 그는 경제적 자유에 관련된 입장의 분화가 그 전에 존재했다는 점까지 언급하지는 않았다. 성장과 분배에 대한 국가 개입을 긍정하느냐 부정하느냐는 『사상계』에 나타난 또 다른 쟁점이었다. 이상록의 연구는 권위주의 정부에 대항해 자유민주주의의 즉각적 실현을 요구하는 한국 자유주의 담론의 특성을 포착했으나, 그것이 국가에 의한 재분배 요구와 병행했다는 점까지 포착하지는 못했던 것이다. 또한 이상록의 연구는 자유민주주의를 둘러싼 지식인들의 관점이 분화되는 양상을 보여주는 데 초점을 맞추면서, 정작 그들이 주장한 자유민주주의가 무엇을 의미했는지를 밝히는 데는 다소 소홀했다고 할 수 있다.

『사상계』의 자유주의적 면모를 온전히 분석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자유와 연관된 담론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경제적 자유에 관한 담론 분석은 『사상계』 연구에서 중요하게 결핍된 분야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권보드래(2009: 66-67)는 1950년대 한국에서 '자유'가 경제 영역과는 무관한 정치적 개념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1950년대 『사상계』에서 '자유' 개념과 가장 많이 결부된 개념은 '경제'였다. 1950년대 『사상계』에는 경제적 자유의 제한을 주장하는 담론과 경제적 자유의 확대를 주장하는 담론은 경합했다. 이와 관련된 논의들은 박정희 정부의 경제계획에 대한 박태균(2007)의 연구를 통해 어느 정도 정리되었지만, 정작 『사상계』 연구에서는 별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이 연구에서는 경제적 자유와 관련된 지식인들의 입장 분화를 중요한 주제로 다룰 것이다. 앞서 한국 자유주의의 특징으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요구와 경제에 대한 국가 개입의 요구가 동시에 제기되었다는 점을 들었다. 이러한 특징이 나타나게 된 양상과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경제적 자유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입장차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유민주주의가 어떻게 의미 변화를 겪게 되는지도 주목해야 한다. 후술하겠지만 '자유민주주의' 개념이 지식인 사회에 보편화된 계기는 5·16 쿠데타였다. 박정희가 쿠데타의 목적을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건설이라고 주장하면서부터 자유민주주의에 관한 담론이 급격히 증가했다. 박정희가 약속한 자유민주주의를 준거로 군사정부와 박정희를 비판하는 담론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당시 지식인들이 '자유민주주의' 개념을 이해하고 사용한 방식은 오늘날에도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개념사적 연구가 필요하다.

제3절 이론적 자원

1. 담론의 지식사회학

이 연구는 『사상계』를 중심으로 지식인들의 '자유' 담론을 분석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담론은 현실과는 다른 것이지만 현실을 규정하고, 현실

을 바꾸거나 유지하기 위한 사회적 실천이기도 하다. 담론은 사회적·정치적·경제적 조건과 연관되면서 현실적인 효과를 갖게 된다(신진욱, 2011: 11). 담론은 총체적인 현실 속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즉, 담론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지식사회학적 접근이 필요하다.

지식사회학의 가장 기본적이면서 핵심적인 명제는 만하임의 말에 따르면 "이론과 사유 방식의 사회적 구속성"이라고 할 수 있다(Mannheim, 2012: 523). 모든 지식은 사회적 구속성에 속박된 일면적 지식일 수밖에 없다. 다양한 집단과 개인이 직면한 사회적 구속성의 실체를 파악함으로써 현상을 바라보는 인식의 총체성을 넓힐 수는 있겠으나 완벽하게 객관적인 지식이란 존재할 수 없다. 막스 베버가 말한 가치의 배제(value free)는 가능하지 않으며 따라서 지식에 개입된 가치를 "비판적 입장에서 파악하고 또 통제를 가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이 만하임의 주장이다(Mannheim, 2012: 68).

만하임은 사회적 구속의 단위를 집단으로 보았다. 사유의 주체는 개인이지만 "이 개인의 사유 작용이란 이미 집단이 갖추고 있는 시각에 준거하여 거기에 참여할 뿐"이다(Mannheim, 2012: 532). 특정한 지식은 역사적·사회적 동질성을 갖고 있는 특정한 세력과 결부되어 이해되어야 하며, 그들이 처한 조건과 욕망으로부터 지식의 내용을 반추해야 한다.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세계관을 이해해보는 것, 즉 이해의 사회학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만하임이 주창한 지식사회학은 한편으로는 현실 인식 문제를, 다른 한편으로는 당위적 지향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현실을 해석하는 개념과 논리는 집단이 처한 조건에 따라 다르다. 따라서 같은 현실을 다르게 인식하는 집단들의 존재는 그 집단들이 처한 조건과 상황의 상이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다른 한편 집단과 개인들은 그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자신들의 지향과 행위를 정당화하고자 한다. 집단적 담론을 통해 우리는 바람직한 세계는 무엇이며, 그것이 어떻게 달성될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을 내리고, 그것을 지향하는 행위를 정당화하려 한다. 윤리적 지향을 담은 담론들은 그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특정 집단의 사상은 현실 유지적일 수도 있고 현실 초월적일 수도 있다. 만하임은 현실 초월적 사상 중 실질적 변화를 가져올 역량을 갖고 있는 것을 유토피아적이라고 규정했다. 앞서 이론과 사유 방식이 사회적 구속성을 띤다고 했다면, 유토피아 사상은 거꾸로 이론과 사유가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각축하는 사회 세력들은 각축하는 유토피아들을 전개할 것이다. 어떤 유토피아가 더 현실적 힘을 갖게 되는가는 담론의 정합성보다는 정치 권력의 문제가 되겠지만, 담론 또한 상대방의 정당성을 허물고,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무기로서 중요하다(Fairclough, 2012).

만하임의 지식사회학에서 특징적인 부분은 지식인을 상대적으로 존재 구속을 받지 않는 집단으로 평가했다는 점이다. 현대에는 "단일화된 조직성을 지닌 조직층 대신에 하나의 자유로운 지식계급이 발생했다"고 하면서 이렇게 탄생한 지식인들은 대중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하게 된다고 보았다(Mannheim, 2012: 78-79). 현대의 지식인들은 물적 조건에 뿌리를 두고 이데올로기를 설파한다기보다 대중과 결탁하여 영향력을 확보하고자 한다. 이러한 만하임의 지적은 지식인 담론을 분석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지식인들은 대중에 호소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헤게모니적 지위로 상승시키기 위해 객관성과 중립성을 주장하게 된다. 칸트가 계몽을 이성의 공적 사용으로 규정한 것처럼 지식인들은 대중과 연계되기 위해 담론의 공적 성격을 강조함으로써 계몽주의적 어법을 구사하게 된다.

지식인들이 발화하는 공공 담론들은 특정 제도와 실천을 정당화하는 목적을 갖기도 한다. 담론을 통해 이질적인 제도들은 일관된 질서로 파악되며, 제도에 따르거나 저항하는 행위에 의미가 부여된다. 이러한 정당화 담론은 상이한 세계관을 가진 집단 간의 충돌이 발생할 경우 더욱 더 개념적으로 체계화되는 경향을 보인다(Berger and Luckmann, 2013). 켈러에 따른다면 이러한 담론은 "갈등적인 사회적 행위자들, 제도적 장치들, 지식 체계들 속에서 실재적 질서들을 구성하고 권력 효과를 산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Keller, 2011: 48).

공적 담론은 특정한 주체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제기되기도 한다. 푸코는 계몽의 형식을 띤 담론이 바람직한 개인의 상태를 제시하고 그에 걸맞은 인간이 되도록 스스로를 문제시하고 개선해나가도록 한다고 보았다. 바람직한 주체 형성을 요구하는 담론은 개인들에게 역할과 정체성을 부여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기법(technology)을 실행하도록 한다. 개인들은 자율의 감각 속에서, 혹은 '자기에의 배려'(care of the self)로서 담론이 지시하는 바를 실행하게 된다(Foulcault, 1994: 105). 공적 담론은 현실을 해석하고 행

위에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특정한 지향을 갖는 주체를 형성하도록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집단 간의 갈등상황과 담론 간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집단 간의 갈등 상황 속에서 담론은 투쟁의 무기이기도 하다. 앞서 보았듯 만하임은 집단들이 내세우는 유토피아들이 집단 간의 갈등을 반영하며, 자신들에게 유리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도구가 된다고 지적했다. 라클라우와 무페는 그람시의 개념을 빌려와 저항 헤게모니 형성에 필요한 담론 전략을 논했다(Laclau and Mouffe, 2012). 정치적 투쟁에서 개념과 담론은 집단 간의 접합과 적대를 구성, 재구성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는 자연스럽게 동맹의 문제와 지도의 문제 등을 제기한다. 헤게모니 전략의 핵심은 다양한 집단을 묶어내고, 적대 대상을 분명하게 지시하는 데 있다.

라클라우와 무페의 제안은 정치적 담론의 성공 조건에 관한 것으로 해석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정치적 담론은 균열을 선명하게 제시하고, 그렇게 제시된 균열 내에서 다수를 확보할 수 있을 때 성공적이다. 즉 정치적 갈등 상태에 있는 집단은 다수에게 광범위하게 내재된 정체성에 호소하는 방향을 취할 개연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는 정치권력의 우열이 대중 동원력에 좌우될수록 더욱 그러할 것이다. 국민, 민족, 민중 등 집단 주체에 대한 호명은 이러한 상황에서 중요성을 더하게 된다.

장준하는 한국전쟁이 사상적 혼란에서 기인했다는 인식 하에 한국의 사상을 체계화하겠다는 문제의식으로 『사상』과 『사상계』를 창간했다(이상록, 2020: 71). 다분히 계몽주의적 기획이라고 할 수 있다. 『사상계』는 장준하를 중심으로 한 지식인 집단의 공론장이면서, 계몽을 통한 대중과의 접촉을 모색하던 잡지였다. 장준하는 “사고의 목표는 항상 현실에 대한 가장 정당한 비판과 결함 제거에 두어야 하며 나아가 새 역사 창조에 두어야 한다”고 했다.[7] 『사상계』 지식인들은 공공성, 객관성, 중립성을 표방하면서 현실을 해석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설정하면서 대중에 호소하는 전략을 고수했다는 점에서 만하임의 지식인론에 부합하는 모습을 보였다.

『사상계』 지식인들의 담론은 대중을 특정한 방향으로 이끌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었다. 따라서 그들이 의도한 방향성이 무엇이었으며, 왜 특정한 방향성이 제시되었는지를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다. 또한 담론의 내

7) C생[장준하], “편집후기”, 『사상』 4호(1952. 12), 204쪽.

용은 현실 해석과 대안 제시를 중심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담론이 요청하는 주체의 모습에도 주목하고자 한다. 잘 알려져 있듯 『사상계』는 박정희 정부와의 갈등상황 속에서 정치적 동원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나갔다. 계몽적 성격은 유지되었지만 정치적 적대를 각인시키고 동원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담론 전략을 사용하게 된 것이다. 『사상계』가 정치적 다수를 구성하기 위해 어떠한 전략을 구사하고자 했는지를 파악하는 것 또한 중요한 분석 지점이라고 하겠다.

2. 개념사와 관념사

이 연구는 한국 자유주의 담론의 특성을 밝히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하지만 자유주의라는 이념적 틀을 가지고 담론의 성격을 재단하기보다는 '자유' 개념의 용법을 통해 접근하고자 한다. '자유' 개념의 의미, 위상, 용법의 변화를 추적함으로써 한국에서 자유주의 담론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더욱 실증적으로 밝힐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개념사와 관념사의 이론들을 참조하고자 한다.

박명규(2009: 23)는 "개념은 추상적인 의미 그 자체로 활동하고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역사적 맥락 속에서 구체적 사회집단 및 쟁점들과 연관되어 존재한다"고 했다. 따라서 개념은 의미가 고정된 채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맥락에서 변용되기도 하고, 새롭게 만들어지기도 한다. 코젤렉은 연구 대상이 되는 개념들이 "사회사의 경험 상황에 있어 중요한 정치적·사회적 용어들"이며, 그 중에서도 "정치적·사회적 영역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단순한 말들보다 의미론적 폭이 큰 개념들"이라고 했다(Koselleck, 1998: 123). 즉 개념은 단순한 단어가 아니라 사회집단들의 이해관계가 그 의미에 반영된 다의적 개념들이라고 하겠다. 사회 속에서 다의성을 얻고, 모호해질수록 특정한 단어는 개념이 된다. 따라서 개념의 의미는 그것이 사용되는 담론의 맥락에 따라 다르며, 경우에 따라서는 사전적 의미와 분리될 수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개념은 역사적 단어라고 할 수 있다(나인호, 2002).

코젤렉은 개념에 경험공간과 기대지평이 교차하고 있다고 했다. 즉 개념

에는 과거로부터 전해오는 상호주관적인 경험이 담겨 있다. 또한 개념에는 미래에 대한 기대와 전망이 투영된다. 그러나 역사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경험공간이 변화하고 새로운 기대지평이 열리면 개념을 둘러싼 투쟁이 벌어지게 된다. 역사적 변화는 개념에 반영되고, 그 개념은 다시 현실에서 정치투쟁의 무기가 된다. 따라서 개념의 의미와 용법이 변화하는 양상을 추적하는 것은 사회사적 변동에 대한 탐구와 동떨어진 것이 아니다.

우리는 개념 없이 현실 뿐 아니라 역사도 서술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다. 개념사는 텍스트와 개념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특정한 연구 대상을 갖고 있지만 사회사와도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코젤렉은 개념사와 사회사의 방법론에 대해 일단, “개념사가 우선 텍스트와 언어를 다루는 반면, 사회사는 텍스트 자체에는 담겨 있지 않은 실상과 운동을 끌어내기 위해 텍스트를 이용할 뿐”이라고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코젤렉은 뒤이어 “공통적 개념들이 없다면 사회는 존재할 수 없고, 무엇보다도 정치적 행위 단위는 존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Koselleck, 1998:122).

과거에 사용된 어떤 개념들은 오늘날과는 상이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런 경우 개념에 대한 명확한 이해 없이 역사적 과거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불가능하다. 과거에 사용된 담론과 개념들을 당대의 사회적 맥락 속에서 이해해야 하듯이 과거의 사건들은 당대의 개념적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스키너는 코젤렉의 개념사에 관해 논평하면서 개념의 의미는 잘 바뀌지 않으며,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것은 개념의 용법이라고 했다(Skinner, 2012: 10장). 이는 특히 행위의 정당화나 부당화에 사용되는 규범적 어휘들에서 잘 나타난다. 어떤 행위는 이전에 부정적인 어휘로 평가되었으나, 역사적 변화에 따라 긍정적인 어휘와 연관되는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다. 물론 그 반대도 가능하다. 이는 특정 세력의 부침과 연관된다.[8] 다른 한편으로 어떤 규범적 어휘는 뉘앙스가 바뀌어 다른 평가를 받게 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서구에서 liberal은 관대함이라는 긍정적 가치와 연관된 개념이었으나, 19세기 중반에 이르면 이기심, 경솔함이라는 부정적 가치와 의미연관을 갖게 되었다(Vierhaus, 2014). 이러한 평가 변화는 급진주의의 출현으로 야기

8) 스키너(Skinner, 2012: 242)는 베버가 『프로테스탄티즘과 자본주의 정신』에서 보여준 통찰을 참고하여 자본주의 발달에 따라 상업 활동에 ‘섭리’(providence)와 ‘종교적’(religious)이라는 단어가 점차 연관되었다고 했다.

된 것이었다.

스키너는 담론을 생산하는 주체의 맥락과 동떨어진 개념 또는 관념 자체의 역사란 있을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개념사는 개념 그 자체의 역사로서 추적되어서는 안 되며, 특정한 역사적 맥락에서 그것을 발화하는 주체의 의도를 염두에 두고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갈등상황에서 집단과 개인들은 특정한 개념들을 활용하면서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갈등 집단의 행위를 부당화하는 전략을 사용한다. 그렇다면 코젤렉이 말한 경험공간과 기대지평의 변화는 개념의 용법 변화로 관찰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용법 변화는 개념의 다의성을 확장할 것이다.

스키너는 관념사(history of ideas) 방법론을 제시하면서 과거의 역사적 담론들을 연구할 때 저자의 의도를 읽어내고 그에 입각해 담론의 의미를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담론의 생산자는 특정한 진술을 함으로써 당대의 구체적인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담론의 생산자가 의도한 바를 간취하기 위해서는 그 시대의 사상적 맥락은 물론 사회적 맥락까지도 살펴보아야 한다.

특정 개념의 의미 변화는 그 개념과 정체성을 같이하는 세력의 의도와도 관계된다. 유럽어에서 liberal과 어원을 같이하는 표현들은 애초에 통치자의 자비를 의미했으나 차츰 관대한 태도를 일컫기 위해 사용되었다. 이것이 특정한 정치적 이념이자 세력을 가리키는 말로 변화한 것은 19세기에 이르러서다. 자유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입장을 보수주의 및 급진주의와 구별해야 했으며, 이를 위해 liberalism이라는 표현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게 되었다(Vierhaus, 2014). 이러한 과정을 거쳐 자유주의는 개인들의 자유로운 행동을 관용하는 정치적 태도와 세력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형성되었다.

자유주의라는 개념의 태동이 정치적 구별을 위해서였듯, '자유' 개념은 정치적 적대 대상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갖게 되기도 한다. 특히 서구에서 자유주의는 자유의 적을 새롭게 규정하면서 혁신되는 양상을 보였다(문지영, 2011: 21). 자유주의가 태동하던 시기에 자유의 주적은 국가였지만, 20세기 초반에는 빈곤이었고, 냉전에 접어들면서 공산주의로 변화했다. 국가를 적으로 규정한 고전적 자유주의, 빈곤을 적으로 규정한 사회적 자유주의, 공산주의를 적으로 규정한 냉전 자유주의에서 '자유' 개념의 의미와 용법은 변화했다.

이처럼 개념사와 관념사의 이론에 따른다면 '자유' 개념의 의미, 용법, 위상에는 당대의 경험과 기대, 발화자의 정치적 인식과 의도가 반영되어 있다. 해방, 분단과 전쟁, 권위주의적 통치, 4월혁명, 5·16쿠데타 등의 굵직한 현대사의 흐름은 '자유' 개념의 의미에도 반영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자유' 개념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정치적 정당화와 동원을 위한 명분으로 작용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자유' 개념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한국의 자유주의 담론이 어떤 과정으로 전개되고 변모되었는지를 파악할 것이다.

제4절 연구 방법

1. 내용분석과 군집분석

자료의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자유' 개념은 체계적으로 분류되어 분석될 필요가 있다. 먼저 자료에 사용된 '자유' 개념의 의미 변화 양상을 찾아보기 위해 거시적 수준에서의 내용분석(content analysis)을 수행했다. 이를 위해 자료에서 '자유' 개념이 사용된 문장들을 추출하고 그와 공출현(co-occurence)한 개념들을 정리했다.

공출현 개념들의 빈도를 파악하는 작업은 기초적인 수준의 내용분석 방법에 해당한다. 내용분석은 특정 분류 기준에 따라 빈도를 기록하는 방식으로 수행된다. 내용분석은 언어가 인간의 인지(cognition)에 중요하게 작용하며, 특정 빈도는 해당 개념의 인지적 중심성을 측정하는 척도라는 전제를 두고 있다. 또한 개념 사용 빈도의 변화는 태도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고 본다(Duriau et al., 2014: 6).

내용분석 방법을 매체 분석에 적용한다면 매체에 수록된 글의 저자, 장르, 주제별로 빈도를 측정할 수도 있고, 특정 개념의 출현 빈도를 측정할 수도 있다. 연구 목적에 따라 분류 기준을 정하고 빈도를 분석함으로써 매체의 성격과 담론의 추세를 파악할 수 있다(이수상, 2014: 51-52). 물론 측정된 빈도는 연구자의 해석을 거쳐 의미가 부여된다. 따라서 내용분석은 그 의미를 확정하기 위해 부가적인 분석을 필요로 한다.

개념사 연구를 통해 알 수 있듯 '자유' 개념처럼 논쟁적인 개념들은 그

의미가 자명하지 않다. 어떤 맥락에서 개념이 발화되었으며, 어떤 개념들과 함께 의미를 구성하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대량의 텍스트를 분석할 때 공출현 개념들의 빈도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Fairclough, 2012: 26). 공출현 개념들의 빈도를 파악한다면 '자유' 개념이 어떤 주제와 주로 연관되었는지, 어떤 주체를 호명하고 있는지 개략적으로 알 수 있다. 또한 이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한다면 개념의 의미와 용법의 변화를 추세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 결과를 당시의 정치·사회적 맥락과 연관지어 분석하면 각 시기별로 '자유' 개념이 어떤 문제에 대한 응답으로, 어떤 의도에서 발화되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접근법은 텍스트의 성격보다는 개념 간의 관련성을 밝히는 작업이라는 점에서 내용분석 접근법 중 관계적 분석(relational analysis)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Babbie, 2013: 457).

이 연구에서 내용분석은 『사상계』 '자유' 담론의 전반적인 흐름을 확인하기 위해 수행하고자 한다. 특정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연역적 방법이 아니라 연구의 틀을 잡기 위한 귀납적 방법으로 내용분석을 사용할 것이다.

공출현 빈도가 높은 개념을 파악하기 위해 한국어에 특화된 내용분석 프로그램인 KrKwic과 워드프로세서의 '찾기' 기능을 병행하였다. KrKwic으로는 전체 텍스트에서 자주 사용된 개념들을 대략적으로만 확인할 수 있다. 띄어쓰기 단위로 개념을 인식하기 때문에 조사가 붙고, 복합어가 빈번한 국어의 특성상 빈도가 정확히 계산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KrKwic를 통해 자주 사용된 개념을 전반적으로 탐색하여 유력 개념들의 후보군을 작성하고 정확한 빈도수는 워드프로세서의 찾기 기능을 통해 계산했다.

또한 KrKwic로 추출된 개념 간의 코사인 유사도(cosine similarity)를 자료로 군집분석도 수행했다. 이를 통해 개념 간 공출현 패턴의 유사성이 높은 개념들을 군집으로 파악할 수 있다. 코사인 유사도는 개념들의 공출현 빈도와 패턴의 유사성을 모두 포괄한다(김재우, 2020: 71). 이 연구의 자료에서 예를 들면 1952~58년의 기간 중에 '경제' 개념과 '통제' 개념의 코사인 유사도가 매우 높게 측정되었다. 이는 '자유' 개념이 사용된 문장에서 '경제' 개념과 '통제' 개념이 함께 출현한 빈도가 높으며, 둘 중 한 개념만 출현한 빈도는 높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코사인 유사도를 통해 군집분석을 수행하면 어떤 개념들이 공출현 패턴이 유사한지 알 수 있게 된

다. 군집분석에 사용한 프로그램은 네트워크 분석에 사용되는 UCINET이다.

빈도가 낮은 개념들은 분석에서 배제되도록 시기별로 상위 40개의 개념을 대상으로 군집을 나누었다. 군집화의 정도를 정하는 문제는 정해진 법칙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결정해야 한다(홍두승, 2008: 306-307). 여기서는 군집에 대한 의미화를 위해 군집 수가 7~9개에 한정되도록 수준을 정했다. 군집화된 개념들을 통해 어떤 이슈가 어떤 개념들을 중심으로 논의되었는지 개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2. 담론분석

담론은 현실에 대한 해석, 재현, 주장을 담은 언표들의 집합이라고 할 수 있다(이기형, 2006: 110). 담론으로 간주될 수 있는 범주가 매우 넓기에 이를 분석하는 방법 또한 고정되어 있지 않다. 담론의 성격, 연구의 주제에 따라 분석 방법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담론분석의 기본적인 목적은 해당 담론이 뜻하고자 하는 바를 명료히 보여주는 데 있다. 담론이 어떤 의도로, 어떤 맥락에서 산출된 것인지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데 담론분석의 요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비판적 담론분석(critical discourse analysis)의 방법론을 참고하여 분석에 활용하고자 한다. 신진욱(2011: 12)에 따르면 비판적 담론분석은 세 가지 특징을 갖는다. 첫째, 거시적 중요성을 갖는 문제들에 착목하고, 둘째, 담론권력이 작동하는 사회적 조건에 대한 비판적 분석에 집중하며, 셋째, 구체적 맥락과 연계된 담론의 행위성을 중시한다. 개념사 연구의 전제와 마찬가지로 비판적 담론분석은 담론이 사회적 조건의 산물이면서, “사람, 행동, 사회관계, 물질세계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데에 ‘인과 효력’을 지닌다”고 본다(Fairclough, 2012: 32). 이처럼 비판적 담론분석 이론에 따르면 담론분석 작업은 언어적인 데 그치지 않는다. 담론은 거시적 사회구조, 상황 맥락 속에서 파악되어야 하며, 다시 담론이 상황과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

비판적 담론분석이 가정하는 인과 효력은 단순히 어떤 행위나 제도 변화를 요청하는 데 머물지 않는다. 담론은 무엇이 개인에게 바람직한 상태인지

를 알려줌으로써 특정한 지향을 가진 주체 형성을 의도할 수 있다. 물론 이는 알튀세의 호명(interpellation) 이론, 푸코의 통치성(governmentality) 이론에서 이미 선취된 바 있는 이야기다. 담론이 어떤 주체의 형성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 또한 담론분석의 핵심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비판적 담론분석 방법은 담론에 전제된 특정한 관점을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Fairclough, 2012: 475). 즉, 담론이 암묵적으로 전제된 상식이 무엇인가를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람시가 상식(common sense)과 양식(good sense)을 구분했듯, 담론은 헤게모니적 편향에 의해 보편화된, 그러나 논리적 근거에 입각하지 않은 상식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담론분석은 개념 간의 연결방식을 찾아내고 그 연결을 자연화하는(naturalize) 가정들을 추론하는 데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 연구는 장기간에 걸쳐 담론을 분석하기에 담론들이 변화하는 양상을 추적할 필요가 있다. 특정 매체의 담론 성향은 장기간에 걸쳐 장르, 주제, 현실 해석, 주장이 모두 변화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여러 가지 우연적 요소에 의해 비롯될 수 있다. 매체 구성원의 변화로 인해 논조가 바뀔 수도 있고, 역사적 사건에 의해 담론의 방향이 변화할 수도 있다. 물론 변화의 방향에는 구조적, 인지적 제약이 존재하겠지만, 담론의 행위성을 감안한다면 그러한 변화를 경시할 수 없다.

담론들이 각각의 의미를 갖는다고 본다면, 변화하는 것은 담론이라기보다 담론 유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정한 현실 인식과 주장을 공유하는 담론들을 담론 유형이라고 한다면, 매체의 담론 유형은 우연적 요소들과 더불어 현실의 이슈와 얽히면서 변화할 수 있다. 현실의 이슈에 대해 기존과는 다른 논점, 해석, 주장을 제시하는 담론이 등장할 수 있고, 그것이 공론장에서 설득력을 갖는다면 지배적 담론이 변화할 수 있다(신진욱, 2020: 418-419 참조). 쿤의 패러다임 이론이 설명하듯 기존의 담론들이 현실에 대한 해석력을 잃을 때 새로운 방향의 담론 유형이 나타날 여지가 크다. 이때 새롭게 등장하는 담론들은 집합적 정체성에 밀착된 방향으로 구사될수록 기존 담론을 대체할 가능성이 높다(Blyth, 2002).

『사상계』는 거시적 문제에 초점을 두고, 권력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시기마다 이슈를 선정해 담론을 생산했다. 또한 『사상계』 지식인들은 계몽의 기획 속에서 담론을 통해 인과 효력을 일으키는 데 목표를 두었다. 앞서

만하임이 말했던 것처럼 그들은 대중에 결탁하고자 한 지식인들이었다. 이런 점에서 『사상계』 담론의 성격은 비판적 담론분석의 연구 대상으로 합치하는 부분이 많다. 물론 비판적 담론분석의 초점 중 하나가 지배 담론에 대한 비판인 데 반해 『사상계』 지식인들의 담론은 지배 담론이라고 볼 수 없다. 특히 1960년대 『사상계』 담론은 권력 비판을 의도한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그들의 담론 또한 비판적으로 독해될 필요가 있다. 그들의 비판 담론은 지배 담론의 허위성을 고발하는 데 그치지 않았으며, 저항적 자유주의 세력, 이른바 민주화 세력의 또 다른 상식을 만들어 내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그 영향력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남아 있다.

이 연구에서는 비판적 담론분석을 참조하여 지식인들의 '자유' 담론을 구조적 조건, 상황적 맥락 속에서 파악할 것이다. 또한 '자유' 담론이 무엇을 요구했으며, 어떤 주체를 형성하고자 했는지도 분석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자유' 담론 유형의 변화 양상을 추적하고, 변화에 영향을 준 요인들이 무엇이었는지 검토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식인들, 특히 『사상계』 지식인들의 '자유' 담론이 어떠한 상식을 전제로 했으며, 또 어떠한 상식을 만들어 냈는지 확인해 볼 것이다.

제5절 연구 자료 소개 및 『사상계』 자료 검토

1. 자료 소개

주요 자료는 『사상』 및 『사상계』이다. 그 외에도 『신천지』, 『새벽』, 『청맥』 등의 잡지 및 각종 신문에 나타난 지식인들의 담론도 살펴보았다. 또한 지식인 담론과 대비해 보기 위해 이승만과 박정희의 대통령연설문 및 저작들도 검토했다.

『사상』은 1952년 8월에 창간되었고 경영난과 정치적 사정으로 인해 1952년 12월, 4호를 끝으로 폐간된다. 이후 장준하의 노력에 의해 1953년 4월 『사상계』가 『사상』의 후신으로 창간되어 1970년 5월까지 발행되었다. 『사상계』가 1950년대와 1960년대에 지배 세력과 거리를 두고 때로는 협력하고 때로는 저항했던 지식인들의 담론을 대표하는 잡지였다. 『사상

계』에는 다양한 입장들이 혼재되어 경합하기도 했지만, 시종일관 자유민주주의를 중심 이념으로 삼았다는 점(이상록, 2020: 71)에서 이 연구에 부합하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내용분석은 『사상』과 『사상계』 수록 글 중 번역물, 서구 사상 및 사상가 소개글, 해외 상황에 대한 보도, 문학 작품, 독자 투고를 제외한 모든 텍스트에서 '자유' 개념이 사용된 문장을 수집하여 수행했다. 번역물과 서구 사상 소개글에서 제시된 '자유' 개념은 당대 한국의 지식인들이 '자유' 개념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보여주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문학 작품과 독자 투고는 『사상계』 지식인들의 직접적인 담론이 아니라는 점에서 배제했다. 『사상계』의 텍스트는 디지털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직접 읽으면서 문장을 발췌하여 자료화했다. 이로 인해 누락된 문장이 있을 수 있으나 전체적인 추세를 확인하는 데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새벽』은 주요한의 주도로 1954년 6월 창간되어 1960년 12월 종간된 잡지로 민주당 신파의 입장을 충실하게 보여준다. 『새벽』은 『사상계』보다 고전적 자유주의에 더 가까운 담론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검토해볼 가치가 있다. 다른 한편 『청맥』은 1964년 8월 창간되어 1967년 6월에 종간되었다. 『청맥』은 제3세계 민족주의에 공감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상대화하는 담론을 보여주었다. 『사상계』와 『청맥』은 모두 박정희 정부에 비판적이었지만 전혀 다른 논리를 구사했다는 점에서 비교해 볼 수 있다.

한국전쟁 이전의 지식인 담론을 검토하기 위해 1946년 2월 창간된 『신천지』를 검토할 것이다. 『신천지』는 창간 이래 1949년까지 다양한 좌우익을 망라하는 담론을 게재했다. 그렇다고 『신천지』가 무이념적이었던 것은 아니다. 『신천지』 편집의 방향은 좌우합작을 추진했던 중간파의 입장에 가까웠으며, 『신천지』에 나타난 다양한 정치적 스펙트럼은 좌익과 우익 간의 소통을 위한 기획의 산물이었다. 특히 중간파의 '자유' 담론을 살펴보는 데 『신천지』는 유의미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신천지』와 『사상계』를 비교한다면 전쟁을 전후로 한 한국 자유주의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을 것이다.

2. 『사상계』 내용분석 및 시기구분

『사상계』는 『사상』까지 포함한다면 19년 동안 발행되었다. 이 기간 동안 숱한 정치적 격변들이 있었고, 『사상계』의 논조도 내외적 이유로 변화했다. 따라서 『사상계』의 시기를 구분하여 담론의 변화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전체적인 분석의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두 가지 방식으로 시기 구분을 시도하고자 한다. 하나는 편집위원회의 구성 변화에 주목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연구 목적에 따라 '자유' 담론에 사용된 개념들의 빈도를 시계열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이다.

(1) 편집위원의 학문적 배경

『사상계』는 초기 장준하 1인 체제로 운영되었으나 1955년 1월에 들어 주간직을 설치하고 편집위원회를 구성하여 체계적인 운영을 시작하였다(김경숙, 2018: 81). 편집위원들이 글을 직접 게재하고, 투고된 글들을 심사하고, 글을 청탁하는 역할까지 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편집위원회의 변화는 잡지의 성격 변화와도 직결될 수 있었다. <표 1-1>은 편집위원회의 변화 시점별로 각각의 학문적 배경에 해당하는 편집위원의 수를 정리한 것이다. 또한 <그림 1-1>에서는 크게 인문학과 사회과학으로 분류하여 편집위원회에서 각 분야의 편집위원들이 차지하는 비중을 시계열로 나타내었다.

편집위원들의 학문적 배경을 시계열로 놓고 본다면 두 번의 큰 변화가 관찰된다. 첫 번째는 1958년 4월 주간이 김성한에서 안병욱으로 교체된 시기와 일치한다. 안병욱은 1950년대 『사상계』에서 김성한은 문학을, 자신은 교양을, 김준엽은 사회과학을 담당했다고 회고했다(장준하선생20주기추모문집간행위원회 편. 1995: 16). 안병욱이 주간에 선임된 1958년 4월에만 김상협(정치학), 김하태(철학), 신응균(군사학), 유창순(경제학), 이상구(경제학), 이종진(과학), 장경학(법학), 한우근(역사학), 현승종(법학), 황산덕(법학) 등 총 10명이 편집위원으로 추가되었다. 반면 강봉식(문학), 정태섭(법학), 한교석(문학), 홍이섭(역사학)은 해촉되었다. 그 결과 위의 <그림 1-1>에서 보이듯 편집위원회에서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비중이 역전되는 양상이 나타

났다. 그리고 안병욱에서 김준엽으로 주간이 교체된 이후에도 전반적인 비중은 변화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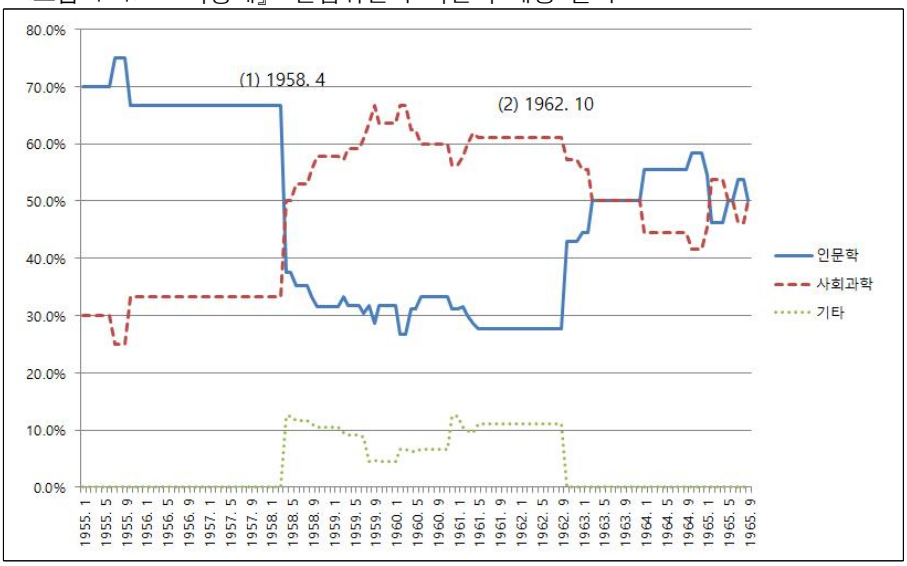
<표 1-1> 『사상계』 편집위원의 학문적 배경 변화

시기	주간	총원	문학	철학	신학	역사학	법학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군사학	과학	비고
1955. 1	김성한 (문학)	10	3	1	2	1	1	1		1			편집위 설치
1955. 6		9	3	1	2	1	1			1			
1955. 7		12	4	1	2	2	1	1		1			
1955. 10		12	4	1	1	2	1	1	1	1			
1958. 4	안병욱 (철학)	16	2	2		2	3	2	3		1	1	
1958. 6		17	2	2		2	4	2	3		1	1	
1958. 9		18	2	2		2	4	2	4		1	1	
1958. 10		19	2	2		2	5	2	4		1	1	
1959. 3		21	3	2		2	5	2	4	1	1	1	
1959. 4		22	3	2		2	5	2	4	2	1	1	
1959. 7		23	3	2		2	6	2	4	2	1	1	
1959. 8		22	3	2		2	6	2	4	2		1	
1959. 9		21	2	2		2	6	2	4	2		1	
1959. 10		22	3	2		2	6	2	4	2		1	
1959. 11	김준엽 (역사학)	22	3	2		2	6	2	4	2		1	주간만 교체
1960. 2		15	1	2		1	5	2	2	1		1	
1960. 4		16	2	2		1	5	2	2	1		1	
1960. 6		15	2	2		1	4	2	2	1		1	
1960. 12		16	2	2		1	4	2	2	1	1	1	
1961. 2		19	3	2		1	5	3	3		1	1	
1961. 3		20	3	2		1	5	3	3	1	1	1	
1961. 4		21	3	2		1	5	3	4	1	1	1	
1961. 5	양호민 (정치학)	18	3	2			4	2	4	1	1	1	
1962. 10		7	2	1			1	1	1	1			대폭 해촉
1963. 1		9	3	1			1	2	1	1			
1963. 3		10	3	2			1	2	1	1			
1964. 1	공석	9	3	2			1	1	1	1			
1964. 10	지명관 (신학)	12	4	2	1		2	1	1	1			
1965. 1		11	3	2	1		2	1	1	1			
1965. 2		13	3	2	1		3	2	1	1			
1965. 5		14	3	2	1	1	3	2	1	1			
1965. 7		13	3	2	1	1	2	2	1	1			
1965. 9		14	3	2	1	1	2	3	1	1			
1965. 10	정치교수 파동으로 편집위원 전원 해촉[9]												
1968. 11	부완혁 대표 취임												

※ 출처: 김경숙(2018: 84-86), 이상록(2020: 67-70)을 참고하여 작성

9) "한·일협정에 따른 포악과 소란, 역사상에 없었던 학원난입과 휴업령, 그리고 이른바 「정치교수」 축출을 위한 집요한 압력. 심지어는 『동아일보』나 본 『사상계』에 관여한 교수를 다만 그 사실만으로 당국에서 징계대상으로 문제삼겠다는 설까지 나타났다. 이리하여 본사에서는 본의 아닌 누를 끼칠까 하는 염려에서 대학교수직을 가진 편집위원을 전원 해촉하기에까지 이르

<그림 1-1> 『사상계』 편집위원의 학문적 배경 변화



※ 인문학=문학+철학+신학+역사학

※※ 사회과학=법학+정치학+경제학+사회학

안병욱의 회고담만 놓고 본다면 1958년 4월의 개편은 편집위원의 지적 배경을 다변화함으로써 교양의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사상계』에 1958년 입사해 취재부장을 역임한 이문휘 또한 이 당시의 개편을 "『사상계』의 발전과 함께 보충"이라고 회고했다.[10] 다시 말해 『사상계』가 학술의 영역을 인문학에서 사회과학으로 확대하고, 독자를 확장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나타나게 된 변화라고 할 수 있다(김미란, 2012). 1959년 11월 김준엽으로 주간이 교체된 후에도 사회과학 중심의 편집위원회는 큰 변화 없이 유지되었다. 교양의 다변화와 대중화라는 전략은 1959년 초부터 4월혁명에 이르는 국면까지 『사상계』가 저항매체로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데도 일조했다. 물론 4월혁명과 5·16쿠데타를 겪으면서 『사상계』의 담론은 교양에 머물지 않았다. 『사상계』 지식인들은 담론을 통해 현실참여적 지향을 실현하고자 했다(김건우, 2017). 사회과

렀었다". "[권두언] 오늘의 極限狀況은 누구의 責任인가", 『사상계』 153호(1965. 11), 26쪽.

10) 이문휘 선생과의 이메일 인터뷰 답신(2021. 1. 4).

학 필진의 강화는 4월혁명 이후 『사상계』의 국가 재건 구상이 학술적 토대 위에서 전개되는 데 영향을 주었다.

두 번째 변화는 1962년 10월 편집위원회를 대폭 축소한 결과로 나타났다. 양호민은 1961년 5월에 주간에 취임했으나, 주간 교체 시점에서 편집위원의 구성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하지만 양호민 주간 체제에서 1962년 10월 갑작스럽게 편집위원이 18명에서 7명으로 축소되는 개편이 단행되었다. 해촉된 편집위원은 김상협(정치학), 김증한(법학), 김하태(철학), 성창환(경제학), 신응균(군사학), 이봉순(문학), 이정환(경제학), 이종진(과학), 이창렬(경제학), 최문환(경제학), 한태연(법학), 황산덕(법학) 등 12명이며, 새로 위촉된 편집위원은 김영록(경제학) 한 명뿐이었다. 기존 편집위원 중 경제학자들이 전원 해촉되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김영록이 편집위원으로 위촉되었다(정진아, 2012: 357).

이 시점의 변화는 군사정부를 둘러싼 지식인의 입장 분화와 관련되어 있다. 함석헌을 제외한 『사상계』 지식인 다수가 상당 기간 동안 5·16쿠데타에 대해 협력적 관계를 유지했다는 점은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군사정부는 1962년에 들어 사장 장준하와 주간 양호민을 "정치부패에 현저한 책임이 있는 자"로 분류하여 정치정화법에 의거 정치활동을 금지시켰다.[11] 민주당 정부 시절 재무부장관 김영선으로부터 『사상계』의 채무 변제 자금을 지원받은 일을 구실로 삼아 군사정부가 장준하를 부패언론인으로 지목한 것이다(김삼웅, 2009: 435-438). 또한 쿠데타 세력은 1963년 8월에 민정이양을 약속했지만, 약속한 시간이 다가올수록 모호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

쿠데타 세력에 대한 평가, 군사정부로부터 받은 처우, 지식인의 현실 참여에 대한 문제의식 등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각자의 입장이 정해졌을 것이다.[12] 그러나 선택지는 크게 세 가지였다. 현실과 분리된 학문의 길을 가는

---

11) "정정(政淨)법 심사대상자명단", 『동아일보』 1962. 4. 1.; "적격자 중의 지명(知名)인사", 『동아일보』 1962. 5. 31. 장준하는 이러한 조치를 함석헌의 "5·16을 어떻게 볼까", 『사상계』 96호(1961. 7)를 게재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여겼다(김삼웅, 2009).

12) 김진현 전 장관과의 인터뷰(2021. 1. 13). 김진현은 유익형, 이문휘, 계창호 등 『사상계』 편집실무진 및 장준하의 동생 장창하와 학연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는 1958년 연합신문에 근무할 때부터 장준하를 비롯한 『사상계』 지식인들과 자주 어울렸으며, 『사상계』에 번역물을 게재하기도 했다. 1960년대 후반 장준하가 정치에 본격적으로 참여할 때 그는 『동아일보』 간부로서 장준하에게 사적으로 여러 정보를 제공했다고 술회했다.

것, 근대화를 위해 군사정부에 협력하는 것, 비판적 지식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는 것이다. 현실 참여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던 『사상계』 편집위원들은 군사정부와의 협력 의향에 따라 체제지식인과 재야지식인으로 분화되었다(이상록, 2020: 66). 1962년 10월 해촉된 위원 대부분은 당시 군사정부와 협력 관계에 있었다.[13] 김상협은 문교부장관에 재직 중이었고, 신응균은 국방부 차관을 거쳐 주서독대사로 파견되어 있었다. 성창환, 이정환, 이창렬, 최문환 등의 경제학자들은 최고회의 고문, 각종 자문회의와 위원회의 위원 등으로 위촉되었으며, 헌법학자 한태연은 제3공화국의 헌법을 준비하는 헌법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약했다. 반면 새로 위촉된 김영록의 경우 민주당 정부 하에서 이재국장으로 일하다가 군사정부에서 쿠데타 세력과 알력을 겪고 사직한 후에 장준하와의 인연으로 『사상계』에서 일하게 되었다(김영록, 1992).

1962년 10월을 기점으로 편집위원회에서 사회과학의 비중이 축소되고 인문학의 비중이 확대된 것은 학문적 특성과도 연관되어 있다. 군사정부에 협력한 해촉 위원들의 학문적 배경은 법학과 경제학에 편중되어 있었다. 군사정부는 쿠데타 이후 법률적인 정당화를 위해 법학자를 필요로 했고, 경제계획 수립과 운영을 위해 경제학자를 필요로 했다. 『사상계』의 법학자와 경제학자들은 군사정부의 우선 포섭대상이었다. 물론 협력 여부는 개인에게 맡겨진 것이었지만, 군사정부와 협력 관계를 갖게 된 법학자들과 경제학자들은 국정 운영에 대한 책임까지 일부 공유하게 되었다.

1962년을 경과하면서 『사상계』 지식인들 사이에 군사정부에 대한 태도는 확연하게 분화되었다. 1962년 10월 편집위원회의 축소 개편은 군사정부와 박정희의 집권 연장을 반대하는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사상계』가 거듭나겠다는 선언과도 같았다. 1962년 11월 『사상계』의 권두언은 지식인의 역할을 다시금 상기시키는 내용을 담았다. “지식인은 만년야인이어야” 하며, 그 야인이란 “정치참여 속에서도 국민의 입장, 대중의 입장을 견지하는 건전한 비판정신이 마비됨이 없는 「마음의 야인」”을 뜻한다고 말했다.[14] 이는 현실 참여의 두 갈래 길 중 비판의 길을 가겠다는 자기 다짐이

13) 해촉 위원 12명 중 박정희의 통치 기간 동안 어떠한 공직도 맡지 않았던 인물은 김하태, 이봉순 2명에 불과했다. 황산덕은 한일협정 국면에서 정치교수로 지목당하여 파면되었으나, 1974년 법무부장관직을 수락했다.

14) “[권두언] 또 다시 知識人들에게 荊冠을”, 『사상계』 113호(1962. 11), 27쪽.

기도 했다.

『사상계』 편집위원회의 변화를 놓고 본다면 1958년 4월과 1962년 10월을 기준으로 세 개의 시기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변화의 의도를 놓고 본다면 1957년 4월 이전은 인문학 중심의 계몽기로, 1957년 4월부터 1962년 10월까지는 사회과학에 중심을 두고 계몽과 참여를 모색하던 시기로, 1962년 10월 이후는 비판적 참여의 시기로 볼 수 있다. 연도별로 본다면 창간 이래 1957년 또는 1958년까지를 첫 번째 시기로 보고, 이후 1962년까지를 두 번째 시기로, 1963년부터 종간까지를 세 번째 시기로 볼 수 있을 것이다.

(2) '자유' 담론에 사용된 개념의 비중 변화

여기서는 연구의 목적에 맞게 『사상계』에서 '자유' 개념이 사용된 문장들을 직접 분류하여 자료화한 후 각 문장 내에서 공출현한 개념들의 빈도를 확인했다. 이를 시계열적 흐름으로 표시해본다면 <표 1-2>과 같다. 『사상계』 창간 이래 '자유' 개념과 한 문장 내에서 공출현한 빈도가 높은 개념의 변화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1953~58년, 1960~61년의 기간 중에는 '경제' 개념이 늘 첫째 또는 둘째로 자주 나타나는 개념이었다. 반면 1960년, 1962~70년까지는 '민주' 개념이 그러했다. 또 주목할 것은 '자유'의 주체와 관련된 개념의 비중 변화다. 개인, 인간, 사람, 국민, 민족 등의 주체 개념은 경합적으로 사용될 수밖에 없다. 개략적으로 본다면 1950년대에는 '개인'과 '국민'이 경합하되 '개인' 개념의 빈도가 더 높았다고 할 수 있다. 반면 1960년대에는 '국민' 개념이 압도적으로 자주 사용되었다(그림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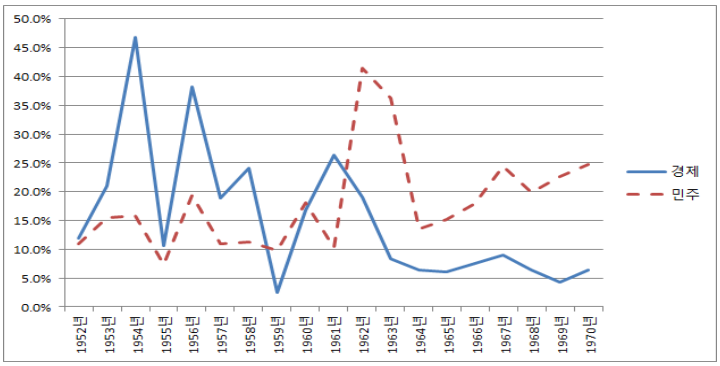
이러한 경향은 『사상계』의 '자유' 담론을 두 방향에 집중하여 분석해야 한다는 점을 알려준다. 하나는 경제적 자유, 경제체제로서 자유경제와 관련된 문제이다. 다른 하나는 자유와 민주주의의 관계 그리고 정치체제로서 자유민주주의와 관련된 것이다. 경제 이슈는 1962년까지 『사상계』 '자유' 담론의 핵심에 있었다. 반면 '민주' 개념은 1960년부터 폐간에 이르기까지 『사상계』 '자유' 담론의 골조를 이루고 있다. 1959년부터 1962년의 기간은 두 개념의 중요성이 점차 교차하는 시기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1-2> 『사상계』에서 '자유' 개념과 공출현한 개념의 빈도 순위

순위	52년	53년	54년	55년	56년	57년	58년	59년	60년	61년
1	인간	경제	경제	사회	경제	경제	법	법	민주	경제
2	국가/	민주	법	경제	민주	사상	경제	사회	경제	사회
3	개인	세계	국가	국가	사회	민주	사회	국가	법	국가
4	사회	공산	민주	민주	정치	개인/	국가	민주	사회	민주
5	사상	정치/	정치	인간	법/	평등	민주	국민	선거	정치
6	근대	국가	국민/	개인	국가	인간	국민	언론	정치	언론
7	생활	한국	통제	사람	개인	사회	개인	사람	국민	계획
8	경제/	진영	사회/	권력	보장	법	사상	권리	국가/	개인
9	사람	미국	자본	평등	언론	통제	보장	정치	보장/	국민
10	민주	사회	체제	자본/ 정치	국민	해방	통제	인간	한국/ 진영	인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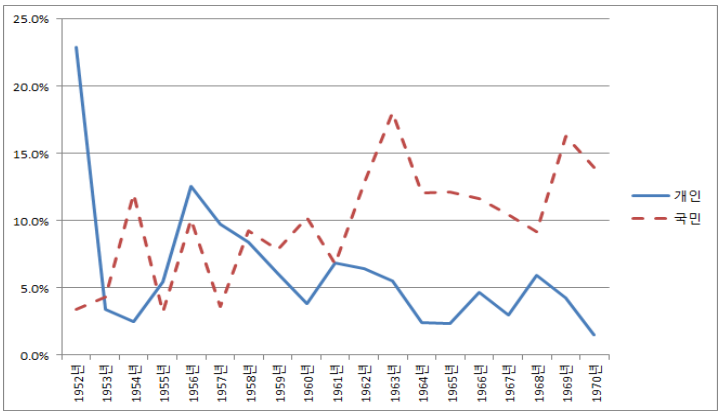
순위	62년	63년	64년	65년	66년	67년	68년	69년	70년	전체
1	민주	민주	법	민주	민주	민주	민주	민주	민주	민주
2	사회	정치/	민주	정치	사회	선거	사회	언론	정치	사회
3	경제	국민	언론	국민	국민	정치/	정치	국민	언론	경제
4	정치	법	국민	사회	정치	국민	법	법	국민/	법
5	법	국가	사회	법	법	경제	국가	사회	대학	정치
6	국민	사회	국가	국가	선거	정부	국민	정치	국가	국가
7	국가	민족	대학	일본	경제	사회/	권력	보장	사회	국민
8	자본/	선거	학원	미국	공산	법	인간	국가	민족	언론
9	한국	경제	정치	한국/	민족	한국	언론	대학	법	개인
10	민족	언론	경제	공산	인간/ 사람	발전	경제	학생	체제	보장

<그림 1-2> '경제'와 '민주'의 비중 변화



※ 각 개념의 빈도를 '자유' 개념의 빈도로 나눈 값

<그림 1-3> '개인'과 '국민'의 비중 변화



※ 각 개념의 빈도를 '자유' 개념의 빈도로 나눈 값

이렇게 본다면 『사상계』의 '자유' 담론 또한 세 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952~58년의 '자유' 담론은 경제적 자유 또는 자유경제를 둘러싼 논의에 집중되었다(1기). 1959~62년에도 경제적 자유와 관련된 논의가 중요하게 다루어지지만(1959년 제외), 4월혁명과 5·16쿠데타를 경과하면서 민주주의가 '자유' 담론의 핵심 이슈로 대두되었다(2기). 마지막으로 1963~70년의 '자유' 담론은 '민주', '국민'을 중심으로 정치적 동원에 주로 결부되었다(3기).

이러한 분류는 앞서 편집위원회의 변화 시점에 따른 시기 구분과도 개략적으로 일치한다. 특히 1962년 10월 편집위원회의 축소 개편은 정치적 이유에 기인하는 것이었기에 '자유' 담론이 민주적 요구를 담아내는 데 집중된 것과 연관된다. 하지만 1958년 4월의 편집위원회 개편의 동기는 외적인 데 있지 않았다는 점에서 두 시기의 유사성은 필연적이라고 할 수 없다. 1959~1962년의 기간의 '자유' 담론은 1기와 3기의 과도기적 양상을 보인다. 이는 1958년 4월 이래 『사상계』에 영향력을 갖게 된 법학, 정치학, 경제학 배경의 지식인들이 정치적으로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제 각각 '자유' 담론을 발화한 데 기인한다.

각 시기별 '자유' 개념과 공출현한 개념들의 빈도 순위를 확인해 본다면 <표 1-3>과 같다.

<표 1-3> 『사상계』 시기별 '자유' 개념과 공출현한 개념의 빈도순위

순위	전체 (1952~70)		1기 (1952~58)		2기 (1959~62)		3기 (1963~70)	
1	민주	18.3%	경제	20.9%	민주	18.1%	민주	22.4%
2	사회	14.1%	사회	15.1%	경제	17.7%	국민	13.5%
3	경제	13.9%	법	11.9%	사회	15.5%	정치	13.3%
4	법	11.7%	국가	11.9%	법	10.6%	법	12.5%
5	정치	10.7%	민주	11.5%	국가	10.4%	사회	12.4%
6	국가	10.6%	개인	7.8%	정치	10.0%	국가	9.9%
7	국민	10.2%	정치	7.1%	국민	9.0%	언론	9.4%
8	언론	7.1%	사상	6.2%	언론	6.9%	경제	6.7%
9	개인	5.5%	국민	6.0%	개인	5.9%	보장	5.9%
10	보장	5.3%	인간	5.9%	한국	5.5%	민족	5.5%
11	한국	4.7%	보장	5.4%	인간	4.9%	대학	5.3%
12	인간	4.7%	평등	5.0%	체제	4.6%	한국	4.8%
13	민족	4.5%	사람	4.4%	공산	4.5%	선거	4.7%
14	공산	4.4%	통제	4.6%	보장	4.5%	공산	4.7%
15	사람	4.4%	세계	4.1%	계획	4.5%	정부	4.6%

※ 각 개념의 빈도를 '자유' 개념의 빈도로 나눈 값
(1기=3,127 / 2기=4,252 / 3기=5,375)

우선 1기, 2기, 3기를 비교해보면, 앞서 연도별로 살펴본 결론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1기에는 경제와 자유의 관계가 핵심적 주제였으며, 자유의 주체로서 개인이 자주 언급되었다. 2기에는 민주와 경제가 모두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자유의 주체로는 국민이 개인보다 다소 높은 빈도로 호명되고 있다. 이 시기에 연이어 발생한 정치적 격변에 맞서 『사상계』 지식인들은 환희와 환멸을 오가며 다양한 기획과 구상을 제출했다. '자유' 개념에 연관 개념들을 각 시기별로 놓고 본다면 2기는 1기와 3기의 과도기로서의 양상을 보였다. 3기에 '경제' 개념은 이전의 중요성을 잃게 되며, '자유' 담론에서 민주와 정치가 핵심 이슈라는 점을 볼 수 있다. 또한 주체로는 국민이 단연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되었다. 이는 3기에 이르러 『사상계』가 국민을 적극적으로 호명해야 할 중대한 변화를 겪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표 1-4> 『사상계』에서 '자유' 개념이 포함된 주요 복합 개념의 빈도

복합 개념	전체		1기(1952~58)		2기(1959~62)		3기(1963~70)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자유민주	683	5.4%	70	2.2%	271	6.4%	342	6.4%
자유국가	48	0.4%	11	0.4%	10	0.2%	27	0.5%
자유세계	144	1.1%	24	0.8%	48	1.1%	72	1.3%
자유우방	47	0.4%	1	0.0%	9	0.2%	37	0.7%
자유진영	300	2.4%	40	1.3%	127	3.0%	133	2.5%
자유선거	107	0.8%	10	0.3%	42	1.0%	55	1.0%
자유경제	497	3.9%	246	7.9%	209	4.9%	42	0.8%
자유경쟁	166	1.3%	55	1.8%	52	1.2%	59	1.1%
자유권(리)	158	1.2%	47	1.5%	64	1.5%	47	0.9%
결사(의) 자유	57	0.4%	7	0.2%	14	0.3%	36	0.7%
기본(적) 자유	69	0.5%	27	0.9%	16	0.4%	26	0.5%
대학(의) 자유	69	0.5%	3	0.1%	4	0.1%	62	1.2%
사상(의) 자유	55	0.4%	20	0.6%	23	0.5%	12	0.2%
신앙(의) 자유	30	0.2%	12	0.4%	3	0.1%	15	0.3%
언론(의) 자유	484	3.8%	72	2.3%	162	3.8%	250	4.7%
종교(의) 자유	20	0.2%	4	0.1%	4	0.1%	12	0.2%
집회(의) 자유	22	0.2%	0	0.0%	5	0.1%	17	0.3%
출판(의) 자유	42	0.3%	7	0.2%	9	0.2%	26	0.5%
학문(의) 자유	83	0.7%	6	0.2%	16	0.4%	61	1.1%
학원(의) 자유	109	0.9%	1	0.0%	10	0.2%	98	1.8%
자유언론	44	0.3%	0	0.0%	7	0.2%	37	0.7%

※ 각 개념의 빈도를 '자유' 개념의 빈도로 나눈 값

<표 1-4>에서 '자유민주' 개념은 2기와 3기에 많이 사용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950년대에 자유민주주의는 사회민주주의에 대비되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 좌우익 전체주의에 대비되는 서구적 정치체제를 일컫는 의미로 더 많이 사용되었다. 이 시기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은 반공과 반독재였다고 할 수 있다. 1950년대에 '자유민주주의' 개념은 주로 법학자들과 정치학자들에 의해 사용되었다. 한편 박정희는 1961년 말부터 쿠데타를 정당화하기 위해 '자유민주주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를 건설하기 위해 쿠데타를 했고 군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상계』는 이에 대해 논평하면서 자유민주주의의 의미를 따지기도 했다. 1963년부터 『사상계』는 박정희가 약속한 자유민주주의의 준수를 요구하는 담론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기 시작했다.

<표 1-4>에서 가장 극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것은 '자유경제' 개념이다. 1950년대에 자유경제는 당시 한국의 경제체제 논쟁의 중심 개념이었다.

1950년대에는 부의 균분을 위한 '통제'의 필요성이 많이 제기된 반면, 1960년대로 넘어가면서부터 '계획'에 의한 성장이 더욱 중시되었다. '통제경제' 개념이 1기에 48회, 2기에 1회, 3기에 3회 사용되었고, '계획경제' 개념이 1기에 11회, 2기에 58회, 3기에 4회 사용되었다는 점은 이를 잘 보여준다. 3기에 경제 이슈 자체가 점차 감소했다는 점은 앞서 언급한 대로다.

『사상계』가 권리로서의 자유로 가장 강조한 것은 '언론의 자유'와 '학원의 자유'였다. 그리고 언론의 자유는 모든 기간에 걸쳐 자주 언급되었지만 3기에 가장 집중되어 있다. 또한 학문의 자유, 학원의 자유는 3기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권리로서의 자유가 탄압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주장되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일협정 국면부터 언론과 교수, 학생운동에 대한 집중적인 탄압이 시작되었고, 『사상계』 또한 그 영향을 받았다. 따라서 3기에 언론의 자유, 학문의 자유, 학원의 자유가 집중적으로 나타난 것은 박정희 정부와 『사상계』 간의 관계가 반영된 결과다.

(3) 시기별 군집분석

다음으로는 각 시기별 군집분석 결과를 확인해보겠다. 이를 통해 전반적인 담론의 추세와 개념 간 관계 변화를 볼 수 있다. 군집분석은 '자유'와 공출현한 개념 중 각 시기별로 빈도가 높은 40개의 개념을 대상으로 했다.

<표 1-5> 1기 군집분석 결과

(1-1)	권력, 선거
(1-2)	사람
(1-3)	개인, 국가, 국민, 권리, 민주, 발전, 법, 보장, 사상, 사회, 생활, 언론, 정치, 제도, 책임, 평등
(1-4)	근대, 역사, 인간
(1-5)	공산, 미국, 세계, 진영, 한국
(1-6)	독립, 민족, 정신, 해방
(1-7)	경쟁, 경제, 기업, 자본, 정부, 정책, 제한, 체제, 통제,

<표 1-6> 2기 군집분석 결과

(2-1)	사람, 인간, 정신, 정의
(2-2)	공산, 미국, 세계, 진영, 한국
(2-3)	선거, 제도
(2-4)	개인, 국가, 국민, 권력, 권리, 민주, 민족, 법, 보장, 사상, 사회, 생활, 시민, 역사, 운동, 정치, 제한, 질서, 평등, 혁명
(2-5)	경제, 계획, 기업, 발전, 자본, 체제
(2-6)	신문, 언론, 정부

<표 1-7> 3기 군집분석 결과

(3-1)	사람
(3-2)	공산, 미국, 세계, 일본, 진영, 한국
(3-3)	인간, 정신
(3-4)	독립, 민족, 발전, 역사
(3-5)	선거
(3-6)	개인, 국가, 국민, 권력, 권리, 민주, 법, 보장, 사상, 사회, 언론, 정부, 정치, 제도, 제한, 질서, 평등
(3-7)	독재, 정권
(3-8)	경제, 대중, 정책, 체제, 대중
(3-9)	대학, 학생, 학원

각각의 군집은 다소 분명한 의미를 보여주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군집분석을 통해 어떤 개념들이 높은 상관관계를 갖고 출현했는지는 알 수 있게 되었지만 군집에 대한 의미부여는 자의성을 띨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의미가 명확한 군집들을 중심으로 해석을 덧붙이고자 한다.

'민주' 개념이 포함된 군집(1-3, 2-4. 3-6)은 다양한 개념들과 연관되어 그 의미를 규정하기 어렵다. 다만 '자유' 담론에서 '민주'는 다양한 개념들과 연관을 갖는 준거적 개념이었다는 정도의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세 시기 모두에서 가장 뚜렷하게 보이는 것은 냉전진영론을 표상하는 개념들이 군집을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1-5, 2-2, 3-2). (3-2) 군집에 '일본'이 포함된 것은 이 시기 『사상계』가 한일협정 반대 투쟁의 논거 중 하나로 반공을 제시했기 때문이다(장세진, 2013: 67).[15] 군집분석 결과를 놓고 볼 때 냉전 자유주의 담론은 『사상계』 전 시기에 걸쳐 가장 일관된 개념

15) 『사상계』는 일본이 "현재 우리의 반공태세를 약화시키는 조련의 행동을 허용하고 우리의 교포를 북송하고 이북과 교역을 하고 문화교류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일협정은 공산화의 위험을 높인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대담] 辱된 길을 왜 서두느냐?: 韓·日問題의 全面的 再檢討", 『사상계』 147호(1965. 6), 95쪽, 부완혁 발언.

군으로 표현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경제체제와 관련된 개념들도 세 시기 모두에 군집을 이루고 있다(1-7, 2-5, 3-8). 1기의 경제체제론이 경제적 자유와 통제를 둘러싼 것이었던 데 반해, 2기의 경제체제론은 계획과 발전을 중심으로 했다는 차이를 볼 수 있다. 3기에는 경제 이슈가 축소되면서 군집을 이루는 개념들의 범위도 작아지는 양상이 나타난다. 그럼에도 『사상계』의 '자유' 담론에서 경제 문제는 전 시기에 걸쳐 독자적인 영역을 가지고 있었다.

'선거' 또한 세 시기 모두 독립된 군집을 이루고 있다(1-1, 2-3, 3-5). '선거'와 '자유' 개념은 1950년대에는 주로 선거에서의 자유분위기, 즉 관권의 개입 없는 선거를 요청하는 담론으로 나타났다. 반면 박정희 정부 시기에는 '선거'를 통한 정권교체가 자유민주주의 복원의 첩경으로 제시되었다. <표 1-3>에서 보이듯 선거는 3기에 특히 높은 중요성을 갖고 있었다.

시기별로 도드라지는 군집을 본다면 2기에는 언론 자유가 독립적 이슈로 제기된 데 반해 3기에는 학원 자유가 부각되었다고 할 수 있다(2-6, 3-9). 언론 자유 이슈는 1958년 12월의 국가보안법 파동(2·4파동), 1959년 4월의 경향신문 폐간 조치와 관련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기에 학원 자유 문제는 한일협정 국면 이후 대학에 내려진 조치에 대한 비판과 연관되어 있다(3-9). 또한 3기에 박정희 정부를 '자유'의 적인 '독재 정권'으로 규정하는 담론을 구사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3-7).

(4) 분석의 함의와 한계

『사상계』의 시기 구분과 내용분석, 군집분석은 전반적인 흐름을 독해하고 연구의 초점을 잡기 위한 시도였다. 이 연구는 한국의 비판적 자유주의 담론의 특성을 정치적 자유와 민주화를 요구하는 동시에 경제에서 국가의 개입을 요청했다는 것으로 규정했다. 이는 내용분석, 군집분석의 결과에 따른다면 '자유' 개념과 '경제', '민주' 개념의 의미연관에 각각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표 1-4>를 참조한다면 '자유경제'와 '자유민주' 개념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내용분석과 군집분석 결과에 따라 분석의 초점을 맞춤으로써 전체 담론의 흐름에 대한 자의적 해석에서 탈피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앞서 제시한 시기구분이 『사상계』의 담론을 분석하는 틀로는 불완전하다는 점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각각의 시기마다 '자유' 담론의 특징을 말할 수 있지만, 각 시기가 완전한 단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1962년 10월 편집위원회 축소는 분명한 변화 지점이었지만, 이전과의 연속성 또한 간과될 수 없다. 이 때의 개편은 편집위원 다수를 해촉한 것이었지, 다른 편집위원들로 대체한 조치가 아니었다. 즉, 기존의 성향을 일부 온존시키면서 특정한 성향을 도려낸 조치였던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사상계』의 '자유' 담론의 시기별 특징을 염두에 두되 시기별 구분에 따른 서술 방식을 택하지는 않을 것이다. 여기서는 『사상계』 '자유' 담론의 핵심 주제이자, 한국 자유주의 담론의 특징과 연관된 두 개념인 '경제'와 '민주'에 집중하고자 한다. 즉, 경제적 자유론과 자유민주주의론을 두 축으로 놓고 『사상계』의 자유주의 담론을 분석할 것이다.

제6절 분석틀과 논문의 구성

1. 분석틀

『사상계』에서 자유주의 담론이 균질적인 성격을 가진 것은 아니었다. 특히 1950년대와 1960년대에는 '자유' 담론의 핵심 쟁점이 달랐다. 대략적으로 보아 1950년대에는 경제체제를 둘러싼 담론이 중심이었다. 빈곤으로부터의 탈피를 위해 경제적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는가 통제되어야 하는가에 논점이 있었던 것이다. 반면 1960년대에는 정치적 자유의 확보를 위한 요구가 중심을 이루었다. 자유주의가 저항의 핵심적 가치로 제기된 것은 자유와 민권을 기치로 했던 4월혁명부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를 준거로 한 투쟁이 본격화된 것은 1963년 민정이양을 앞둔 시점부터라고 할 수 있다.

1950년대에 경제적 자유와 관련된 입장은 크게 보아 경제에 대한 적극적인 국가 개입 옹호론과 국영 산업 민영화론으로 나뉜다. 국가 개입을 긍

정하는 입장은 대부분 사회적 자유주의 또는 사회민주주의론에 근거하고 있었다. 국가가 인민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국가 개입이 옹호된 것이다. 반면 자유경제론자들, 즉 경제적 자유의 확대를 주장한 논자들은 이승만 정부의 경제체제가 관권의 과도한 개입으로 비효율적이며, 정경유착을 낳는다고 보았다.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자유경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두 입장은 1960년대에 접어들면서 경제계획론으로 수렴되는 양상을 보인다.

1960년대에는 자유민주주의의 보편성과 민족적 특수성 중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가 중요한 문제였다. 서구의 자유민주주의가 당대의 한국에서 발아할 수 있는가를 둘러싸고 입장이 갈렸다. 자유민주주의의 적용에 비관적인 지식인들은 한국의 후진성, 문화적 전통, 냉전 상황으로 인해 자유민주주의가 그대로 실현될 수 없다고 보았다. 이는 박정희의 민족적 민주주의론에서도 나타나지만, 민족주의적 관점을 뚜렷하게 내세우며 혁신계 입장을 대변한 『청맥』에서도 자주 발견되는 논리였다. 반면 『사상계』의 주류는 자유민주주의를 보편타당한 정치 체제로 간주했다. 경제적 발전 정도와 무관하게 자유민주주의는 실현될 수 있는 것이었고, 실현되어야 하는 것이었다. 민족적 특수성을 우선시하느냐 자유민주주의의 보편성을 우선시하느냐에 따라 지식인들은 분화되었다. 『사상계』에서 후자를 중요시한 지식인들은 박정희 정부에 대한 비판 세력으로 남게 되었다.

<표 1-8> 분석틀: 『사상계』 자유주의 담론의 쟁점

		경제적 자유에 대한 입장	
		자유경제론	국가 개입론 (복지국가론)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입장	자유민주주의의 보편성	(1)	(2)
	민족적 특수성 (후진성, 분단 상황)	(3)	(4)

(1)의 입장은 고전적 자유주의와 유사하다고 하겠다. 여기에 근접한 담론을 산출한 집단은 1950년대 주요한, 김영선 등 민주당 신파였다. 그들은 이승만 정부가 관권 개입을 통해 경제적 효율성과 민주주의를 모두 훼손하고

있다고 보았다. 정치적 민주화와 더불어 자유경제로의 전환을 요구했다. 『사상계』에서 고전적 자유주의 원칙에 충실한 지식인 일부는 1960년대에도 이러한 입장을 표명했다.

(2)의 입장은 장준하, 함석헌, 안병욱, 양호민 등 『사상계』를 대표한 필자들의 입장에 가깝다. 그들은 이승만, 박정희 정부에 대해 자유민주주의를 준거로 비판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국가 개입에 의한 성장과 분배를 요구했다. 그들은 빈곤을 인간성의 훼손의 차원에서 보았으며, 산업화에 따른 빈부격차의 확대가 공동체의 통합을 저해한다는 견지에서 국가 개입에 의한 재분배를 옹호했다. 그들의 입장은 휴머니즘적 자유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담론은 1950년대와 1960년대에 약간의 변화를 보일 뿐 지속되었다.

(3)의 입장은 성창환, 이동욱, 이정환, 이창렬 등 자유경제론을 주장한 경제학자들이 대변했다. 그들은 자유경제론을 주장했으나, 한국의 후진성을 이유로 국가의 개입과 계획이 한시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았다. 즉, 자유경제의 기틀을 잡는 방향의 국가 개입이 필요하다는 견해였다. 그들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회의를 직접적으로 표명한 적은 없었다. 그러나 박정희 정부와의 협력을 택함으로써 그들은 실천적으로 자유민주주의를 포기했다.

(4)의 입장을 가장 잘 보여주는 집단은 1960년대의 혁신계였다. 이들은 자유민주주의가 한국에서 잘 작동할 수 없다고 보고, 민족주의에 입각한 정치체제와 국가 개입에 의한 경제발전을 구상했다. 흥미로운 지점은 이들의 논리가 박정희가 주창한 민족적 민주주의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점이다. 실제로 혁신계는 민족적 민주주의에 대해 기대를 걸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들은 1964년 한일협정을 반민족주의적 행태로 규정하고 박정희를 비판하기 시작했다.

2. 논문의 구성

논문의 2장에서는 우선 『사상계』 이전 시기에 지식인들이 자유주의를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일제강점기의 신문과 잡지를 간략히 살펴볼 것이다. 또한 『신천지』를 통해 해방 정국에서 지식인들이 자유주의를 어떤 의도에서 수용하고 소개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3장에서는 1950년대 ‘자유’ 담론의 핵심 주제였던 경제적 자유와 관련된 담론들을 분석할 것이다. 경제적 자유에 관한 각각의 입장들을 검토하고, 그러한 입장들이 나타나게 된 정치적, 경제적 이유를 밝힐 것이다. 또한 1960년대에는 이러한 입장들이 어떻게 진화하는지 살펴볼 것이다.

4장에서는 정치적 자유주의 또는 자유민주주의를 둘러싼 관점들에 초점에 두고 담론을 분석할 것이다. 이를 통해 자유민주주의가 한국의 비판적 지식인들에게 어떻게 이해되었으며, 자유민주주의를 통해 무엇을 요구하고자 했는지 확인해 볼 것이다.

5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연구의 의의와 한계를 밝히면서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제2장 20세기 전반기 자유주의의 유입과 전개

개화기에 신지식인들은 자유주의를 서구의 제도적 원리로 이해하고 부국강병책으로서 수용했다. 그러나 별다른 결실을 맺지 못한 채 일제강점기에 들어서게 되었다. 일제강점기에도 일부 지식인들은 자유주의 담론을 통해 조선인의 자치와 정치적 자유를 요구하기도 했으나 반향은 없었다. 일제강점기에 자유주의는 현실적 의미를 갖지 못한 채 일종의 교양 지식으로서 존재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이 시기에 특징적인 것은 지식인들이 20세기 초반 영국에서 나타난 새로운 자유주의, 즉 사회적 자유주의를 접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해방 이후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모두를 거부하고자 한 지식인들은 사회적 자유주의를 그 절충점으로 보았다. 자유와 평등의 조화, 개인과 공동체의 조화라는 이상은 해방 직후 매혹적인 전망이었다. 또한 분단과 단정 수립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사회적 자유주의는 남과 북, 좌와 우를 통합할 수 있는 대안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현실에서 좌우합작은 실패하고 단정 수립과 전쟁으로 반공주의가 다른 모든 문제의식을 압도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극우 정치 세력은 반자유주의적 반공주의로 나간 반면, 자유주의적 가치를 중시했던 지식인들은 냉전 자유주의에 가까운 입장을 갖게 되었다.

제1절 20세기 초반 자유주의의 혁신: 사회적 자유주의

고전적 자유주의의 맥락에서 자유는 개인에게 구속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자유주의는 국가와 종교로부터 간섭받지 않는 개인 영역의 구축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겼다. 자유주의는 국가로부터 분리된 시민사회를 정당화하는 사상적 자원이었다. 개인은 누구라도 자기만의 영역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었다. 그러나 시민사회에서 자유는 평등하게 향유되지 않았다. 재산의 불평등은 자유의 불평등으로 이어졌다. 사회주의는 이러한 불평등에 대한 문제제기로 태동했다. 사회주의 운동의 확산으로 정치적 입지를 위협

받게 된 자유주의자들은 20세기 초반에 자유주의의 혁신을 도모했다. 이는 기회의 평등을 위해 경제적 자유의 제한과 국가 개입에 의한 재분배를 옹호하는 사회적 자유주의로 나타났다. 사회적 자유주의는 일제강점기 이래 한국의 지식인들에게도 영향을 주었다. 공동체와 개인의 자유를 조화시키려 한 한국 지식인들의 구상은 사회적 자유주의를 통해 체계적으로 담론화될 수 있었다.

1. 자유와 자유주의: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

이샤야 벌린(Isaish Berlin)은 자유를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로 구분하여 설명했다(Berlin, 2014: 339-424). 소극적 자유란 원하는 바를 수행함에 있어 외부로부터 간섭 받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러한 정의는 고전적 자유주의에서 '자유' 개념이 의미하는 바이기도 하다. 일례로 로크(John Locke)는 자유를 "타인의 허락을 구하거나 그의 의지에 구애받지 않고, 자연법의 테두리 안에서 스스로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바에 따라서 자신의 행동을 규율하고 자신의 소유물과 인신(person)을 처분할 수 있는" 상태라고 규정했다(Locke, 1996[1689]: 11).

물론 '자유' 개념은 자유주의의 발명품이 아니다. '자유' 개념은 고대 그리스 이래 오랜 역사를 갖고 있었다. 자유주의가 새로운 점은 자유의 주체를 개인으로 설정한 데 있었다. 근대 이전에 자유는 대부분 공동체의 자유를 의미했다(Ablaster, 2007: 196). 이러한 전환은 대체로 르네상스 이후에 나타난 것으로 평가된다. 자유주의는 개인을 속박에서 해방하는 이념으로 제시된 것이다. 자유주의는 개인을 중심에 두고, 국가, 종교와의 관계를 설정하는 담론으로서 영향력을 갖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여러 종류의 자유주의들이 있었지만, 그것들을 일관하는 가치 또한 개인주의라고 할 수 있다(문지영, 2011: 19-21).

로크가 "자연법의 테두리"라는 제약을 둔 것에서 볼 수 있듯 자유주의가 제한 없는 자유를 옹호하지는 않았다. 타인의 자유를 제약할 자유까지 허용될 수는 없다. 또한 사회적 삶을 위해서도 무제한한 자유를 인정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자유주의자들은 침해받지 않는 자유, 즉 소극적 자유의 영역이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고 믿었다. 이와 관련해 밀(J. S. Mill)은 내면 의식의 영역, 사생활의 영역, 결사(結社)의 영역을 인간 자유의 기본 영역이라고 주장했다(Mill, 2010[1859]: 36-37). 타인에게 해악을 끼치지 않는 한 이러한 자유의 영역은 침범될 수 없다. 자유주의자들은 외부로부터 간섭받지 않는 권리의 영역을 구축하는 데 진력했다.

자유주의자들이 이처럼 사회적으로 차단된 사적 영역을 중시한 것은 인간에 대한 독특한 관점에서 기인한다. 그들에 따르면 인간은 상호의존적인 사회적 동물이 아니라 사적 영역에서만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자기완결적 존재다(Ablaster, 2007: 103). 심지어 사회적인 혁신 또한 개인의 사적 공간에서 시작된다(Mill, 2010: 124-125). 아담 스미스(Adam Smith)가 보여주었듯 개인에게 부여된 자유는 공적인 이익으로 수렴된다는 점에서도 바람직했다. 자유주의자들은 개인의 자아실현 과정에서 사회적 혁신이 일어나고 공익이 증가한다고 낙관했다.

고전적 자유주의에서 '자유' 개념이 소극적 의미로 사용된 데 반해, 20세기에는 적극적 의미의 '자유' 개념 또한 자주 사용되었다. 벌린에 따르면 적극적 자유는 특정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상태와 연관되었다. 그 행위란 단순한 쾌락이나 유흥에서 벗어난 것이어야 했다. 자유는 현실의 자아가 아닌 '진정한' 자아에게 주어져야 했다. 현재의 자아가 원하는 행위들은 진정한 자아가 원하는 것과 배치될 수도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개인들은 더 원숙하고 이성적인 자아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숙고하면서 행동할 때 자유롭다. 낮은 본성에서 벗어나 더 높은 수준의 도덕적, 이성적 행위를 지향해야 한다는 것이 적극적 자유의 의미다. 고립된 개인의 쾌락 추구에서 벗어나 공동체에 기여하는 것이야 말로 고귀하고 품격있는 자유로 규정된다. 더 나은 자아를 만들기 위해 스스로를 단련하고, 절제하는 것 또한 적극적 자유에 포함된다. 소극적 자유가 즉각적 행위와 연관된다면 적극적 자유는 도덕적 방향성을 갖고 있다(Berlin, 2014: 362-368).

벌린은 소극적 자유만이 진정한 의미의 자유라고 판단했다. 그는 적극적 자유 개념이 특정한 인간형을 강요하는 데 쓰일 수 있다고 보았다. 그는 적극적 자유론에 의해 자유의 방향성이 획일적으로 강요될 위험이 있다고 평가했다. 적극적 자유론에는 전체주의가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다. 공동체의 질서와 조화 또한 중요한 가치지만, 그것에 지향된 행위까지 자유 개념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자유는 어디까지나 개인에 대한 외적 제약의 문제다. 자유의 평등한 향유를 위해 국가 개입을 요청할 수도 있지만, 그러한 개입 자체를 '자유' 개념에 포함시키면 개념적 혼란만 야기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여기서 잠시 한국 사회로 눈을 돌려보자. 한국의 지식인 담론에서 개인주의적 문제설정을 담아 '자유' 개념을 다룬 경우는 흔치 않았다. 보수 우파의 신자유주의(neo-libralism)적 쇄신을 표방한 근래의 '뉴라이트'(New Right) 운동조차 개인과 공동체의 조화를 추구하는 담론을 유포했다. 그들에 따르면 자유주의는 "개개인의 인격완성과 자아실현이 가능한 좋은 삶 내지 선한 삶"을 실현하는 데 지향되어야 하며, 이는 "좋은 공동체 내지 좋은 사회"에서만 가능하다(박세일, 2008: 256). 이처럼 한국의 지식인 다수는 좌우를 막론하고 공동체와의 조화 속에서만 진정한 자유가 구현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벌린이 비판한 '적극적 자유' 개념이 한국의 지식인들에게는 더 상식적인 '자유'의 의미였다. 공동체의 도덕으로 수렴되지 않는 자유는 교정되어야 했다. 1950년대 '아프레 걸', '자유부인'에 대한 지식인들의 비난은 이를 잘 보여준다(정혜경, 2011). 자유주의적 가치를 중시한 『사상계』에서도 이런 경향은 그대로 나타났다. 자유는 "강제가 없는 상태로서 외적 자유, 소극적 자유"에 그치지 않고, "이성이 우리를 지배할 때에 성립하는 자유", "적극적으로 자기가 자기를 통제 지배하는 상태로서" "적극적 자유 또는 내적 자유"에 이르러야 했다.[16] 무엇보다도 "자유는 올바른 방향을 가져야" 했다.[17]

그렇다면 한국에서 개인의 자유는 왜 공동체의 틀 안에서만 긍정되었는가? 앞서 언급했듯 여기에는 한국의 역사적 경험이 그 배경을 이루고 있다. 특히 식민지 경험과 그에 이은 전쟁 경험은 민족의 독립 없이 개인의 자유도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강화했다. 공동체의 틀에 개인의 자유를 배치하는 담론은 한국 지식인들의 경험에 합치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설명이 충분치 않다. 한국에서 상식화된 적극적 자유론은 지적 맥락을 갖고 있었다. 한국의 지식인들은 사회적 자유주의를 흡수하고 변용함으로써 공동체와 개

16) 안병욱, "自由의 倫理", 『사상계』 24호 (1955. 7), 16-17쪽.
17) 위의 글, 22쪽.

인의 자유를 조화시키려는 담론을 체계적으로 산출할 수 있었다.

2. 영국의 사회적 자유주의

조선이 일제강점기에 들어서게 되는 시점에 서구에서 자유주의는 자기 혁신을 모색하고 있었다. 산업화에 따른 계급분화와 불평등이 확대되고, 사회주의의 도전이 강화됨에 따라 자유주의는 정치적 입지를 위협받고 있었다. 경제적 방임이 다수의 비참을 야기하는 상황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자유주의자들은 경제적 평등을 요구하는 사회주의의 주장을 흡수하는 방향으로 자유주의를 수정하려 했다. 이렇게 수정된 자유주의는 일제강점기 한국의 자유주의 담론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수정 자유주의는 신자유주의(new liberalism) 또는 사회적 자유주의(social liberalism)라고 불렸다. 여기서는 일제강점기 한국의 자유주의를 검토하기 전에 잠시 시선을 영국으로 돌려 사회적 자유주의의 내용을 요약해보고자 한다.

사회적 자유주의는 영국에서 고전 자유주의의 성과와 한계가 명백히 드러난 시대적 상황을 배경으로 탄생했다. 성과라 함은 19세기 말에 이르러 자유주의가 “제 할 일을 다 한 듯 보였다”는 홉하우스의 말에 드러나듯(Hobhouse, 2006[1911]: 187), 자유주의가 요구했던 정치적 권리들이 어느 정도 실현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Ablaster, 2007: 547). 성인 남성 선거권이 보편화되고 언론, 출판의 자유가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상황에서 자유주의는 더 이상 진보적 가치를 내걸 수 없었다.

다른 한편으로 자유주의는 경제적 방임이 전체의 풍요를 낳을 것이라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빈곤과 실업은 만성적이었다. 더 이상 빈곤의 원인을 개인적 결함으로 돌리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았다(서병훈, 1993: 48-49). 이론과 현실의 간극은 이미 제도를 통해 보완되고 있었다. 영국에서는 19세기에 노동자와 여성, 아동의 보호를 위한 국가의 개입이 시작되었다(Hobhouse, 2006: 49). 그럼에도 이러한 조치들은 계급적 격차를 개선하는데 한계를 보였다. 자유주의자들은 국가 개입을 마지못해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자유주의적 원칙에 대한 훼손 또는 예외로 간주했다(Ablaster, 2007: 549). 그러는 동안 노동계급은 선거권 확대를 계기로 현실적인 정치 세력으

로 성장하고 있었다.

자유주의는 정치적으로는 저항적, 진보적 역할을 다 했기에 무의미해졌고, 경제적 영역, 즉 분배의 문제에서는 보수적이었으며 현실 문제 해결에 무용했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는 것만으로는 어떠한 적극적 의미도 가질 수 없었다. 정치적으로 자유주의를 대표했던 영국 자유당은 금권을 앞세운 제국주의자들과 노동계급을 조직한 사회주의자들 사이에서 제 역할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Hobhouse, 2006: 187).

사회적 자유주의는 정치적 위기의식에서 비롯된 자유주의의 활로 모색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자유주의에 본격적인 수정을 가한 사상가는 토마스 힐 그린(T. H. Green)이었다(Ablaster, 2007: 550; 노명식, 2011: 263-264). 그린이 자유주의에 가한 수정 중 이후 사회적 자유주의로 승계된 유산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개인의 자유는 사회적 상호의존 관계 속에서 재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린은 궁극적 선을 추구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삶을 제외한 어떤 삶 속에서도 자신이 만족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할 수 없다"고 하면서 "사심 없는 선함의 보편성"이 사회적 삶의 양식으로 자리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Green, 2004[1883]: 529). 자기의 잠재력을 현실에서 구현하는 것은 사회 속에서의 자기부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다(서병훈, 1996: 95-96). 그린은 사회적 선과 개인의 자유가 합치될 수 있으며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믿었다. 따라서 자유는 독립적으로 향유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상호작용에의 참여 속에서 진정한 의미를 갖게 된다. 그럼에도 그린은 개인의 자기실현에 궁극적 가치를 두었다는 점에서 자유주의의 계보를 잇고 있었다. 그린이 보기에 현실에서 자기실현은 실질적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따라서 모든 개인에게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는 것은 적극적 자유, 즉 '무엇을 하기 위한 자유'를 확대시킨다(서병훈, 1996: 97). 개인의 자유는 사회적으로 주어진 기회와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그린은 자유가 가치있는 방향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는 모든 효용 또는 쾌락을 양적 차이로만 환산하는 공리주의에 대한 비판을 통해 설득력있게 제기되었다. 그린은 밀이 공리주의적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우리의 정신이 덕을 추구하지 않으면 올바른 상태가 아니며, 효용과도 거리가 먼 상태에 빠지게 된다"고 말하는 모순을 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Green, 2004: 251). 밀은 높은 수준의 쾌락과 낮은 수준의 쾌락을 모두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높은 수준의 쾌락을 추구할 것이라고 했다(Green, 2004: 245). 밀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각각의 욕망에는 질적 차이가 있으며 선과 악이 결부될 수도 있다. 모든 욕망의 충족이 선한 것이 아니며, 자기의 잠재력을 충분히 실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자유를 실현할 때만 그것은 '참된' 자유라고 할 수 있다. 즉 자유는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할 때 존중될 수 있다. 참된 자유의 방향은 개인들의 자기실현을 위한 사회적 토대를 굳건히 하는 데 기여하는 데 있었다.

이처럼 그린은 공동체의 전체적 '선'(good)을 극대화하는 것을 자유의 목표로 설정했다. 이는 공공선(common good)으로 개념화되었다. 그린은 공공선에 어긋나는 자유는 국가에 의해 억압되어도 무방한 것으로 여겼다(서병훈, 1996: 106). 자기실현에 잠재력과 기회가 모두 필요하다는 관점은 기회의 균등을 위해 국가가 개입할 수 있다는 주장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고전적 자유주의가 경쟁과 시장 기제에 의한 예정조화를 주장했다면 그린의 자유주의는 사회적 조화에 이성적 조율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셈이다. 그 현실적 방향은 평등주의적인 개혁일 수밖에 없었다.

그린은 철학적 어조로 고전적 자유주의의 '개인' 개념과 '자유' 개념을 비판했다. 개인들은 상호의존적이며, 몰도덕적 자유는 공익으로 수렴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유는 이성과 도덕의 발달에 의해서만 공공선에 합치될 수 있었다. 그린은 그 과정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았다. 그는 헤겔의 논법을 변용하여 '영원한 의식'(eternal consciousness)이 현실 속 개체들에 의해 구현되는 과정으로 역사를 이해했다(서병훈, 1996: 91). 영원한 의식에 의해 개인의 자유와 공공선은 결국 일치될 것이었다. 이처럼 개인의 자유와 공공선의 조화는 형이상학적 전제 속에서 낙관적으로 전망되었다.

20세기 초반 영국의 사회적 자유주의를 대표하는 홉하우스와 홉슨은 공공선과 개인의 자유를 조화시킨다는 그린의 문제의식을 수용했지만 그의 형이상학은 받아들이지 않았다(Weiler, 1982: 20). 홉하우스와 홉슨은 현실적인 토대에서 사회적 자유주의를 선명하게 구축하고자 했다. 홉하우스는 "우리의 논점은 이론적인 고찰이 아닌 실질적인 고찰에 따라야한다는 것, 즉 모든 경우에 효과적으로 자유를 산출할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인지 물어야한다는 것"이라고 하여 경험주의적 토대에서 자유주의를 혁신하고자 했다

(Hobhouse, 2006: 132). 물론 그 함의는 그린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우리는 각 경우마다 자유와 평등이 긴밀한 관계를 맺는다는 사실을 발견했”던 것이다(Hobhouse, 2006: 132). 홉슨 또한 당시의 정치 상황을 “영국 자유주의의 마지막 기회”가 주어진 상태라고 규정하고 자유주의의 존속을 위한 현실적 해법을 모색했다(Hobson, 1909: 135). 그는 자유주의 정치 세력을 유의미하게 유지, 확대하기 위해 기회의 평등이라는 자유주의의 또 다른 측면을 강조해야 한다고 역설했다(Hobson, 1909: 93).

홉하우스는 “보편적인 자유를 위한 첫째 조건”으로 “어느 정도 보편적인 제약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법치가 공동체 전체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법이란 공평한 것”으로 여겨야 한다고 했다(Hobhouse, 2006: 39). 법이 전체의 자유를 위해 존재하며 국가가 공정하다면 국가와 법은 자유에 배치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홉하우스에 따르면 국가로부터의 자유라는 고전적 자유주의의 목표는 진정한 민주 정부에서 의미가 없다. “국가 외에도 자유의 적들은 많다. 그리고 사실상 우리는 국가를 수단으로 해서 그것들과 싸운다”는 말은 국가에 대한 그의 관점을 간명히 보여준다(Arblaster, 2007: 554에서 재인용). 홉슨 또한 새로운 국가 개념이 필요하며 그것은 “자기 발전의 요구 또는 권리가 사회복지에 대한 주권적 요구에 맞춰 조정”되는 것과 관련된다고 주장했다(Hobson, 1909: xii). 홉슨은 홉하우스만큼 자유에 제약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지는 않았으나, 기회의 평등을 중심에 두고 그것에 필요한 사회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물론 그러한 사회정책에는 기존에 허용되었던 경제적 자유에 대한 국가 개입이 불가결했다. 이처럼 사회적 자유주의자들은 평등주의적 원칙으로 국가를 재평가했다(Weiler, 1982: 17).

홉하우스는 공공영역에서 절대적인 개인의 자유란 존재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그가 보기에 사회는 개인들로 구성된 유기체이기에 어느 한 부분의 변화는 다른 부분에도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친다. 타인과 무관하게 사용되는 자유는 ‘비사회적 자유’(unsocial freedom)이며 이는 권리가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하는 사회에서는 행사될 수 없다. 따라서 모든 자유는 ‘사회적 자유’여야 하며 그것은 제한에 의존한다(Hobhouse, 2006: 93). 사회를 유기체로 간주하면 타인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행위란 존재할 수 없다. 부를 축적하는 자유가 타인의 궁핍을 야기하고 기회 박탈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러한 자

유는 제한되어야 한다. 고전적 자유주의가 주장한 식의 절대적 자유란 존재할 수 없다. 모든 자유는 제한적 자유여야 했다. 다만 그 허용과 제한의 경계선은 정해진 법칙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공정성에 입각한 이성적 사유, 상호존중의 윤리를 통해 찾아낼 수 있는 것이었다(Hobhouse, 2006: 43, 119, 121). 자유는 천부의 자연권으로 전제되는 것이 아니라 공공선과 조화되는 한도 내에서 법에 의해 보장되고 제한되어야 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린이 공공선을 '영원한 의식'에 의해 보증되는 것으로 보았다면, 홉하우스는 '공공의지'(common will)을 그 담지자로 지목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민주적 원칙의 적용을 의미했다. 민주적 원칙에 의한 의사결정은 공공의지로 천명되며, 그것이 사회적 조화를 이끌어 내는 데 성공적이라면 국민간의 유대감을 높여 건전한 민족주의를 형성하기도 한다고 보았다(Hobhouse, 2006: 127). 물론 대중의 의사결정이 사회적 조화에 기반을 둔 자유의 보장으로 귀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 민주적 절차에 의해 자유를 제거하는 의사결정 또한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국가와 양심의 상호채무관계 덕분에, 그리고 시민의식이 발달한 덕분에, 법과 양심이 벌이는 갈등은 극히 협소한 범위로 제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했다(Hobhouse, 2006: 140-141).

여기서 홉하우스는 밀이 "정신적으로 성숙한 사람에게만" 자기 결정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했던 것(Mill, 2010: 33)과 마찬가지로 아동이나 백치, 저지능자, 정신박약자, 알콜중독자에게는 민주적 참여가 보장될 수 없다고 했다(Hobhouse, 2006: 141). 따라서 홉하우스의 사회적 자유주의에는 양심적이고 이성적인 시민과 공정한 국가가 전제되어 있다. 시민의 자격이 갖춰진 상태에서 민주주의는 사회적 조화와 개인의 자유가 어우러지는 결과를 산출한다고 본 것이다. 홉슨 또한 기회의 자유를 부여할 수 있는 경제적 접근성의 개선은 "정신적이고 지적인 기회의 적절한 실현과 결부되지 않는다면 결실을 가질 수 없다"고 했다(Hobson, 1909: 94). 총체적 시야를 가진 시민에 의해서만 사회 개혁은 정치적 장애를 헤쳐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사회적 자유주의로의 개혁을 지지할 수 있는 시민의 존재 없이 자유주의의 혁신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신뢰의 강도와 치유의 규모"였다(Hobson, 1909: 134). 홉슨은 또한 다양한 이해관계가 공공지성과 도덕(public intelligence and morals)을 거치면서 일반의지(general

will)로 수렴될 수 있다고 보았다. 물론 그 과정은 현실적으로 대의제일 수 밖에 없었다. 여기서 관건은 공공 지성을 담지하는 지식인의 존재였다(Hobson, 1909: 86-87). 간단히 말해 홉하우스와 홉슨은 공공선과 개인의 자유가 민주주의를 통해 일반의지로 조화됨으로써 공공선을 도출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일반의지의 산출에는 대의 민주주의뿐 아니라 지적, 도덕적 시민의식이 필수적이었다.

홉하우스는 "개인은 결코 홀로 살아갈 수 없고 개인과 국가는 서로에게 상호의무를 져야한다"는 전제에서 "개인은 국가에 대하여 자신과 가족을 위한 산업에 종사할 의무"를 가지며, "그런 한편에서 사회는 그에게 평균적인 문명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할 의무를 진다"고 했다(Hobhouse, 2006: 150-151). 이는 산업을 사회주의적으로 조직하는 것을 의미했다. 그러나 홉하우스는 산업 재편과 개인의 자유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기존의 사회주의 이론과는 다른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의 결합을 모색했다. 홉하우스는 이를 자유주의적 사회주의(Liberal Socialism)라고 칭했다.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 개인의 개성을 발휘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된다면 자유주의의 목표와 사회주의적 생산조직이 결합 가능하다는 것이다(Hobhouse, 2006: 157-158).

자유주의적 사회주의란 "산업의 사회적인 요인들과 개인적인 요소들을 동시에 강조하고 중시하려고 노력"함으로써, "공공선의 관점에서 개인의 권리를 지속적으로 제한할 수 있고,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개인들의 복리의 관점에서 공공선"을 설정하는 체제를 의미했다(Hobhouse, 2006: 184-185). 이에 비해 홉슨은 자유주의와 사회주의를 결합시키기보다 구분하려 노력했다. 홉슨이 기회의 평등을 저해하는 핵심 요소로 본 것은 독점자본이었다. 국가는 자본의 독점을 해체하기 위해 개입할 수 있지만, 사회주의가 주장하듯 국유화의 방향을 취해서는 안 된다. 국가의 개입 근거는 자유 경쟁을 복원하기 위한 것이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공적 독점이 사적 독점을 대체해야 한다고 보았다(Hobson, 1909: 4). 홉슨은 국가 개입 또한 자유주의적 원칙에서만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고, "새롭고 확대된 기회를 향유할 수 있도록 개별적 자유의 확장에 기여하는 경우에만 국가의 간섭과 권위 및 기능의 확장이 정당화된다"고 주장했다(Hobson, 1909: 95). 홉슨은 "자유주의는 주요 정책에서 국가의 강화보다는 개별적 시민의 자유를 우

선시한다는 점에서 사회주의와 차별성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두 주의의 원칙에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 또한 "두 입장의 적대성은 진보적 경험 속에서 사라져버릴 것"이라고 하여 실제 정책적 측면에서는 자유주의와 사회주의가 수렴되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Hobson, 1909: 93).

19세기 말부터 영국에서 제기된 사회적 자유주의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기회의 평등을 주된 원칙으로 내세웠다. 사회적 자유주의의 주창자들은 개인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하는 데 국가의 역할이 있다고 보았다. 자유는 제약이 없는 것뿐 아니라 잠재력을 발휘할 조건이 갖춰져 있는 것까지 의미했다. 둘째, 개인과 사회, 개인과 국가의 조화를 낙관했다. 공공선과 개인의 자유는 궁극적으로 대립되지 않는다. 그 전제는 앞서 말했듯 국가의 공정성과 완숙한 시민의식이다. 그린은 '영원한 의식'에 의해 그러한 궁극적 상태로 나아갈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홉하우스와 홉슨은 총체성을 인지하는 이성적 시민과 그들의 의사가 반영되는 민주주의에 의해 개인과 사회가 조화되는 개혁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았다. 셋째,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요청했다. 사회를 유기체로 간주하는 사회적 자유주의자들의 관점에서 타인과 무관한 행위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개인의 자유란 사려 깊은 자제와 책임 의식을 수반하는 것이어야 했다. 개인의 자유는 총체적인 맥락에서 재조정될 필요가 있었다. 그 핵심은 사적 소유권의 절대성을 허무는 것이었다. 앞서 말했듯 국가가 공정성을 유지하고 있고, 시민 정신이 완숙해 있다면 국가 개입은 개인 자유의 훼손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었다. 넷째, 시민들의 이성적 역량과 연대 의식을 강조했다. 사회적 자유주의에서 자유는 총체적 선(善)과 진리의 문제로 제기된다. 사회적 자유주의의 신조에 따르면 모두가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회 속에서만 개인은 자유로울 수 있다. 하지만 개인 저마다의 잠재력이 무엇인지, 그것을 발휘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이 무엇인지는 연대 의식을 바탕으로 한 이성적 추론으로만 발견될 수 있다. 그린은 "이성은 어떤 절대선을 추구하며 이것이 자신과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공통된 것이라고 인식하는 사람의 능력을 구성한다"고 정의했다(Green, 2004: 298). 이성적 시민들로 구성된 사회에서만 개인의 자유와 공공선이 조화될 것으로 본 것이다.

자유주의의 자기 혁신으로 나타난 사회적 자유주의는 영국에 국한되지

않았다. 미국에서는 사회적 자유주의가 혁신주의 운동(progressive movement)으로 전개되기도 했다(장은주, 2012: 256). 이는 듀이(John Dewey)의 논의에서 잘 나타난다. 그는 자유주의가 자유방임 자본주의로부터 결별하고 점진적인 사회 입법에 의한 개혁으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사용되는 생산력을 사회화하여 경제 조직의 구조가 개인의 자유를 뒷받침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하여, 자유주의의 혁신 방향이 국가 개입에 의한 경제적 평등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Dewey, 2011[1935]).

일본에서도 1910년대부터 영국의 사회적 자유주의가 유입되어 지식인들에게 전파되고 있었다. 일본의 진보적 지식인들은 자본주의적 산업화 단계에 접어들며 나타난 문제들에 관심을 가졌고, 영국의 사회적 자유주의를 유력한 해법으로 수용하고 소개했다. 자유주의적 가치를 존중하면서도 이를 공동체적 윤리와 조화시키고자 했던 지식인들에게 사회적 자유주의는 매력적인 대안이었다(최선웅, 2015).

조선이 일제강점기로 접어드는 시기에 세계적으로 자유주의의 표준이 변화하고 있었다. 자유주의는 이제 개인의 자유를 절대시하고, 경제적 방임을 주장하는 사상으로 규정되지 않았다. 미국, 영국, 일본 등지로 유학을 떠난 조선의 지식인들은 사회적 자유주의 담론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

제2절 일제강점기의 자유주의 담론

일제강점기에 지식인들은 고전적 자유주의와 사회적 자유주의를 모두 접하게 되었다. 그러나 식민지 상황에서 고전적 자유주의를 통해 총독부 통치로부터의 자유를 요구하는 것은 무의미했다. 사회주의자들은 우파 민족주의 운동을 자유주의로 규정하고 비판하기도 했다. 다른 한편 사회적 자유주의 또한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습득되고 있었다. 사회적 자유주의의 논리를 통해 민족과 개인의 이익이 일치한다는 점이 강조되기도 했다. 그러나 사회적 자유주의 또한 일제강점 하에서 현실적 의미를 갖기는 어려웠다. 일제강점기에 자유주의는 교양 지식으로서의 의미 이상을 갖기 어려웠다. 일제강점기에 유입된 자유주의, 특히 사회적 자유주의는 해방 이후에 국가 구상을 담은 담론으로 나타나게 된다.

1. 고전적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의 비판

1920년대에 조선인에 의한 언론 운영이 허가되면서 지식인들은 신문과 잡지를 통해 활발히 자신의 주장을 개진했다. 여기에는 고전적 자유주의에 근거한 담론도 있었다. 특히 1920년대 초반에 고전적 자유주의에 입각한 논의가 간헐적으로 발견된다.

1920년 『동아일보』는 학교 경영을 조선인의 자치에 맡길 것을 요구하면서 "현대의 자유주의는 국가의 무용한 간섭을 배척하고 인민의 창의로 사업을 경영하며 인민의 자유로 복리를 도모함에 재"한다고 주장했다.[18] 또한 정치적 집회의 자유를 요구하면서 "자유주의"를 준거로 삼아 총독부를 규탄하기도 했다.[19] 이러한 담론은 3·1운동을 계기로 변화한 총독부의 통치 방식에 기대를 걸고 민족의 자치 영역을 확대하고자 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조선인의 정치, 경제적 영역을 총독부의 개입으로부터 차단하고자 한 의도에서 고전적 자유주의 담론이 사용된 것이다.

그러나 총독부를 상대로 자유주의에 입각한 요구를 지속한다는 것은 무망한 일이었다. 일제강점기 언론에서 고전적 자유주의에 입각한 담론을 찾아보기 어려운 이유는 그러한 요구들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이다. 반대로 사회주의적 입장에서 자유주의를 규정하는 담론이 훨씬 많았다. 자유주의를 긍정적으로 논하는 경우에도 조선의 당면 과제가 반봉건이기에 자유주의적 요구가 의미 있다는 식의 논의가 주를 이뤘다. "조선에는 아즉 자유주의가 발달하기 전에 다른 전제적 압박물이 조선사회를 지배하야 봉건주의는 의연히 파괴되지 안해잇"기에 "사회운동", 즉 사회주의 운동은 시기상조이며, "자유주의적 방면에 잇서서 아즉도 진전의 여지가 충분히 잇다"는 것이다.[20] 또한 1920년대의 민족운동을 "기(其) 성질상 "뿔조아" 급진 자유주의 운동"으로 규정하고 ""뿔조아" 계급의 역사적 사명에서의 전제적 봉건적 제도 타파라는 계급적 본능"이 있기에 이들의 운동 또한 현 단계에서 의미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21] 이러한 논의들은 단계론적 관

18) "교육진흥과 민간의 적극적 노력", 『동아일보』, 1920. 6. 5.
19) "정치적 집회를 허하라", 『동아일보』, 1922. 1. 15.
20) "사회발전사 상의 자유주의의 지위". 『동아일보』, 1929. 9. 3.
21) 김영식, "전환기에 직면한 조선신흥운동(5)", 『동아일보』, 1927. 2. 19.

점에서 자유주의를 긍정하고 있다.

그러나 자유주의를 표방한 민족운동이 별 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자유주의는 더 이상 단계론적으로도 긍정되지 않았다. “오늘의 자유주의는 벌서 그러한 옛날의 역사적 사명을 상실하여 버린 선탈(蟬脫)한 존재에 지내지 안는 것”이며, 자유주의의 담지자인 중간계급이 계급분화로 사라졌기에 “자유주의는 그 물질적 실체의 몰락으로 의하여 완전히 거세되고 만 것”이라고 진단되었다.[22] 자유주의 단계를 거쳐 민족 해방을 이룬다는 전망은 비현실적인 것으로 규정되었다.

> 「푸로레타리아」가 근대에 니르더 신흥계급으로써의 존립을 주장함에 니르게 되자 「부르쥬아지」는 「봉건세력」의 일부와 결탁하야 경제위기 타개를 목적으로 한 경제상의 독점주의 따라서 정치의 절대주의로 전화하기도 하고 또는 실제상의 「부르쥬아지」의 정치상 절대적 우위권을 그 금력으로써 확립한 후에는 부르쥬아지 자유주의는 사실상 사멸된 셈이다.[23]

이처럼 사회주의자들은 자유주의를 고전적 자유주의, 즉 “정치상으로는 언론, 출판, 집회의 자유 등, 인민의 권리의 압박 상태 없는 신장과 경제상으로는 산업상으로 자유경쟁과 자유무역을 국가번영의 기초로 하여온 주요골자”로 가진 것으로 규정하고,[24] 그것이 당대에 이미 의미를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일제강점기에 자유주의를 고전적 자유주의의 의미로 사용하는 데 가장 적극적이었던 부류는 사회주의자들이었던 셈이다. 자유주의를 정치적 개인주의와 경제적 자유방임의 결합으로 규정하고 비판하는 담론 전략은 이후에도 이어진다. 1950~60년대 혁신계 또한 자유민주주의를 부르주아 이데올로기라는 이유로 비판했다. 자유주의가 불평등과 계급분화를 불러왔다는 비판은 사회주의적 성향을 가진 지식인들의 자유주의 담론에서 지속되었다. 하지만 이들은 사회적 자유주의라는 까다로운 상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

22) 전원배, “사상시평(上): 자유주의의 조종(弔鐘)”, 『동아일보』, 1935. 7. 18.
23) 홍양명, “자유주의의 부흥”, 『삼천리』 제8권 제12호(1936. 12), 75쪽.
24) 위의 글, 76쪽.

2. 사회적 자유주의의 수용

1920년대 『동아일보』에는 사회적 자유주의의 논조를 가진 담론들이 자주 등장했다. 특히 1910년대에 일본 와세다대학에서 유학을 하고 돌아온 장덕수는 동아일보 창간 시 주간을 맡아 사설을 통해 사회적 자유주의의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다(최선웅, 2013: 90). 그는 창간 기념 사설에서 자유를 "정치적 자유"와 "사회적 자유"로 구분하고, 정치적 자유를 "국가경영을 민의로 수행하는 인민의 권리"로, 사회적 자유를 "개개인 생활상의 자유"로 규정했다.[25]

> 회(回)하야 19세기의 입헌정치를 관(觀)하건대 자유의 범위는 정치적 자유에 불과하고 사회적 자유에 미급(未及)하얏스며 그뿐만 아니라 정치적 자유도 또한 그 소급정도가 심히 제한되야 일반민중의게 편달치 못하고 오즉 유산계급에 한하얏스니 이 엇지 정치적 자유의 평등이라 할 수 잇스며 또한 그 범위가 사회적 자유에 미급한 결과 경제사회에 재하야는 자본주와 노동자의 관계가 흡연(恰然)히 노예시대의 노예와 그 주인과의 관계와 여(如)한 현상을 상존케 하얏스니 이 엇지 사회의 평등이라 하리오.[26]

장덕수는 다른 글에서 "신도덕의 이상은 재산과 일반적 부에 대하야 전연히 개인적 물(物)로 간주하지 아니하고 사유재산이나 일반적 부를 사회적 물로 간주하야 개인의 이익만 도(圖)치 아니하며 사회일반의 이익을 도함에 재하"다고 하기도 했다.[27] 개인의 재산은 개인의 노력으로만 형성된 것이 아니며, 사회적으로 존재하는 다양한 자원이 활용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따라서 사유재산 중 사회적 기여에 의해 형성된 부분은 환원되어야 한다. 장덕수는 '사회적 부(富)'라는 사회적 자유주의의 개념에 근거를 두고 재산의 공적 사용을 "신도덕의 이상"으로 제시하고 있다.

사회적 자유주의의 요구는 "자유권과 생존권"으로 집약되어 제시되기도 했다. 자유권이 없이는 생존권이 보장될 수 없고, 생존권이 없다면 자유권은 무용한 것이라는 논리다. 물론 핵심은 자유방임적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데

---

25) 장덕수, "세계개조의 벽두를 당하야 조선의 민족운동을 논하노라(2)", 『동아일보』, 1920. 4. 3.
26) 위의 글.
27) 장덕수, "신도덕을 논하야 신사회를 망하노라", 『동아일보』, 1920. 7. 24.

있다. “불합리 무절제한 자본주의”는 “자유권의 병적 발전”의 결과이기에 “박애평등의 대이상을 무시하는 불합리 방종적인 소유욕”과 “상호부조의 원칙을 이탈하는 용단(龍斷)적 이기심인 태만성을 폐기”해야만 자유권과 생존권이 모두 보장된다는 것이다.[28] “극히 넓은 범위의 사람을 위한 실질덕 자유”를 위해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생존은 동시에 보장되어야 했다.[29]

하지만 기회의 평등을 위해 국가 개입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자유주의의 주장은 일제강점기에 현실에서 의미를 갖기 어려웠다. 현실에서 민족은 “위압의 태산”, “기아의 심연”에 처하여 “자유가 업고 생존의 보장까지 업는 우리”로 표상되었다.[30] 그럼에도 사회적 자유가 강조된 이유는 무엇인가? 장덕수는 사회적 자유주의의 특징인 유기체적 사회관을 활용하여 개인의 이익과 민족의 이익이 동일하다는 논리를 전개했다. “민족은 단(單)히 개인이 다수히 집회한 것이 아니오, 또한 그의 독특한 존재를 구유(具有)한 일개실체”이며, “개인은 오히려 기중(其中)에서 생(生)하며 기중에서 양육되야 일개인격을 성(成)하는 것”이라고 하여 사회적 자유주의에서 말하는 공공선을 민족으로 치환하고자 했다.[31] 사회적 자유주의를 이념으로 삼아 자유와 평등이 조화되는 사회로 나가는 첩경은 “각 방면의 실력을 충실히 하야써 문화의 행복을 수(受)”하는 것,[32] 또는 “심력(心力)의 발전”[33]으로 제시되었다. 이처럼 1920년대 『동아일보』에서는 사회적 자유주의의 전망과 문화적 민족주의의 방법이 결합되어 나타나기도 했다.

한편으로 사회적 자유주의는 식민지 지식인들에게 평화의 이념으로 인식되기도 했다.

> 현금 국가의 권력계급 즉 정부기관은 자본주의를 지지함에 반하야 노동자는 노동본위주의 즉 사회적 자유주의를 주장함이라. 고로 자본주의의 정부는 그 이기(利己)를 위하야 식민지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되 노동주의의 국제회의는 이에 민족자결주의를 식민지에 적용하야써 세계평화를 촉진코자 하는도다.[34]

---

28) “자유권과 생존권(上)”, 『동아일보』, 1925. 1. 12.
29) 낭산인(朗山人)[김준연], “자유와 부자유”, 『동아일보』, 1927. 7. 5.
30) “자유권과 생존권(下)”, 『동아일보』, 1925. 1. 15.
31) 장덕수, “세계개조의 벽두를 당하야 조선의 민족운동을 논하노라(3)”, 『동아일보』, 1920. 4. 6.
32) 장덕수, “세계개조의 벽두를 당하야 조선의 민족운동을 논하노라(4)”, 『동아일보』, 1920. 4. 7.
33) “자유권과 생존권(下)”, 『동아일보』, 1925. 1. 15.

당대의 신지식층에게 고전적 자유주의는 사회진화론의 맥락에서 이해되었다(최선웅, 2015: 101). 약육강식의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구래의 가치관에서 탈피하고 서구화해야 한다는 인식이 기저에 있었던 것이다. 고전적 자유주의가 경쟁을 정당화하는 담론으로 이해되면서, 제국주의 또한 고전적 자유주의의 산물로 여겨지기도 했다. 지식인들은 고전적 자유주의가 개인 간의 경쟁은 물론 국가 간의 무제한적 경쟁을 가져오는 사상적 배경이라고 보았다. 반면 국제적 수준에서 사회적 자유주의는 각 국가의 이기심을 억제하여 세계 평화를 이루는 이념으로 인식되기도 했다. 실제로 영국의 사회적 자유주의자들은 국가 간의 관계 또한 자유와 평등의 원칙에 입각해야 한다고 믿었다(Weiler, 1982: 40). 식민지 조선에서 사회적 자유주의는 비교적 원본에 충실하게 이해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언급한 장덕수가 그러했듯 사회적 자유주의는 유학생들을 통해 주로 수용되었다. 이는 『동광』의 한 대목에서도 발견된다. 김윤경[35]은 일본 유학시절인 1927년에 『동광』에 기고한 글에서 홉하우스를 적극적으로 인용하며 논지를 폈다. 그는 "개인과 사회의 관계에 대하여는 유기체적이라는 것을 진리"라고 믿으며, 개인의 자유는 진리아(眞理我)와의 합치할 때 보장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36] "만일 그렇지 않고 자연주의자·유물론자 혹은 개인주의자처럼 자타를 구별하여 한갓 이기주의에 달아나면 사회는 수라장으로 화하여 파괴 멸망"한다는 것이다.[37]

흥미로운 것은 이 글이 작성된 배경이다. 김윤경은 글 마지막에 "이 글은 사회학 교수에게 「自由ご 法律 或ひは 國家意志」라는 논문 숙제를 받아가지고 조곰 참고도 하고 지도도 받아 평소에 생각하던 바를 토대로 하고 쓴 것을 조곰 고치면서 뽑아 번역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38] 김윤경은 『동광』에 게재한 다른 글에서도 개인의 자유는 이상적 상태라면 공공선 — 그의 표현대로라면 진리아 또는 대아(大我) — 과 합치될 수밖에 없다는

34) "인도에 민족자결주의 적용 결의", 『동아일보』, 1920. 7. 2. 인용문의 국제회의는 국제연맹(League of Nations)의 산하의 ILO를 의미한다.
35) 김윤경은 해방 이후 국어학자로 활약하게 된다. 그는 『사상계』에 국어학 관련 논문과 수필을 기고하기도 했다.
36) 김윤경, "自由에 대한 一考", 『동광』 제13호(1927. 5), 41쪽.
37) 위의 글, 42쪽.
38) 위의 글, 46쪽.

입장을 꾸준히 견지했다.[39] 일본 유학생들은 정규 교육 과정을 통해서 사회적 자유주의를 학습하기도 했다.

사회적 자유주의는 국제적 차원에서는 제국주의를 견제할 수 있는 이념이었고, 국내적으로는 이상적인 민족의 지향점으로 인식되었다. 사회적 자유주의는 고전적 자유주의가 대안이 될 수 없는 상황에서 사회주의에 거부감을 가졌던 지식인들에게 매혹적인 이념이었을 것이다. 물론 사회적 자유주의 또한 민족의 독립을 위한 방향을 제시해줄 수는 없었다. 현실적으로 본다면 당대의 사회적 자유주의 담론은 유학을 통해 습득한 새로운 지식을 무리하게 식민지 현실에 적용하고자 한 것이라고도 평가할 수 있다. 1930년대에 이르면 사회적 자유주의 담론 또한 보기 어렵다. 식민당국이 자유주의조차 불온시한 것도 영향을 주었겠지만, 현실과 담론의 거리가 너무 멀었던 데 더 큰 이유가 있을 것이다. 사회적 자유주의의 전망은 해방 이후에 비로소 국가 구상으로 나타날 수 있었다.

제3절 해방 정국의 자유주의 담론

해방과 동시에 지구적 냉전이 시작되었다. 공산주의가 자유의 적으로 지목되면서 자유주의에는 반공주의적 요소가 강하게 투영되었다. 그 결과 자유의 적에게는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냉전 자유주의가 형성되었다. 좌우 대립이 격화되어가면서 한국의 우익 정치 세력은 냉전 자유주의 담론을 통해 반공 투쟁에 대중을 동원하고자 했다. 그러나 여순사건 등 내전에 가까운 상황이 벌어지면서 극우 정치 세력은 반자유주의적인 반공주의로 경도

39) 4월혁명 이후 『사상계』는 라이샤워(Edwin Oldfather Reischauer)와 좌담회를 가졌다. 라이샤워는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위선 선교사들이 서구문화의 수입에 노력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한국이 일본의 통치를 받는 동안에 일본의 리베라리즘(liberalism)을 적으나마 받아들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말하자면 교육적 경험이라고 할까요 …. 한국인으로서 일본에 가서 공부한 곳은 일본에 있어서는 자유주의라는 것이 그런 사립학교에서 자라고 있었거든요. 그런 영향도 역시 한 가지 원인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중요한 원인은 2차대전 이후에 미국문화가 대량적으로 직수입된데 있겠지요”. “忍耐만이 民主主義를 지킨다”, 『사상계』 89호(1960. 12), 213쪽. 라이샤워의 발언은 식민지 근대화론에 입각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한국 자유주의의 유입 경로 중 하나로 일본 유학을 지적한 점은 타당성을 갖고 있다고 할 것이다.

되었다.

다른 한편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를 모두 거부하고자 했던 지식인들은 사회적 자유주의를 국가 구상의 이념으로 제기했다. 개인과 공동체, 자유와 평등의 조화라는 사회적 자유주의의 이상은 지식인들에게 매혹적인 전망이었다. 좌우 합작을 도모했던 중간파 지식인들은 사회적 자유주의를 이념적 갈등을 절충할 수 있는 대안으로 간주했다.

1. 냉전 자유주의

해방이 분단으로 이어지면서 지구적으로 조성된 냉전은 한반도의 정세를 완전히 규정했다. 지구적 냉전은 자유주의의 또 다른 변형을 야기했다. 공산주의를 자유주의적 관용의 대상에서 제외한 냉전 자유주의가 대두한 것이다. 냉전 자유주의의 입장에서 공산주의는 자유를 억압하는 전체주의 체제였으며, 자유주의 체제에 대한 위협이었다(Ablaster, 2007: 572). 공산주의자는 자유주의 체제 자체를 파괴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자유주의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었다. 냉전 자유주의의 특징인 반공주의는 논리 이전에 감성적인 것이기도 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반공주의는 논리보다는 공포감과 적개심을 통해 배양된 것이기도 했다(이하나, 2012).

한국의 자유주의 담론에서 반공주의가 상식화된 결정적 계기는 한국전쟁이었다. 그러나 이미 해방 정국에서 극우 정치인들은 자유의 적으로 공산주의를 지칭하는 담론을 구사하고 있었다. 이를 대표하는 세력은 이승만과 한민당이었다. 물론 이들이 처음부터 공산주의를 적대시하지는 않았다. 독립운동에 헌신한 좌익 세력을 반공주의를 통해 몰아붙이기는 쉽지 않았다. 해방 직후 그들은 대중의 신임을 받고 있었다(양승태·전재호, 2007: 263).

반공주의적 동원의 중요한 기점이 되는 반탁운동에서 극우 정치인들은 공산주의를 반민족세력으로 규정하는 담론 전략을 취했다. 이승만은 반탁운동에 혼선을 야기하는 좌익의 행동은 “독립을 지연시킬 뿐”이라고 주장했다.[40] 이러한 담론에서 준거는 민족의 독립이었다. 국내 공산주의자들은 무엇보다 민족의 적으로 규정되었다. 공산주의자들은 완전한 독립을 저해하고

40) “좌익의 찬탁론 배격코 기정노선에 매진”, 『동아일보』 1946. 1. 18.

한국을 소련의 식민지로 만들고자 한다는 것이다. 우익 정치세력은 이처럼 식민지 기억을 환기하는 방식으로 공산주의에 대한 공포와 적개심을 조장했다.

정부 수립 이전 시점까지는 냉전 자유주의 담론은 남한 내의 공산주의자를 공격하기보다는 소련군 점령 하의 북한 체제를 비판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북조선의 공산독재"는 "자유를 구속"한다는 점에서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었다.[41] 북한 체제는 "인민의 자유와 권리를 박탈하는 독재정치"로 규정되었다.[42] 한민당의 함상훈은 "남조선이 정치적으로 자유롭고 경제적으로 윤택한 반면 북조선의 일천만 동포들은 전제정치와 경제적 빈궁 속에 신음"하고 있으며, "북조선에는 북로당 지배하에 언론, 집회, 결사, 출판, 선거의 자유는 없고 북로당 이외의 세력은 극도로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자유선거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다. 따라서 선거를 통한 통일정부 수립이라는 구상은 몽상에 불과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이처럼 냉전 자유주의 담론은 북한 체제를 소련에 의해 식민화된 전체주의 사회로 그리면서, 화합불가능한 대상으로 묘사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이러한 담론은 단독정부 수립을 정당화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 남북 간의 타협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단정 수립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주장하고, 단정에 반대하는 남한 내의 중간파와 좌익을 정치 무대에서 배제하고자 한 전략이었다.

1948년에 이르면 이승만과 한민당은 자유의 확보를 위해 반공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했다. 이전까지 냉전 자유주의 담론의 주된 내용이 '자유 남한'과 '독재 북한'을 대비하는 것이었다면, 1948년 이후에는 공산주의가 남한의 자유를 위협하고 있다는 내용이 더 많이 발견된다. 즉, 공산주의의 열등성을 주장하던 담론에서 공산주의의 현재적 위협을 강조하는 담론으로 나간 것이다.

특히 1948년 5·10 총선을 앞두고 담론의 변화가 확연해졌다. 우익 세력에게 단정 수립은 자유 국가의 건설을 의미했다. 따라서 공산주의자들의 저항은 자유에 대한 훼손이자 침해였다. 이승만은 총선 실시를 촉구하며 공산주의자의 준동을 억제하지 못하면 "평화와 자유와 안전을 누릴 나라는 하나

41) "민주공화국을 건설: 좌우합작에 일치된 의견, 원세훈 씨 談", 『동아일보』 1946. 6. 19.
42) "입의(立議)역할은 군정연장: 한국민주당선전부 발표", 『동아일보』 1947. 1. 11.

도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43] 군정 관계자들 또한 공산주의자들이 "자유 국민에 허용된 자유를 이용하여 … 여러분이 현재 향유하고 있으며 또 향유할 수 있는 자유를 파괴"한다고 주장하면서 공산주의에 동조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44] 공산주의를 자유의 파괴자로 규정하려 했다는 점에서 한국의 극우 세력과 미군정은 일치하는 관점을 보였다.

이러한 담론은 정부 수립 직후 여순사건이 발생하면서 더욱 공세적인 어조를 띠었다. 이전까지 냉전 자유주의에 가까운 담론을 구사했던 극우 세력은 여순사건을 계기로 국권을 위해 자유의 유보를 요구하는 노골적 반공주의로 나가게 된다(김득중, 2009). 여순사건 직후 이승만은 공산주의자를 비롯해 중간파와 우익 일부까지 자신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을 언급하면서 "국권을 세워야 개인의 자유권이 보장된다는 것은 생각지 못하고 이 정부가 무너져야 자기들이 무슨 기회를 얻을 수 있을가 하는 희망을 가지고 백방으로 선전과 운동을 극렬히 전파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45] 개인의 자유보다 국권이 우선한다는 담론을 적극적으로 내세운 것이다. 전쟁이 다가올수록 이러한 언사는 더욱 빈번히, 더욱 강경하게 나타난다. 극우 세력의 담론은 여순사건을 기점으로 냉전 자유주의라기보다 반자유주의적 반공주의를 지향하게 되었다.

전쟁은 반공주의가 한국 사회의 지배적 담론으로서 영향력을 갖게 된 결정적 계기였다. 극우 정치 세력은 반자유주의적 반공주의로 완전히 경도되었다. 냉전 자유주의 담론은 극우 정치와 비판적 거리를 가졌던 지식인들에 의해 발화되었다. 이들은 반공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건립이라는 차원에서 단정 수립을 지지 또는 묵인해으나, 반공을 준거로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태에는 거부감을 가졌다. 이들에게 반공은 자유를 지향할 때만 의미가 있는 것이었다. 냉전 자유주의 담론은 우익의 단정 수립을 위해 제기되었으나, 점차 통치 집단을 비판하는 준거로 전환되었다(문지영, 2011 참조).

---

43) "급속한 총선거실시로 독립정부수립하라: 협의 후의 이 박사 담(談)", 『동아일보』 1948. 1. 27.
44) "파괴 일삼는 공산파 민주조선의 적", 『동아일보』 1948. 2. 12.
45) 이승만, "건설적인 비평과 파괴적인 비평", 1948. 11. 19.

2. 사회적 자유주의: 『신천지』의 중간파

해방 정국에서 냉전 자유주의와는 다른 맥락에서 제기된 자유주의 담론도 있었다. 일제강점기부터 지식인들에게 익숙했던 사회적 자유주의였다. 냉전 자유주의가 공산주의를 자유의 적으로 상정했다면, 사회적 자유주의는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를 모두 자유의 적으로 간주했다. 조소앙과 안재홍 등 자유민주주의적 정부 수립을 통일보다 우선시했던 중도 우파 또한 자유와 균분을 함께 강조하는 입장을 보였다(문지영, 2011: 86). 그들 또한 국가 개입에 의한 경제적 균분 없이 개인의 자유는 불완전하다고 보았다. 하지만 사회적 자유주의를 가장 적극적으로 주창한 집단은 좌우 합작을 염원했던 중간파 지식인들이었다. 그들은 사회적 자유주의를 통합의 이념으로 제시하고자 했다. 이들의 입장은 『신천지』 지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1946년 2월부터 1954년 10월까지 간행된 『신천지』는 해방 이후 지식인 담론의 흐름을 살펴볼 수 있는 잡지다. 『신천지』는 발간 이후 1949년까지 뚜렷한 매체 이념을 보이기보다는 좌우를 망라하는 편집구성을 보였다(김준현, 2009: 55). 이봉범(2010)은 『신천지』를 두 개의 시기로 나누어 1946년 2월부터 1949년 7월까지는 이념적 망라성이 나타나던 시기로, 1949년 8월 이후는 좌익의 전향과 제거에 따라 반공주의를 강력히 표방한 시기로 규정했다. 『신천지』는 서울신문사에서 발행되었는데, 서울신문사는 총독부의 기관지를 발행하던 매일신보사의 후신으로 주식의 48.8%가 귀속재산이었다(이봉범: 2010: 214). 따라서 정부 수립 이전에는 미군정 산하에, 이후에는 정부의 영향력 하에 있었다. 그럼에도 1949년까지 『신천지』에는 우익과 정부를 비판하는 글도 비교적 자유롭게 게재되었다(김준연, 2009: 62). 김동리가 편집주간에 취임하여 보수 우익의 대변지 역할을 하게 되는 시점 전까지 『신천지』는 당대의 지식인 담론을 다양하게 살펴볼 수 있는 잡지였다.

『신천지』의 이념적 망라성은 편집구성이 무이념적이었다거나 기계적 균형을 중시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신천지』 편집진의 의도는 민족을 앞세워 좌우의 합작을 도모하는 데 있었다. 좌우의 소통을 목표로 하여 같은 사안에 대해 좌익의 견해와 우익의 입장이 나란히 배치되기도 했다.[46] 『신천지』의 입장은 "우리 국가재건은 오직 남북통일과 좌우합작에

서만 있을 것"이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47] 1949년까지 『신천지』의 논조는 이른바 '중간파'로 지칭되었던 지식인들에 의해 주도되었다.

『신천지』에서 고전적 자유주의는 극복의 대상으로 간주되었다. 고전적 자유주의의 입장에서 자유주의자를 자처한 지식인은 없었다. 대부분의 경우 고전적 자유주의는 자본주의의 모순을 야기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고 보았다. 당시 좌익의 언어로 표현한다면 "근세민주주의가 부루짖는 「자유」적 「개인」은 파괴되고 오로지 자본가계급만이 향유할 수 있는 「부루조아」적 자유가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48] 당시 좌익의 입장에서 자유주의는 계급이 존재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무의미했다. 형식적으로 보장된 자유는 그것을 실질적으로 향유할 자원이 없는 "노동자와 농민에게는 미사여구"일 뿐이었다.[49]

좌익의 입장에서 자유주의적 한계를 넘어설 대안은 "진보적 민주주의"로 설정되었다. 진보적 민주주의란 "절대 다수의 노동대중 즉 노동자 농민 도시소시민 인테리겐챠 진보적인 자본가를 망라한 전 「인민을 위한 인민의 의한 인민의 정치」 형태"이며, 이는 "일견 쏘련적 민주주의와 구별하기 어려우나 「푸로레타리야 독재」가 아닌" 것으로 규정되었다.[50] 진보적 민주주의란 이처럼 통일전선으로 결집된 정치세력에 의해 전 인민이 자유와 민주를 향유하자는 구상을 의미했다. 진보적 민주주의는 통일전선 수립을 위한 좌익의 단계론적 전략으로 제기되었지만, "전 민중적 동원, 특히 지식분자, 중산계급의 활발한 동원과 양심적인 지주와 기업가의 협력"을 요청했던 중간파의 입장[51]과 표면적인 차이는 없었다. 실제로 『신천지』의 중간파 지식인들은 초기에 진보적 민주주의에 우호적인 입장을 보였으나, "좌익이 즐겨서 애용하는 그 진보적 민주주의가 실질에 있어서 소련식 정치이념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독재정치"라고 규정하면서 비판적인 입장으로 선회했다.[52]

---

46) 『신천지』 제1권 제8호(1946. 9)에서는 좌우합작원칙을 두고 좌익의 입장과 우익의 입장이 나란히 게재되었다. 함상훈, "좌익측 합작오원칙에 대한 비판"; 권태섭, "우익 팔원칙의 분석과 그 비판".

47) 홍종인, "혁명의식의 앙양", 『신천지』 제1권 제7호(1946. 8), 62쪽.

48) 김동환, "민주주의론", 『신천지』 제1권 제1호(1946. 1), 124쪽.

49) 이유문, "스딸린헌법과 소벳드 민주주의", 『신천지』 제1권 제10호(1946. 11), 34쪽.

50) 위의 글, 125쪽.

51) 홍종인, "혁명의식의 앙양", 『신천지』 제1권 제7호(1946. 8), 59쪽.

자유방임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적 인식은 좌익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었다. 경제적 자유방임에 대한 부정은 정치적 스펙트럼과 무관하게 『신천지』에 나타난 '자유' 담론에서 공통된 것이었다. 하지만 좌익이 일제강점기 사회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자본주의의 모순을 자유주의의 본원적 한계로 규정하고자 했던데 반해, 좌우 합작을 주장한 중간파는 자유주의의 사회주의적 수정을 대안으로 삼고자 했다. 이들의 논의는 사회적 자유주의 담론으로 표출되었다. 『신천지』의 '자유' 담론은 자유주의를 고전적 자유주의로 규정하고 공격한 좌익과 사회적 자유주의를 기치로 내세운 중간파에 의해 주도되었다.

『신천지』에서 자유주의는 1947년과 1948년 초에 가장 왕성하게 논의되었다. 1948년 1월호와 3월호에는 자유주의를 주제로 기획 논문들이 실리기도 했다.[53] 정부 수립 직전의 시점에 자유주의가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던 것이다. 이 시기에는 좌우 대립이 격화되고 그에 병행하여 중간파가 광범위하게 형성되고 있었다. 『신천지』 필진 중 중간파를 자처하는 지식인들은 자유주의를 자기 이념으로 표방했다. 앞서 말했듯 대개의 경우 그들이 의미한 자유주의는 사회적 자유주의였다. 이는 서구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경제활동에 국가 개입이 필요하다는 담론으로 표출되었다.

> 재산의 자유란 것이 경제활동의 자유경쟁을 전제로 할 때 그 결과는 부익부, 빈익빈으로 빈부의 대립이 현격해지며 격렬한 계급투쟁을 초래케 하야 마침내는 사회적으로 크다란 불평등을 유치케 하였다. 이러한 결과에서 국가사회의 제도상 결함이 지적될 것은 당연타 할 것이다. 따라서 현대에 와서는 「재산의 자유」가 어느 정도 제한되지 안을 수 없시 되엿다.[54]

『신천지』의 권두언 격이었던 "삼면불"을 집필했던 오기영의 경우 자본주의적 착취도, 공산주의적 독재도 없는 나라가 한국이 지향해야 할 길이라고 했다. 그는 "자본가 지주계급의 독재를 부당하게 아는 똑같은 이유로써

52) 오기영, "착취업는 나라 독재업는 나라", 『신천지』 제2권 제6호(1947. 7), 17쪽.
53) 이헌구, "자유의 옹호: 자유주의 비판에 대하야"; 김병덕, "자유·자유주의·자유주의자"; A. S. 닐, "자유와 교육", 『신천지』 제3권 제1호(1948. 1); 신영만, "사상빈곤의 조선현실과 신자유주의론"; 오기영, "새자유주의의 이념: 독재와 착취 업는 건국을 위하여", 『신천지』 제3권 제3호(1948. 3).
54) 홍종인, "인민의 권리·의무", 『신천지』 제2권 제6호(1947. 7), 35쪽.

또 다른 계급의 독재도 수긍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여 미국식 자본주의도, 소련식 공산주의도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단언했다.[55] 그는 스스로를 "자유주의자"로 자칭하면서 "좌우 어느 진영에도 구애하지 않으려는 자유주의의 임무"는 "가장 솔직하게 가장 냉정하게 비판하며 충고"하는 것이라고 보았다.[56] 그는 자신이 표방하는 자유주의자는 "과거 자유주의 이념의 승리에 의하여 봉건적 귀족주의에 대치된 근대적 자본주의를 그대로 옹호하려는 자가 아니라"고 했다.[57] 자신이 말하는 자유주의가 고전적 판본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가 내세운 것은 "새자유주의"였다. 그는 신자유주의(new liberalism)가 양극단의 체제를 절충하는 이념이라고 생각했다. 사회적 자유주의는 자본주의의 "경제독재"와 공산주의의 "정치독재"를 모두 지양하고 두 체제의 장점을 절합할 수 있는 사상적 자원으로 여겨졌던 것이다.[58]

신자유주의, 즉 사회적 자유주의는 자유방임주의를 극복하고 자유주의의 문제의식을 이상주의의 기반 위에서 개진한 것으로 이해되었다. 개인의 자유를 방해하는 조건들을 사회정책을 통해 제거하는 것이 사회적 자유주의의 핵심으로 간주되었다. 신영만은 그린을 인용하면서 사회적 자유주의를 소개하고 이를 자유방임 자본주의와 폭력혁명노선 모두를 지양할 수 있는 사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사회적 자유주의에 입각해 좌우 극단을 모두 비판한 뒤 "신자유주의는 실로 사상빈곤의 조선현실을 구하기 위하여 중대한 사명을 포부한 사회사상"이라고 평가했다.[59]

사회적 자유주의는 중간파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이념으로 상정되기도 했다. 중간파의 정치세력화만이 파국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이 시기 『신천지』에서 흔하게 볼 수 있었다. 그런 글들은 중간파의 정치적 결집을 전망하며,[60] 중간파의 정치세력화를 정당화하고자 했다.[61] 최우근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자본가의 등장에 따라 파멸해가는 "소자산계급"이 중

55) 오기영, "착취업는 나라 독재업는 나라", 『신천지』 제2권 제6호(1947. 7), 16쪽.
56) 오기영, "이성의 몰락: 일자유주의자의 항변", 『신천지』 제2권 제4호(1947. 5), 22쪽.
57) 오기영, "새자유주의의 이념: 독재와 착취 업는 건국을 위하여", 『신천지』 제3권 제3호(1948. 3), 43쪽.
58) 위의 글, 50쪽.
59) 신영만, "사상빈곤의 조선현실과 신자유주의론(承前)", 『신천지』 제3권 제4호(1948. 5), 100쪽.
60) 함상훈, "중간파에 대한 시비", 『신천지』 제2권 제2호.
61) 최우근, "중간정당을 논함", 『신천지』 제2권 제2호.

간파의 물적 조건이라고 보았다.[62] 그는 정치적으로 대자본가는 금력(金力), 무력을 동원한 파시즘에 경도되는 반면, 중간파는 “금융자본가의 독점체제와 무한량한 착취를 반대하고 경제통제의 육체적 정신적 노동자의 대우개선을 요구”하여 “반자본주의의 방향으로 나온다”고 주장했다.[63] 그러나 그들의 지향은 공산주의가 아닌 자유민주주의에 있다고 했다. 여기서 말하는 자유민주주의 또한 사회적 자유주의 노선을 의미했다.

1947년 6월 중간파 언론이었던 『새한민보』를 창간한 설의식 또한 사회적 자유주의를 대안으로 생각했다. 설의식은 “개체는 개체로서 고립된 개체가 아니라, 전체에 연환(聯環)된 개체이므로 어디까지나 전체로서의 조화가 유지되어야 하고 전체로서의 균형이 보지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하여 개인과 사회의 유기체적 관련성을 전제했다.[64] 그는 이러한 상호연관성을 바탕에 두고 “권리를 행사하기에 개방된 문호와 제일(齊一)된 기회를 자유로 이용할 수 있는 체제와 환경”을 만드는 것이 민주주의의 요체라고 보았다.[65] 하지만 한국이 참조할 민주주의의 모델은 미국도 소련도 아니었다. 그는 “일의독재의 소련적 민주방식”도 “명색 좋은 자본독재의 미국적 민주방식”도 거부하고, “미소(美蘇)적 방식의 교차점에서 새로운 조화의 합일점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66] 그 대안은 “민주정치와 민주경제”를 조화시키는 데 있었다.[67] 이러한 입장은 그가 “남북통일을 지상과제로” 삼는다[68]는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설의식은 한반도의 양극화된 체제가 사회적 자유주의를 통해 수렴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처럼 사회적 자유주의는 좌우와 남북의 합작을 도모했던 중간파의 이념으로서 단정 수립 직전에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자유주의는 양극의 정치적 지향을 종합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해 갈 수 있는 지혜를 담고 있는 사상으로 제시되었다. 이는 18세기 서구에서 Liberal이라는 개념이 편견의 배제와 자기 객관화 역량을 의미했다는 점(Vierhaus, 2014: 28)을 연상케 한다. 서구에서 자유주의는 극단적 사고방식을 벗어나 다양한 입장을 관용하

62) 위의 글, 17쪽.
63) 위의 글, 17쪽.
64) 설의식, “전제정치와 민주정치”, 『민주조선』 제1호(1947. 11), 15쪽.
65) 위의 글, 15쪽.
66) 설의식, “미소대표에 보내는 말”, 『신천지』 제2권 제6호(1947. 7), 21쪽.
67) 위의 글, 21쪽.
68) 위의 글, 20쪽.

는 태도를 일컫는 개념이기도 했다. 해방 정국에서 중간파는 자유주의에 내재된 중립적, 관용적 성격에 주목하면서도, 균분의 문제의식으로 양극화된 정치 세력을 한 데 담아보고자 했다.

『신천지』에는 정부 수립 이후에도 자유주의자의 정치세력화를 통해 파국을 막아보려는 구상을 담은 글들이 간간이 등장했다. 자유주의자는 "보수 진보의 중간에 개재하야 그 어느 편에도 소속되지 않는 무리의 사람들"로 "수로서 적지 않은 이들 일군은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나 단결하지 않고 도리혀 각개 독립하여 생활함을 즐"긴다고 규정되기도 했다.[69] 그러나 혼란한 정치 상황 속에서 그들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의 사회적 세력으로서 힘을 발휘하는 이외의 길은 없"었다.[70]

> 자유주의자가 □연히 종래의 퇴영을 탈각하여 활발히 자기의 소신을 표명하고 행동하는 용기를 갖는다면 양 세력을 압도할 세력은 떨치지 못하드라도 이들은 견제하고 혼란과 붕괴를 방지할 세력으로는 될 수 있는 것이다. 웨냐하면 자유주의자의 지성은 양극의 주장과 요구의 합리적인 것의 이해를 가능케 하고, 거기 기인하여 사회 속에 합리적 진보적인 경향을 조장하여 열광적인 「이데오로기-」나 실력의 충돌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71]

인용문에서 보이듯 자유주의는 지적이며 합리적인 사상으로 표방되었다. 자유주의자의 적극적 정치 참여는 스스로의 자유를 지키고, 국내 정치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필요했다.

다른 한편 양 체제가 모두 민주주의를 표방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를 동시에 지양하는 이념으로 제시되기도 했다. 한치진은 『신천지』에 기고한 글에서 민주주의를 "다수한 사람으로 하여금 유산자가 되게 하고", "소수의 자본가의 남은 재력을 다수인의 생활 표준을 향상시키는 데 활용하자는 진보사상"이라고 규정했다.[72] 여기서 민주주의는 경제 민주주의이자 사회적 자유주의에 가까운 이상을 표현하는 개념으로 제시되었다. 그는 "민주주의의 견지에서 자본주의에 입각한 사회주의와 사회주의에 입각한 자본주의"가 한국의 이상적 방향이라고 보았다(한치진, 1948: 65).

---

69) 고병욱, "자유주의자의 성격", 『신천지』 제4권 제5호(1949. 6), 41쪽.
70) 위의 글, 50쪽.
71) 위의 글, 50-51쪽.
72) 한치진, "민주주의의 사적 고찰", 『신천지』 제4권 제9호(1949. 10), 111-112쪽.

중간파는 이승만 정부의 반공 국민 만들기 기획이 본격화되면서 그 입지를 잃어갔지만(장세진, 2018), 스스로를 자유주의자, 민주주의자로 규정하면서 마지막까지 충돌을 막아보고자 했다. 한국전쟁 이전까지 『신천지』의 '자유' 담론을 주도한 것은 중간파였다. 그들은 사회적 자유주의를 양 극단의 절충 또는 지양으로 간주했다. 그것은 통합의 담론으로서 호소력을 갖추고 있었다.

하지만 편집권이 우익에 장악되면서 『신천지』의 '자유' 담론은 반공주의에 결박된다. 자유주의적 입장에서 언론자유 보장을 주장하는 글도 등장하고,[73] 매카시즘을 비판하는 글도 등장하지만,[74] 공산주의에 맞서는 '자유세계'의 일원이라는 정체성이 압도하게 된다. 경제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글에서도 반공이 목표로 제시되었다. "공산독재보다 민주주의의 편이 우수하다는 것을 우리는 실적으로써 입증하"기 위해 "경제적으로 또한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말은 이를 잘 보여준다.[75]

전쟁은 공산주의를 타협의 대상으로 보는 논의를 금기로 만들었다. 체제의 차이는 생사의 문제로 경험되었다. 이는 전후(戰後) 지식인 담론을 주도한 『사상계』 필진들에게도 마찬가지였다. 해방 정국의 사회적 자유주의에서 보였던 '자유'와 '공산'의 의미론적 교집합 가능성은 사라지고 두 개념의 관계는 반공주의의 압도적 영향력 속에 적대적으로 변화했다.

---

73) 민병훈, "언론의 자유와 명예훼손", 『신천지』 제9권 제3호(1954. 3).
74) 신상초, "정권과 민중", 『신천지』 제9권 제1호(1953. 12).
75) 유광렬, "전후풍조의 극복", 『신천지』 제8권 제3호(1953. 8), 66쪽.

제3장 『사상계』의 경제적 자유론:
경제체제론에서 도덕적 책임론으로

이 장에서는 한국의 저항적 자유주의 세력이 국가에 의한 재분배를 선호하게 된 이유를 살펴보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 자본주의를 부정하지 않으면서 국가 개입에 의해 자유와 평등의 조화를 도모하는 입장은 앞서 보았듯 사회적 자유주의의 관점에 가깝다. 그러나 1950년대 『사상계』에는 경제적 자유를 옹호하는 담론 또한 적지 않게 발견된다. 국가 권력의 집중을 막고 효율적 경제성장을 추구하기 위해 경제적 자유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사회적 자유주의의 전제에서 자유의 평등한 향유를 위해 경제적 자유를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 또한 지속되었다.

1950년대 후반부터 근대화를 위한 경제체제를 모색하면서 이들의 주장은 충돌하기도 하고 수렴되기도 했다. 『사상계』에서 개진된 경제체제론은 대체로 자유경제 체제의 확립을 위해 일정 기간 국가 계획이 필요하다는 방향으로 종합되는 양상을 보였다. 빈곤 탈피를 위한 국가 개입은 복지국가론에 의해 정당화되기도 했다. 물론 후진국의 입장에서 국가의 역할은 재분배보다는 개발에 있었다.

그러나 1960년대 후반 총량적 경제성장이 불평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개되면서 생존권 보장을 국가의 도덕적 역할로 요청하는 담론이 확산되었다. 생존권 담론은 사회과학적 논리보다는 휴머니즘적 윤리에 바탕을 두고 있었다.

제1절 1950년대 경제적 자유를 둘러싼 입장들

『사상계』에서 경제적 자유는 “스미스, 말사스, 리카도 등 정통파 경제학자에 의해 이론적으로 확립”된 것이며, 그 핵심은 “기업의 자유, 소비의 자유를 골간으로 하는 자유경쟁론”으로 이해되었다.[76] 자유경쟁 자본주의는 독점을 야기하는 등 여러 모순을 발생시킴으로써 20세기에는 “「경제적 자

76) 신상초, “自由主義의 現代的 考察”, 『사상계』 24호(1955. 7), 117쪽.

유」에 대한 국가의 통제 또는 간섭이 여러 가지 형식으로 생기지 않을 수 없었다"는 점[77]은 『사상계』의 필자들에게 상식과도 같았다.

그러나 서구와는 다른 수준에 처해있는 한국 사회에서 경제적 자유의 확대가 필요한지 제한이 필요한지는 논자마다 다른 입장을 보였다. 특히 1950년대 『사상계』에는 경제적 자유에 대한 옹호론과 비판론이 동시에 존재했다. 휴머니즘적 자유론, 사회민주주의론은 모두 개인의 자유를 극대화하기 위해 경제적 자유를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일치했다. 반면 경제적 자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한 집단도 있었다. 민주당 신파를 대변한 주요한, 김영선은 『사상계』와 『새벽』의 지면을 통해 관권경제로부터의 탈피와 국영산업의 민영화를 요구했다. 앞의 두 경향이 균분과 성장을 위해 국가의 경제 개입을 옹호하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이승만 정부의 개입 방식을 문제 삼았다면, 자유경제론을 주장한 집단은 국가 개입 자체를 문제로 여겼다. 『사상계』의 경제필진들도 대체로 자유경제를 옹호하는 입장을 가졌다. 다만 그들은 국가가 시장 체계의 기반을 조성하고 독점을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보았다. 경제적 자유와 관련하여 1950년대 『사상계』에 개진된 입장은 이처럼 네 가지 흐름으로 분류된다(표 2-1).

경제적 자유에 대한 평가는 세 가지 준거를 가졌다. 공정성, 효율성, 민주주의 친화성이다. 경제적 자유를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진 지식인들은 민간에 방임된 경제가 불평등을 낳고, 비효율적이며, 독점자본의 지배로 귀결될 것이라고 보았다. 반면 관권으로부터 민간 기업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지식인들은 자유경제가 효율적이며, 국가로의 권력 집중을 차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경제적 자유로 인해 조성될 수 있는 불평등은 자유경제의 장점에 비해 부차적인 문제라고 보았다.

77) 위의 글, 118쪽.

<표 3-1> 1950년대 경제적 자유를 둘러싼 입장들

	경제적 자유 통제	경제적 자유 확대
정신적 요소 강조	- 휴머니즘적 자유론: 장준하, 함석헌, 김재준, 안병욱 등 『사상계』 주요 필진	- 민주당 신파: 주요한 등 『새벽』 필진
제도적 변화 강조	- 혁신계: 이동화, 신도성	- 질서자유주의: 성창환, 최호진 등 『사상계』 경제 필진

1. 휴머니즘적 자유론: 도덕적 평등주의

『사상계』의 편집 방향을 주도한 핵심 필자들은 사회적 자유주의와 기독교적 정신주의를 결합한 듯한 논조를 보일 때가 많았다. 그들은 자유의 가치를 부정하지 않았지만, 쾌락 추구를 자유와 동일시하는 대중을 용납할 수도 없었다. 그들은 자유에 방향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여겼다. 그 방향은 이성적 자기 통제에 근거한 휴머니즘이었다(최창근, 2016). 공공선에 기여하는 자유만이 진정한 자유였다. 사회적 조화를 훼손하는 자유는 일탈이며 방종이었다. 이들의 휴머니즘은 인간의 사회성을 전제로 자유에 따른 책임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었다.

『사상계』의 휴머니즘적 담론에서 자유의 방향, 즉, 공공선이란 인간을 억압하는 모든 것들로부터의 탈피를 의미했으며, 한국 사회에서 그 핵심 과제는 근대 국가 건설에 있었다. 정치, 경제, 교육 등 제 분야의 근대화를 이룸으로써 전근대적 관행과 빈곤에 억눌린 대중을 구제해야 한다는 의식이 휴머니즘으로 표출되었다(장세진, 2005).

휴머니즘적 자유론의 입장에서 자유는 취향과 선호의 차원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상업적 대중문화에 대한 선호는 저급한 것으로 여겨졌다. 문화의 소비 또한 계몽의 대상이었다(한영현, 2012). 일상 속의 대중들은 미국의 대중문화와 접속하면서 또 다른 형태의 자유를 접했지만 『사상계』 지식인들은 이를 멸시했다(권보드래, 2009 참조). 자유란 어디까지나 공적 지향을 가진 것이어야 했다. 그들은 문학 또한 퇴폐와 허무에서 벗어나 민

족과 인류의 문제를 대면해야 한다고 볼 정도로 공공선과 자유의 합일을 강조했다(김경숙, 2018: 353-354).

『사상계』에서 휴머니즘적 자유론의 입장에 선 지식인들은 대개 철학이나 신학을 지적 배경으로 삼고 있었다. 여기에는 장준하, 함석헌, 안병욱, 김재준 등이 포함된다. 이들은 신 앞에 평등한 인간이라는 기독교적 세계관에 입각해 평등주의적 가치를 내면화하고 있었다. 이들에게 자유란 신의 의지를 현실에서 구현하는 것이었다(김명임, 2015; 이철호, 2013). 이러한 입장에서 자유방임 자본주의는 불평등을 산출하여 공동체를 분해시킬 것으로 우려되었다. 물론 이런 논의가 자본주의에 대한 전적인 부정으로 치닫지는 않았다. 이들은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평등이 조화될 수 있다고 보고, 두 가지가 동시에 병행되는 사회를 구상했다.

김복순(2013: 86)은 1950년대 장준하의 자유주의 담론을 두고 진영론에 결박된 냉전 자유주의라고 평가했다. 장준하의 '자유' 담론이 분단 상황에 고착되어 있다는 것이다. 『사상계』 지식인들이 반공주의에 충실했다는 주장은 타당하다. 그러나 장준하를 비롯해 휴머니즘적 자유론에 선 지식인들의 담론에서는 개인의 자유와 평등의 조화를 중시하는 사회적 자유주의의 영향력 또한 분명하게 감지된다. 장준하는 국민 통합과 생활의 안정을 위해 국가가 경제에 개입해야 한다고 했다(김진기, 2013: 344-345).

휴머니즘적 자유론 입장을 견지한 『사상계』 지식인들은 경제적 자유에 부정적이었다. 서구에서 경제적 자유는 부르주아 계급의 반봉건적 요구에 따라 확보되었으나, 극심한 빈부격차를 낳았고, 그 결과 20세기에는 국가의 개입으로 이를 조정하는 것이 당연시 되었다는 설명은 『사상계』 도처에서 찾아볼 수 있다. 경제적 자유는 무엇보다 공동체에 유해한 것이었다.

> 무통제한 자유경쟁사회 조건 하에서도 진정한 자유는 발전할 수 없다. 자유가 그 사회의 각 구성원에게까지 갖추어 지려면 일정한 계층의 자유 이외에는 인정되지 않는 사회기구는 변혁되지 않아서는 아니 됨과 동시에 「힘」이 사회 일반에 균등하게 편재(遍在)하고 경제력이나 정치력이 사회의 일방에 편재(偏在)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78]

> 최소행위의 소극 국가가 19세기의 자유국가의 이념이었지만 최대 행위의 적극 국가

78) "[권두언] 「自由」 守護를 爲한 一言", 『사상계』 10호(1954. 2), 9쪽.

가 20세기의 복지국가의 이념이다. 그러므로 자유에 관한 여러 가지 중대 문제의 해결을 우리는 국가의 손에 맡기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79]

추상적 수준일지언정 분배의 균등, 또는 수탈없는 경제체제는 해방 정국의 지식인들에게는 일종의 컨센서스에 가까웠다(김동춘, 2018: 252). 이러한 정서적 지향은 『사상계』의 휴머니즘적 자유론에서도 지속되었다. 균분의 관점에서 본다면 경제적 자유는 지양되거나, 국가에 의해 통제 또는 조정되어야 했다. 순수한 자유방임은 서구의 역사 속에서 이미 그 실효를 다한 것이기에 한국 사회가 그것을 좇을 이유가 없었다. 이런 입장에서 사회주의적 경제 체제는 자유민주주의와 얼마든지 접합될 수 있다고 판단되었다. "구체적인 실정이 경제적인 평등을 기도할 필요성이 있다면 사회주의 정책을 쓰는 것이 결코 '자유사회'의 이념과 모순된다고 할 수는 없다"는 말은 이러한 논리를 간명하게 보여준다.[80]

휴머니즘적 자유론을 편 지식인들이 경제적 자유에 부정적이었던 것은 그들이 지식인으로서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표방한 것과도 관계가 있다. 그들의 자유주의는 계급적 기반을 결여했다. 그렇기에 그들의 담론은 정치적으로 허약할 수밖에 없었지만, 역으로 자유를 공동체의 제약과 연결시키는데 거리낄 것이 없었다.(조경란, 2011: 147). 그들이 보기에 빈곤에 대한 공적 책임을 위반하는 자유는 허용될 수 없었다. 공동체의 도덕을 강조하면서 그에 합치되는 자유를 요구함으로써 그들은 공적인 계몽자로서 스스로를 정립하고자 했다.

『사상계』의 주요 필진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독교적 가치에 비추어도 계급 간의 격차를 수반하는 발전은 용납할 수 없었다. 강원길은 "국가가 다만 그 성원의 생명·재산만을 보호하면 그만이라는 자유주의적 견해는 기독교철학과 전혀 어긋나는 것"이며, "무제한한 경쟁은 경제계의 파멸을 가져오게" 하므로 국가의 개입에 의한 경제적 자유의 일부 제한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81] 김재준은 자본주의가 야기하는 경제적 불평등이 "현대 민주주의의 가장 큰 위기를 가져오는 표본"이라고 규정하고, 제도적 개선과 더불어 이기적 인간형의 개조를 요구했다.[82] 함석헌 또한 "이날까지 자본주의가

79) 안병욱, "自由의 倫理", 『사상계』 24호(1955. 7), 28쪽.
80) 유기천, "自由社會", 『사상계』 61호(1958. 8), 168쪽.
81) 강원길, "基督敎的 社會觀: 캐토릭적 입장에서", 『사상』 4호(1952. 12).

발달해 올 때에 자유로 생산하고 매매하는 데 마껴서 좋았"으나, "이제는 그렇게 자유방임을 하고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데 다달았다"고 하면서 "어느 정도의 통제를 하지 않고는 … 도저히 사회생활의 터져나감을 막을 수가 없게 되었다"고 말했다.[83] 함석헌은 자본주의가 강제하는 "경쟁으로 자유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이 상식"이라고 하면서 인간은 정신적 발전을 통해서만 자유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84] 『사상계』 지식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휴머니즘의 견지에서 불평등은 용인될 수 없었다. 자본주의는 정신적으로 갱신되어야 했다.

이러한 담론들을 살펴보면, 휴머니즘적 자유론이 개인의 자유와 경제적 자유 간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했는지 알 수 있다. 이 입장에 선『사상계』 지식인들은 경제적 자유가 불평등한 관계를 만들어 내기에 자유의 평등한 향유를 불가능하게 한다고 파악했다. 따라서 경제적 자유는 다른 자유를 더욱 풍부하게 누리기 위해서 억제되어야 했다. 경제적 자유는 여타 자유의 실현을 구조적으로 훼방하는 특수한 자유로 인식되었다. 다만 그것의 수정은 사회정책과 더불어 정신적 개조, 즉 이기심의 폐기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았다. 이처럼 경제적 자유를 도덕적 문제로 생각했다는 데 휴머니즘적 자유론의 특징이 있다. 20세기 초반 영국의 사회적 자유주의자들이 합리주의, 휴머니즘, 도덕주의(moralism)에 입각해 있었다는 점(Weiler, 1982: 19-22)에서 『사상계』의 휴머니즘적 자유론은 정신적 요소를 강조하면서 사회적 자유주의를 계승하고 있다.

장준하는 경제적 자유의 제한이 생산성 제고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았다. 그는 "착취를 당하는 일이 없고 공평이 전 사회를 지배하게 될 때 모든 사람들은 그 가진 바 전 능력을 그 사회의 공동한 복리를 위하여 바치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85] 즉 경제적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경제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고, 모두가 평등하게 자유를 향유한다면 경제 성장에 대한 대중의 자발적 기여가 높아지게 된다는 것이다. 간략히 말해 균분이 이루어질 때 효율적인 경제 체제가 건설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적 성과가 있어야 자유가 실질적 의미를 갖게 되고, 자유가 있어야 경제 성장도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는

82) 김재준, "民主主義論", 『사상계』 2호(1953. 5), 35-36쪽.
83) 함석헌, "새윤리(上)", 『사상계』 33호(1956. 4), 112쪽.
84) 함석헌, "새윤리(下)", 『사상계』 34호(1956. 5), 246쪽.
85) 장준하, "協同精神의 發顯을 爲하여", 『사상계』 22호(1955. 5), 8쪽.

조화론적 구상이다.[86]

휴머니즘적 자유론을 편 지식인들은 경제적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보았다. 『사상계』 지식인들은 '자유와 빵'의 비유로 공산주의를 평가하기도 했다. 공산주의는 빵을 보장해주지만 자유가 없는 사회라는 것이다.[87] 안병욱은 이를 두고 "아무리 빵이 귀하다고 하더라도 자유가 없으면 곧 노예"이며, "빵없는 자유 이것은 인간의 원(願)이 아니"라고 했다.[88] 또한 "빵이 없는 자유는 자유의 껍데기에 지나지 않"는다고도 했다.[89] 빈곤 상태에서 자유는 무의미할 뿐더러 공산주의의 선전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진단이다. 따라서 빈곤의 해결과 자유의 보장을 병행하는 것만이 대안이 될 수 있었다.

이처럼 휴머니즘적 자유론의 입장에서 경제적 자유의 제한은 공정성, 효율성, 민주주의 친화성이라는 측면에서 모두 긍정적인 것이었다. 경제적 자유를 제한하고 분배의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생산 의욕을 증강하고, 공동체의 결속을 강화하여 체제 대결에서도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는 전망이었다.

휴머니즘적 자유론의 입장에서 경제적 자유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은 『사상계』의 번역물에서도 나타난다. 『사상계』에는 공동체주의적 윤리를 준거로 자유경쟁, 자유방임을 비판하는 입장을 담은 번역물들이 선택적으로 게재되었다.

> 무제한의 자유경쟁이 지배하는 사회질서 안에서 정의는 어떠한 의미를 가질 수가 있는가. 그러한 사회체제 내의 자유는 인간상잔의 자유다. 이러한 투쟁에서 정의는 단순히 개인이 획득한 물량의 정당성을 말하는 데 불과하다. 이와 같이 규정된 자유는 자유로운 사회의 정당한 원리가 아니라 다른 귀중한 것을 파괴해 버리거나 또는 추방해버리는 흉악한 독단에 불과하다.[90]

> 자유제도는 정치적 평등을 전제로 합니다. 그런고로 모든 불평등 특히 개인이나 집

86) 경제적 효율성과 균분이 선순환을 그린다는 장준하의 조화론적 논리는 1960년대 산업화 우선론을 반박하고 민주화와 산업화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담론으로 이어진다(이상록, 2010).
87) 안병욱, "自由의 倫理", 『사상계』 24호(1955. 7), 26쪽.
88) 위의 글, 26쪽.
89) 위의 글, 22쪽.
90) 아렉산더 마이클존, "自由論", 민석홍 역, 『사상계』 6호(1953. 9), 156쪽.

단에게 부당한 정치적 영향을 주는 경제적 불평등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고안한 방법은 정당할 뿐더러 필요합니다. 그 밖에도 사회적·경제적 평등을 주장하는 유력한 도덕적 이유가 있음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91]

두 인용문은 모두 '정의'와 '도덕'의 관점에서 경제적 자유를 비판하고 있다. 개인들이 자유를 균등하게 향유하려면 경제적 자유를 일부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렇지 못한 사회는 정의롭지 못하고, 도덕적이지 않다. 두 번째 인용문은 냉전 자유주의자로 명성을 떨쳤던 시드니 후크(Sidney Hook)의 글이다. 그는 냉전진영론의 입장에서 공산주의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였지만, 도덕적 자유주의자의 면모 또한 갖고 있었다. 또한 이 글은 서구의 자유진영 지식인들의 결사체였던 '문화자유회의'(The Congress for Cultural Freedom)에서 발표된 것이기도 했다. 『사상계』는 적극적으로 '문화자유회의'의 담론을 수용, 번역했는데(권보드레, 2011), 이는 1950년대 '문화자유회의'가 반공을 표방하는 지식인들의 느슨한 조직으로서 최신의 담론을 산출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휴머니즘에 기반을 둔 자유주의의 기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다.[92] 이처럼 반공주의가 가미된 휴머니즘적 자유론은 서구 지식인들의 담론에 의해 뒷받침되었다.

휴머니즘적 자유론의 입장을 가진 지식인들은 평등주의적 원칙을 현실화하는 방식으로 정신적 개조를 강조했다. 이는 그들이 기독교적 정신주의와 문화적 민족주의의 전통 속에서 사회개조를 구상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김건우, 2003). 문화적 민족주의의 논리에 따른다면 사회변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를 개조하는 것이고, 특히 정신을 개조하는 것이다. 개조의 방향은 공동체와 개인의 조화를 지향하는 것이어야 했다. 그들이 보기에 개인에게는 공동체에 대한 책임이 존재한다. "나의 자유를 악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선을 위해서, 사회의 복(福)과 이(理)를 위해서 사용할 책임이 있는 것"이며 그 책임이 수반되지 않는 자유는 "결국 사멸하는 도리밖에

91) 시드니 후크, "自由의 運命", 이상혁 역, 『사상계』 35호(1956. 6), 77쪽.

92) '문화자유회의'와 『사상계』가 어떻게 관계를 맺게 되었는지는 확실치 않다. 김준엽은 "사상계 활동 가운데 국제적인 유대도 많이 가졌죠. … 국제적으로는 '자유문화회의'를 통해서 전세계적으로 자유·민권운동 하는 단체들하고 유대를 맺었었지요. 내가 '자유문화회의' 하는 데 많이 나갔었지요"라고 밝혔으나 관계가 어떻게 시작되고 유지되었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장준하선생20주기추모문집간행위원회 편, 1995: 43-44). 김준엽은 이 '문화자유회의'에 참여하여 서구 지식인들의 내한을 주선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없는 것"이었다.[93] 이러한 인식은 사회적 자유주의 담론과 마찬가지로 유기체적 사회론으로 정당화된다.

> 민주사회는 유기체적 사회이며 협동적 사회임은 췌언할 필요가 없읍니다. 유기체에 있어서는 어떠한 부분에서 받는 자극이라도 곧 전체에 영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한 부분에서 그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게 될 때 전체는 큰 타격을 받고 변동을 일르키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부분이 완전히 자기의 맡은 직분을 감당하여 갈 때에만 질서는 유지되고 안녕은 지속되는 것입니다.[94]

유기체적 사회론에 따르면 모든 개인은 사회 속에서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으므로 타인과 무관한 자유란 있을 수 없다. 자기 소명에 충실하지 못한 것조차 공적인 손실로 간주된다. 공적인 것과의 연관성을 인식하는 가운데서만 개인의 자유가 가능하다는 논리다. 개인의 책임은 타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공선을 지향해야 한다. 반면 공공선을 지향하지 않는 자유는 자멸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그려진다.

안병욱은 "국민들의 무지와 악의와 무책임으로 인해서 자유가 썩고 타락하고 남용되고 부패하"게 되며, 이를 "자유의 자살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95] 개인 간의 상호의존성,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무시한다면 자유는 올바르게 행사될 수 없다는 말이다. 즉, 책임은 윤리적인 것일 뿐더러 지적인 것이기도 하다. 이는 때로 '진리'를 아는 문제로 제기되기도 했다. "「진리」라 함은 누구나 다 긍정할 수 있는, 그리고 보편타당성을 가진 지식"을 의미했다.[96] 이처럼 보편타당한 진리를 깨닫는 데서 자유는 바람직한 방향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설정되었다. 따라서 계몽 없이는 올바른 자유도 불가능하다. 이런 논리에서 경제적 자유의 제한 또한 제도적 요구로 표출되기보다 각자의 자제와 절제를 요청하는 방향을 택하게 되었다. 1950년대 『사상계』의 휴머니즘적 자유론은 이처럼 끊임없이 공적인 것을 환기시키고, 대중 계몽을 주창하는 전략을 고수했다.

『사상계』의 휴머니즘적 자유론은 사회적 자유주의가 설정한 공공선의

---

93) 위의 글, 23쪽.
94) "[권두언] 바른 判斷力을 促求함", 『사상계』 11호(1954. 3), 10쪽.
95) 안병욱, "自由의 倫理", 『사상계』24호 (1955. 7), 19쪽.
96) "[연두사]「진리」를 위하여", 『사상계』 9호(1954. 1), 8쪽.

중요성을 극대화하는 담론이었다. 이 입장에 선 지식인들은 일본 유학 경험 등을 통해 사회적 자유주의의 논리를 이미 익숙하게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휴머니즘적 자유론을 주창한 『사상계』 지식인들은 기독교적 세계관, 문화적 민족주의의 전통에 사회적 자유주의의 논리를 결합시키는 담론을 구사했다. 또한 '빵'과 '자유'의 논리에서 보이듯 이들은 반공주의의 틀 속에서 사회적 자유주의를 재맥락화했다.

2. 사회민주주의: 자유경제론 비판

경제적 자유를 비판한 또 다른 흐름은 혁신계로 불린 사회민주주의자들에게서 볼 수 있다. 『사상계』를 비롯한 당대의 지식인들은 사회민주주의에 관심을 보이기도 했는데, 이는 영국 노동당의 약진에 영향을 받은 것이었다(박지영, 2015: 538; 윤상현, 2013: 55). 1950년대에 『사상계』에서 혁신계의 입장은 대부분 1955년 이후 이동화와 신도성이 집필한 글을 통해 볼 수 있다. 두 사람은 모두 도쿄제국대학 정치학과에서 수학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동화는 도쿄제국대학 정치학과의 가와이 에이지로(河合榮次郎) 교수로부터 영향을 받아 민주적 사회주의를 옹호하게 되었다고 술회한 바 있다(나연준, 2019: 191-194). 신도성은 서울대학교 교수로 『사상』에도 글을 실은 바 있었고, 이동화는 성균관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면서 이두산이라는 필명으로 1953년부터 『사상계』에 글을 게재했다. 이동화와 신도성은 1956년 진보당 창당 작업에 함께 하기도 했다.[97] 이들 논의의 핵심은 경제적 자유가 야기한 불평등을 국가 개입을 통해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동화의 논의가 이론적이고 우회적이라면, 신도성은 현실정치의 맥락 속에서 경제적 자유를 비판했다.

이동화와 신도성은 국가 개입에 의한 균분이라는 사회민주주의의 주장이 공산주의로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다. 그들은 볼셰비즘을 비판함으로써 이념적 정당성을 기초하려 했다. 볼셰비즘은 "요컨대 경제적 빈곤

97) 신도성은 자신의 의견이 관철되지 않는다며 1956년 6월 28일 진보당 창당 작업에서 탈퇴했다. "진보당을 탈퇴: 신도성 의원 표명", 『조선일보』, 1956. 6. 29. 그는 1959년 11월 경남지사로 발탁되어 재직하다가 3·15 부정선거와 관련된 혐의로 4월혁명 이후 구속되었다. "신도성씨 구속기소", 『경향신문』 1960. 6. 14.

과 정치적 압제라는 토양 위에서 성장해 온 것"이며,[98] "폭력주의를 신봉실천하는" 사상으로 규정되었다.[99] 특히 이동화는 소련에 대한 연구결과를 『사상계』에 다수 게재하면서 소련의 공산주의가 후진성의 산물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볼쉐비즘 즉 레닌=스탈린주의는 후진 로시아의 특수한 역사적 사회적 제조건 하에서 발생 발전하였다"고 지적하고,[100] "따라서 그것이 세계적인 보편적 타당성을 가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101]

『사상계』에서 이동화는 소련 체제를 분석하고 비판하는 학자로서의 면모를 보였지만, 기회가 있을 때면 사회민주주의를 적극적으로 소개하기도 했다. 그는 국가 개입을 통해 인격적 완성을 도모한다는 그린의 사상을 설명하고 이것이 홉하우스, 홉슨의 신자유주의, 즉 사회적 자유주의를 거쳐 "그 논리적 귀결로서 드디어 민주적 사회주의에 도달"했다고 주장했다.[102] 이처럼 그는 사회민주주의를 사회적 자유주의의 계보 속에서 이해했다.

> 오늘에 있어서의 새로운 민주주의 즉 사회적 민주주의의 주요 목적과 임무는 만인을 위하여 빈곤으로부터의 자유를 조직하고 축성(築成)하는 데에 있다. 자유의 정치적 조건은 새로운 사회적 민주주의가 만인의 만인에 의한, 그리고 만인을 위한 정치의 원칙을 실현하는 일이지마는 한편 자유의 경제적 조건은 우리의 인적 및 물적 자원을 생산에 옳게 배분 이용함으로써 만인을 위한 경제적 풍요를 창출하는 일이다.[103]

이동화는 고전적 자유주의, 즉 자유방임주의가 한계에 도달했다고 평가하고,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으로는 "폭력주의를 신봉실천하는 「볼쉐위즘」의 노선"과 "이를 반대하고 평화와 자유를 중시수호하는 사회적 민주주의의 노선"이 존재한다고 했다. 그가 볼셰비즘을 집요하게 비판한 이유는 반공을 표방함으로써 이념적 위험을 피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지만, 사회민주주의만이 자본주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득하기 위해서이기도 했다. 자본주의에 문제가 있지만 볼셰비즘은 그 대안이 될 수 없다는 담론을 통해 자연스럽게 사회민주주의를 대안으로 부각시키고자 한 것이다. 그는 소련의 위성

98) 신도성, "再建의 政治的 土臺", 『사상계』 6호(1953. 9), 50쪽.
99) 이두산[이동화], "政治學을 공부하는 學生에게", 『사상계』 23호(1955. 6), 193쪽.
100) 이두산[이동화], "쏘련공산주의의 로시아적 성격", 『사상계』 40호(1956. 11), 293쪽.
101) 이두산[이동화], "(續)쏘련공산주의의 로시아적 성격", 『사상계』 41호(1956. 12), 109쪽.
102) 이두산[이동화], "政治學을 공부하는 學生에게", 『사상계』 23호(1955. 6), 186쪽.
103) 위의 글, 186쪽.

국가들도 자유화, 민주화를 통해 사회민주주의로 전환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104] 마치 해방 정국의 중간파처럼 양분된 세계가 사회민주주의로 수렴될 것으로 기대한 셈이다.

신도성의 글은 시간에 따른 편차를 보인다. 그는 1952년 『사상』에 게재한 글에서 아테네 도시국가의 민주주의를 설명하고는 그 교훈으로 "시간과 장소 여하를 막론하고, 민주정치가 성공하기 위하여서는 어느 정도까지 당해 사회구성원의 동질성·공동성이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105] 이를 위해 "같은 전체의 이익이 동시에 개인의 이익이 되고, 국가의 영광이 국민의 복지에 일치하"는 사회적 결합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106] 그는 구성원의 동질성 창출을 민주주의의 핵심 전제로 꼽으면서 평등주의적인 사회구성을 요청했다.

신도성은 1954년 1월에는 경제적 불평등이 정치 또한 양극화하여 "우리의 자유를 위태롭게" 한다고 보았다. 1952년 글의 연장선 상에서 본다면 이러한 주장은 자본주의의 발전에 따라 구성원의 동질성이 와해되어 민주주의가 위태로워진다는 뜻으로 읽을 수 있다.[107] 그러나 그는 동질성 회복을 위해 "자유민주주의 그 자체를 말살"하려는 것은 "그릇된 사회주의자들"의 주장이라고 하여 급진적 해결책을 부정했다.[108] 그가 대안으로 삼은 것은 "민주주의의 정신적·윤리적 토대"로서 "모든 사람의 가슴 속에 「관용」과 「협조」의 정신이 자리잡"는 것이라고 주장했다.[109]

이상의 글을 볼 때 신도성은 평등주의적 사회 구성을 민주주의 공고화의 조건으로 보기는 했지만, 이를 구조적, 제도적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입장으로까지 나가지는 않았다. "관용과 협조의 정신"을 강조한 대목은 휴머니즘적 자유론에 근접한 것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 그의 논조가 급격히 변화하는 시점은 1955년부터라고 할 수 있다. 그는 1954년 민국당 소속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 이듬해 탈당하고, 1956년에는 진보당 창당 작업에 참여했다. 그는 사회민주주의를 내세워 민주당을 공격하는 데 앞장서면서 "환상

104) 이두산[이동화], "(續)人民民主主義를 批判한다", 『사상계』 49호(1957. 8), 88쪽.
105) 신도성, "希臘 都市國家의 民主政治", 『사상』 3호(1952.11), 65쪽.
106) 위의 글, 65쪽.
107) 신도성, "民主政治와 寬容의 精神", 『사상계』 9호(1954. 1), 108쪽.
108) 위의 글, 107-108쪽.
109) 위의 글, 113쪽.

적 사회주의 분자들의 대변자"라는 악평을 듣기도 했다.[110]

신도성은 혁신계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당시 민주당 신파가 주도했던 자유경제론을 적극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1956년 『사상계』에 발표한 글에서 자유경제론을 공박하고 국가 개입에 의한 성장과 분배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백보를 양(讓)하여 가령 그들[민주당: 인용자]의 '자유주의' 정신을 그대로 믿어둔다 할지라도 고도로 발달한 자본주의 세계에 끼인 우리나라와 같은 후진지역에서는 벌써 '자유경제' 따위로서는 생산을 증강할 수도 없고 국민경제를 발전시킬 수도 없으며, 더욱이나 공정한 분배라든지 근로대중의 복리향상과 같은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다.[111]

인용문은 당시 민주당 정강의 주요 내용 중 하나였던 자유경제원칙을 비판하는 맥락에서 작성된 것이다. 신도성은 자유경제가 후진 사회에서는 효율성과 공정성 모두를 저해한다고 단언했다. 자유경제는 "소수금융귀족이 지배하는 영구적인 과두전제정권"으로 귀결된다는 것이다.[112] 그는 구미식 자유경제는 광활한 경제적 영토를 조건으로 할 때만 성공할 수 있기에 한국 사회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단언했다. 다시 말해 자유경제는 특수한 역사적·사회적 조건에서 성립하여 번성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게다가 자유경제는 구미에서도 이미 지양되었다.[113] 따라서 자유경제는 효율성의 차원에서 볼 때도 한국 사회가 추종해야 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평가는 휴머니즘적 자유론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경제적 자유를 방치하면 공정성과 효율성 모두 확보할 수 없다는 논리다.

하지만 경제적 자유와 민주주의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소 다른 논리가 나타난다. 신도성은 자유경제가 독점자본의 출현으로 귀결되며 이는 자본의 지배를 야기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보았다. 그가 보기에 '자유경제'가 당시 한국에서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국유화되어 있는 산업시설을 민간에 헐값에 매각하는 것이었다. 신도성은 자본의 독점에 따라 자유와

---

110) 김재순, "자유민주주의의 옹호(1): 신도성 씨의 소론을 박함", 『동아일보』, 1955. 5. 5.
111) 신도성, "民主黨", 『사상계』 31호(1956. 2), 304쪽.
112) 위의 글, 310쪽.
113) 위의 글, 305쪽.

민주는 허울로만 남아 “이기적인 소수인의 자유요, 소수인을 위한 민주”가 된다고 보았다.[114] 그는 “‘개인독점’은 ‘기업인’ — 즉 자본가로 하여금 비단 정치적으로 ‘독립’하게 하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치를 ‘지배’하게” 한다고 주장했다.[115] 신도성은 이러한 논의를 통해 자유경제론을 주장하는 민주당의 계급성과 보수성을 지적하고자 했다. 이처럼 혁신계는 특권층을 민주당을 포함한 기성 정당에 연관시키고, 특권을 창출하는 기제로서 자유경제를 지목했다. 민주당이 제시하는 자유경제는 국가 독점을 개인 독점으로 바꿀 뿐이기에 다수의 복지를 보장해 줄 수 없다는 것이다.[116]

신도성은 구미의 사회주의 운동을 공산주의와는 다른 개량적 복지국가 운동으로 언급하기도 했다.[117] 그가 한국의 발전모델을 뚜렷하게 제시한 것은 아니지만 한편에서는 민간의 자본주의적 발전이 진행되고, 다른 한편에서는 국가에 의한 사회보장과 교육이 확충되는 것을 바람직하게 여긴 것은 분명하다.[118] 혁신계는 반공을 벗어나지 않는 틀에서 진보적인 사회·경제 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한 전략을 구사했다.

큰 틀에서 본다면 휴머니즘적 자유론이나 혁신계의 사회민주주의론이나 경제적 자유에 부정적이었다는 점에서는 동일했다. 공정성, 효율성, 민주주의 친화성의 측면에서 국가 개입을 선호한 논리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둘 다 기존의 사회적 자유주의 논리를 반공주의적 틀에 맞춰 재구성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사상계』의 휴머니즘적 자유론의 중심에 있었던 장준하는 혁신계에 우호적이지 않았다. 주간을 역임했던 양호민의 회고에 따르면 장준하는 사회민주주의에 반대하지 않았지만, 혁신계 인사들에 대해 거부감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장준하선생20주기추모문집간행위원회 편, 1995: 25). 두 입장 사이에 가장 큰 차이는 방법론에 있었다. 휴머니즘적 자유론이 여전히 문화적 민족주의의 전통에서 개인의 정신적 각성을 강조하고 도덕적 준거를 중시했던 데 반해, 혁신계의 사회민주주의는 정치 세력화를 통한 권력 장악을 목표로 했다. 표면적 주장은 별 다른 차이가 없을지언정 그 기반을 이루는 세계관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었던 것이다.

---

114) 위의 글, 310쪽.
115) 위의 글, 306쪽.
116) 위의 글, 306쪽.
117) 신도성, “韓國自由民主主義의 課題”, 『사상계』 24호(1955. 7), 101쪽.
118) 위의 글, 104쪽.

3. 민주당 신파의 자유경제론

1950년대 『사상계』에는 사회적 자유주의의 영향력이 적지 않게 나타났지만, 경제적 자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한 담론도 병존했다. 해방 정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들었던 경제적 자유 옹호론이 1950년대 중반에 나타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사상계』 필자들 중 자유경제를 가장 적극적으로 옹호한 인물은 주요한과 김영선이었다. 둘 다 민주당 소속 정치인으로 활약했다. 이들은 자유경제체제를 기반으로 경제적 부흥을 도모한다는 민주당 신파의 입장을 대변했다(박태균, 2007: 53). 이들이 자유경제론을 주장한 이유는 정치적 상황과 무관치 않았다.

한 가지 주목할 것은 1950년대 민주당 신파의 입장을 담은 잡지가 별도로 존재했다는 사실이다. 일제강점기 수양동우회의 잡지였던 『동광』의 후신으로 기획되어 1954년 6월 주요한의 주도로 창간된 『새벽』이다.[119] 『새벽』은 "진정한 민주주의적 민족문화와 고결한 교양"을 지향한다고 하여[120] 『사상계』와 유사한 목적을 표방했다. 실제로 『사상계』와 『새벽』의 필진들은 겹쳐지는 경우가 많았다. 함석헌, 신상초, 유달영, 장이욱, 주석균, 이동욱 등의 지식인들은 『사상계』와 『새벽』에 모두 활발히 글을 기고했다. 그러나 발행 초기 『새벽』에서는 사회적 자유주의의 논조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에서 『사상계』와 차별점을 보였다.[121] 여기서는 민주당 신파가 주창한 자유경제론의 특징을 『사상계』와 『새벽』의 글을 함께 참조하여 검토해보고자 한다.

민주당 신파는 자유경제를 효율적이며 불가피한 길로 제시했다. 김영선은 "한국을 둘러싼 미국을 위시한 국제환경을 살펴보더라도 역시 자유경제

---

119) 주요한, "동광에서 새벽으로: 우리는 진보를 신봉한다", 『새벽』 창간기념호(1954. 9), 216쪽.

120) "창간사 대신으로", 『새벽』 창간호(1954. 6), 36쪽.

121) 『새벽』은 1957년 하반기부터 1959년 상반기까지 재정난에 부딪혀 명맥만 유지했다. 그러나 1959년 10월에 혁신호를 발간하면서 1960년 12월 폐간 때까지 각종 논문, 시평, 문예물을 겸비한 종합교양지로서의 성격을 보였다. 창간 초기에는 흥사단의 색채가 비교적 강하게 반영되었으나, 혁신호 이후에는 다양한 필진들이 섭외되어 그러한 성격이 옅어졌다(김효재, 2015: 257). 혁신호 이후부터는 필진의 중복, 지향과 편집구성의 유사성으로 인해 『사상계』와 『새벽』 간에 큰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다.

원칙을 채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며, "우리나라의 경제여건 하에서 생산을 급속히 증가시킬 수 있는 길"은 "무엇보다 개인의 창의와 노력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이는 자유로운 경제활동에서만 기대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122] 주요한 또한 "산업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이 자유기업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급속한 발달을 볼 수가 없"다고 하여 효율성의 차원에서 자유경제를 옹호했다.[123] 자유진영에 속한 이상 자유경제의 길을 택할 수밖에 없으며, 자유경제를 택하는 것이 성장에도 유리하다는 논리다.

주요한은 "국민생산을 증강하는 동시에 19세기 자본주의 초기의 폐단인 노동자의 무제한한 착취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선결문제는 생산증강"에 있다고 하여 분배를 부차적인 문제로 설정했다.[124] 생산증강의 첩경은 경제적 자유의 확대에 있었다. 경제적 자유를 확대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이고,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평등은 차후에 개선한다는 구상을 보인 것이다. 생산증강, 즉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국가에 장악된 산업들을 민영화하는 것이 급선무로 지적되었다. 한국에서 자본주의가 발달하지 못하는 핵심 원인은 국유국영경제에 있다는 것이다.[125]

물론 이들도 자유경제가 불평등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럼에도 "자본주의의 나쁜 면만 보고서 그 좋은 면, 발전적인 면에 눈을 가리워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들의 입장이었다.[126] 김영선은 "냉정히 생각하건대 자유의 경제적 조건은 인적 물적 자원을 최고도로 효율을 발휘케 하여 물자를 풍부하게 하는 것이 선결문제일 것이고 정의에 입각한 분배는 말하자면 일종의 교통정리적 성격을 띤 것에 불과할 것"이라고 했다.[127] 자유경제는 효율적이기에 도입되어야 하지만 그로 인해 분배문제, 즉 불평등이 발생한다는 점은 인정하고, 대신 그것을 국가가 "교통정리"하면 될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자유경제가 가진 단점보다는 장점, 즉 효율성이 훨씬 크다는 논리다.

하지만 민주당 신파는 단지 자유경제가 효율적이라는 이유로만 옹호하지

---

122) 김영선, "保守政黨論", 『사상계』 41호(1956. 12), 63쪽.
123) "[좌담회] 新黨의 諸問題", 『사상계』 19호(1955. 2), 84쪽, 주요한 발언.
124) 주요한, "아이디아가 자본이다: 중견청년에게 주는 말(下)", 『새벽』 제4권 제6호(1957. 6), 33쪽.
125) 신상초, "우리 사회 근대화의 고찰", 『새벽』 제4권 제2호(1957. 2), 43쪽.
126) 위의 글, 53쪽.
127) 김영선, "保守政黨論", 『사상계』 41호(1956. 12), 63쪽.

는 않았다. 이들의 자유경제론은 정치적 맥락을 갖고 있었다. 주요한은 민주당 창당 작업과 관련해 "현재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관료통제라는 것은 없앤다, 민간기업을 조장해가지고 우선 관료의 경제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타파해야 되겠다, 이것이 한 개의 공약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여 자유경제를 새로운 정당의 차별적 정체성으로 내세우고자 했다.[128] "신당은 모름지기 자유경제를 지향해야 된다"는 것이다.[129] 김영선은 민주당을 "개인주의를 중심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적 색채가 농후한 보수정당"으로 규정하고, 사회민주주의 정당에 대해서는 경제계획과 공정한 분배를 요구하는 "대중민주주의적 색채가 농후한 것"이라고 구별지었다.[130] 이들에게 자유경제는 자유당은 물론 혁신계와도 차별화되는 지점이었던 것이다.

민주당 신파가 자유경제를 옹호한 가장 큰 이유는 정치적 부패와 자유당 독주를 막아내는 데 있었다. 주요한은 자유당 정권의 물적 토대가 "정치가 실업(實業)을 좌우"할 수 있는 조건에 있다고 보았다.[131] 자유경제가 실현되지 못하는 이유는 기업가들이 자유당과 유착하여 이익을 취하고, 그 일부를 정치자금으로 제공하는 데 있었다.[132] 주요한은 "자유경제가 좀 추진이 된다면 선거도 공명하게 되고, 민권도 옹호"될 것이라고 보았다.[133] 이처럼 관권경제에 대한 비판에는 자유당의 물적 근거를 약화시키려는 정치적 의도가 깔려있었다. 주요한은 관권에 의존하는 기업가들을 비판하면서, "필요하다고 하면 야당의 뒤를 보아줄 수 있는 실업인도 차차 출현해야 할 것"이라고 하여 자유경제론이 정치자금 문제와 연계되어 있다는 점을 숨기지 않았다.[134] 경제적 자유의 확대는 무엇보다도 자유당 정치자금의 원천을 도려내는 데 필요했던 것이다. 따라서 민주당 신파는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도 관권이 장악하고 있는 국영산업들을 민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128) "신춘좌담: 민주정치의 위기와 대두하는 신당운동(5)", 『동아일보』, 1955. 1. 6. 주요한 발언.
129) "[좌담회] 新黨의 諸問題", 『사상계』 19호(1955. 2), 84쪽, 주요한 발언.
130) 김영선, "保守政黨論", 『사상계』 41호(1956. 12), 59-60쪽.
131) 주요한, "민주주의의 활로는 어디로부터", 『새벽』 제2권 제2호(1955. 3), 19쪽.
132) 이동욱, "민주당의 생리와 그 정권담당능력", 『새벽』 제6권 제4호(1959. 10), 44쪽.
133) "[대담] 헌법기초학자가 말하는 "흥미없는 헌정사"", 『새벽』 제3권 제6호(1956. 11), 118쪽, 주요한 발언.
134) 주요한, "민주주의의 활로는 어디로부터", 『새벽』 제2권 제2호(1955. 3), 19쪽.

이들은 자유경제를 이승만 정부에 대한 비판의 준거로 사용했다. 절량농가, 저임금 노동과 이에 대비되는 사치와 향락의 범람이 모두 "직접 간접으로 횡포하고 부패한 관료의 불공평한 처사"에 기인하는 것으로 제시되었다.[135] 이승만 정부의 경제체제를 관권경제로 규정하고 관권경제에 의해 비효율과 불공정이 난무하게 되었다고 주장한 것이다. 민주당 신파는 관권경제 하에서는 민주주의도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다. 경제적 자유 없이는 정치적 자유도 없다는 것이다. 이런 입장에서 이승만 정부의 관권경제는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물적 조건이었다.

> 개인의 자유나 관권에 대한 민권의 신장은 한 쪽의 법률이나 제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자유와 민권의 사회경제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구극적(究極的) 해결책이 될 것이다. 즉 우리의 경험과 현재의 세계사의 가르치는 바에 의하면 개인의 자유와 민권은 경제제도 특히 소유형태와 경제운영의 기본 원리와 불가분의 상관관계에 있음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즉 쏘련과 같이 생산수단의 사소유를 허용하지 않고 경제운영원리에 있어 계획과 강제나 병행하는 나라에 있어서는 하등의 자유나 민권을 찾아볼 수 없으며 … 옳은 의미의 자유나 민권이나 민주주의는 오직 민간기업과 자유경제원칙 하에 운행되던 미국 영국 불란서 등지에서만 찾아볼 수 있었던 것이다.[136]

김영선은 "자유경제나 민간기업의 원리가 선진국가에 있어 그 약점을 노정한 것을 모르는 바 아니"라고 하면서도 "민간기업과 자유경제원리"라는 사회경제적 토대에서만 자유와 민권이 바로 설 수 있다고 했다.[137] 이는 당시 한국의 경제적 비효율과 집권세력의 정치적 전횡이 모두 관권에 의한 경제장악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인식을 바탕에 두고 있다. 무능한 관료들에 의해 장악된 경제는 공정하지도, 효율적이지도 않을뿐더러 국가의 권한을 비대하게 만들어 자유와 민권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주요한 또한 "자유경제 없는 곳에 민주주의가 있을 수 없고 권력과 부패의 극소화가 있을 수 없다"고 하여 자유경제를 자유와 민주주의 보장의 핵심적인 조건으로 보았다.[138] 따라서 정치적·경제적 문제를 겪고 있는 "모든

---

135) 김영선, "保守政黨論", 『사상계』 41호(1956. 12), 63-64쪽.
136) 위의 글, 61쪽.
137) 위의 글, 62쪽.
138) 주요한, "權力과 腐敗: 마이노리티 指導力을 待望", 『사상계』 56호(1958. 3), 69쪽.

후진국가의 공통과제는 자유주의 경제를 강화"하는 데 있다고 주장했다.[139] 주요한은 민주주의를 뒷받침할 주체의 형성은 자유경제만으로 가능하다고 보았다.

> 근대 산업화가 성취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느 정도의 '자유경제 체계'로 되기 전에는 시민적 민주주의의 성장은 어려울 것이다. 이런 점에서 미국의 원조정책이 기본적으로 '자유경제'를 조장하는 원칙을 세우고 있는 것은 경제적 의미에서뿐 아니라 정치적인 포석인 것을 알 수 있다.[140]

자유와 민권이 보장되는 민주주의 정치 체제는 자유경제라는 경제적 토대 위에서만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주요한과 김영선의 주된 논점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와 정치는 조응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민주당은 자유경제로의 실질적 전환을 공식 정책으로 내걸고 이를 민주주의와 연결시킴으로써 정권에 대한 정치적, 경제적 비판을 동시에 수행하고자 했다. 하이에크가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자유를 연결짓는 논리로 전체주의를 비판했듯 민주당 신파는 자유경제론으로 이승만 정부를 공격했다.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자유가 동시에 확보되지 않는다면 전체주의로 귀결될 수 있다는 것이 민주당 신파가 주창한 자유경제론의 핵심 논리다. "국유국영의 방향"에서는 "관료의 지배하에 국민은 노예의 지위에 신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들의 입장이었다.[141] 따라서 국가 개입을 옹호하는 사회적 자유주의 또한 배제되었다. "독일식보다는 미국식" 경제체제로 가야한다는 것이다.[142] 민주당 신파가 『새벽』과 『사상계』에서 전개한 자유주의 담론은 반(反)전체주의라는 냉전 자유주의의 기준에 충실하면서, 미국식 자유경제를 모델로 하고 있었다.

민주당 신파가 경제적 자유를 주장한 또 다른 이유는 그들이 한국 사회의 당면 과제를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확립으로 규정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는 『새벽』에서 제기된 자유민주주의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새벽』의 지식인들은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를 부정하지 않았지만, 당장 한

---

139) 위의 글, 69쪽.
140) 주요한, "우리의 悲願: 解放14年의 風塵", 『사상계』 61호(1958. 8), 22쪽.
141) 김영선, "민주주의의 경제적 토대", 『새벽』 제2권 제2호(1955. 3), 52쪽.
142) 위의 글, 52쪽.

국 사회가 지향해야 할 목표는 아니라고 보았다. 그보다는 한국 사회의 정치적, 경제적 근대화를 위해 중산층 또는 부르주아부터 육성하는 것이 시급했다. 한국 사회는 "고차원의 데모크라시는 고사코, 소위 뿔조와 데모크라시마저 궤도에 오르지 않았"기에 부르주아 민주주의부터 우선 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143] 앞서 보았듯 주요한이 분배보다 자유경제에 의한 생산증강의 우선성을 강조했던 것도 동일한 맥락이라 할 수 있다. 1920년대에 자유주의적 민족운동이 단계론의 관점에서 긍정된 것처럼 민주당 신파는 한국 사회가 고전적 자유주의의 단계를 거쳐야 한다고 보았다.

민주당 신파의 자유경제론은 대만의 자유주의 지식인들이 1950년대 중반에 하이에크를 적극 수용한 것과 유사한 맥락을 보여준다. 대만에서 『사상계』와 유사한 입지를 가졌던 자유주의적 지식인 잡지 『自由中國』은 처음에는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옹호했으나, 후쓰(胡適)를 필두로 하여 1950년대 중반부터 전면적인 자유경제 옹호론으로 전환하게 된다(정문상, 2013: 286). 이러한 변화는 중국의 자유주의 지식인들이 장제스(蔣介石)와 국민당의 전횡에 대한 비판을 전면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났다. 여기서 '경제적 자유 없이 정치적 자유도 없다'는 하이에크의 주장이 수용되었다. 중국의 자유주의 지식인들은 전통적으로 평등주의적 사고방식에 익숙했지만, 정치와 경제를 모두 장악한 국민당 정부가 권위주의적 통치를 지속하자 개인주의와 경제적 자유를 강조하기 시작했다(오병수, 2012: 251-252).

자유경제론은 반공의 맥락을 벗어나지 않으면서 관권의 전횡을 비판하는 데 유용한 자원이었다. 1950년대 한국과 대만에서 자유경제론은 정부의 전횡을 비판하려는 의도가 내재된 담론으로 활용되었다. 제도권 내의 정치투쟁에 초점을 맞춘 민주당의 경우에는 관권과 민권의 대립을 강조하고, 이를 다시 통제경제와 자유경제의 대립으로 의미를 연결하는 담론 전략을 수행했다. '관권=통제경제=전체주의=자유당'이라는 개념적 연결고리를 만들고 반대편에 '민권=자유경제=민주주의=민주당'이라는 의미체계를 세운 것이다.

자유주의와 관련하여 『사상계』에 실린 번역물의 다수는 사회적 자유주의의 입장을 담은 것이었지만, 경제적 자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한 것도 있었다. 경제적 자유가 개인 자유의 중요한 한 부분이며, 정치적 자유와도 상통하는 것이라는 주장 또한 1950년대 『사상계』에서 개진된 자유주의의 또

143) 신상초, "우리 사회 근대화의 고찰", 『새벽』 제4권 제2호(1957. 2), 52쪽.

다른 한 축을 이루고 있었다.

> 자유의 불가분성은 경제적 자유와 정치적 자유를 분리할 수 없는 것으로 만든다. 비판의 자유는 자유정체에 있어 필요한 것이며 자유비판의 왕성한 활동은 권력이 분산되어 있는 곳, 재산소유권이 편재하여 있는 곳, 인민의 경제적 복리가 국가와 같은 어떤 단일한 원천에만 의존되어 있지 않는 곳에서만 볼 수 있는 현상이다.[144]

인용문은 "1957년 4월 5일 오하이오주 켄욘대학에서 개최된 자유의 본질에 관한 회의에서 미 대통령 특별보좌관 Gabriel Hauge 씨가 행한 연설문"을 번역한 것이었다.[145] 상당히 신속하게 번역이 이루어진 셈이다. 이 글의 입장은 민주당 신파의 자유경제론과 매우 유사했다. 민주당 신파의 자유경제론 또한 서구 자유주의의 또 다른 흐름으로부터 정당화되고 있었다.

물론 민주당 신파는 민영화가 만능이라는 주장에만 그친 것은 아니다. 특히 주요한은 『새벽』에 자유경제론을 주장하는 글보다 대중의 정신적 각성을 요청하는 글을 더욱 자주 실었다. 민족개조론과 실력양성론이라는 방법은 『새벽』의 기본 전제였다. 안창호, 최남선, 이광수에 대한 계승의식은 『사상계』에서도 나타나지만 『새벽』에서 훨씬 직접적으로 표출되었다(김효재, 2015). 『새벽』이 표방한 정신적 요소에 대한 강조는 이런 맥락에서 볼 수 있다.

주요한의 경우 경제적 자유를 옹호한다는 점에서 고전적 자유주의에 충실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 역시 공동체주의적 조화를 염두에 두고 있었고, 개인의 자유란 방향성을 갖는 숙고된 것이어야 한다는 입장을 가졌다. 그에게 정치적, 경제적 근대화의 핵심은 "진실과 헌신과 사랑의 절대적인 도덕표준 앞에서 자기자신을 개조"하는 데 있었다.[146]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주체의 형성을 사회개조의 관건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주요한의 관점은 『사상계』의 휴머니즘적 자유론이 담고 있는 정신주의와 다르지 않았다. 경제적 자유에 대한 판단과 경제체제의 방향에 대한 생각은 달랐지만, 근대적 가치들이 "우리의 일상생활의 습관이 되고, 가장 비근한 생활도덕의 일부가 되어야만 한다"는 입장은 동일했던 것이다.[147]

---

144) G. 호오쥐, "人間自由와 政府의 經濟的 任務", 김선배 역, 『사상계』 49호(1957. 8), 54쪽.
145) 위의 글, 71쪽.
146) 주요한, "새국민을 만드는 길(中)", 『새벽』 제4권 제1호(1957. 1), 42쪽.

민주당 신파는 효율성과 민주주의 친화성이라는 준거로 경제적 자유를 주장했다. 자유경제로 인해 공정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이는 추후의 정책적 과제일 뿐이라고 보았다. 민주당 신파의 자유경제론은 자원 배분을 자유당 정부가 독점함으로써 발생하는 정치적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맥락에서 강조된 것이기도 했다. 하지만 제도적 개혁을 이룰 수단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대중의 각성을 요청하는 데 주력하는 태도를 보였다.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는 과제조차 기업가의 각성에 달려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국의 민주발전이 정당인이나 관리나 언론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요, 강력한 민족자본의 축적과 실업인의 각성에 있다는 것"이다.[148]

4. 질서자유주의: 자유경제를 위한 국가 개입

『사상계』는 1950년대 중반부터 경제학자들을 편집위원으로 위촉하면서 경제 이슈들을 전문성있게 다루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합류한 경제학자는 1955년 10월에 편집위원으로 위촉된 성창환이었다. 1958년 4월 편집위원회 개편 때 성창환의 주도로 유창순과 이상구가 합류했고, 이후 이정환, 이동욱, 이창렬이 편집위원으로 위촉되었다(김경숙, 2018: 84-85; 정진아, 2012: 332). 이들은 1950년대 한국 경제의 핵심 문제가 식민지 경제 구조의 온존에 있다고 판단했다. 이승만 정부는 1954년 개헌을 통해 자유경제의 전면화를 천명했지만, 경제 구조의 변화가 수반되지는 않았다. 『사상계』의 경제 필진들은 경제적 권한이 과도하게 국가에 집중됨으로써 식민지적 경제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고 보고 민영화를 통한 자유경제로의 전환을 주장했다. 즉, 이들에게 자유경제란 경제 구조의 전근대성을 근절하기 위한 방편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한국의 후진적 상황에서 국가의 선택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점 또한 인정했다. 자유경제로의 전격적 전환보다는 자유경제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내는 것이 급선무였다.

『사상계』의 경제학자들은 자유경제가 더 높은 생산성을 보장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는 자유로운 경쟁이 창의를 북돋고 수요와 공급의 자연적 균

147) 주요한, "민주주의의 활로는 어디로부터", 『새벽』 제2권 제2호(1955. 3), 18쪽.
148) 위의 글, 20쪽.

형을 가져와 전체적인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자유주의 경제학의 가정이 전제되어 있다. 또한 미국의 영향력 속에서 한국은 자유경제를 체제의 근간으로 삼을 수밖에 없기에 자유경제의 장점을 최대화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견해도 제시되었다. 이런 전제는 앞서 보았듯 민주당 신파의 주장과 다르지 않다.

자유경제의 창의성을 근거로 자유경제의 확대를 주장한 대표적인 경제학자로는 성창환을 들 수 있다. 그가 보기에 "결국 산업진흥의 기본대책이란 개인의 영리주의와 창의에 일임하는 민간산업의 자율적 발전에 둘 수밖에는 없는 것"이었다.[149] 즉 효율성의 측면에서 자유경제는 궁극적 지향점이 되어야 했다. 국유화는 민간 산업의 발달을 지체시키며 따라서 "자유경제 원칙에 의하여 전 산업부문을 민영화한다는 것은 철칙이 아닐 수 없"는 것이었다.[150] 그러나 "후진국의 입장에서 정부가 유치산업에 대한 보호육성을 목표로 하는 일정한 통제를 가하여야 한다는 것도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보았다.[151] 효율적 혼합경제는 "정부의 지도육성 하의 자유경제 원칙"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다.[152] 그는 케인즈주의적 처방 또한 후진국에는 적용될 수 없다며 거부했다. 정부의 역할은 투자 유인이 강화될 수 있도록 시장을 확대하는 데 있으며, 후진국의 투자 확대는 소비보다는 저축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153]

한국이 처한 국제정치적 상황에서 자유경제를 잘 운용하는 것만이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길이라는 입장을 잘 보여주는 논자로는 주석균을 꼽을 수 있다. 그에 따르면 "원래 통제경제가 옳으냐 자유경제가 옳으냐 하는 본질적인 문제는 속단을 불허하는 바이지만 우리 한국은 자유국가군의 일원으로서 경제조항개헌까지 하면서 자유경제로 지향할 것을 국책으로 삼고 있는 만큼 자유경제 토대 위에서 경제정책을 운영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154] 그는 당시 한국 경제에 나타난 효율성의 문제를 자유경제나 통제경제 어느 한 쪽의 방향성이 없다는 점에서 찾았다. 일제강점기의 연속선에서 관료들은 통제경제 관념을 지속하고 있는 반면 제도적으로는 자유경제를 표방하고 있

149) 성창환, "貧困에서의 解放: 經濟安定과 繁榮의 길", 『사상계』 41호(1956. 12), 210쪽.
150) 위의 글, 211쪽.
151) 위의 글, 211쪽.
152) 성창환, "韓國의 雇傭問題와 그 基本對策", 『사상계』 37호(1956. 8), 54쪽.
153) 성창환, "韓國經濟와 케인즈經濟學: 케인즈經濟學은 後進國經濟에 무엇을 기여할 것인가?", 『사상계』 (1956. 4), 106-107쪽.
154) 주석균, "政府의 低物價政策解剖", 『사상계』 49호(1957. 8), 134쪽.

다는 것이다. 그는 자유경제가 반드시 옳다고 할 수는 없지만 한국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보았다. 그렇다면 자유경제의 원칙을 전면적으로 적용하는 편이 합리적일 것이었다. 다만 "민족자본이 안고(安固)하게 될 때까지의 과도기는 기초산업 내지 특수중요부문에 대하여는 정부에서 통제 내지 관리를" 하는 개입은 필요하다고 보았다.[155]

최호진은 독점의 문제를 거론하며 기업자유가 국가 개입을 통해서만 보장된다고 하여 다소 다른 강조점을 보여주었다. 그는 "자유주의 경제체제를 지향하는 것"이 "보다 많은 창의와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라고 긍정했다.[156] 다만 국가의 개입은 "개인의 자유로운 창의와 기업활동의 자유를 존중 장려하고 … 자유활동을 방해하는 자유경쟁의 왜곡 폐해를 제거하는 한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157] 자유경제가 독점자본을 낳게 되면 자유경제의 장점이 훼손되기에 정부는 이를 방지하는 데 개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자유당 정부가 "자유주의 경제체제를 외면으로 표방하면서 내면적으로는 소수자의 독점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158] 그는 독일의 질서자유주의(Ordo Liberalismus)를 "신자유주의(Neoliberalismus)"라는 이름으로 소개하고서 이를 한국이 배워야 할 모델로 제시했다. 최호진은 자유경제의 효율성을 긍정하면서 그 장점을 살리기 위해 선택적인 국가 개입, 즉 "자유와 통제의 현명한 혼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159]

『사상계』 경제학자들 또한 민주주의는 자유경제에서만 가능하다고 보았다. 주석균은 통제경제를 하려면 "경찰국가화하는 것을 각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160] 통제경제도 선택지가 될 수는 있지만, 통제경제의 원활한 수행은 정치적 자유를 비롯한 여타 자유의 제한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들은 자유민주주의 정치 체제를 유지하고자 한다면 자유경제체제를 심화시키는 방법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다른 한편 경제학자들의 논의에서는 공정성, 즉 불평등과 관련된 논의를 찾아보기 어렵다. 『사상계』의 경제학자들은 어떤 체제가 한국의 후진성을 극복하는 데 가장 효율적인가에 초점을

155) 주석균, "方向論(下)" 『사상계』 8호(1953. 12), 51쪽.
156) 최호진, "經濟體制 - 現實과 理念", 『사상계』 62호(1958. 9), 54쪽.
157) 위의 글, 55쪽.
158) 위의 글, 54쪽.
159) 위의 글, 55쪽.
160) 주석균, "農村經濟의 現實과 그 繁榮策", 『사상계』 44호(1957. 3), 41쪽.

맞추었기 때문에 경제적 자유가 가져올 수 있는 불평등은 중요한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

자유경제를 옹호한 경제학자들은 일제강점기의 잔재인 관료적 통제 체계를 폐기하고, 시장 체계를 창출하며, 기간산업을 육성하는 데 국가 개입의 방향이 맞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도 후진국에서 국가의 역할은 가격 기제에 의한 효율성이 작동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데 있었다. 이는 최호진이 명시한 것처럼 독일의 질서자유주의에 가까운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질서자유주의란 생산의 효율성과 개인의 자유를 위해 완전경쟁시장을 유지해야 하며, 국가는 완전경쟁시장을 위한 조건을 창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이근식, 2001: 43-44). 경제적 자유를 보장했을 때 효율성과 민주주의가 동시에 보장될 수 있으며, 국가는 그 조건을 만들고 관리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 점에서 『사상계』 경제학자들의 자유경제론은 질서자유주의의 논리를 한국의 후진성에 투사한 담론이라고 할 수 있다.

제2절 경제계획론으로의 수렴

『사상계』 지식인들은 한국 사회의 탈후진 근대화를 적극적으로 갈망했다. 근대화는 정치적 근대화와 경제적 근대화라는 두 개의 연관된 과제로 인식되었다. 『사상계』 지식인들은 4월혁명을 정치적 근대화의 한 단계를 넘어선 사건으로 규정했다. 따라서 이후에는 경제적 근대화의 과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했다.

『사상계』 지식인들은 어떤 경제 체제가 경제적 근대화를 앞당길 수 있는지, 즉 효율적인지를 따졌다. 계획의 범위와 강도에 대해 견해차가 있었지만, 국가 계획의 필요성 자체에는 이견이 없었다. 논의를 거치면서 후진국의 상태를 벗어날 때까지 자유경제와 국가 주도의 계획이 혼합되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의견이 수렴되었다. 시장 기제에 대부분을 일임하는 자유경제는 미래의 목표로 상정되었다.

잘 알려져 있듯 『사상계』 지식인 다수는 5·16쿠데타에 대해 우호적으로 반응했다. 군사정부는 『사상계』 필진을 포함한 지식인들을 국정 운영

에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지식인들의 식견이 국가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지식인들의 근대화 구상, 특히 경제적 근대화 구상은 군사정부를 통해 실체화될 수 있었다. 자유와 민주주의는 중지되었지만, 이후 근대화의 속도를 내기 위한 준비 기간이자 체제 전환을 위한 과도기로서 군사정부의 의의가 긍정되었다.

1. 4월혁명에 대한 인식: 후진성 극복의 계기

『사상계』는 1959년에 들어서면서 이승만 정부에 대한 적극적 저항을 고취했다. 반공을 빌미로 한 반자유주의적 조치들에 대해 '자유와 민권'을 기치로 한 자유주의적 요구가 저항의 중심을 이루었다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빈곤과 실업' 또한 4월혁명 이전 『사상계』가 펼친 비판 담론에서 중요한 주제였다.

『사상계』 1959년 8월호 권두언에서는 "경제생활의 안정은 인간의 기본적 요구요 사회발전의 기초조건"인 바, "실업과 빈곤에서의 해방은 우리 사회의 지상과제"라고 선언되기도 했다.[161] 자유당 정부의 자의적 입법과 법적용에 따른 자유권의 훼손 또한 문제이지만 "가장 필요한 것은 지금 거리에 방황하는 실업자를 어떻게 건져주느냐, 그리고 굶주리는 농민을 어떻게 살리느냐 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는 상황이었다.[162]

빈곤과 실업은 한편으로는 국가 정책의 문제이며, 다른 한편으로 대중들의 정신적 갱신을 필요로 하는 문제로 인식되었다. 빈곤과 실업은 "번영과 발전을 위한 경제의 체제가 바로 서 있지 못"하며, 국민이 "근로와 생산의 이념"에 철저하지 못한 결과였다.[163] 휴머니즘적 자유론의 관점에서 빈곤 탈피를 위한 국가의 주도적 개입과 대중의 정신적 각성을 함께 요구한 것이다.

하지만 이승만 정부는 경제성장을 주도하려 하지 않았다. "국내적인 경제기구의 기형성이 시정되지 못하고", "빈곤의 악순환과 자주경제의 틀이

161) "8·15의 反省", 『사상계』 73호(1959. 8), 19쪽.
162) "[토의] 레바이아탄의 現代的 復活: 現代國家에 있어서의 行政權의 强化와 그 裁量問題", 『사상계』 73호(1959. 8), 23쪽, 김홍수 발언.
163) "[권두언] 새時代의 새人間", 『사상계』 72호(1959. 7), 25쪽.

잡히지 않은 채 외원의 대폭감축이 선언"된 상황에서 국가의 체계적인 대응은 미흡했다.[164] 경제 체제의 정비는 정치의 문제, 즉 국가의 정책적 개입에 달린 문제였다.[165] 그러나 빈곤과 실업에 대해 적극적인 구상을 보여주지 못했다.

해방 정국에서 이승만은 다른 지식인, 정치인들과 마찬가지로 자유방임을 비판하고 주요 산업의 국영화를 주장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양승태·전재호, 2007: 265). 그러나 그는 1950년대에 들어서면서 자유방임을 경제운용의 원칙으로 표방했다. 그는 "우리 경제상 문제를 원칙으로 해결하자는 작정으로 정치상 관련이나 법제상 위력으로 강제력을 쓰려는 것은 다 없이하고 자유방임주의로 순리를 따라서 나가자"고 주장했으며,[166] "정부는 개인 기업에 간섭할 의향은 조금도 없다"고 단언하기도 했다.[167] 1950년대에 이승만은 경제계획 자체를 불온시했다. 경제계획을 공산주의적 사고방식으로 간주하고 거부했던 것이다(박태균, 2007: 42). 하지만 자유방임으로 경제를 운용하겠다는 생각은 빈곤과 실업이 만연한 상황을 방치하겠다는 말과 다를 바 없었다. 시대적 염원과는 달리 국가가 경제성장을 위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이승만에게는 없었다(정용욱, 2004: 168).

물론 4월혁명이 학생들의 시위로 격화되는 과정에서 경제 문제는 적극적으로 제기되지 않았다. 부정선거, 김주열의 죽음, 그리고 항쟁 중 학생들의 희생은 논리 이전의 문제였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 경제 실정(失政) 또한 4월혁명으로 치닫는 과정에서 정부 비판의 중요한 주제였다. 이승만 정부는 1960년 3·15 선거를 앞두고 경제개발3개년계획을 통해 민심을 모아보려 했지만 정국은 의도치 않은 방향으로 흘러갔다.

4월혁명의 국면에서 '자유' 담론은 지식인들의 후진성 콤플렉스와 연동되어 있었다. 당시 한국의 후진성 문제는 정치적 후진성과 경제적 후진성 문제로 나뉘어 인식되었다. 정치적 후진성은 시민혁명에 의해, 경제적 후진성은 산업화에 의해 성취되어야 했다. 두 가지 목표는 얽혀 있는 것이기도 했다. 대부분의 지식인들은 민주주의가 산업화에 의해 뒷받침될 때 제대로 작동한다고 보았다.

---

164) 배응도, "韓國의 財閥들", 『사상계』 81호(1960. 4), 75쪽.
165) "[권두언] 8·15의 反省", 『사상계』 73호(1959. 8), 19쪽.
166) 이승만, "경제 안정 정책에 관하여", 1955. 8. 22.
167) 이승만, "기자질문에 대한 답변서", 1959. 2. 3.

경제적 후진성은 당장 어쩔 수 없었지만, 정치적 후진성은 이승만과 자유당이라는 가시적 원인이 존재했다. 1950년대 후반 『사상계』의 정치 비판은 이승만 정부와 대중의 전근대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사상계』 지식인들에게 정치적 근대화는 곧 민주주의를 의미했다(김건우, 2003: 133). 4월혁명에서 "행정부는 이 이상 우리나라를 세계적 후진국가로 만들지 말라"(김상웅 편저, 2001: 22)는 구호[168]가 나온 것은 정치적 후진성이 당시 지식인과 학생들에게 수치스러운 것으로 여겨졌음을 보여준다.

후진성의 문제의식은 4월혁명에 대한 의미부여에서도 자주 등장한다. 4월혁명의 성공은 콤플렉스의 한 축을 이룬 정치적 후진성을 일거에 극복한 사건으로 여겨졌다. 4월혁명 직후에 발행된 『사상계』의 권두언의 한 대목은 이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 한국의 민권운동도 이제 피를 흘리기 시작하였으니 만방의 자유민들 앞에 머리를 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천인이 공노할 관권의 야만적 횡포 아래서도 그저 울고만 있는 유약한 백성이란 낙인은 우리에게 다시는 찍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바란다는 것은 쓰레기통 속에서 장미가 피기를 기다림 같다」던 망언도 이제 취소가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입으로 「자유」를 논할 자격을 얻었으며 행동으로 민권을 과시한 실적을 남겼습니다.[169]

인용문에서 자유는 관권에 의해 억눌렸던 것으로 그려지고 있다. 그 관권을 피 흘려 타도했다는 점에서 4월혁명은 서구의 시민혁명과 동일한 반열에서 평가되었다(이상록, 2010: 72; 정용욱, 2004: 167). 『사상계』 지식인들에게 4월혁명은 그 무엇보다도 정치적 후진성의 탈피라는 점에서 의미를 가졌다. 후진성으로 인한 수치심에서 "머리를 들 수 있게 된" 사건인 것이다. "우리는 세계를 향하여 자유를 논할 자격이 생겼고 민주주의에 참여할 권리를 가졌다"는 말은 이를 압축적으로 보여준다.[170]

다른 한편으로 4월혁명은 "지식인들의 손에 의한 혁명"으로 규정되었다.

> 4월혁명은 자유와 민권의 선각자인 이 땅의 지식인들의 손에 의한 혁명이다. 그 기

168) 4월 18일 국회 앞에 연좌농성 중인 고려대학교 학생들의 구호.
169) 장준하, "[권두언] 民權戰線의 勇士들이여 편히 쉬시라", 『사상계』 82호(1960. 5), 18쪽.
170) 안병욱, "利의 世代와 義의 世代", 『사상계』 83호(1960. 6), 101쪽.

반을 닦아온 것은 정객들보다는 양심있는 이 나라의 교수들과 교사들을 포함한 지식인들이오 이에 박차를 가해준 것은 신문이나 잡지들을 포함한 매스콤의 힘이요, 그 불길이 되어 탄 것은 가장 감수성이 강하고 정의감이 가장 두터운 학도들이었음이 분명하다.[171]

이처럼 『사상계』는 4월혁명을 교수, 교사, 언론, 학생들의 합작품으로 평가했다. 특정한 당파성에 의한 투쟁이 아닌 자유와 민권이라는 진리에 입각한 혁명이었다는 것이다. 학생들이 앞장 선 것은 그들이 "일반 국민보다 먼저 자유와 민권이 무엇인가를 알았"기 때문이다.[172] 『사상계』 지식인들이 보기에 후진사회에서는 권위주의에 젖어 있는 지배 세력도, 문맹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일반 대중도 자유를 담당할 수 없었다. 또한 국가로부터의 자유를 자기 이익으로 삼는 부르주아 계급 또한 미약했다. 학생은 '진리'의 관점에서 자유와 민권을 주창할 수 있는 유일한 집단으로 간주되었다.[173] 『사상계』 지식인들은 한편으로는 당시 정국을 자유와 민권의 박탈 상태로 규정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유가 지식인에 의해 통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자유와 민권의 회복은 지식인과 학생의 손에 의해서만 올바른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자유에 방향성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은 『사상계』 지식인들의 '자유' 담론에서 자주 되풀이되었다. "언제나 자유는 해방인 동시에 무엇을 위한 자유"이며 "적극적인 건설에 대한 방향을 가져야" 했다.[174] 이는 기독교적 사고방식과도 친화성을 갖고 있다. 신학자이자 목사였던 김재준은 "인간이 자연법칙에 가장 잘 순응함으로써만 자연에서 가장 많이 자유됨과 같이 인간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가장 잘 순종함으로써만 가장 크게 자유함을 얻는다"고 했다.[175] '방향'과 '하나님의 뜻'은 '진리'로 표상되기도 했다. "'진리'가 가져올 것은 인류의 공통된 염원인 자유와 평화"이며,[176]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한다'라는 성훈이 있거니와 무엇을 좀 더 바로 알고 또

171) 장준하, "[권두언] 또 다시 우리의 向方을 闡明하면서", 『사상계』 83호(1960. 6), 36쪽.
172) 김성식, "學生과 自由民權運動", 『사상계』 83호(1960. 6), 66쪽.
173) 위의 글.
174) "文學者·哲學者가 오늘과 來日을 말하는 座談會: 휴매니즘을 中心으로", 『사상계』 47호(1957. 6), 251쪽, 박종홍 발언.
175) 김재준, "自由와 宗敎: 內的인 面에서", 『사상계』 43호(1957. 3), 32쪽.
176) "[권두언] 「眞理」를 爲하여", 『사상계』 9호(1954. 1), 9쪽.

많이 알고자하는 마음의 태도야말로 우리를 보다 더 자유로운 인간이 되게 하는 길이"라는 인식[177]에서 '자유' 개념과 '진리' 개념의 의미연관을 볼 수 있다.

이처럼 자유와 앎의 문제는 『사상계』 내에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다. 지식이 부족한 자에게 자유란 의미가 없거나 파괴적으로 사용될 소지가 있는 것이었다. "잘못된 규정을 내려서 또 잘못 지도를 받은 자유는 오히려 이 잘못된 자유가 노예제도를 만들어내는 것과 같은 것"이며, "사실 자유는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필요한 것이 아"닌 것이다.[178] 『사상계』가 4월혁명을 지식인의 손에 의한 정치적 근대화로 전유하려 한 것은 공공선이 지식인에 의해서만 인식될 수 있다고 간주했기 때문이었다.

4월혁명 이후 『사상계』 지식인이 생각한 자유의 방향은 1960년 6월 장준하의 이름으로 게재된 권두언에 잘 나타나 있다. 장준하는 "첫째로 이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정책은 이 나라 지식층에게 완전히 납득이 될 수 있는 투명한 정책이어야 하며",[179] "둘째로 자유우방들에게 오인과 불신을 받을 만한 요소는 모든 정책면에서 완전히 제거되어야" 하고, "셋째로 국민의 생활향상에 전력이 기울어지는 정책이 수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180] 지식인은 정책의 유효성과 과학성을 판단하는 심판자로 특권화되었으며, 4월혁명은 반공의 틀을 벗어날 수 없는 것으로 규정되었다. 또한 자유의 방향은 경제건설에 집중되어야 하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사상계』 지식인들에게 4월혁명은 불의한 권력을 교체하고 개인의 자유를 확보했다는 의미를 넘어서는 것이었다. 4월혁명은 기존과는 다른 국가를 건설하는 계기여야 했다. 4월혁명으로 확보된 자유는 공동체 재건을 위한 방향으로 표출되어야 했다(정혜경, 2013: 297). 『사상계』 지식인들에게 핵심적인 과제는 경제건설이었다. 『사상계』는 1961년 2월호의 권두언을 통해 "4월혁명이 쟁취한 시민적 자유, 민권을 경제적 사회적 분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 전 국민이 일할 수 있는 근로체제를 시급히 확립하지

177) 장이욱, "自由人間과 그의 力量", 『사상계』 69호(1959. 4), 49쪽.
178) 김은우, "새 「自由」의 模索", 『사상계』 70호(1959. 5), 295쪽, 299쪽.
179) "지식층에게 완전히 납득이 될 수 있는 정책"이란 표현은 "일부 정당이나 정객들의 야욕"을 채우는 데 지향되지 않은 정책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구태 정치를 청산하라는 요구로 이해할 수 있다.
180) 장준하, "[권두언] 또 다시 우리의 向方을 闡明하면서", 『사상계』 83호(1960. 6), 37쪽.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181] 또한 "경제적 건설"의 "정신적 토대로서 국민의 기강이 확립되어야" 하며, 이 정신적 요소는 "후진성 극복의 열의"로 표현되었다.[182] 빈곤과 실업로부터의 탈피를 위해 인민개로(人民皆勞) 사회의 구상과 그에 병행하는 정신적 각성을 강조한 것이다.

정신적 갱신의 방향은 과학적 합리성에 의해 지시되어야 했다. 『사상계』에서 과학적 합리성은 효율성과 생산성을 지향하는 것이었다(이선옥, 2016: 275). 따라서 정신에 대한 강조는 노동하는 주체의 형성이라는 문제의식에 맞닿아 있었다. 다시 말해 자유는 노동 속에서 발휘되어야 했다. 4월혁명으로 정치적 진공상태가 나타나면서 억눌렸던 요구들이 사회적으로 분출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사상계』가 대중들에게 노동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직분에 충실하도록 권고한 것은 자유를 재질서화하여 경제적 후진성 극복에 동원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4월혁명 이후 『사상계』는 정신적 갱신과 물질적 풍요를 미래 비전으로 내세웠다. 『사상계』 지식인 일부가 민주당 정부 출범 후 국토건설본부에서 활동하게 된 것도 경제적 후진성 극복에 기여하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되었다(장준하선생20주기추모문집간행위원회 편, 1995: 38). 장준하가 실질적 대표인 기획부장을 맡았고, 『사상계』 편집위원이었던 신응균은 관리부장으로, 이만갑은 조사연구부장으로 일했다. 『사상계』에서 자유경제론을 열렬히 주장하던 김영선은 재무부장관에 발탁되어 『사상계』 지식인들의 현실 참여를 뒷받침했다(이만갑, 1995: 105).[183]

> 민주주의적 정치체제가 확립되었다고 해서 우리들의 자유가 최종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자유의 보장을 위하여 체제의 확립은 필요한 조건이기는 하지만 충분한 조건은 못된다. 자유는 정치적 면에서 경제적, 사회적으로 확대하지 않으면 안 되며 그 물질적 기반으로서 힘찬 경제적 건설이 수반되어야 하고 그 정신적 토대로서 국민의 기강이 확립되어야 함은 물론이다.[184]

---

181) "[권두언] 勞動만이 살 길이다", 『사상계』 91호(1961. 2), 24쪽.
182) "[권두언] 3·1精神은 어떻게 繼承되어야 할 것인가?", 『사상계』 92호(1961. 3), 35쪽.
183) 김진현의 회고에 따르면 장준하는 김영선과는 친분이 깊었으나, 같은 서북 출신 선배였던 주요한과는 어울리지 않았으며 주요한을 언급한 적도 거의 없었다고 한다(김진현 전 장관과의 인터뷰, 2021. 1. 13). 장준하 등 『사상계』 지식인들은 기성 서북 출신 지식인들을 존중하면서도 그들의 친일경력과 미래 비전 부재를 문제로 여겼다(김건우, 2017: 77-78).
184) 위의 글, 35쪽.

민주주의는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는 제도로서 4월혁명을 통해 쟁취되었다. 그러나 자유의 확대와 안정화를 위해서는 물질적 풍요가 뒷받침되어야 하고, 정신적 갱신, 즉 "국민의 기강이 확립"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4월혁명을 정치적 근대화의 도약으로 인식했다면, 경제적 근대화가 그 뒤를 따라야 한다는 생각은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다(정용욱, 2004: 167-168). "민생의 향상 없이 민도의 향상을 바랄 수 없고 민도의 향상이 없이 민주국가의 실을 거둘 수 없"다는 생각은 이미 4월혁명 직후에도 표명된 바 있다.[185] 다른 말로 하면 경제적 풍요가 정신적 갱신을 가져오고, 이 두 가지 기초 위에 민주 제도가 안정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2. 4월혁명 이후의 경제체제론

4월혁명으로 향해가는 국면, 즉 1959년과 1960년 초에 『사상계』는 정치적 저항을 고취하는 데 집중했다. 빈곤과 실업에 대한 문제제기는 있었지만 자유경제론 등 경제체제와 관련된 논의는 찾아보기 어렵다. 하지만 4월혁명으로 국가 재편의 계기가 마련되면서 『사상계』의 지면에는 경제체제를 둘러싼 담론이 급증했다. 자유경제론이 공세적으로 재등장하기도 했지만 자유경제만으로 생산력을 증강시키기 어렵다는 주장 또한 자주 나타났다. 넉시(R. Nurkse) 등이 전개한 후진국개발론이 이러한 논의들에 깊은 영향을 주었음은 이미 많은 연구에서 지적한 바다. 다른 한편으로 계획경제를 통한 공산주의 국가들의 고도성장은 계획의 시급성을 환기시켜준 또 다른 계기였다(정진아, 2012: 345).

이 시기 경제체제론에서는 자유경제에 대조되는 개념이 '통제경제' 대신 '계획경제'로 변화되었다. 애초에 '통제경제'라는 개념은 1930년대 일본이 총력전으로 치달아가는 상황에서 군사경제력 증강을 위해 자유경제와 계획경제의 장점을 종합한 경제모델을 지칭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었다(Sasada, 2014: 37-38). 일제강점기를 경험했고 일본 유학 경력을 가진 『사상계』 지식인들에게 '통제경제'는 익숙한 개념이었다. 하지만 개념의

185) 장준하, "[권두언] 또 다시 우리의 向方을 闡明하면서", 『사상계』 83호(1960. 6), 37쪽.

의미로 볼 때 자유경제에 대조되는 개념으로는 계획경제가 더 적절했다. 게다가 소련을 비롯해 공산주의 국가들이 표방한 계획경제의 성과가 가시화되면서 이슈를 더욱 선명히 부각시키기 위해 자유경제에 대립되는 개념으로 계획경제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4월혁명 이후 자유경제론은 기존의 경제체제를 적폐로 몰아세우며 공세적으로 전개되었다. "4월혁명의 경제적 사명은 경제계가 관권의 속박을 벗어나서 그 자주성을 찾는데 있으며, 건전한 기업활동을 위한 자유경제원칙의 확립이란 오히려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라는 입장이다.[186] 물론 이러한 담론은 국가의 역할을 전적으로 부정한 것이라기보다 이승만 정부 시절에 자행된 자의적인 관권 개입을 근절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었다.

4월혁명 이후 민주당의 자유경제론은 1950년대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기본적으로 자유경제의 효율성을 옹호하는 것은 마찬가지였지만, 공정한 분배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입장 또한 강조되었다. 『사상계』에서 자유경제를 가장 적극적으로 옹호했던 김영선은 민주당의 구상이 "계획성 있는 자유경제체제"를 건설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자유경제원칙 하에 생산을 증액하고 사회정의에 입각하여 공정한 분배를 기함으로써 건전한 자유민주주의적 시민사회를 건설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187] 집권을 눈앞에 둔 민주당은 "자유있는 복지사회"를 당의 목표로 제시했다.[188] 이승만 정부의 붕괴로 자유경제론의 정치적 의미가 사라진 상황이었다. 민주당 입장에서 굳이 자유경제론을 강하게 주장할 이유는 없었다. 민주당은 분배의 문제까지 포괄한 담론을 통해 집권세력으로서의 책임감을 보여주려 했다. 김영선은 재무부장관 취임 전후에 루즈벨트의 뉴딜 정책을 찬양하는 등 기존의 강경한 자유경제론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였고, 스스로를 자유경제론자가 아니라 "교도경제론자"로 칭하기도 했다.[189] 자유경제의 원칙을 중시하되 국가에 의한 성장 및 분배 관리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이다.

『사상계』의 경제학자들은 자유경제로 전환했을 때 발생할 것으로 예상

186) 성창환, "金融機構의 根本的改革을: 自由經濟體制의 確立을 爲하여", 『사상계』 85호(1960. 8), 245쪽.
187) 김영선, "民主黨腹案의 骨子", 『사상계』 83호(1960. 6), 147-148쪽.
188) "노동자권익보장", 『조선일보』, 1960. 7. 16.
189) "재무부장관 김영선 씨 「교도경제」가 지론", 『동아일보』 1960. 8. 25.

되는 문제로 불평등보다는 독점에 주목했다. 이와 관련해 폭넓은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자유경쟁에 의한 독점의 발생은 자연스러운 것이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190]부터 각계각층을 연합한 민족적 리더십으로 이를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191] 대자본을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의 육성을 주장하는 입장,[192] 공공 산업은 국영해야 한다는 입장[193]까지 다양한 견해가 있었다. 그러나 자유경제로의 전환이 가져올 부작용을 관리하기 위해 국가의 계획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대체적인 공감대가 있었다.

『사상계』는 "후진국의 낙인을 극복"하기 위해 "현실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최선의 경제체제의 확립"을 우선 과제로 설정했다.[194] 이처럼 최선의 경제체제를 확립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자유경제와 계획경제의 장단점이 다각도에서 논의되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사상계』의 경제체제론은 차츰 국가 계획에 의한 자유경제 수립이라는 방향으로 수렴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런 흐름은 1961년 3월호에 게재된 "자유경제냐 계획경제냐"라는 주제의 특집에서 잘 드러난다. 여기에 실린 글 중 하나에 따르면 1960년 10월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학생들이 한국경제체제를 두고 경제정책 토론대회를 열었다고 한다. 토론회에서 어떤 결론이 나온 것은 아니었지만 "계획에도 장점이 있는 동시에 자유도 버릴 수 없다는 소감"은 공통된 것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다.[195] 이러한 인식은 『사상계』 지식인들에게도 공유되고 있었다.

문제는 계획의 범위와 방식이었다. 당시 한국 경제의 문제를 민간부문의 과소성장으로 보느냐, 계획성의 부족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른 처방이 내려졌다. 그러나 자유경제 원칙의 확대를 주장하는 경우에도 후진국의 특수성을 들어 자본형성과 무역 및 외환 관리에서의 국가개입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었다.[196] "자유경제냐 계획경제냐" 특집에 게재된 글 중 가장 강경한 어조로 자유경제 원칙의 실행을 주장한 이동욱 또한 "산업

190) 이정환, "政治로부터 獨立된 經濟", 『사상계』 83호(1960. 6), 198-199쪽.
191) 최문환, "4月革命의 社會史的 性格", 『사상계』 84호(1960. 7), 224쪽.
192) 성창환, "金融機構의 根本的改革을: 自由經濟體制의 確立을 爲하여", 『사상계』 85호(1960. 8), 245쪽.
193) 이은복, "企業國營化의 苦悶", 『사상계』 85호(1960. 8), 243쪽.
194) "編輯後記", 『사상계』 92호(1961. 3), 428쪽.
195) 이창렬, "韓國經濟體制의 進路", 『사상계』 92호(1961. 3), 100쪽.
196) 성창환, "經濟開發을 위한 自由와 計劃의 調和", 『사상계』 92호(1961. 3), 63-64쪽.

들 중에는 그때 그때의 중경(重輕)·완급이 있으므로 이에 호흡을 맞추는 계획(정책)을 안 쓸 수가 없으니 순수한 자유경제란 경제학교과서에 추상적인 표준으로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며, "사유재산과 자유경쟁과 자유가격을 중요한 기둥으로 삼고 있다면 이는 자유경제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를 "계획적 자유경제"라고 표현했다.[197]

반면 논자들 중 가장 강력하게 국가 주도의 계획을 강조한 박희범은 후진국에서는 자유경제에 의한 발전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계획에 의한 사회구조적 변혁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는 글의 서두에서 "가격기구를 이용한 민간부문의 자발적 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계획"과 "중앙당국의 지도원리에 입각한 공공부문의 활동이 그 기반이 되는 계획"을 대비시켰다.[198] 그는 "공업화란 구조적 변혁을 의미하며 전통적 사회의 부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후진국에서 자유경제로는 정체상태를 벗어날 수 없다고 주장했다.[199] 그는 가격기구를 기반으로 하는 계획은 후진국에서 실행불가능하다는 논의를 전개하고는, 후진국에 어떤 계획이 더 적실한지는 논하지 않았다. 다만 공업화로의 자원 이전에 따르는 "내핍을 온 국민이 골고루 감내해야 할 것"이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용품의 배급까지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이라는 문장으로 무언가를 암시하듯 글을 마무리했다.[200] 이로 미루어볼 때 박희범은 사실상 후진국에는 사회주의적 계획이 적실하다고 주장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즉, "중앙당국의 지도원리에 입각한 공공부문의 활동"이 한국 사회에 적합하다는 것이다.[201] 그럼에도 사상적 의심을 피하기 위해 사회주의 계획을 직접 옹호하기보다 시장 효율성을 중심으로 한 계획이 후진국에서는 작동하지 않는다는 방식으로 서술한 것으로 보인다.

1950년대와 마찬가지로 경제학자들의 관심은 효율성에 있었다. 자유경제를 지향하는 논의와 계획성의 강화를 주장하는 논의 모두 그 근거의 핵심을 효율성에서 찾았다. 자유경제 옹호론에 따르면 자유경제는 "인간의 보다 창조적인 역량을 발휘시킬 수 있고, 또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자발적 노력에

197) 이동욱, "自由經濟體制의 確立", 『사상계』 92호(1961. 3), 84-85쪽.
198) 박희범, "後進國에 있어서의 經濟計劃", 『사상계』 92호(1961. 3), 74쪽.
199) 위의 글, 78쪽.
200) 위의 글, 81쪽.
201) 박태균(2007: 58-59)은 박희범을 비롯한 국가주도형 경제개발론자들의 지적 배경으로 해방 직후 사회주의 경제학자들의 영향 하에서 대학교육을 받았다는 점을 꼽았다.

서 오는 일할 보람을 느끼게" 하며, "이것이 바로 자유경제에 있어 왕왕 기업가활동의 기적적 성과를 가져"온다.[202] 따라서 자유경제는 "한국의 경제번영을 가장 능률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제도"로 제시되었다.[203] 반면 국가계획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자유경제체제로서는 후진경제의 구조적 변혁이 효과적일 수 없"으며,[204] 자연자원과 자본형성이 빈약한 한국에서 "재건과 부흥을 위해서는 자유방임이란 있을 수 없다"고 자유경제론을 비판했다.[205] 경제학자들 사이에 계획의 필요성은 공감대를 이루고 있었으나, 계획의 강도와 범위에 관해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였다.

다른 한편 공정성 문제는 거의 제기되지 않았다. 자유경제론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이동욱은 "생활수준의 불균형문제는 재정적인 부의 재분배 정책에 의하여 균형화로 향하고 있으므로 … 생활수준의 불균형을 가지고 자유경제를 공격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고 했다.[206] 자유경제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고, 자유경쟁에 따른 불균형과 격차 문제는 보완 정책으로 해소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자유경제에 부수하는 문제들은 정책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1950년대 민주당 신파의 자유경제론과 다르지 않다. 박희범의 경제계획론에서도 공정성의 문제는 제기되지 않았다. 다른 무엇보다 후진성을 벗어날 수 있는 성장의 방법을 찾는 것이 경제학자들에게는 핵심적인 과제였다.

공산주의 국가들의 고속성장 또한 효율성 중심의 경제 담론이 형성되는데 큰 영향을 주었다. "계획경제의 실시가 공산권에서는 유례없는 고도의 발전율을 나타내어 주고 있"다는 점은 중요한 문제였다.[207] "외원과 자체역량동원을 토대로 하여 북한에서는 1954-56년 간에 '전후 인민경제복구발전 3개년계획', 그리고 1956-61년 간의 '제1차 5개년계획'이 실시되어 왔는데 그 경제부흥의 성과는 솔직히 괄목할 바 있다"고 하여 북한의 계획경제가 인민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지만 지표상의 발전이 있다는 점이 시인되기도 했다.[208] "북에 그 군노(軍奴)적 통제경제로 다소의 건설생산성과가 있음이

202) 성창환, "經濟開發을 위한 自由와 計劃의 調和", 『사상계』 92호(1961. 3), 62쪽.
203) 이동욱, "自由經濟體制의 確立", 『사상계』 92호(1961. 3), 90쪽.
204) 박희범, "後進國에 있어서의 經濟計劃", 『사상계』 92호(1961. 3), 79쪽.
205) 이창렬, "韓國經濟體制의 進路", 『사상계』 92호(1961. 3), 105쪽.
206) 이동욱, "自由經濟體制의 確立", 『사상계』 92호(1961. 3),, 86쪽.
207) 이창렬, "韓國經濟體制의 進路", 『사상계』 92호(1961. 3), 104쪽.
208) 박동운, "「千里馬運動」下의 北韓經濟", 『사상계』 89호(1960. 12), 101쪽.

사실"이고 "남에는 아무리 민주적 체제 위에 자유가 무제한으로 보장되어 있더라도 가난한 사람과 실업자가 많"다는 것이 현실이었다.[209] 4월혁명 이후의 상황은 체제 대결의 맥락 속에서 '빵이 없는 자유'로 진단되었던 것이다. 특히 북한의 경제발전은 한국의 경제적 후진성을 체제 위기로 진단하도록 만들었다(정진아, 2012: 338). "공산주의는 … 스스로 자립하여 자족하는 경제적 지반을 닦는 곳에서만 그 침투력은 마비된다"는 언급 또한 효율적 경제발전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210] 빈곤 탈피라는 직접적인 목적뿐 아니라 체제 대결의 맥락에서도 자유와 계획의 조화는 지식인과 학생들에게 중요한 의제였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효율적이며 공정한 경제 체제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이 시기에는 휴머니즘적 입장에서 경제적 자유를 논평하는 담론보다 경제체제와 관련된 경제학자들의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었다.[211] 경제체제론이 효율성 문제로 집중된 것은 4월혁명으로 인해 정치적 후진성에서 탈피했다는 인식과 냉전 대결에서 경제적 열위에 처했다는 인식이 중첩적으로 작용한 데 기인한다. 공산권 국가들의 고속성장 비결이 계획경제로 파악되면서 한국에도 계획성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가 생길 수 있었다. 그럼에도 『사상계』 경제학자들 다수는 그 대가로 자유경제의 원칙을 포기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계획이 강조된 자유경제라는 절충안으로 논의가 수렴된 것이다. 다시 말해 『사상계』 경제필진들은 자유의 제한은 최소화하면서 체제 경쟁에서도 뒤처지지 않는 효율적 경제체제를 구상하고자 했다. 이처럼 자유진영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계획의 장점을 취하겠다는 전략은 4월혁명을 계기로 확고해졌다. 자유경제론과 냉전 자유주의가 후진성 극복을 위한 경제계획론과 결합하면서 계획을 통해 자유경제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구상으로 종합되고 있었다.

---

209) 한재덕, "北韓이 提起한 統一方案의 問題點", 『사상계』 93호(1961. 4), 132쪽.

210) 조가경, "革命主體의 精神的 昏迷: 主體性 確立의 目標는 積極的 自由와 經濟富强", 『사상계』 93호(1961. 4), 76쪽.

211) 『사상계』가 1958년 4월 편집위원회 확대 개편을 통해 사회과학의 비중을 확대한 것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3. 5·16쿠데타 이후의 경제계획론

4월혁명 이후 대중의 요구는 집합행동으로 분출되었다. 『사상계』 지식인들은 민주화로 개방된 정치 공간이 낮은 민도에 의해 악용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낮은 민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방편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도덕적 계몽을 통해 대중을 순치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경제성장을 통해 합리적 주체들이 형성될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었다(마상윤, 2016: 185-186). 낮은 민도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를 희생해서라도 "부패와 무능과 무질서와 공산주의의 책동을 타파"하는 편이 나았다.[212] 『사상계』가 5·16쿠데타 직후 보인 태도는 지식인 주도성에 따르지 않는 대중에 대한 환멸에서 비롯되었다.

5·16쿠데타 세력은 민생고의 시급한 해결 및 자주 경제 재건을 공약했다. 4월혁명 이후 『사상계』가 경제 건설과 이를 위한 정신적 기강 확립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213] 게다가 군사정부는 자신들의 전문성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지식인들을 적극적으로 기용했다(임대식, 2003: 318). 이 중에는 『사상계』 필진들도 다수 포함되었다(도진순·노영기, 2004: 85-86 참조). 널리 알려져 있듯 장준하 또한 한동안 군사정부에 우호적인 입장을 보였다. "종래의 집권자들에게 멸시를 당하였던 이 나라 지식층"[214]을 크게 우대하고 그들의 식견을 폭넓게 받아들인 것은 역설적으로 군사정부였다.

『사상계』는 4월혁명을 지식인들의 손에 의한 혁명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이후 권력은 민주당의 기성 정치인들이 독점했다. 객관적 진리에 의한 정치를 꿈꾸던 지식인들의 참여는 제한적이었다. 오히려 쿠데타 직후 군사정부가 법제 정비와 경제정책 구상에 지식인들을 대거 참여시켰다. 개중에는 군인들의 위협 때문에 억지로 참여하게 된 경우도 있었다고 하나, 그런 경우에도 대부분은 맡겨진 임무에 성실하게 임했다. 군사정부는 발탁된 지식인들에게 장관직이나 최고회의 고문역을 맡기기도 했다(도진순·노영기, 2004: 84-86). 이렇게 『사상계』 지식인들의 구상은 군사정부에 의해 전

212) "[권두언] 5·16革命과 民族의 進路", 『사상계』 95호 (1961. 6), 34쪽.
213) 김종필(2016: 56)은 "혁명계획을 구상하는데 신문과 『사상계』를 참조했다"고 직접 밝히기도 했다.
214) 장준하, "[권두언] 또 다시 우리의 向方을 闡明하면서", 『사상계』 83호(1960. 6), 37쪽.

유되고 있었다(정진아, 2012: 353). 당대의 한국에서 지적 헤게모니를 가졌던 로스토우는 지식인-상인-군인의 연합에 의한 지도력이 후진국에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군사정부에 지식인들이 결합함으로써 로스토우의 구상은 현실에서 구현되고 있었다(박태균, 2007: 152; 정용욱, 2004: 171-172).

『사상계』 경제 필진들은 계획의 필요성에 점차 공감했다. 이승만 정부도 장면 정부도 경제적으로는 무능했다고 보고 국가의 전략적 개입의 필요성을 인정했다(정진아, 2012: 353). 앞서 언급했듯 계획의 방향은 궁극적으로 자유경제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었다. 국가 주도로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하고, 협력에 따른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기업가들이 자발적으로 협력하도록 만든다는 복안이었다.

『사상계』 지식인들은 군정 기간을 후진성 극복을 위한 과도기로 간주했다. 군사정부는 그들의 구상을 실현시켜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이런 인식에서 『사상계』의 경제학자들은 활발히 경제계획론을 펼쳤다. 『사상계』의 경제학자들 다수는 계획이 민간기업의 자율적 발전을 견인할 조건을 조성하면서, 독점과 불균형을 제어하는 데 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질서자유주의에 입각한 사회적 시장경제를 계획의 모델로 삼았던 것이다.

> 우리의 계획이란 어디까지나 광범한 민간기업의 자율적 발전을 조성하는 것이며 이와 더불어 자유경제에 따르기 쉬운 병폐인 「독점」과 「불균형」을 사전에 저지하고 원시적 견지에서 경제건설과 더불어 복지사회를 지향하는 것이라야 한다.[215]

이들이 보기에 군정 기간은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를, 경제적으로는 자유경제를 온전히 갖추기 위해 준비하는 과도기였다. 『사상계』의 경제학자들은 계획의 핵심이 "국민 각자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노력할 때 그 개개의 노력이 그대로 총합되어 사회와 국가의 생산증가와 복리증진으로 나타날 수 있는 사회구조를 속히 완성하는" 데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216] 이 시기 경제학자들은 4월혁명 이후 민간주도 경제개발론, 즉 자유경제를 위한 계획

215) 성창환, "經濟開發5個年計劃 第1次年度 內資調達問題: 計劃成敗의 關鍵은 內資調達에 있다", 『사상계』 105호(1962. 3), 219쪽.

216) 김영록, "5個年計劃과 巨視的 接近方法: 平面的 計劃보다 立體的 計劃을", 『사상계』 105호(1962. 3), 179쪽.

이라는 논리를 조금 더 정교하게 구사했다.

경제계획의 성공은 군정 이후 자유와 민주의 안정적 향유를 위한 조건으로 여겨졌다. “경제적 빈곤의 극복 없이는 자유니, 인권이니, 민주주의니 하는 일련의 가치체계가 결국은 공염불”이라는 것이다.[217] ‘참된’ 자유의 복원을 목표로 경제성장에 매진해야 한다는 점에는 모두 공감했지만, 그 경제성장이 자유의 일시적 억제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최고회의의장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박희범은 민주주의는 자유경제에서만 번성할 수 있지만, 후진국에서는 자유경제를 통해 신속한 경제성장을 이룰 수 없다고 단언했다. 따라서 당장은 자유경제와 민주주의가 아닌 국가주의적 동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자유와 민주주의가 진정코 인민의 행복을 위한 최선의 수단이라면 국가주의는 배척되어야 하겠지만 민주주의적 경제기반을 마련하는 효과적 수단이 또한 국가주의라면 이는 용납되어야 한다”고 하여 자신의 경제계획론의 요체를 국가주의로 제시했다.[218] 이는 앞서 사회주의적 계획의 필요성을 암묵적으로 옹호한 것과 이어지는 논의라고 할 수 있다. 민주주의는 중산층과 자치농민에 기반을 두고 있으나, 자유경제 체제로서는 이러한 집단을 육성하기 요원하다는 것이 그의 전망이었다.

박희범의 논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민주주의는 중산층과 자유경제에 근거해서만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지만, 후진국에서 자유경제로는 발전이 어렵기에 중산층의 형성은 불가능하다. 자유경제와 민주주의는 제도적 수준의 문제이지만 중산층과 자치농민의 육성은 계획과 시간을 요구한다. 그렇다면 민주주의의 기반 세력이 충분히 만들어질 때까지는 자유, 민주주의, 자유경제가 모두 유보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219] 박희범 논리의 특징은 구조적 변화, 즉 전통적 사회관계의 파괴와 새로운 주류 세력의 형성을 강조한 데 있다. 그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국가주의에 의한 지도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중산층이 창출될 때까지 유예

217) 양호민, “民主主義와 指導勢力”, 『사상계』 100호(1961. 11), 48쪽.
218) 박희범, “民主主義의 土臺로서의 經濟”, 『사상계』 103호(1962. 1), 99쪽.
219) 박희범은 위의 글에서 국가주의가 “대중적인 사회적 세력기반” 조성이라는 목표에 종속되지 않으면 독재주의로 변화하게 된다는 점을 경고했다. 따라서 그가 옹호한 것은 민족주의적 지향을 가진 집단에 의한 과도기적인 강권 통치라고 할 수 있다.

된다. 이러한 논리는 이상록(2010: 51)의 표현에 따르면 “산업화 우선의 신생국 자유민주주의론”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민주주의와 산업화가 병행될 수 있고, 병행되어야 한다는 “자유민주주의·산업화 병행론”(이상록, 2010: 51) 또한 쿠데타 직후부터 나타났다. 신상초는 이 시기에 『사상계』 지면에서 병행론을 가장 적극적으로 주장한 필자였다. 신상초 또한 “자유를 없애고 건설만 하는 경우에는 전제주의 체제가 분명히 빠르”다고 보았다.[220] 그러나 그는 자유가 인간의 본능이며,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존립 근거가 자유진영의 일원이라는 점이기에 자유를 포기하고 건설에만 매진할 수는 없다고 했다. 효율성의 일부를 포기하더라도 대의민주주의는 군사정부의 약속대로 회복되어야 하며, 민정 이양 후에는 자유와 건설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신상초는 자유가 빵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강조했다. 그러나 그가 생각한 자유의 경제적 근거는 박희범처럼 민주주의의 기반 세력인 중산층 육성에 있지 않았다. 그는 4월혁명 이후의 혼란 근거가 “건실한 국민경제의 뒷받침을 못 받”은 데 있는 것으로 보았다.[221] 빈곤 상태의 대중은 구 정치세력에 매수되어 민주주의가 타락하는 데 일조한다는 점에서 빈곤은 자유를 혼란으로 이끈다는 것이다. 따라서 다수 대중이 자신의 자유와 권리에 관심을 갖게 될 정도로 빈곤에서 벗어나면 자유는 다시 보장되어야 한다. 그는 자유의 옹호 세력을 육성하는 것보다는 자유의 왜곡 조건을 파괴하는 데 경제성장이 필수적이라고 본 셈이다. 자유와 민주의 재개를 위한 경제적 조건은 다수 대중이 극빈 상태에서 벗어나는 정도면 충분했다. 그가 보기에 군사정부의 역할은 이를 만족시킬 만한 여건을 창출하는 데 있었다.

산업화 우선론과 병행론 모두 당대의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주요 과제가 산업화와 민주화라는 이중혁명에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 하지만 이중혁명의 동시 수행 가능성에 대해 다른 판단을 보였다. 산업화 우선론은 장래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라도 우선 고도성장을 촉진해야 하며, 여기에는 국가의 강압이 한시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병행론을

220) “主導勢力없는 革命은 政變에 不過: 4.19 2週年을 回顧하며”, 『사상계』 106호 (1962. 4), 166쪽.

221) 신상초, “檀君 以來의 自由의 破綻·收拾·再建: 自由의 計劃化가 必要”, 『사상계』 99호 (1961. 10), 56쪽.

편 지식인들은 자유의 보장과 경제 발전이 동시에 진전될 수 있다고 믿었다. 병행론은 두 갈래의 논리로 전개되었다. 신상초의 경우 자유는 경제 발전을 저해함에도 그 고유의 가치 때문에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장준하는 자유가 자발적 헌신을 유도하기에 경제 발전에도 유익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두 논리가 실질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차이가 없었다. 경제성장을 이유로 자유민주주의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후일의 더 큰 자유, 더 안정적인 자유를 위해 현재의 자유를 포기해야 한다는 입장과 자유는 어떤 경우에도 유보될 수 없다는 입장 사이에 정치적 균열이 새롭게 나타났다. 근대화에 대한 지향은 차이가 없었지만, 근대화 수행 기구로서 통치 체제의 성격을 둘러싸고 정치적 대립이 시작된 것이다. 박정희 정부 내내 자유민주주의를 핵심 준거로 한 투쟁이 벌어진 것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군사정부의 경제개발5개년계획은 산업화 우선론의 입장에서 빈곤 극복과 체제 우위를 위해 자유와 계획을 결합시킨다는 지식인들의 구상을 종합한 것이었다. 박정희는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 구정권의 무능과 부패로 인한 사회 경제적인 악순환을 과감히 시정하고 국민경제의 재건과 자립적 성장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장기경제발전계획의 수립이 요청되는 것이며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경제적 후진성을 가진 여건하에서는 더 한층 절실하다고 할 것이다.
> 이와 같은 계획을 이룩함에 있어서는 진정한 민주정신에 입각한 개인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는 자유경제체제의 원칙하에 국민경제의 조속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계획성이 가미되는 새로운 경제체제를 확립함으로서 민족적 숙원인 승공통일을 기약할 수 있을 것이다(대한민국 정부, 1962: 3).

인용문에서 나타나는 경제적 후진성 극복이라는 문제의식, 자유경제체제의 원칙과 강력한 계획성의 조화라는 방법, 체제 경쟁에서의 승리라는 목표는 당시 『사상계』 경제필진들의 경제계획론을 종합한 것과 다르지 않았다. 실제로 『사상계』의 경제필진들은 최고위원회에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하고 있었다(도진순·노영기, 2004). 『사상계』에 글을 게재하던 박희범과 유창순은 경제개발5개년계획 작성에 직접 참여했다.

쿠데타 세력은 민생고 해결을 공언했지만 별 다른 대책이 없었다(황병주, 2008: 89). 군사정부는 쿠데타 이후 각종 고문직과 위원회에 지식인을 초빙함으로써 정책 공백을 메워가고자 했다. 당시 쿠데타 세력은 『사상계』와 전국대학 교원명부를 놓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인물들을 충당했다(김건우, 2003: 48). 『사상계』의 경제 필진들의 구상은 이러한 경로를 통해 군사정부에 반영되었다(정진아, 2012: 353). 이는 당대에 지식인의 층위가 두텁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상계』 지식인들과 쿠데타 세력의 근대화에 대한 지향이 크게 다르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다(이상록, 2007: 226). 군사정부의 비전문성과 계획의 시급성으로 인해 『사상계』를 위시한 지식인들의 담론이 비교적 걸러지지 않고 군사정부의 경제개발5개년계획에 반영될 수 있었다. 『사상계』의 경제계획론은 약간의 조정을 거쳐 박정희의 이름을 달고 국가 정책으로 공식화되었다(김형아, 2005: 2장; Kim, 2007).

박정희는 군정 기간을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경제적 기반을 조성하는 시간으로 규정했다. 한시적인 산업화 우선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박정희는 "우리가 이상으로 하는 진정한 자유민주주의가 확고한 경제적 기반 없이는 실현을 바라기 어렵다는 것은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이라고 하여 산업화 우선론의 논리에 의거해 쿠데타와 군사 정부의 통치를 정당화하고자 했다.[222]

4. 복지국가론의 개발주의적 변용

4월혁명을 전후하여 경제적 근대화에 대한 모색이 본격화되면서 나타난 또 하나의 흐름은 복지국가에 대한 관심이라고 할 수 있다. 장준하는 1960년 6월 권두언을 통해 4월혁명의 성취를 "만대의 복지를 건설"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호소하기도 했다.[223] 일부 대학생들 또한 4월혁명 이후 정부의 성격이 "자유민주주의이면서도 약간의 복지주의적인 사회주의적 색채"를 가져야 한다고 보기도 했다.[224]

---

222) 박정희, "국민에게 보내는 연두사", 1962. 1. 1.
223) 장준하, "[권두언] 또 다시 우리의 向方을 闡明하면서", 『사상계』 83호(1960. 6), 37쪽.
224) "[좌담회] 怒한 獅子들의 證言", 『사상계』 83호(1960. 6), 49쪽, 이상칠 발언.

내용의 면에서 보건대, 4월혁명은 정치적으로는 독재정치를 물리치고 우리의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자는데 있었으며, 사회적으로는 모든 부정과 부패를 제거하고 자유·정의·진리를 실현하자는데 있었으며, 경제적으로는 독재자의 착취를 물리치고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리게 하여 민생고를 없이 함으로써 복지국가를 건설하자는 데 있었다.[225]

유럽의 복지국가는 『사상계』 지식인들에게 한국의 이상적 미래로 간주되었다. 복지국가에서 자유방임의 폐해가 극복되고 '자유와 빵'이 조화를 이루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20세기 국가는 국민의 생존을 책임지는 적극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담론은 『사상계』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개진되었다. 그러나 1950년대 『사상계』에서 이러한 담론이 대체로 휴머니즘적 자유론과 사회민주주의 담론으로 표출되었다면, 1960년대 초반에는 사회과학의 언어로도 적극적으로 개진되었다. 이는 『사상계』의 무게중심이 1958년 이후 사회과학과 법학으로 옮겨 간 것과도 관련되어 있다. 『사상계』에서 1950년대에 제기된 경제적 자유의 제한과 균분은 정책적 의제라기보다 도덕적이고 당위적인 명제였다. 반면 사회과학 담론에서 복지국가는 경제성장의 목표이자 사회개혁의 정책 과제로 제기되었다. 1960년대 초반 『사상계』 지식인들은 서구 복지국가를 준거로 '빵'의 보장을 위해 '자유'의 일부, 특히 경제적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고 보았다.

복지를 위한 국가 개입은 자유의 이름으로 정당화되었다. 오늘날 "개인생활에 대한 국가의 영향력이 증가한다는 것은 개인자유의 제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확대를 의미하게 되는 것"이며, 이는 결과적으로 "자유의 구속을 의미하는 전체주의에 반대하는 힘을 길러"준다는 것이다.[226] 복지국가는 개인의 잠재력을 발휘할 기회를 보장한다는 사회적 자유주의의 이상을 구현할 뿐 아니라 체제 유지를 위한 충성심, 즉 반공주의를 굳건히 하는 데도 훌륭한 수단이라는 말이다.

5·16쿠데타 이후 『사상계』에서 복지국가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졌다. 1961년 8월호에는 "현대적 사회개혁의 모델"을 특집으로 구성하여 영

225) 현승종, "새로운 學生運動의 方向", 『사상계』 93호 (1961. 4), 127쪽.
226) 김영철, "스칸디나비아의 社會主義: 스웨덴의 社會福祉政策을 中心으로", 『사상계』 86호 (1960. 9), 237쪽.

국의 복지제도, 미국의 뉴딜정책 등이 소개되었다. 또한 『사상계』 1961년 10월호에 편성된 “자유의 재인식” 특집은 당시 지식인들이 서구의 복지국가를 어떤 방식으로 참조하고자 했는지 잘 보여준다. 이 특집에서 차기벽은 라스키를 인용하여 자유의 본질을 “최선아 실현을 위한 실질적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이를 위해 서구 국가들은 “적극국가(복지국가)에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227] 신상초는 4월혁명 이후의 혼란상을 지적하면서 군정 기간 중에는 “자유의 계획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자유란 “개인의 자유와 개인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회질서 사이에 균형과 조화” 위에서만 가능하기에 “자유는 애초부터 사회적 자유”라고 규정했다.[228] 따라서 “자유의 계획화”란 정부에 의해 “개인의 자유와 개인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회질서 사이에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입법상 및 국민훈련상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실천에 옮기”는 것을 의미했다.[229] 이러한 논의들은 자유의 방향성과 지식인 리더십을 강조하면서 복지를 위한 국가 개입을 요청하고 있다.

특집에 글을 기고한 신범식 또한 후진국에서 기아로부터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 국가의 주도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긍정했다. 그러나 후진국에서 “초조하게 욕구되는 진보와 발전”의 열망이 국가 권력의 비대화와 부패를 불러올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국가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비판과 사상의 자유”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230] 국가 개입은 긍정하되 국가 권력의 비대화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는 논리다. 이처럼 특집에 게재된 글들은 계획과 자유의 조화 방식에 관해 조금씩 다른 논점을 보였지만 후진국에서 자유의 확보를 위한 계획의 필연성, 또는 불가피성을 전제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차기벽의 글은 당시 자유주의에 관한 지식인들의 인식을 가장 체계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는 서구 역사에서 ‘자유’ 개념이 어떻게 시대적 변화를 거쳤는지 서술했다. 차기벽은 자유주의의 역사를 정리하여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국가로부터의 자유”에서 “국가에의 자유”, 즉 “참정권(정치적 자

227) 차기벽, “自由의 現代的 方向”, 『사상계』 99호(1961. 10), 47쪽.
228) 신상초, “檀君 以來의 自由의 破綻·收拾·再建: 自由의 計劃化가 必要”, 『사상계』 99호(1961. 10), 53쪽.
229) 위의 글, 53쪽.
230) 위의 글, 39쪽.

유)"으로, 20세기에 와서는 "사회적 내지 경제적 민주주의"를 보장하는 "국가에 의한 자유"로 발전했다고 서술했다.[231] 그는 "국가에 의한 자유"를 "자유의 현대적 방향"이라고 말하고,[232] 그린과 라스키를 인용하여 사회적 자유주의를 긍정적으로 소개했다.[233] 서구 자유주의의 흐름은 "국가 보고 간섭하지 말라던 개인은 스스로의 생명을 보전하고 자기의 인격의 완성을 보장해 주는 실질적인 자유를 누리기 위하여 국가의 보호와 간섭을 받게 되었다"라는 말에 요약되었다.[2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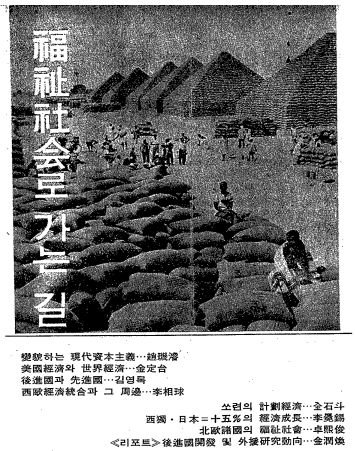
그렇다면 서구 자유주의의 역사가 후진국, 즉 한국에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일단 한국사회가 지향해야 할 길은 자유와 평등이 조화된 사회적 자유주의의 노선으로 규정되었다. "오늘날 자유, 특히 사회적 자유가 후진국에 있어서보다 더 긴요하게 요청되는 곳은 드물"기에[235] 한국도 선진국처럼 "자유권 상의 평등과 생존권 상의 평등실현에 있어서 양자 사이에 적절·균형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236] 이는 "국가의 보호와 간섭 그리고 개인의 철저한 자각을 다 같이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237] 이처럼 국가 개입에 의해 개인과 개인을, 개인과 공동체를, 자유와 평등을 조화시킨다는 사회적 자유주의의 문제설정은 후진국에서 국가가 사회에 대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논리로 변용되었다. 국가와 시민사회를 구분하기보다 국가에 의한 시민사회의 창출을 도모하는 후발국가들의 문제의식(Cummings, 1999: 89)과 사회적 자유주의의 논리 구조가 중첩된 것이다.

서구의 복지국가론을 참조한 논의들이 소개되고 있었지만 한국의 현실에서 복지국가는 재분배국가가 아닌 개발국가로 이해되었다. 『사상계』 1963년 3월호에는 "복지사회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특집 논문 9편이 수록되기도 했다. 이 특집에서 인상적인 점 또한 복지가 곧 총량적 성장으로 이해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논문 중에는 북유럽의 복지제도를 소개하는 글도 있었지만 후진국 개발론, 서독과 일본의 경제성장 등 총량적 경제발전

231) 차기벽, "自由의 現代的 方向", 『사상계』 99호(1961. 10), 42-46쪽.
232) 위의 글, 46쪽.
233) 위의 글, 46-47쪽.
234) 위의 글, 41쪽.
235) 신범식, "市民的 自由와 社會的 自由", 『사상계』 99호(1961. 10), 38쪽.
236) 신상초, "檀君 以來의 自由의 破綻·收拾·再建: 自由의 計劃化가 必要", 『사상계』 99호(1961. 10), 55쪽.
237) 차기벽, "自由의 現代的 方向", 『사상계』 99호(1961. 10), 49쪽.

과 관련한 글이 더 큰 비중을 차지했다. 특집 속표지 또한 쌀가마니가 높이 집하되어 있는 사진을 배경으로 했다(그림 3-1). 복지사회는 이처럼 양적 풍요로움이라는 이미지로 이해되고 있었다. 한국 상황에서 복지를 위한 국가 개입, 계획이 현실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국가 주도의 총량적 성장이었다.

<그림 3-1> "복지사회로 가는 길" 속표지



복지국가론의 철학적 기원을 이루고 있는 사회적 자유주의에 따른다면 빈곤으로부터의 탈피를 위해 자유의 일부가 제한되는 것은 정당했다. 복지국가가 개발국가로 이해되면서 논리적 착종이 나타나게 된다. 서구에서 빈곤으로부터의 탈피가 제도적 재분배를 의미하는 것이었다면, 한국에서 그것은 총량적 경제성장을 의미했다. 따라서 복지국가론이 한국의 후진성에 굴절되면 성장을 위해 자유가 억압될 수 있다는 담론으로 치닫게 된다.

『사상계』에서 실제로 이러한 논리가 전개되었다. 차기벽은 국가 주도의 성장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자유가 유보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자유에의 강제"라고 표현하기도 했다.[238] "독재적 수단에 의해서 민주적 기반을 급속히 닦"는다면, 과도기적 강제 조치들은 용인될 수 있다는 것이다.[239] 신상초 또한 비슷한 인식에서 "군혁정부는 불합리한 제도를 뜯어고쳐 경제재건의 방향과 기틀을 올바로 잡아주"는 데 그 임무가 있다고 했다.[240] 빈곤 탈피를 위한 자유의 유보가 가능하다는 논리에서 군사정부는 혼란 수습과 경제재건의 초석을 놓는 시기로 긍정될 수 있었다.

『사상계』 지식인들의 복지국가론은 이처럼 국가 주도적 경제개발과 자유의 유보를 뒷받침하는 논리로 변용되고 있었다. 국가 개입을 통한 재분배

238) 위의 글, 49쪽.
239) 위의 글, 48-49쪽.
240) 신상초, "檀君 以來의 自由의 破綻·收拾·再建: 自由의 計劃化가 必要", 『사상계』 99호 (1961. 10), 56쪽.

와 기회 균등이라는 문제의식은 한국의 후진성이라는 프리즘을 통해 국가 주도의 계획과 성장이라는 전망으로 굴절되었다. 성장 이후 자유와 민주주의가 정상화된다면 분배의 균형 또한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으로 낙관되었다. 『사상계』 지식인들이 보기에 경제성장은 민주주의의 중추 세력인 이성적 시민을 만들어내는 확실한 방편이었다. 그렇다면 복지, 자유, 민주를 조화시키는 지름길은 경제성장에 있을 따름이었다.

다른 한편으로 『사상계』에서 개진된 복지국가론은 박정희에 의해 차용되기도 했다. 국가가 주도성을 발휘해 빈곤과 기아를 퇴치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보존한다는 담론은 박정희에 의해 그대로 되풀이 되었다.

> 빈곤, 기아, 저소득은 우리 민족이 표방하는 근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가장 위험한 도전이 될 것이다. 공산주의가 노리는 것도 자유사회의 이러한 허점이다. 그러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불가불 방임에서 계획으로 야경국가에서 복지국가로 지향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도 바로 여기에 있다(박정희, 1962: 32).

박정희는 "복지국가 건설이라는 명제는 제2차대전을 계기로 세계각국이 다같이 정치의 최고목표"라고 하면서,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자유경제체제를 존중하면서 빈곤을 구축(驅逐)하는 것만이 인간으로서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는 길이 되는 것이며, 이것이 곧 국가의 책무라고 인식하게 되었"다고 밝히기도 했다.[241] 서구의 복지국가가 국가의 개입으로 가능했던 것처럼 한국에서 빈곤의 구축도 국가의 책무로서 달성될 것이라는 말이다. 이처럼 박정희는 당대 지식인들의 복지국가론을 차용하여 집권 초기 개발주의적 지향을 정당화하고자 했다.

> 혁명정부는 집권 이래 부단한 투지와 야망을 품고 5개년계획을 필두로 대규모의 산업화계획과 겸하여 국민의 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다. … 국민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계획의 성공을 기원하고 있을 게다. 즉 하루 바삐 「자유」와 빵을 함께 만끽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민주주의적 복지국가가 도래하라고.[242]

『사상계』 지식인들에게 경제개발5개년계획은 "민주주의적 복지국가"의

241) 박정희, "독립소년직업훈련소 낙성식 축사", 1962. 7. 19.
242) 윤형섭, "福祉國家와 兵營國家: 自由와 빵은 永遠히 平行되어야 하는 것", 『사상계』 124호 (1963. 8), 54쪽.

달성이라는 현대 국가의 목표를 한국에서 실현하려는 시도로 이해되었다. 국가 주도의 경제개발이 복지국가론으로 정당화된 것이다. 물론 국가 개입이 "「자유주의적 법치국가」의 행동범위를 벗어나서 빵을 추구할 때 그 국가는 복지국가라고 하는 화려한 간판 밑에서 전제독재국가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는 했다.[243] "자유를 빵의 재료로 삼아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는 말을 통해 국가 주도 산업화가 자유민주주의와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244] 자유주의적 한계선이 제시되기는 했지만 복지국가와 개발국가의 동일시는 논리적 위험을 안고 있었다. 빈곤 탈피를 위한 경제적 자유의 제한이라는 사회적 자유주의의 논리는 박정희의 개발주의 국가 구상을 통해 개발을 위한 일부 자유의 유보라는 논리로 변용될 수 있었다.

『사상계』에서 전개된 자유주의 담론들은 박정희의 집권 초기 반자유주의적 개발주의로 종합되었다. 산업화 우선론의 관점에서 질서 자유주의(자유경제를 위한 국가 개입), 냉전 자유주의(승공통일), 사회적 자유주의(국가 개입, 복지국가) 담론을 종합하는 방식으로 개발주의의 골조가 형성되었다. 저항적 참여의 길을 택한 『사상계』 지식인들이 개발주의 자체에 대안을 제시할 수 없었던 것은 『사상계』의 경제체제론, 복지국가론, 반공주의가 박정희의 개발주의에 포괄되어 있었던 데 기인한다. 저항적 지식인들은 개발주의에 암묵적으로 동의하면서 개발의 방식에 대한 문제제기 — 자립경제론, 균형성장론 — 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김보현, 2003).

제3절 경제적 자유의 새로운 쟁점들

군정 기간 경제계획과 관련된 논의 이후로 『사상계』의 경제 담론은 1950년대처럼 활발하게 전개되지 않았다. 이는 박정희 정부가 『사상계』 경제 필진을 인적, 지적으로 상당 부분 수용했고, 1963년부터 『사상계』가 정치적 투쟁에 무게 중심을 두었기 때문이었다.

군정 이후 『사상계』에서 '자유'와 '경제'는 1950년대와는 전혀 다른 의미연관을 갖게 되었다. 한국 경제가 국제적 분업 체계의 일부로 편입되는

243) 위의 글, 56쪽.
244) 위의 글, 55쪽.

것이 '자유화'로 개념화되었다. 『사상계』는 무역자유화를 자립경제의 토대를 침식하고 선진국, 특히 일본에 대한 경제적 예속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했다. 민족주의적 준거로 경제 교역에서의 자유화가 비판된 것이다.

다른 한편 『사상계』는 계획에 따른 경제성장이 독점재벌의 형성으로 이어지는 데 주목했다. 독점은 처음에는 자유경쟁의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이유에서 비판되었다. 그러나 1960년대 후반에 이르면 『사상계』는 독점에 대해 효율성보다는 공정성의 입장에서 비판하기 시작했다. 『사상계』는 산업화에 의해 본격화된 불평등 문제를 경험하면서 생존권을 준거로 박정희 정부의 개발주의에 도전했다.

1. 경제 담론의 부차화

『사상계』에는 1962년 10월 대폭의 편집위원 축소가 있었다. 이 때 『사상계』에서 이탈한 위원 중에는 성창환, 이정환, 이창렬 등의 경제학자들이 포함되었다. 이동욱은 그 이전 시점인 1961년 2월에 해촉되었다(김경숙, 2018: 85 참조). 이후 『사상계』의 경제 담론은 폭과 깊이 모두 전성기 수준을 보여주지 못했다.

1962년 10월 『사상계』 편집진의 교체는 군사정권에 대한 입장차에서 비롯되었다. 이 때 해촉된 경제학자들은 모두 군사정부에 협조하고 있었다. 성창환은 1961년 8월 국가재건최고회의 경제고문으로 등용되었다.[245] 이정환은 1961년 한국은행 수석부총재를 거쳐 1962년 농협중앙회 회장으로 임명되었다.[246] 이창렬과 이동욱은 1962년에 통화대책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다.[247] 1962년 말부터 군사정부와 『사상계』 간의 거리가 멀어지기 시작하면서 이들 경제학자들은 『사상계』에 남기보다는 군사정부와의 협력을 지속하는 방향을 택했다.

1963년 이후 폐간까지 『사상계』의 경제 담론은 이전의 중요성을 회복

245) "의장고문 2명 추가: 최고위공보실서 발표", 『경향신문』, 1961. 8. 1.
246) "이정환 씨 임명, 한은수석부총재에", 『경향신문』, 1961. 7. 7.; "이정환 씨 임명, 농협중앙회장에", 『경향신문』, 1962. 7. 20. 이정환은 1964년에는 재무부장관에 등용된다.
247) "자문위원 16명", 『조선일보』, 1962. 6. 14.

하지 못했다. 여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앞서 언급했듯 『사상계』 경제 담론을 주도했던 경제학자들 은 군사정부에 참여하고 협력하는 관계를 유지했다. 『사상계』는 점점 정부와의 대립각을 세우는 방향으로 나간 반면, 경제필진들은 정부의 정책 방향에 책임을 지고 있었던 것이다. 지식인을 배제했던 이승만 정부에서 지식인의 현실 참여, 즉 앙가주망의 문제는 비판과 저항으로 단일화될 수 있었다. 그러나 지식인을 권력의 자장 속으로 끌어들이려 했던 박정희 정부에서 지식인들은 '비판적 지식인'으로 남느냐 정권에 협력해 산업화를 견인하는 '근대화 인텔리겐차'가 되느냐하는 선택지를 마주해야 했다(김건우, 2017: 110). 둘 다 지식인의 현실 참여라는 명분으로 정당화되었지만, 정치적 방향은 정반대였다.

두 번째로는 『사상계』 지식인들이 주장했던 자유경제와 국가 계획의 혼합 모델이 박정희 정부에 의해 수용되었다는 점이다. 이전처럼 경제 체제 문제를 중심으로 정부를 비판하는 담론은 유효하지 않았다. 독점과 불평등, 대외 종속으로 초점을 옮겨 가며 박정희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이 전개되기도 했지만, 경제체제와 관련된 논의는 찾아보기 어렵다. 국가 계획에 의한 생산력 증강이라는 박정희 정부의 개발 드라이브에 대해 『사상계』 지식인들은 대안을 갖지 못했다(김보현, 2003: 347; 정진아, 2012: 357). 경제계획에 관한 논쟁에 참여한 지식인들은 계획의 범위와 강도에 대해 이견이 있었지만 생산성 중심의 사고를 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다르지 않았다. 경제성장을 위해 근로의욕과 내핍정신을 생활화한 주체의 형성이 필요하다고 본 것도 마찬가지였다. 4월혁명 이후 『사상계』가 제기한 정신 개조의 논리는 군사정부에서도 되풀이되었다(윤상현, 2014). 국가 주도의 계획과 근로자로 개조된 대중의 결합이 경제성장의 관건이라는 인식을 공유한 상태에서 『사상계』는 군사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비판의 입지를 찾기 어려웠다.

세 번째 이유는 『사상계』의 역할 변화와 관련되어 있다. 『사상계』의 위상을 감안한다면 뜻이 맞는 인사들을 섭외하여 경제 필진들을 충분히 다시 구성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1963년 이후 박정희 정부와의 대립이 격화되면서 『사상계』는 투쟁의 당위성을 알리고, 지식인과 대중을 동원하기 위해 정치 담론에 무게중심을 두었다. 이 기간 중에 『사상계』가 가장 중점을 둔 것은 정권교체였다. 선거에 의하든 4월혁명과 같은 대중동

원에 의하든 정권을 바꾸는 것이 중요했다. 경제 담론은 정권 비판의 요소 중 하나를 차지했지만, 동원의 언어를 만들어내기는 어려웠다.

2. 한일협정과 자립경제론

『사상계』 시기 구분과 관련된 자료에서 보았듯 1963년 이후 '자유' 담론에서 '경제' 개념의 중요성은 크게 하락했다. 그럼에도 두 가지 쟁점은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났다. 하나는 경제적 종속과 관련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독점과 연관된 것이었다.

1960년대 초반까지 자유민주주의의 보편성을 신뢰하던 『사상계』 지식인들은 서구와 같은 반열에 서는 정치적, 경제적 근대화를 민족의 과제로 설정했다. 또한 그들은 냉전진영론에 충실했기에 민족주의를 전면에 내걸지 않았다(장규식, 2014: 296). 이러한 분위기가 전환된 계기는 한일협정 반대 투쟁이었다. 한일협정을 배후에서 압박한 미국이 성토되었고, 서구와는 다른 민족의 이익이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자유진영이 모두 공동운명체라는 냉전진영론의 입장에서 탈피하게 된 것이다. 물론 이 단계에서 『사상계』는 『청맥』과는 달리 통일 지상의 민족주의로 넘어가지는 않았다. 자유민주주의는 여전히 보편적인 준거로서 중요했다. 그럼에도 경제적 자립을 종속의 문제와 연관시켜 생각하기 시작한 점은 『사상계』에서 새롭게 나타난 담론적 변화라고 할 수 있다. 1950년대에도 자립경제 건설은 꾸준히 주장되었지만 그 목적은 실업과 빈곤의 구제에 있었다. 하지만 자립경제는 한일협정 국면을 거치면서 대일 종속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필수적인 관건으로 재의미화되었다.

1964년과 65년에 『사상계』가 지면을 가장 많이 할애한 이슈는 한일협정이었다. 『사상계』 지식인들은 협정이 일본에 대한 경제적 예속을 가져올 뿐더러 일본의 동아시아 패권을 재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우려했다. 또한 한국 경제의 국제적 산업 연관이 심화되면서 국내 시장을 잠식당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었다. 미국 또한 비교우위론의 관점에서 한국의 무역자유화를 요구했다. 미국의 경제지원을 받는 상황에서 박정희 정부는 미국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 변화 속에서 '자유'와 '경제' 개

념은 한국 경제의 국제적 재편 속에서 새로운 의미연관을 갖게 되었다.

논자들마다 국제경제적 자유화를 다루는 시각에서 다소 차이를 보였지만, 대부분 자유화를 시기상조로 보았다. 미국의 압력에 따라 자유화 조치가 불가피하다면 품목을 줄이고, 속도를 늦춰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화는 소비재 수입을 증가시킴으로써 외환부족을 가속화하여 한국 경제 전체를 교란하고 파멸시킬 것으로 우려되었다.[248] 이처럼 박정희 정부에 들어서면서 '자유'와 경제 관련 개념의 관계는 이승만 정부 시기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부정적 함의를 갖게 되었다.

'무역 자유화', '환율 자유화', '자본 자유화'가 이 시기 '자유' 개념과 '경제' 개념을 엮는 핵심 주제였다. 이러한 자유화는 자립경제를 준거로 비판되었다. "도대체 자유화를 통해서 후진경제의 산업구조가 자립의 방향으로 개편되리라고 믿는다는 것은 적어도 통상적인 경제논리로서는 이해될 수 있는 대상이 못된다"는 것이다.[249] 무역 자유화는 "선진국에 의한 이 나라 경제에 수탈을 합리화시키는 것이 되며, 선진자본과 상품의 자유도입으로 국민경제를 파산케 하는 소이"이며,[250] "외국자본의 운동에 대항하는 굳건한 민족자본의 형성이나 국가적 수단(국가자본주의적 영역)의 확보 없이 외자에 의한 민족경제의 자립적 토대구축이란 연목구어격"이라는 것이 비판의 요점이었다.[251]

이와 관련하여 또 다른 반대 논거는 자유화가 민족적 예속을 불러온다는 것이었다. "경제발전단계가 다른 나라 사이에서 자유화를 행하는 경우에는 경제발전이 뒤떨어진 나라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짙다"는 주장이다.[252] 여기서 핵심적인 우려는 일본에 대한 경제 의존도의 심화라고 할 수 있다. 한국에 강제된 무역 자유화는 한일 간의 경제적 분업 구도의 형성이라는 미국의 의도에 따른 것이었다. 따라서 종속에 대한 우려는 근거가 없지 않았다.

---

248) 이열모, "換率의 現實化와 國民經濟: 單一 變動換率論을 駁함", 『사상계』 144호(1965. 3), 67쪽.
249) 홍성유, "政策體系 未確立의 混沌: 經濟", 『사상계』 148호(1965. 7), 88쪽.
250) 홍성유, "새로운 政策原理의 發見: 停滯經濟에서 發展經濟에로", 『사상계』 142호(1965. 1), 118쪽.
251) 조용범, "腐敗經濟下의 高度成長假面劇", 『사상계』 200호(1969. 12), 112쪽.
252) 정도영, "國際經濟競爭에 대한 韓國戰略", 『사상계』 186호(1968. 10), 132쪽.

이러한 대일의존의 심화는 최근 박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자본자유화 정책에 의하여 더욱 가속화될 것이며, 그 결과로서 민족산업의 몰락, 대자본의 매판화, 중소자본의 일본자본의 하청계열화의 재편성을 초래하여 전면적인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 예속화로의 길에 들어설 것이 예상된다.[253]

이처럼 무역자유화, 환율자유화는 일본 경제에 한국 경제를 종속시켜 민족적 예속을 초래할 것으로 여겨졌다. 국제적 차원에서 경제의 자유화는 민족적 당위로 여겨졌던 자립경제에 대립되는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한일협정 이후 일본과의 경제 교류가 본격화됨에 따라 경제 담론에서 '자유' 개념은 점차 부정적인 함의를 갖게 되었다. 다시 말해 경제적 의미에서의 '자유'는 이제 '민족'에 반하는 것이 되었다. 이러한 의미연관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 농산물 수입 자유화, 한미 FTA 등의 국면마다 나타난 반대 운동은 국가 간 교역의 문제와 '자유' 개념이 엮일 때 즉각적으로 민족주의적 거부감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1960년대 중반에 이르면 경제 자유화는 민족의 이름 하에 통제되어야 할 것으로 간주되었다. '경제'에서의 '자유'는 민족적 '종속'의 원인으로 해석되었다. '경제'에서의 '자유'는 반민족적이고 반민주적인 것으로 재규정되었다. 국가의 통제를 통해 억제되는 것이 바람직한 '자유'였다. 경제에 대한 민족주의적 준거는 한일협정 국면을 경과하면서 선명해졌다.

3. 복지국가론으로부터의 탈피

복지국가론을 근거로 자유의 제한을 정당화한 담론은 군정 이후에도 『사상계』에서 지속되었다.

국민의 기본적 자유라 하더라도 복지국가의 실현을 위하여 공공복리의 입장에서 제한할 수 있음은 현대헌법의 이상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선진민주국가의 경우와는 달라서, 아직 공공복리에 입각하여 기본적 자유를 제한하여야 할 필요를 느끼는 이른바 자유주의의 수정단계 이전에 경험하였어야 할 정통적인 자유주의에 대한 경험을 제대로 가져보지 못한 사회적 현실에 있다. 그렇다고 순수한 자유주

253) "學生運動의 나아갈 길: 正義의 횃불은 永遠히…", 『사상계』 205호(1970. 5), 150쪽.

의의 경험을 충분히 쌓을 때까지는 공공복리에 의한 자유의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현대에 있어서의 법률사상적 조류로 미루어 보아 또 우리의 사회적 현실이 순수한 자유주의의 실현을 위하여 방치하기에는 너무나 사회적 평등이 개인적 자유에 쫓아가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생각할 때 개인적 자유에 대한 공공복리에 입각한 어느 정도의 제한은 불가피하다 하겠으나, 그러나 그 제한의 도가 지나쳐서 기본적 자유의 본질적 신장을 저해할 염려가 있을 정도로까지 된다면, 그것은 확실히 우리의 사회적 현실을 도외시한 부조리를 자아내고 말게 되는 것이다.[254]

위의 인용문에서 보이듯 복지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개인적 자유의 일부는 제한될 수 있다는 담론은 마치 상식처럼 통용되었다. 다만 그 제한의 정도가 문제였다. 사회적 자유주의의 전제대로라면 그 제한의 범위와 정도는 이성적 시민들의 민주적 의사결정에 의해 설정될 것이었다. 그러나 『사상계』 지식인들은 한국 사회에 그러한 조건이 조성되어 있다고 보지 않았다. 특히 대중들의 낮은 민도가 문제였다. 현실적으로 자유의 제한 정도는 "위정자의 양심 여하"에 달린 문제로 여겨졌다.[255]

한일협정 국면을 거치면서 정치적 자유를 위축시키는 조치들이 단행되었다. 계엄이 있었고, 학원과 언론에 대한 탄압이 있었다. 정치교수로 낙인찍힌 교수들은 대학에서 해임되었다. 『사상계』와 『동아일보』 등 비판적 언론에 대한 압박도 심해졌다. 이러한 조치들은 공공선을 근거로 정당화되었다. 박정희는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위기하에서의 언론의 자유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는 미국의 판례를 끌어와 언론의 자유가 절대적인 가치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256] 물론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위기"에 대한 판단은 위정자의 양심 여하에 달린 문제일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 개입을 옹호하는 복지국가론의 입지는 모호할 수밖에 없었다. 복지국가와 개발국가를 동일시하는 입장에서는 개발을 위한 자유의 제한을 근본적으로 비판할 수 없었다. 복지국가를 명분으로 자유주의적 가치들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은 1960년대 말에 가서야 본격적으로 개진되었다. 일례로 정치학자 이극찬은 "만일 '권력으로부터의 자유'가 공허화된다면, '권력에의 자유'도 역시 형식화될 우려성이 있"으며, 따라서

254) 현승종, "試鍊의 憲政 1年을 보내며: 憲法과 政治 그리고 社會와 責任", 『사상계』 141호 (1964. 12), 45-46쪽.
255) 위의 글, 42쪽.
256) 박정희, "신문발행인협회 총회 치사", 1965. 10. 16.

“복지국가화가 자유주의의 원칙을 깨트리지 않게 하기 위한 자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257] 이극찬은 박정희 정부의 개발주의를 복지국가론의 맥락에서 이해하되, “민주적 자유가 따르지 않는 복지는 요컨대 노예의 행복에 불과하다”고 하여 개발주의와 정치적 자유주의의 공존을 요구했다.[258]

이처럼 1960년대 말에 가면 후진국에서는 “생존권의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지도 않은 것을 함부로 자유를 제한”하는 경향이 자주 나타난다는 진단[259] 하에 국가의 자의적 권력 행사를 비판하는 담론이 산출되었다. 개발국가와 복지국가를 동일시하는 관점은 지속되었지만, 복지국가 건설을 빌미로 한 자유의 침해가 과도하다는 방식의 비판이 전개된 것이다.

다른 한편 복지국가론에 대한 근원적인 비판도 제기되었다. 헌법학자 한상범은 한국이 복지국가 건설의 단계에 있다는 인식 자체가 오류라고 보았다. 따라서 생존권을 고루 보장하기 위해 자유의 일부를 제한한다는 발상 자체가 한국에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 한국사회에 있어서는 서방시민사회의 유산인 자유주의 가치가 옳게 계승·정착화되기 이전에, 그 모순점이 지적되고 이미 낡은 것으로 지나쳐 버리는 경향이 있다. 헌법론에 있어서 자유권의 정착화 내지 구현의 과정을 체험하기 전에 생활권(사회권)의 문제가 논의되다가 보면, 시민적 자유의 남용이 우리 사회에 있어서 큰 문제가 되었던 것처럼 착각되어, 이미 복지국가의 구현의 단계를 지나고 있는 듯이 거론한다.
> 그러나 실상은 우리사회에 있어서 시민적 자유의 남용문제가 정치적·법률적으로 논의될만한 과정은 겪어 본 적이 거의 없다. 그것은 서방의 이론·사상의 급격한 수입이라는 정신작업에서 생긴 관념적인 환상 이외에 아무 것도 아니다. 말하자면 소화불량적 논리의 고백 이외에 아무 것도 아니다.[260]

한상범은 “자유주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서 방향성 없는 자유를 위험시하고, 개인주의를 일탈로 간주하는 한국의 지적 상황을 통렬히 지적했다.[261] 그는 “자유주의·개인주의의 정신유산은 복지국가의 시대라고 하여서

---

257) 이극찬, “權力의 集中化와 民主主義의 背理”, 『사상계』 186호(1968. 10), 85쪽.
258) 위의 글, 85쪽.
259) 이병린, “權力과 民權: 放恣한 權力이냐, 不退轉의 民權이냐?”, 『사상계』 188호(1968. 12), 50쪽.
260) 한상범, “市民社會의 論理와 福祉國家에의 幻想: 官憲國家的 精神構造의 拂拭과 自由民主 福祉國家를 위한 市民的 權利鬪爭이 필요하다”, 『사상계』 195호(1969. 7), 145쪽.

안이하게 방치 또는 포기될 것은 아니"고, 하물며 복지국가와는 거리가 먼 한국에서 자유주의적 가치들을 쉽게 양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262] 한상범의 논의는 『사상계』의 '자유' 담론과 관련하여 중요한 점을 지적했다. 성장을 위한 국가 개입, 즉 변형된 복지국가론의 전제를 수용하는 한 『사상계』의 정부 비판은 부차적인 데 머물 수밖에 없었다. 경제성장을 위해 일부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긍정하게 되면 그 제한의 정도를 놓고 다툴 수밖에 없었다. 개발과 안보를 이유로 정치적 자유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지식인들은 개발주의로 변용된 복지국가론을 재고하게 되었다. 경제성장은 민주화로 이어지지 않았고, 공정한 분배로 귀결되지 않았다.

4. 독점재벌 비판과 생존권 담론

박정희 정부 초기 경제 정책에 대한 비판은 비효율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이는 군정 시기 의욕적으로 실행했던 시도들이 좌초한 데 따른 것이다. 숨겨진 자본을 끌어내 내자로 동원하겠다는 의도로 실시한 화폐 개혁은 화폐 유통을 차단하는 결과만 가져왔다. 경제개발5개년계획 또한 초기에는 목표치에 미달하는 성과를 보였다. 국가 계획의 필요성 자체는 의문시되지 않았지만 결과가 좋지 못했기에 정부 역량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통제의 손이 지혜의 손이 아니었고 맹목의 손이었으니 국민경제가 개선될 리 만무"하다는 것이다.[263]

여러 시행착오를 거친 후에 박정희 정부는 1964년부터 경제성장 전략으로서 수출증대에 집중했다(박태균, 2007: 336-338). 경제적 성과가 가시화되기 시작하면서 『사상계』의 비판은 독점과 불평등에 맞춰졌다. 독점은 두 갈래의 이유로 비판되었다. 하나는 독점이 자유경제가 지닌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점이다.[264] '계획성 있는 자유경제'라는 지향에는 『사

---

261) 위의 글, 150쪽.
262) 위의 글, 152쪽.
263) 신상초, "軍事獨裁가 남긴 것: 「腐敗無能」을 代辯한다(下)", 『사상계』 129호(1963. 9), 70쪽.
264) 대표적으로 김성두, "韓國獨占財閥形成의 特異性: 韓國財閥의 非能率 非經濟的 特質", 『사상계』 185호(1968. 9)

상계』 지식인들도 동의했지만 그 계획이 독점재벌을 육성함으로써 자유경제의 효율성 자체를 잠식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담론은 생산성을 중심에 두었다는 측면에서 박정희 정부의 경제 구상과 다르지 않았지만 생산성 제고의 방법이 균형성장에 있다고 지적한 점에서 차이를 보였다(김보현, 2006).

독점 재벌이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담론은 민간 기업 간의 자유경쟁이 더 효율적이라는 관점을 전제하고 있다. 독점 자본을 효율성 차원에서 비판하면서 그 책임을 정부에 묻는 담론은 질서자유주의의 입장에서 나왔다. "시장에서의 자유경쟁을 통하여 수요와 공급이 조절되어야 한다면, 공급이나 수요에 인위적인 제약을 필연적으로 가하는 독점행위는 이념적으로 자유경제원리와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라는 논리다.[265] 계획이 독점을 조장하는 방식으로 흐른다면 자유경제의 기본틀이 무너지게 된다는 관점에서 독점에 대한 별개의 국가 개입이 요청되었다. 물론 이런 식의 문제제기를 한 논자들은 대부분 경제학적 전문성을 지닌 지식인들이었다.

비판의 다른 갈래는 독점이 공정하지 못한 정책의 결과이며, 더 큰 불공정성을 낳을 수 있는 원인이라는 주장이었다. 독점의 문제는 "자유경제의 미명하에 포만한 일부 독점재벌과 기본적 생존권마저 위협당하고 있는 대다수의 국민"이라는 구도로 인식되었다.[266] 독점재벌의 비대화와 국민의 궁핍화는 불공정한 자원 분배라는 하나의 원인에서 비롯된 결과이며, 그 간극은 계속 넓어질 것이라고 본 것이다. 여기서 문제는 "자유경제라는 미명"이다. 자유경제를 한다는 명분으로 분배를 방임한다는 점이 비판의 핵심이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경제성장의 성과가 있었다는 것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었으나, 그 과실이 중소기업과 대중에게 배분되지는 않는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경제성장만 먹고 살 수 없다"는 것이다.[267]

196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독점에 대한 비판의 초점은 효율성보다 공정성에 맞춰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박정희 정부의 경제적 성과 자체를 완

265) 이열모, "獨占과 貧困의 排除: 富益富·貧益貧 現象의 是正을 促求한다", 『사상계』 155호(1966. 1), 134-135쪽.

266) 황활원, "論評의 自由와 言論의 責任: 「워싱톤 포스트」紙 社說을 반격한 「韓國日報」論評에 편견있다", 『사상계』 198호(1969. 10), 153-154쪽.

267) 이열모, "『經濟成長』만 먹고 살 수 없다: 第3次5個年計劃總量計劃批判", 『사상계』 205호(1970. 5).

전히 부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급격한 도시화와 노동계급의 형성이라는 새로운 문제가 『사상계』 지식인들에게 포착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1960년대 초반 『사상계』 지식인들은 국가 주도의 경제계획이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하는 복지국가로 귀결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국가 계획이 복지국가로 가는 첩경은 아니었다. 1960년대 말에 이르면 지식인들은 경제계획이 전체적인 빈곤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박정희의 개발주의에 대응해 『사상계』는 생존권을 준거로 균분을 요구했다. 경제성장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었지만, 여전히 기본적 자유의 조건이 되는 "기아로부터의 자유"는 해결되지 않았다.[268] 따라서 "생존권과 자유권의 보장"이 모두 요청되며 이는 "만인에게 빵과 자유를"이라는 구호로 집약되었다.[269] 자유권의 전망 또한 위태로웠지만, 불평등 문제 또한 구체화되고 있었다. "우리의 산업화는 한편으로는 경제적 발전을 이루는 데는 상당히 성공하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적 독주와 사회적인 빈익빈·부익부의 양극화현상을 빚어내어 자유와 정의의 실현에는 크게 실패하고 있다"는 인식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었다.[270] 한국노총의 간부조차 "내핍의 한계를 넘어 더 이상 생존할 수조차 없는 이 사회에서 자본의 횡포는 자본의 자유나 고도성장의 이름으로 비호"되고 있다고 토로하며, "자본가 내지 기업가"를 규제하는 "제반 재분배정책"이 수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271]

1950년대 『사상계』에서 휴머니즘적 자유론은 빈곤으로부터의 자유를 위해 국가가 적극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으로 표출되었다. 그럼에도 그러한 문제의식은 구체적 요구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총량적인 빈곤 탈피가 우선시되면서 불평등은 구체적 문제로 인식되지 않았다. 하지만 1960년대 경제 성장의 결과로 불평등은 구체적 대상을 통해 가시화되었다. 공정성과 생존권을 앞세운 비판의 등장은 『사상계』 지식인들이 박정희식 개발주의가 복지국가와는 전혀 다른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한 결과였다.

『사상계』는 1960년대 후반에 이르러 개발주의적 근대화 담론에서 벗

---

268) 이만갑, "人權不在의 社會", 『사상계』 188호(1968. 12), 42쪽.
269) 안병욱, "現代의 三綱五倫", 『사상계』 177호(1968. 1), 28쪽.
270) 차기벽, "政治人의 價値觀", 『사상계』 177호(1968. 1), 41쪽.
271) 이헌기, "高度成長의 그늘속에 희생되는 勤勞者 權益: 社會正義具顯과 富益富·貧益貧政策의 是正을 促求한다", 『사상계』 201호(1970. 1), 61쪽. 이헌기는 한국노총 총무부장이었다.

어나기 시작했다. 산업화가 가져온 성과를 무시할 수 없었지만 그에 따른 인간 소외 또한 병리적인 것으로 지적되었다(이상록, 2007: 233). 196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지식인들은 경제성장이 자유민주주의의 지지세력을 산출할 것이라는 점에 이견이 없었다. 그러나 1960년대 후반의 현실에서 그런 징조는 보이지 않았다. 피폐한 노동자들의 모습만이 구체적으로 눈에 띌 뿐이었다.

개발에 의한 고도성장은 균분으로 이어지지 않을 뿐더러 개인의 생존권조차 보장해주지 않았다. 이는 이론이 아닌 구체적인 경험을 통해 인식되었다.

> 구봉광산의 양창선씨가 16일만에 매몰된 갱에서 살아나온 사건은 실로 길고 지루한 무더위를 지낸 우리들에게, 하나의 큰 기쁨이었다. … 생명의 고귀함이나 인간의 존엄성은 농민, 근로자, 노동자들에게도 천부의 것으로 있는 것이다. 집권정부의 포악한 수탈정책으로 수많은 우리 국민이 기본권, 아니 생존권의 위협을 당하고 있다면, 이들도 마찬가지로 마땅히 구제되어야 할 권리가 있고, 또 정부에겐 구제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272]

인용문은 매몰된 갱에서 16일만에 생환한 광부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해 모든 사람에게 기본권으로서 생존권이 존재한다는 논리로 나가고 있다. 여기서 매몰된 갱이 상징하듯 산업화는 또 다른 위험을 가져오는 것이었다. 국가주도의 성장 드라이브는 개인들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한편 다수의 개인들은 생존권 문제를 겪어야 했다. 『사상계』 지식인들은 산업화를 계급 분화라는 추상적 개념이 아닌 광부가 겪는 구체적인 생존의 문제로 주시하기 시작했다.

경제적으로 핍박받는 민중이라는 이미지는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적극적으로 형상화된다(문지영, 2011: 297). 위의 인용문은 그러한 방향을 엿보게 한다. 생존권은 휴머니즘의 견지에서 옹호되고 있으며 국가의 관여에 의해 보호되어야 할 것으로 제시되었다. 이처럼 생존권의 문제, 균분의 문제의식은 지식인들이 개발주의를 상대화하면서 1960년대 후반부터 구체적 대상을 갖고 표현되기 시작했다. 휴머니즘에 입각한 생존권 담론은 효율성의 차원에서 독점을 비판한 사회과학보다 강한 파급력을 갖고 있었다.

---

272) "[권두언] 人間의 尊嚴性", 『사상계』 173호(1967. 9), 4쪽.

196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복지국가와 개발국가를 동일시하던 담론들은 현실적 설명력을 잃게 되었다. 그러나 불평등이 광범위하게 확산된 현실에서 경제적 자유의 확대는 선택지가 될 수 없었다. 박정희 정부 하에서 사회민주주의는 정치적 전망을 가질 수 없었다. 이런 대안 부재의 상황에서 휴머니즘적 자유론에 입각한 균분의 요구는 1960년대 후반에 생존권 담론으로 재생했다. 총량적 경제성장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리라던 기대가 무너지고, 경제성장이 공동체를 파괴하는 현상이 목도되면서 휴머니즘적 자유론이 경제적 비판 담론으로 현실적 호소력을 갖게 되었다.

새로운 현실을 맞아 휴머니즘적 자유론에 입각한 비판적 지식인들은 민족과 민중이라는 새로운 공공선과 결합하는 방향으로 나갔다. 그들은 개발주의를 비판하면서 경제적 자유를 옹호하기보다 국가 개입에 의한 균분과 복지, 균형성장을 요구했다(문지영, 2011: 234). 이는 『사상계』에서 나타나듯 지식인과 종교인들의 휴머니즘적 자유론이 공감을 얻은 데 기인한다. 1970년대에 "가난한 민중이 무관심 상태 속에 버려진 채 부정부패로 부가한 곳으로 기울어지는 빈익빈·부익부의 양극화 현상"(김삼웅 편, 2001: 299)에 가장 큰 관심을 기울였던 집단도 종교인들이었다.[273] 휴머니즘적 자유론의 입장에서 불평등은 자본주의의 구조적 문제라기보다 인간 소외의 도덕적 문제였다. 불평등과 불공정은 공동체의 통합을 저해하는 것이었으며, 부도덕한 것이었다. 무엇보다도 생존권은 도덕적 이유에서 보장되어야 했다. 그러나 재분배를 강제할 수 있는 정치 세력은 국가 외에 존재하지 않았다.

비판적 자유주의를 견지한 지식인들은 국가 권력의 약화를 요구하지 않았다. 경제 성장과 분배를 위한 국가 개입은 긍정되었다. 지식인들이 문제 삼은 것은 권력 행사의 자의성, 즉 통치자의 양심이었다. 이는 정권만 교체되면 해결될 수 있는 과제라고 여겼다. 국가에 의한 균분을 요구하는 한편 자유민주주의를 준거로 정권교체에 몰두한 것은 이런 맥락에서 모순되지 않았다. 자유주의 정치세력은 정권교체만 되면 불평등도 시정될 수 있으리라고 낙관했다.

273) 기독교 정의구현 전국성직자단, "성직자 시국선언", 1975. 5. 1.

제4장 『사상계』의 자유민주주의론:
전체주의 비판론에서 정권교체론으로

이 장에서는 한국에서 자유주의 담론의 정치적 성격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우선 언급할 것은 이승만 정부에 대한 자유주의적 비판 담론의 핵심이 냉전 자유주의에 바탕을 둔 전체주의론이었다는 점이다. 전쟁 이후 한국의 자유주의 담론은 반공주의를 기본 전제로 깔고 있었다. 그러나 자유주의적 가치를 지향한 지식인들은 반공을 이유로 자유를 억압한 권위주의 정권을 옹호하지 않았다. 4월혁명에서 지식인과 학생들은 냉전 자유주의 담론을 통해 이승만 정부를 전체주의와 동일시했다. 반공주의의 한계선을 활용한 자유주의 담론은 더 큰 호소력을 가질 수 있었다.

서구에서 자유주의는 애초에 국가에 대한 저항 이념으로서 탄생한 것이었다. 그러나 한국에서 자유주의 담론은 국가의 권한 축소를 요구하기보다 권력의 도덕적 사용을 요청하거나 정권교체를 위한 동원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한국의 자유주의 담론이 고전적 자유주의에 충실하기보다 사회적 자유주의, 복지국가론의 영향을 받은 데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국가 권력의 크기와 강도 자체를 문제삼기보다 그것을 운영하는 통치자의 자질을 문제삼은 것이다.

1960년대에 들어서면 『사상계』는 자유민주주의를 준거로 박정희 정부를 비판하고, 정권교체를 위한 동원을 촉구했다. 이 과정에서 자유민주주의는 정권교체와 동일시되기도 했다. 물론 '자유민주주의' 개념이 처음부터 정권교체와 연관되어 있지는 않았다. 자유민주주의는 논자마다 의미를 달리하는 모호한 개념이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는 정치적 준거로서의 지위를 얻으면서 권위주의 정부에 대한 반대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될 수 있었다.

여기서는 한국 자유주의 담론의 정치적 성격이 역사적 사건과의 교차 속에서 어떻게 변화했는지 보일 것이다. 특히 1960년대 정치 담론에서 핵심 개념이 된 '자유민주주의' 개념에 대한 지식인들의 인식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제1절 냉전 자유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앞서 언급했듯 냉전 자유주의와 반공주의는 다른 것이다. 1950년대에 『사상계』 지식인들은 반공주의를 고수하면서도 자유주의적 원칙을 고수했다. 그들은 반공의 강화를 위해서도 자유민주주의가 준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공주의를 전제하면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준거로 정권을 비판했기에 『사상계』 지식인들의 비판은 현실적 파괴력을 가질 수 있었다.

1. 비판 담론으로서 냉전 자유주의

전쟁을 계기로 한국의 자유주의에는 반공주의적 색채가 강하게 스며들었다. 반공주의는 사회적 상식이자 금기였다. 『사상계』의 자유주의 담론은 물론 사회민주주의 담론 또한 반공주의를 당연한 가치로 전제했다. 『사상계』 지식인들은 공산주의가 결과의 평등을 우선시한다고 비판하지는 않았다. 균분은 『사상계』에서도 중요한 가치였다. 그들에게 공산주의는 자유를 압살하는 전체주의이며, 무력으로서 다른 국가를 복속시키려 한다는 점에서 위협적인 체제였다. 기독교 신자이자 월남한 지식인들이 대종을 이룬 『사상계』 필진들에게 공산주의는 이념 이전의 문제였다.

이승만은 휴전 후에도 "미국과 그 우방들은 지금 소련의 공장들에 대해서 폭탄을 투하해야 할 것"이라는 등 호전적 언사를 거듭했다.[274] 『사상』과 『사상계』 초기 반공 담론도 이와 다르지 않았다. 공산주의의 절멸 없이는 평화도, 자유도 불가능한 것으로 그려졌다. 전쟁의 의미는 "공산침략자=적색제국주의자를 완전히 격멸해서 우리 민족 우리 국가 우리 국토를 완전 통일하고 우리 자손 만대의 번영과, 행복을 도모하고 나아가 자유주의 원칙을 수호하는 동시에 세계의 전인류의 영구적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규정되었다.[275] 『사상』과 『사상계』의 창간에 큰 도움을 준 백낙준은

274) 이승만, "상하 양원 합동의회에서 연설", 1954. 7. 28. 이틀 후 이승만은 "해외기자 구락부에서의 연설"을 통해 자신은 "미국에 대하여 즉시 중공과 개전할 것을 권유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의 변명을 해야 했다.

“오늘의 세계는 자유진영과 비자유의 양 진영의 일원으로 공산전제주의를 타파하기 위하여 전선에서 싸우고 있”다고 진단했다.[276] 양 진영으로 나눠진 국제적 현실에서 한국은 자유진영을 위해 최전선에서 투쟁하는 사명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백낙준은 “자유진영으로 협력하지 아니하는 것은 중립이 아니요, 협력하지 아니하는 정도만치 자유진영에 가해하는 것이요 공산진영에 가담하는 것이”라고까지 말했다.[277] 『사상』과 『사상계』 초기에 나타난 반공주의는 우리를 말살하려는 적에 대한 적개심을 담고 있었다. 이는 『사상』과 『사상계』가 전쟁 중에 발행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공산주의에 대한 비판은 여기에 머물지 않았다. 공산주의는 독재체제이며, 인간의 본능인 자유를 말살한다는 점에서 체계적으로 비판되었다. 공산주의 국가는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을 근본적으로 거부하고, 직업과 거주 선택의 자유가 말살되고”, “초과노동의 강요”가 빈번한 사회로 묘사되었다.[278] 이러한 압제는 필연적으로 반발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되었다. “인간의 존엄성을 부인하고 인간의 본능인 자유와 개성을 무시하고 인간을 기계화하는 방법으로 가고 있는 공산정권이 필멸하리라는 것”은 분명하다는 것이다.[279]

무력으로 공산화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본다면 공산주의는 절멸의 대상이 될 뿐 그 이상의 논의가 무의미하다. 하지만 공산주의가 자유를 말살한다는 점에 비판의 초점이 맞춰지게 되면 반공주의는 현실 비판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자유를 억압하는 체제는 공산주의보다 나을 것이 없다는 논리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는 반공을 일단 표방하고 시작되기에 안전하기도 했다.

> 자유의 폐단이 있다고 해서 공산주의의 최대의 적인 동시에 자유세계의 최대의 무기인 자유를 제한하고 자유를 거세한다는 것은 마치 우리의 유일한 무기를 버리고 적에게 빈주먹으로 대항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며 공산주의와의 투쟁

275) “[좌담회] 思想運動의 回顧와 展望”, 『사상』 2호(1952. 10), 70쪽, 이병도 발언.
276) 백낙준, “三一精神論: 우리 獨立宣言書의 4大基本自由에 對하여”, 『사상계』 1호(1953. 4), 118쪽.
277) 백낙준, “韓國戰爭과 世界平和”, 『사상계』 3호(1953. 6), 8쪽.
278) 김대중, “韓國勞動運動의 進路”, 『사상계』 27호(1955. 10), 38쪽. 이 글은 김대중이 『사상계』에 처음으로 기고한 글이다. 김대중은 “노동문제 연구가”로 소개되어 있다.
279) 주석균, “方向論(上)”, 『사상계』 7호(1953. 11), 17쪽.

에서 최후의 승리를 확보하는 길은 어디까지나 자유를 발전시킴으로 민중 자신들로 하여금 자유의 가치를 인식하고 자유를 신봉하도록 하는 이외에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280]

어떠한 경우라도 일당독재가 되지 않도록 엄히 계신(戒愼)하여야 한다. 「민주독재」도 일당독재의 방식으로 나아가서는 안 되며 만일 자유세계에서 일당독재를 꿈꾸다가는 공산국가와의 투쟁에서 패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명념(銘念)하여야 한다.[281]

이러한 논의는 특정 대상을 직접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승만과 자유당의 정치적 독주를 겨냥하고 있다. 인용문에서 공산주의가 비판되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자유를 억압하고 획일적 지배체제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것과 동일한 행태를 보이는 체제라면 똑같이 비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반공을 위해서라도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고, 민주주의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다. 이런 견지에서 반공을 위해 자유가 유보되어야 한다는 논리는 자가당착으로 간주된다.

이승만은 "우리는 지금 전쟁 중이니 정부를 이유 없이 반대하고 해치려는 일은 없어야 하며 이러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공산당이거나 또는 공산당이 아니더라도 공산당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여 반공을 위해 일부 자유를 유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282] 휴전한지 3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전쟁 중"이라며 주권적 결단을 독점하고자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사상계』 지식인들은 반공을 위해 자유와 민주주의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맞섰다. 『사상계』 지식인들은 반공주의자라는 점에서 이승만과 같았지만, 자유주의적 원칙을 버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달랐다. 자유민주주의만이 반공의 길이라고 전제하면서 『사상계』 지식인들은 자신들이 이승만보다 더 반공에 충실하다고 주장할 수 있었다. 『사상계』 지식인들은 자유를 궁극적 목적으로 설정하면서 반공을 그 한계선으로 제시한 냉전 자유주의 담론을 활용해 정부를 비판했다.

---

280) 위의 글, 25쪽.
281) 주석균, "方向論(下)", 『사상계』 8호(1953. 12), 53쪽.
282) 이승만, "합심해서 나라 일을 해나가라, 서울특별시 의회의원에게", 1956. 9. 6.

2. 4월혁명의 자유주의 담론

1959년에 들어서면서 『사상계』는 이승만 정권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했다. 1958년 12월 24일 국회에서 농성 중인 야당 의원들을 폭력적으로 끌어내어 감금하고 여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국가보안법 개정 사건, 소위 2·4 파동이 그 시발점이었다. 새롭게 개정된 국가보안법은 언론 자유의 침해,[283] 인신 자유 침해,[284] 정치적 자유의 침해[285]라는 측면에서 비판되었다[286]. 기존에는 정권에 대한 비판적 거리를 유지하되 대결의 담론은 삼갔으나, 이 시기에 들어서면 투쟁을 독려하는 논조가 강하게 표출되었다. 미국도 1959년에 들어서면서 이승만을 대체할 대안을 찾고 있었다(이철순, 2011: 100). 『사상계』는 미국과의 교감을 갖고 과감한 정부 비판을 수행했다.[287]

1959년 1월 권두언의 제목이었던 "새해는 '민권의 해'로 맞고 싶다"는 말은 『사상계』의 논조 변화를 상징적으로 함축하고 있다. 이승만 정부의 폭주는 '자유와 민권'의 문제틀로 비판되었다. 자유주의적 권리의 훼손에 비판의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것이다.

---

283) 17조 5항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허위인 줄 알면서 적시 또는 유포하거나 사실을 고의로 왜곡하여 적시 또는 유포함으로써 인심을 혹란케하여 적을 이롭게 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 문제시되었다. 이하 법령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인용.

284) 36조 1항 "지방법원판사는 제19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02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일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는 내용과, 37조 "제6조 내지 제20조와 제22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공소된 피고사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이에 해당한다. 36조는 사법경찰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구속기간의 연장을 가능하게 하였고, 37조는 피의자가 법정에서 경찰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에도 그 증거능력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도록 한 것이다.

285) 당시 상황에서 공산주의에 대항하기 위한 법률로서 국가보안법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개정된 국가보안법에 의하면 반국가단체와 연관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어떠한 정치활동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었다(제17조, 제22조). 『사상계』 지식인들은 반국가단체와의 연관성이 자의적으로 조작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신국가보안법이 탄압의 수단으로 전용될 소지가 많다고 판단했다. 한태연, "韓國에 있어서의 自由", 『사상계』 65호(1958. 12), 26쪽 참조.

286) "保安法 波動", 『사상계』 67호(1959. 2), 70쪽; 김병로, "二四波動有感", 『사상계』 68호(1959. 3), 19쪽

287) 김진현 전 장관과의 인터뷰(2021. 1. 13). 김진현은 장준하를 비롯해 『사상계』 지식인들과 미공보원이 친분을 갖고 서로의 위상을 활용하고자 했다고 회고했다.

'자유의 나무는 피를 마시고 자란다'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가 특권에 항거하여 민권을 쟁취하려는 힘이 자라면 자랄수록 이를 막으려는 무리들의 행위는 날로 악랄하여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씌워질 모든 억울한 사슬은 그 강인의 도를 더할수록 우리를 더욱 깨우쳐주고 더욱 반발케 하며 더욱 힘있게 하여줄 뿐입니다.[288]

마치 예언과도 같았던 인용문의 내용에서 보이듯 『사상계』는 4월혁명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대중의 저항을 요청했다. 『사상계』 지식인들은 "국민대중은 합법적인 저항권을 당당히 행사하여 민주주의의 소생을 위한 투쟁에 용기를 내야할 것"이며, 민주주의가 바로잡힌 후에야 "실추된 국위를 회복할 수 있고 대동단결하여 반공투쟁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고 했다.[289] 1959년 3월호에는 "자유를 위한 투쟁"이 특집으로 기획되어 해외의 민권 투쟁이 소개되었다. 그 의도는 "구라파에서, 미국에서, 또는 인도에게 전개된 자유투쟁의 빛나는 발자취"가 "딴 나라, 딴 민족의 일일 수" 없다는 것이었다.[290] 프랑스 지식인들의 레지스탕스 운동이 언급되기도 했는데 그 의도 또한 마찬가지였다.[291]

신국가보안법 입법에 이어 이승만 정부는 1959년 4월 30일에 정부에 비판적인 논조를 보였던 『경향신문』을 폐간시켰다. 여기에 동원된 법률은 미군정법령 88호로 신문 및 간행물의 허가와 취소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 수립 후 제정된 법률로는 폐지의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미군정법령을 끌어와 폐간 조치를 한 것이다. 이는 "현행법령은 이 헌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한 헌법 제100조를 통해 정당화되었다. 정부는 한국의 특수 상황에서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는 언론에 대한 허가 취소를 규정한 군정법령 제88호는 현행 헌법에 합치한다고 볼 수 있으며, 실제 합치 여부에 대한 판단은 법원이 할 일이라고 입장을 밝혔다(대한민국 외무부, 1959).

정권의 처사는 "반공을 방패삼아 민권을 유린"한 것으로 비판되었다.[292]

---

288) 장준하, "새해는 「民權의 해」로 맞고 싶다", 『사상계』 66호(1959. 1), 17쪽.
289) 신상초, "韓國과 韓國人: 韓人은 북어처럼 때릴수록 좋아지는가", 『사상계』 68호(1959. 3), 83쪽.
290) "編輯後記", 『사상계』 68호(1959. 3), 442쪽.
291) 안병욱, "旣成秩序에 對한 레지스탕스의 構造", 『사상계』 69호(1959. 4), 35쪽.
292) 장준하, "이 길위에 서서: 創刊6週年을 맞으면서", 『사상계』 69호(1959. 4), 14-15쪽.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제한받지 아니한다”(제13조)고 했다. 『사상계』 지식인들이 보기에 이승만 정부는 이 조항을 역이용하고 있었다. ‘법률에 의한다면 헌법에서 보장하는 자유권을 언제라도 제한할 수 있다’는 식으로 헌법 13조를 비틀어 해석한 것이다.[293] 『사상계』 지식인들은 이를 자유와 민권의 제도적 근거인 헌법에 대한 자의적 훼손으로 간주했다. 이에 따라 『사상계』는 창간 이래 그 어느 때보다도 정권에 대한 공세적인 담론을 펼치면서 투쟁을 고취했다.

> 집권당은 「몽둥이 정치」의 효용을 과신하는 나머지 우리 백성을 북어로 착각 취급하지 말 것이며 또 국민대중은 합법적인 저항권을 당당히 행사하여 민주주의의 소생을 위한 투쟁에 용기를 내야할 것이다.[294]

> 참된 자유는 어디까지나 레지스탕스다. 또 힘의 발현인 것이다. 인권을 선언한 것이나 시민권을 선언한 것이 한 조각의 헛된 공문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인간으로서 시민으로서의 의무라는 것을 선언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295]

이 시기 『사상계』에서 ‘자유’는 곧 저항이었고, 저항에 의해서만 쟁취될 수 있는 것으로 표상되었다. 1960년 3월에 대선이 임박했음에도 선거에서의 심판보다 직접 행동, 즉 “힘의 발현”을 강조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이승만 정부 하에서 평화적 정권교체가 불가능하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여야의 대립은 격화되고 의회의 기능은 마비되고 국민의 여론은 무시되고 집회의 자유가 금지되고 있는 이 정국에서 귀결될 수 있는 유일한 결론은 이미 우리 사회에 있어서는 정권의 평화적 교체는 불가능하다는 소정(所定)뿐”이라는 것이다.[296]

저항권의 발동에 의해 자유와 민권을 되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상계』는 저항의 주요 세력으로서 지식인과 젊은 세대에 주목했다. 후진국에

---

293) 신상초, “軍政法令第88號의 幽靈: 自由言論은 죽지 않는다”, 『사상계』 71호(1959. 6), 24쪽; 문홍주, “基本的 人權의 保障 - 美國憲法과 韓國憲法의 比較硏究”, 『사상계』 72호(1959. 7), 77쪽.

294) 신상초, “韓國과 韓國人: 韓人은 북어처럼 때릴수록 좋아지는가”, 『사상계』 68호(1959. 3), 83쪽.

295) 김은우, “새 「自由」의 模索 ”, 『사상계』 70호(1959. 5), 297쪽.

296) 한태연, “韓國自由民主主義의 危機”, 『사상계』 67호(1959. 2), 23쪽.

는 부르주아 계급이 형성되어 있지 않으며, 일부 형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국가와 결탁해 있기에 진보적 역할을 기대할 수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후진국에서는 지식과 교양을 가진 집단이 서구에서 부르주아 계급이 시민혁명 과정에서 담당했던 역할을 수행해야 했다. “자유민주주의는 언제나 교양과 용기를 가진 지식계급을 전제로 하는 것이었고 또한 지식계급의 비판과 반항에 의해서만 유지되고 발전될 수 있는 것이”기에 “여기에 후진국가에 있어서의 지식계급의 역사적 사명”이 있다는 것이다.[297] 또한 “창조적인 자유를 추구하는 힘이 젊은 세대에 더 많이 그리고 또 강렬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매양 우리 역사상에서나 또 외국 역사상에서나 사회의 혁신운동은 젊은 세대의 손에서 이루어지는 예가 많”다고 하여 불의에 민감한 청년층의 저항을 촉구하였다.[298] 한편으로는 한국의 독립운동을 이끈 집단이 “지식청년”이었음이 강조되었고,[299] 다른 한편으로 해외의 지식인 운동 사례가 한국의 정세에 투영되어 소개되기도 했다.

이 시기 『사상계』의 저항권 담론이 자연권적 개인 관념에서 제기되었다고 평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윤상현, 2019: 173). 그러나 저항은 개인주의적 권리로 정당화되기보다 공동체에 대한 기여로서 요청될 때가 더 많았다. 『사상계』는 여전히 “자리(自利)를 꾀하는 동시에 이타를 잊지 않는 개인”을 바람직하게 여겼으며, 저항의 주체로서 개인은 “사회의 부정과 불의를 보고 감연히 일어서서 싸울만한 용기와 의분”을 가질 수 있어야 했다.[300] 개인 자유의 절대성을 강조한 글이 없지 않았지만,[301] 그런 관점은 『사상계』의 주된 논조가 아니었다. 개인과 공동체의 조화를 요청하면서, 공동체에 기여하는 방법으로 저항을 제시하는 담론이 더 흔하게 나타났다. 즉 저항은 사리(私利)가 아니라 공공선에 지향된 행위로 정당화되었다.

이 시기 이승만 정권에 대한 저항의 이유는 자유와 민권에 대한 자의적 침해에 있었다. 무엇보다도 자유와 민권은 인간의 본능으로서 옹호되었다.[302] 타인에게 구속받지 않는 삶은 누구나 원하는 것이며, 거스를 수 없

297) 한태연, “韓國의 知識階級”, 『사상계』 70호(1959. 5), 41쪽.
298) 이은상, “제목없는 글”, 『사상계』 66호 (1959. 1), 253쪽.
299) 위의 글, 37쪽.
300) “[권두언] 個人의 意味”, 『사상계』 75호(1959. 10), 19쪽.
301) 예를 들어 문홍주, “基本的 人權의 保障: 美國憲法과 韓國憲法의 比較硏究”, 『사상계』 72호(1959. 7).
302) 주석균, “方向論(上)”, 『사상계』 7호(1953. 11), 17쪽; 안병욱, “自由의 倫理”, 『사상계』

는 본능으로 전제되었다. 앞서 보았듯 자유와 민권은 『사상계』가 반공주의에 충실했던 이유이기도 했다. 자유와 민권이 억압받는다면 공산주의와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 『사상계』 지식인들의 생각이었다. "자유의 적은 공산주의뿐만 아니라 무릇 어떠한 형태의 파시즘도 여기에 해당한다"며 자유당의 국회 독주를 경고한 말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303]

4월혁명의 국면에서 '자유' 담론은 일제강점과 공산주의 통치의 기억을 소환하는 것이기도 했다. 특히 대학생들은 자신들의 투쟁을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것으로 규정하면서 독립운동 및 한국전쟁에서의 반공투쟁과 연속선에 있다고 규정했다. "항일투쟁", "멸공전선"에 섰던 학생들이 "오늘은 진정한 민주이념의 쟁취를 위한 반항의 봉화를 높이 들어야" 한다는 것이다(김삼웅 편, 2001: 27).[304] 이승만 정부를 일제 또는 공산당과 다를 바 없는 자유의 적으로 지목한 것이다. 이렇게 냉전 자유주의의 입장에서 제기된 전체주의 비판론은 역사적 맥락과 결합하여 정권비판론으로 활용되었다.

『사상계』 지식인들은 자유의 훼손이 '자유진영'으로부터 지원 없이 존속할 수 없는 한국의 존재 자체를 위협한다고도 보았다. "자유진영의 각 국가가 우리나라를 돕는 것"은 냉전 대결에서 자유를 수호하는 "존재의의를 가진 나라이기 때문"이며,[305] 한국에서 벌어지는 자유의 훼손은 "한국의 반공국가로서의 강력성"을 상실하게 할 것이라고 보았다.[306] 『사상계』 지식인들은 '냉전의 최전선에서 자유를 수호한다'는 점에서 미국을 위시한 '자유진영'의 대한(對韓) 원조를 당연시했다. 이런 입장에서 자유와 민권의 훼손은 국제정치 무대에서 국가의 생존에 대한 위협이나 마찬가지였다.[307]

이처럼 반공주의는 통치 세력의 무기만은 아니었다. 반공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괄시하는 정권에 대한 비판의 준거였다. 반공주의 자체는 깨뜨릴 수 없는 금기였다. 그러나 그것은 비판적 지식인들뿐만 아니라 권위주의 정부도 깰 수 없는 것이었다. 반공이 최상위의 가치였다는 점은 담론적으로 역이용될 수 있었다. 반공에 근거한 정부 비판, 반공에 근거한 사회민주주의적

24호(1955. 7), 26쪽.

303) 한태연, "韓國에 있어서의 自由", 『사상계』 65호(1958. 12), 26쪽.

304) 고려대학교 학생회 4·18시국선언문, 1960. 4. 18.

305) 정태섭, "國家保安法改正에 對한 綜合檢討", 『사상계』 66호(1959. 1), 84쪽.

306) 한태연, "韓國自由民主主義의 危機", 『사상계』 67호(1959. 2), 25쪽.

307) 김기수, "亞細亞의 民族主義와 共産主義", 『사상계』 53호(1957. 12), 156쪽.

주장은 호소력이 있었고 안전했다. 물론 『사상계』 지식인들이 필화를 피하기 위해 반공주의로 분장했다는 것은 아니다. 장준하와 함석헌을 비롯해 『사상계』 필진들은 완강한 반공주의자였다(장준하선생20주기추모문집간행위원회 편, 1995: 41-42). 그러나 그들은 또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마찬가지로 중시했다. 『사상계』의 자유민주주의적 비판 담론은 반공주의라는 시대적 상식과 결합하여 더욱 현실적인 파급력을 가질 수 있었다.

제2절 반공주의적 자유민주주의론

해방 이후 민주주의를 전유하려는 좌우의 투쟁 속에서 우익이 자유민주주의를 내세웠듯이 한국에서 '자유민주주의' 개념은 반공주의의 맥락에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사상계』에서는 특히 한태연이 서독 헌법학계의 영향을 받아 냉전 자유주의의 관점에서 '자유민주주의' 개념을 사용했다. 그에게 자유민주주의란 자유주의적 헌정을 위협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자유를 허락하지 않는 체제를 의미했다.

다른 한편 『사상계』에서 자유민주주의 담론의 급증을 촉발한 것은 박정희의 저작과 연설이었다. 박정희는 쿠데타 이후 국내외의 사상적 의구심을 떨치기 위해 자유민주주의를 자주 언급했다. 그가 말한 자유민주주의란 '자유진영의 민주주의'라는 의미를 벗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박정희의 자유민주주의론은 예기치 않은 담론적 결과를 낳게 된다.

1. 한태연의 자유민주주의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1950년대 『사상계』에서 혁신계의 자유민주주의 비판론을 제외하면 '자유민주주의' 개념을 사용한 경우는 많지 않았다. 앞서 언급했듯 해방 정국에서는 좌우 모두 민주주의를 표방하면서 좌익의 민주주의와 구별하기 위해 자유민주주의가 언급되기도 했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전유하기 위한 좌우의 대립이 사라진 마당에 굳이 '민주주의' 앞에 '자유'를 붙여야 할 이유는 없었다. 또한 한국에서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결합으로 나타

난 것이 아니라 해방과 함께 완성품으로 주어진 것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모순적 결합이라는 문제의식 자체가 존재하기 어려웠다. 유일하게 혁신계만이 자신들의 입장을 사회민주주의로 표명하면서 그에 대조되는 개념으로 자유민주주의를 비판할 뿐이었다.

혁신계 외에 '자유민주주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사용한 논자로는 헌법학자 한태연이 있었다. 그는 1950년대 후반 『사상계』에서 다소 독특한 의미로 사용했다. 한태연의 '자유민주주의'는 'liberal democracy'를 뜻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개의 경우 서독의 'Freiheitliche demokratische Grundordnung', 즉 '자유(로운) 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의미하는 것이었다(국순옥, 1994: 130-131).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복합체로서 자유민주주의는 가치중립적이다. 어떠한 사상과 이념이라도 주장될 수 있는 자유가 있으며 다수의 가치관과 상충되는 주장이라 하더라도 관용되어야 한다. 민주적 절차를 통해 특정 사상과 이념의 현실적 적용 여부가 판가름날 것이기에 특정한 주장이 제기되는 것만으로는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보는 것이다. 반면 서독의 헌법에서 개념화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자유민주주의 헌정에 절대적 가치를 부여했다. 따라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하에서는 반헌법적 주장과 정치세력을 관용하지 않는다. 이는 자유민주주의에 충실했던 바이마르 공화국의 귀결이 히틀러에 의한 자유민주주의의 부정이었다는 경험을 반영한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개념은 당대의 냉전 맥락에서 제기된 것이기도 했다. 공산주의 또한 자유민주주의의 부정, 즉 전체주의로 규정되면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실제로 이 개념이 법적 의미를 갖게 된 것은 1952년 사회주의국가당 사건, 1956년의 독일공산당 사건을 통해서였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냉전 자유주의의 맥락에서 이른바 전투적 민주주의, 방어적 민주주의를 옹호하기 위한 개념으로 사용되었다(국순옥, 1994; 김삼룡, 2012).

> 대체로 자유민주주의적 국가라고 할 때에는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학문, 예술의 자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그 전제로 한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해석에 있어서는 자유민주주의의 그 상대주의적 세계관의 결과로 인하여 이러한 자유는 어떠한 그 누구에게 대해서도 인정되는 절대적인 자유로 생각하여왔다. 그러나 바이마아르헌법에 의한 바이마아르 공화국의 자유민주주의적 질서가 그 헌법질서에 의하여

합법적으로 자라난 「히틀러」의 나치쓰당에 의하여 파괴되게 되자, 모든 사람은 그 때에야 비로소 자유민주주의적 정치질서에 있어서의 국민의 모든 기본적 자유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따라서 자유민주주의적 국가에 있어서도 그 정치질서에 의하여 보장되는 개인의 기본적 자유도 그것이 그것을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와 양립할 수 있을 경우에만, 그 권리로서의 성격을 가질 수 있다는 데에, 그 기본적 자유의 한계가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서독에 있어서는 그 헌법의 규정에 의하여 자유민주주의에 위반하는 모든 정당의 활동을 금하는 동시에 서독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개인의 모든 기본적 권리도 그 헌법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위배할 때에는 그것은 이미 권리로서의 성격을 상실한다고 규정하여 자유민주주의에 위반하는 공산주의 및 그 밖의 전체주의적 활동을 금지하고 있다.[308]

이처럼 한태연은 '자유민주주의' 개념의 의미가 '자유주의+민주주의'에서 나치즘과 냉전 경험에 따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 변모했다고 설명했다. '자유민주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별개의 개념으로 놓지 않고, '자유민주주의' 개념이 의미론적 변화를 겪었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전반적으로 본다면 한태연의 '자유민주주의' 개념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태연이 '민주주의' 개념보다 '자유민주주의' 개념을 유독 자주 사용한 것은 언어적 습관이 아니라 '자유의 적에게는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 민주주의'를 의미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로써 자유민주주의는 가치중립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의 정치적 편향을 갖게 된다. 자유와 민주의 적에 대해 적대적 태도를 갖게 되는 것인데, 이는 현실적으로 현행 헌법 질서의 수호라는 입장으로 귀결된다.

한태연은 1959년 2월에 "한국자유민주주의의 위기"라는 글에서 이승만 정부의 폭주가 "자유민주주의와는 정반대의 경향으로 흘러가게" 되며, "헌법 제1조의 규정에 있어서와 같이 영원히 '민주공화국'로서만 존재할 가치가 있"는 한국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보았다.[309] 이처럼 한태연의 자유민주주의론은 헌법의 수호라는 입장에서 이승만 정부를 비판하는 담론이 될 수 있었다.[310]

---

308) 한태연, "韓國에 있어서의 自由", 『사상계』 65호(1958. 12), 23쪽.
309) 한태연, "韓國自由民主主義의 危機", 『사상계』 67호(1959. 2), 25쪽.
310) 한태연의 자유민주주의론은 반공주의로 자유의 제한을 정당화하는 담론이 될 수도 있었다. 즉,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적용은 특정한 원칙을 따른다기보다 자유민주주의의 '적'을 누구로 상정하는가에 따라 자의적일 수 있었다.

한태연의 자유민주주의론은 당시 서독 헌법학계의 논의를 한국 상황에 적용한 것이었다. 복잡한 역사적, 사상적 배경이 있지만 구체적 적용으로 나가면 적나라한 반공주의와 다르지 않을 수도 있었다. 그럼에도 한태연은 이승만 정부의 폭주에 대해서 특유의 자유민주주의론을 근거로 비판했다. 그는 이승만 정부가 전근대적 가치에 매몰되어 있다고 판단했다. 한태연은 "우리 사회에 있어서는 자유민주주의를 배양케 할 모든 조건이 하나도 없"으며, "여기에 우리 사회에 있어서의 민주주의가 가산국가적 관념 위에 입각하게 되"었다고 보았다.[311] 가산국가와 민주주의가 결합한 결과 이승만을 '국부(國父)'로 하는 한국에서 "집권자의 모든 행위는 그것이 헌법에 위반되든 말든 그것은 가장 민주주의적이라고 하는 단정을 강요"한다는 것이다.[312] 그는 선거로 선출된 권력이라면 헌법을 벗어나도 민주적이라는 인식이 문제라고 보았다.

한태연은 이승만 정부가 자유민주주의를 논하기 이전 단계에 있다고 판단했다. "정치이념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라고는 하지만,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는 이씨왕조의 그 정신적 유산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말 속에 한태연의 현실 인식이 나타나고 있다.[313] 따라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근거로 무언가를 보호해야 할 것이 이승만 정부에는 없다고 본 것이다. 오히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 보호해야 할 것은 이승만 정부에 의해 사문화되고 있는 헌법이었다. 한태연의 자유민주주의론은 냉전 자유주의의 관점에서 자유주의적 헌법 수호에 절대적 가치를 부여하는 담론이었다. 그가 보기에 1950년대 말 헌법의 파괴자는 이승만 정부였다. 이승만 정부는 전근대적 전체주의 체제로 규정되었다.

한태연은 4월혁명 이후의 분위기에서 "서구적 의미의 사회주의 정당"은 "자유민주주의적 정치체제" 속에서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314] 자유민주주의적 정치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정과 개혁"이 필요하며 이는 "수정자본주의에 있어서의 부의 평균한 분배와 경제의 민주화, 자유민주주의에 있어서의 평등의 원칙의 형식적 경향에서 실질적 경향으로의 발전, 시민적 헌법에 있어서의 사회적 기본권의 채용과 그 수익자의 범위의

311) 한태연, "韓國自由民主主義의 危機", 『사상계』 67호(1959. 2), 22쪽.
312) 위의 글, 20쪽.
313) 한태연, "韓國野黨의 社會學", 『사상계』 79호(1960. 2), 28쪽.
314) 한태연, "第2共和國憲法의 傾向", 『사상계』 83호(1960. 6), 171쪽.

확대와 같은 것"을 의미한다고 하기도 했다.[315] 그는 4월혁명 국면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보호하기 위해 진보적 조치들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태연의 자유민주주의론은 이처럼 냉전 자유주의를 요체로 하면서 사회적 자유주의의 방향까지 포괄하고 있었다.

1956년부터 1960년 12월까지 활발하게 『사상계』에 글을 기고하고 좌담회에 참여했던 한태연은 그 이후 『사상계』의 지면에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다. 1962년 10월 편집위원회 축소 개편에 따라 한태연과 『사상계』의 공식적 관계는 완전히 단절되었다. 그는 『사상계』를 떠나 박정희 정부의 헌법 이론가이자 이데올로그로서 활약하게 된다. 그가 박정희를 따르게 되면서 그의 자유민주주의론은 점차 박정희의 비판자들을 헌정의 적으로 규정하는 데 쓰이게 될 운명이었다. 예를 들어 『우리 민족의 나갈 길』에서 "오늘날 자유민주주의는 자기 속에 지니고 있는 스스로의 적을 붙잡아 처리하지 않으면 저 무서운 공산주의자들에게 패배할 염려가 있다"(박정희, 1962: 32)고 한 대목에서는 한태연 식 자유민주주의론의 영향력이 감지된다.[316] 이 문맥에서 "스스로의 적"은 '빈곤'을 의미한다. 하지만 박정희 정부의 통치 양식이 경성화될수록 '적'의 범주는 확대되고 정치화될 것이었다. 다른 한편으로 인용문은 한태연이 왜 군사정부에 협조했는가를 추측할 수 있게 한다. 이승만 정부의 전근대성을 비판했던 것과 연관지어 볼 때 그는 탈후진 근대화 없이 실질적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수립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인다. 즉, 그는 군사정부와의 협력을 근대화에의 참여와 동일시했다(김건우, 2017: 110 참조).

2. 박정희의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사상계』에서 '자유민주주의' 개념이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시점은 5·16쿠데타 이후라고 할 수 있다. 연구에 사용한 『사상계』 자료에서 쿠데타 이전까지 '자유민주주의' 개념은 총 126회만 나타났다(1952~58년

315) 한태연, "保守勢力의 系譜", 『사상계』 85호(1960. 8), 62쪽.

316) 『우리 민족의 나갈 길』의 몇몇 구절은 한태연이 『사상계』에서 피력했던 논의와 상당히 유사하다. 이 책의 집필에는 이만갑 등 『사상계』 지식인들도 관여했다(황병주, 2008: 98). 한태연 또한 직간접적으로 참여했을 가능성이 있다.

59회, 1959~1961년 5월 67회). 반면 쿠데타 이후 폐간 때까지 사용 빈도는 총 476회이다. 그 중에서도 군정기간에 해당하는 1961년 6월부터 1963년 12월까지 337회 사용되었다. 연도별로 본다면, 1961년 6월부터 12월까지 15회, 1962년 166회, 1963년 156회다. 이처럼 『사상계』에서는 군정기간, 특히 1962년과 1963년에 '자유민주주의' 개념을 둘러싼 논의가 집중되었다.

그렇다면 왜 『사상계』는 군정기간에 자유민주주의를 집중적으로 언급했는가? 갑자기 '자유민주주의' 개념에 대한 『사상계』 지식인들의 인식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자유민주주의' 개념을 지식인 사회에 유행시킨 것은 다름 아닌 박정희였다. 박정희는 책과 연설을 통해 쿠데타의 목적을 '진정한' 자유민주주의의 건설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사상계』에서도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논평과 주장을 내놓았다. 이런 과정을 통해 자유민주주의는 보편적인 정치 언어로서 확산되었다. 자유민주주의는 박정희가 주도한 유행어였다.

5·16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군사정부는 빈곤으로부터의 탈피가 최우선 과제라는 제2공화국의 구호를 그대로 이어받았다. 산업화가 다른 모든 부문의 근대화를 추동하는 힘이라고 본 것이다. 물론 이를 위해 정치적 자유가 유보될 수 있다고 생각한 점은 장면 정부와 달랐다. 그러나 박정희는 자유민주주의를 공식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었다. 그는 쿠데타와 자유민주주의를 조화시켜야 하는 딜레마를 예민하게 느끼고 있었다. 박정희가 집권 초기 '자유민주주의' 또는 '민주주의'를 말할 때 유난히 '진정한', '참된'이라는 수식어를 남발한 것은 이 때문이다.

박정희는 장도영을 축출하고 최고회의의장에 취임하는 날부터 "진정한 민주주의적 국가 재건", "진정한 민주 공화국 재건"을 외쳤다.[317] 민주당 정부 하의 사회상은 "아나키즘적 상태"로서 "폭력과 데모는 도처에서 인권과 자유를 짓밟고, 용공 중립 사상은 북괴의 선전에 동조하"는 "극도의 혼란"으로 묘사되었다(박정희, 1962: 41). 그는 민주당 정부 하에서의 정치체제를 "진정한" 민주주의가 아닌 이름만 민주주의였다고 평가함으로써 쿠데타를 정당화하고자 했다. 따라서 군정 기간은 "진정한 민주주의" 건설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규정되었다. 앞으로의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민주

317)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취임사", 1961. 7. 3.

주의를 일시 중지한다는 논법이 나오게 된 것이다.

박정희는 쿠데타 직후 1961년 6월 16일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발행한 『지도자도』에서도 짧게나마 "자유민주주의와 혁명"이라는 제목이 붙은 단락을 통해 딜레마를 해소해보고자 했다. "이번 군사혁명은 자유민주주의의 철저와 부합되는 것인가 또는 이에 배치되는 것인가"라고 묻고는 "금반(今般)의 군사혁명은 일종의 수술"이며, "국가가 파멸에 직면하고, 국민의 주권이 비참히 유린되었을 때, 여기에 일대 수술을 가하여 국가와 국민의 자유 및 권리를 소생시키고자 한 것이 이번 5·16 군사혁명이었"다고 주장했다(박정희, 1961: 25-27). 쿠데타 당시 제시한 혁명공약에서 권리로서의 자유나 민주주의와 관련된 언급이 전혀 없었던 것을 상기해보면,[318] 『지도자도』의 내용은 군정 초기부터 자유민주주의의 입장에서 스스로를 변호해야 하는 압박이 컸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압박은 민주주의 앞에 '자유'를 붙인 '자유민주주의' 개념으로 표현되었다. '자유민주주의' 개념은 『지도자도』에서 이미 사용되었지만 최고회의의장 취임 초기 연설문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319] 지식인들을 제외하면 이 당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절충으로서 '자유민주주의'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도 드물었고, 언론에서 '자유민주주의'가 사용되는 경우도 많지 않았다.[320] '자유민주주의' 개념이 처음으로 연설문에서 사용된 것은 1961년 10월 3일 "북한동포에게 보내는 메시지"에서였으며, 그 뒤로 1961년 11월 방일 및 방미 기간부터 본격적으로 사용되었다.

박정희는 미국 체류 기간 중 연설에서 '자유민주주의' 개념을 총 9회 사용했다. 그 중 8회는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라고 했고, 1회는 "순수한 자유민주주의"라고 했다.[321] 모두 쿠데타의 목적을 미국인들에게 납득시키려는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우리의 혁명은 전 정권의 비민주적인 모든 잔재를

---

318) 혁명공약에서 '자유' 개념은 "미국을 위시한 자유 우방과의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한다"는 대목에 한 번 등장하며, '민주' 개념은 사용되지 않았다.

319) 박정희의 저작과 연설문은 개념 사용과 논리 전개에서 다소 괴리가 있다. 저작의 경우 지식인 또는 전문 집필자의 손을 거쳤기 때문이다.

320)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를 통해 검색한 결과 『동아일보』에서 '자유민주주의' 개념이 사용된 기사는 1952년 4건, 1953년 0건, 1954년 3건, 1955년 11건, 1956년 23건, 1957년 12건, 1958년 23건, 1959년 21건, 1960년 30건, 1961년 50건, 1962년 42건, 1963년 173건이었다.

321) 박정희, "외교협회에서의 연설", 1961. 11. 17; "아세아협회에서의 연설", 1961. 11. 18; "아세아재단에서의 연설", 1961. 11. 20.

일소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며, "진정한 자유민주주의의 토대를 세우는 데 있는 것"이라고 하여 자유민주주의의 정상화에 쿠데타의 목적이 있다고 주장했다.[322]

이 때까지도 박정희를 비롯해 당시 군부와 관료들에게 '자유민주주의'는 익숙하지 않은 개념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 방문과 관련된 백서 성격의 자료를 보면 박정희 연설을 영역(英譯)한 내용이 있다. 연설에 사용된 자유민주주의의 영어 번역은 'liberal democracy'가 아니라 "free democracy"로 되어 있다(대한민국 정부, 1961). 이는 자유민주주의를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결합으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 '자유(free)'라는 수식어를 단 민주주의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즉, 박정희의 자유민주주의는 반공주의적 지향을 갖는 민주주의를 의미했다.

시기적으로 보나 개념에 대한 인식으로 보나 박정희 정부가 '자유민주주의'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얻고자 한 것은 군정에 대한 미국의 인정과 협조였다. 민주주의라는 말로는 충분히 미국의 의심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자유민주주의"가 군정의 "부동의 목표"라고 말했던 것이다.[323] "우리들의 정치적 목표는 명백한 것이며 우리들은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고 있으며 우리들은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기초를 마련하고 있"다는 표현은 무언가 변명하는 듯한 어조를 보인다.[324] 그는 자신의 지향이 미국의 한계선(American boundary) 내에 있음을 증명하고자 했다.[325] 박정희가 언급하는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 개념은 민주주의의 수식어로서 미국과의 일체성을 나타내기 위한 의도를 담고 있었다. 그에게 '자유'란 자유세계(free world)를 의미할 뿐이었다.

박정희가 연설문에서 자유민주주의는 군정기간에 집중적으로 언급되었다. 박정희 연설문에서 '자유민주주의' 개념은 최고회의의장 시기(1961. 7 ~ 1963. 12)에 54회 등장하지만, 대통령 취임 후 유신 전까지의 기간

322) 박정희, "외교협회에서의 연설", 1961. 11. 17.
323) 박정희, "아세아협회에서의 연설", 1961. 11. 18.
324) 박정희, "아세아재단에서의 연설", 1961. 11. 20.
325) 이 개념을 제기한 최장집(1996: 22)에 따르면 미국은 "분단국가로서의 최소한의 안정이라는 하한선과 민주주의의 최소한의 유지라는 상한선"을 한국에 설정했다. 이 한계선을 벗어나게 되면 미국의 압력이 행사되었다. 박정희는 권력 기반이 불안정한 상태였기에 자신이 '미국의 한계선' 내에서 행동할 것임을 필사적으로 입증해야 했다. 무엇보다도 군사정부가 민주주의에서 벗어난 체제로 나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

(1963. 12 ~ 1972. 10)에는 21회만 등장한다. 박정희는 국내외에 쿠데타를 정당화하고 취약한 정권 기반을 보완하기 위한 담론 전략으로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했다.

박정희는 군사정부 시기에 미국의 한계선을 준수할 것임을 내외에 확신시키기 위해 '자유민주주의' 개념을 주로 사용했지만, 1963년 선거 기간에 자유민주주의는 또 다른 의미연관을 갖게 되었다. 자유민주주의의 외래성을 지적하되 배척하지는 않고 자주적 수용의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 본인이 가진 자유민주주의는 본질적으로 그들의 것과 다름이 없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그 자세와 조건이 다릅니다. 즉 자유민주주의는 건전한 민족주의의 바탕 위에서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이번 선거도 사상과 사상을 달리하는 개인과 개인의 대결이 아니라 더욱 폭 넓게 사상과 사상을 달리하는 세대의 대결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민족적 이념을 망각한 가식의 자유민주주의 사상과 강력한 민족적 이념을 바탕으로 한 자유민주주의 사상과의 대결입니다.[326]

누가 더 자유민주주의에 가까운 인물인가를 기준으로 한다면 박정희는 윤보선에 비해 유리한 점이 없었다. 윤보선은 기독교 신자로서 영국에서 유학생활을 하고 야당 정치인으로서의 경력을 쌓으면서 대통령을 역임했다. 그에 비해 박정희의 경력에서는 자유민주주의와 연결되는 지점을 찾기 어렵다. 그렇다고 자유민주주의의 개념적 지위를 하락시키기도 어려웠다. 미국과의 문제도 있었지만, 당시 대통령 선거전에서 박정희는 남로당 전력을 의심받고 있었다. 이를 돌파하기 위해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폄훼하지는 않으면서, 차별화하여 전유하고자 민족주의를 끌어온 것이다. 군정 기간 중에는 미국의 인정을 받고, 자신을 반공주의자로서 각인시키기 위해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했다면, 선거 국면에서는 한국의 특수성을 강조함으로써 4월혁명 이후 고조된 민족주의적 열기를 흡수하고자 했다(장세진, 2013: 59-60).

박정희는 야당의 자유민주주의를 "가식의 자유민주주의"로 규정하고 자신의 자유민주주의는 "강력한 민족적 이념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정희는 "그 자세와 조건"이 어떻게 다른지, "건전한 민족주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하지 않았다. 박정희는 민족주의를 "외국에서 들어오는 주의·사상·정치제도를 우리 체질과 체격에 맞추어서 우리에게 알맞은

326) 박정희, "중앙방송을 통한 정견발표", 1963. 9. 23.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규정했을 뿐[327] "우리 체질과 체격"이 무엇인지 언급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자유민주주의의 토착화 또는 한국화라는 문제틀은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우리 체질과 체격에 맞추"는 것이 현실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박정희의 통치 기반이 확고해지는 1960년대 후반부터 분명해진다. 한국적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자유민주주의는 우리 체질과 체격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으로 치닫게 되는 것이다(황병주, 2008). 박정희(1971: 266)가 보기에 "모든 개인에게 자유를 주고 평등한 대우를 실시하여 존엄한 인격과 침해받을 수 없는 기본권을 부여한다는 생각은 우리의 전통적 사고방식에 잘 어울려 들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제3절 혁신계의 자유민주주의 비판

혁신계는 자유민주주의를 사회민주주의와 대비시켜 비판했다. 그들은 자유민주주의를 경제적 자유방임에 정치적 민주주의가 결합한 것으로 취급했다. 이러한 담론은 이전에 사회주의자들이 자유주의를 부르주아 이데올로기라고 공격한 것과 다르지 않았다. 그럼에도 사회민주주의자들은 정치적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무시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1960년대 혁신계의 담론은 민족주의의 영향을 강하게 받게 된다. 1960년대 혁신계 담론에서는 민족적 특수성이 강조되면서 경제적 자유방임뿐 아니라 정치적 자유주의도 부정하는 경향을 보인다. 하지만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전면적 부정은 스스로의 정치적 입지를 협소하게 만드는 요인이기도 했다.

1. 혁신계의 민주당 비판

『사상계』에서 '자유민주주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글쓰기를 처음으로 시도한 논자는 신도성이었다. 그는 기존의 사회주의자들처럼 자유민주

327) 박정희, "서울중고교정에서 행한 대통령 선거연설", 1963. 9. 28.

주의의 본질이 경제적 자유주의에 있다고 보았다. 그는 자본주의 발달에 따른 계급 분화와 정치적 대립이 “현대의 자유민주주의가 숙명적으로 봉착하게 되는 그 자체에 내재적이고 본질적인 위기의 근원”이라고 주장했다.[328]

신도성이 혁신계 운동에 관여하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입장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비판론으로 표출되었다. 민주당이 표방하는 자유민주주의가 경제적 자유방임과 같은 것이라고 규정하고, 사회민주주의를 지향하는 혁신계를 옹호하고자 한 것이다. 실제로 민주당은 창당을 준비하면서 자유민주주의로 자신들의 지향을 표현했다. “당면한 한국국민의 진보적이며 합리적이며 이상적이며 실현가능성이 있는 정치적 「이데오로기」는 다름 없는 자유민주주의를 근간으로 삼을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는 것이 그들의 견해였다.[329]

앞서 『새벽』의 논조에서 보았듯, 민주당 신파는 한국 사회가 처한 단계에서 사회민주주의는 부적합하며, 전통과 구습으로부터의 탈피를 위해 자유민주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민주당은 창당선언문에서 “경제면에 있어서는 우리 경제의 역사적 단계를 솔직히 파악하여 자유경쟁 원칙에 의한 생산의 증강을 도모”해야 한다고 하여 이 점을 분명히 명시하기도 했다.[330] 한 마디로 말해 민주당은 당대의 과제를 자유민주주의로의 전환으로 설정하고, 혁신계가 표방한 사회민주주의를 시기상조라고 공격했다.

이에 대해 혁신계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한 신도성은 1956년 2월에 민주당이 주장하는 “이른바 자유민주주의”가 자본의 독점을 야기할 것이라고 비판했다.[331] 그는 진보당 결성 작업에 관여하기 시작하면서 자유민주주의와 구별되는 사회민주주의의 성격을 부각시키려 했다. 민주당이 자유민주주의를 선점하고 자유경제를 당론으로 정한 것에 대해 ‘자유민주주의 대 사회민주주의’라는 구도를 설정하여 대응한 것이다.

이동화 또한 사회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구별하는 논법을 구사했다. 그는 자유민주주의를 19세기의 자본주의적 이데올로기로 정의하고, “자유민주주의가 수행할 수 없는 역사적 과업이 새로운 형태의 민주주의 즉 사회적 민주주의에 의하여 수행될 수 있으며 또 수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332] 그

328) 신도성, “民主政治와 寬容의 精神”, 『사상계』 9호(1954. 1), 107쪽.
329) 김용성, “관념적 진보주의자의 망단(妄斷)을 박(駁)함(1)”, 『경향신문』 1955. 4. 14.
330) 김삼웅, “전통야당의 원조 민주당 출범”, 『오마이뉴스』 2019. 3. 15.
331) 신도성, “民主黨”, 『사상계』 31호 (1956. 2), 310쪽.

러한 과업이란 “자유방임주의적 야경국가로부터 사회주의적 복지국가에로의 이행, 자유경제로부터 계획경제에로의 이행”을 의미하는 것이었다.[333]

사회민주주의를 주창한 혁신계는 정치적 필요성에 따라 자유민주주의를 경제적 자유주의와 정치적 민주주의의 결합으로 규정했다. 특히 이 시점에는 자유민주주의의 정체성을 민주당이 선점했기에 혁신계는 민주당을 비판하기 위해 자유민주주의를 적극적으로 부정하고자 했다. 이는 일제강점기에 사회주의자들이 자유주의의 정수를 자유방임경제로 규정하고 비판한 것과 다르지 않다.

혁신계는 자신들의 노선을 사회민주주의로 규정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격하하는 담론을 구사했다. 앞서 보았듯 혁신계는 민주당이 제시한 자유경제론을 불공정하고, 비효율적이며, 독점을 조장하여 자본의 정치적 지배를 산출한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그 대안은 국가 주도의 계획, 민족경제 건설, 주요 산업의 국유화를 통해 자본주의 경제의 모순을 넘어선다는 구상으로 표명되었다(박태균, 2007: 62-63). 혁신계가 ‘자유민주주의’ 개념을 사용한 것은 자유민주주의와 자유경제를 동일한 것으로 의미화하여 민주당과 구별되는 혁신세력의 정체성을 부각시키려는 담론 전략에 기인한 것이었다. 혁신계는 영국 노동당의 성공을 자신들의 모델로 삼아 사회민주주의 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세력화를 모색했고(나연준, 2019), 그 과정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적극적으로 비판했다.

2. 민족주의로 전유된 사회민주주의

진보당 운동이 좌절된 후 사회민주주의적 구상을 담은 혁신계의 담론은 한동안 『사상계』에 나타나지 않는다. 이승만과 자유당의 통치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사회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것은 위험할 뿐더러 현실적 의미를 갖기 어려웠다. 4월혁명으로 치달아 가는 정세에서 『사상계』는 자유주의 담론을 통해 정부를 비판하는 데 주력했다.

4월혁명은 혁신계 재건을 위한 기회였다. 자유당이 몰락하는 가운데 혁

332) 이두산[이동화], “政治學을 공부하는 學生에게”, 『사상계』 23호(1955. 6), 187쪽.
333) 위의 글, 187쪽.

신계 입장의 인사들은 민주당과 혁신정당이 양당 체제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금후 한국의 보수당과 혁신당 두 당이 역시 양립해가지고 훼어·푸레이를 하면서” 민주적 경쟁을 할 수 있으리라는 것이다.[334] 그러나 기대와 달리 선거는 민주당의 압도적인 승리와 혁신계의 참패로 끝났다. 233명을 선출하는 민의원 선거에서 사회대중당은 4명, 한국사회당은 1명의 당선자만을 냈다.

혁신계의 정치적 역량이 쇠잔한 상황에서 5·16쿠데타는 또 다른 기회로 간주되었다. 쿠데타 세력이 민족주의적 지향을 표방한 것을 두고 다수의 지식인과 정치인들은 의구심을 가졌지만, 혁신계는 반대로 기대를 걸었다. 쿠데타 이후 혁신계 인사들에 대한 검거 조치가 있었음에도 기대감은 꺾이지 않았다. 일부 혁신계 인사들은 1963년에 공화당을 혁신 정당으로 오인하고 창당에 참여하기도 했다. 군사정부에 대한 혁신계의 기대와 미련은 오랜 기간 지속되었다(임대식, 2003: 320-323).

『사상계』에서 사회민주주의적 구상과 혁신계 정당의 필요성이 다시 지면에 활발히 등장한 것도 5·16쿠데타 이후부터였다. 신도성이 혁신계와 결별했고 이동화가 구속된 상태에서 탁희준, 이방석, 김철수 등 대학교수들이 『사상계』 지면에서 사회민주주의 옹호론을 펼쳤다. 물론 이들의 담론에서 새로울 것은 별로 없었다. 자유민주주의를 비판하고 사회민주주의 정당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이 논의의 핵심이었다.

1963년에 이르면 『사상계』는 자유민주주의를 준거로 박정희와 군사정부를 비판하는 담론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군사정부에 대한 혁신계의 실망감도 이 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 혁신계는 흥미롭게도 군사정부가 너무 자유민주주의적이라는 이유로 비판했다. 이러한 관점은 조선일보 논설위원이었던 최석채의 “군사혁명이 남긴 족적: 혁명군인 역시 특별한 사람들은 아니었다”라는 글에서 볼 수 있다.[335] 이상록(2020: 199)은 이 글의 제목이 『사상계』 지식인들의 군정에 대한 실망감을 응축하고 있다고 보기도 했지만, 정작 이 글은 『사상계』 주요 필자들의 군정에 대한 비판과는 전혀 맥락을 달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혁신계의 실망감은 “혁명이라는 돌개바람을 일으켜 의욕적으로 모든 개혁을 과감하게 실시했으나 ‘자유민주주

334) “[좌담회] 카오스의 未來를 向하여”, 『사상계』 84호(1960. 7), 33쪽, 이동화 발언.
335) 최석채는 4월혁명 이후 치러진 총선에서 사회대중당 소속으로 출마한 이력을 갖고 있었다.

의'라는 대원칙 밑에 맞추어 보니 끝내 제자리로 돌아온 것 뿐"이라는 말에 집약되어 있다.[336] 군정의 문제는 자유민주주의에 구애(拘礙)된 데 있다는 것이다. 혁신계는 군사정부가 사회(민주)주의적 방향으로 나갈 것으로 기대했으나 기존의 집권 세력과 마찬가지로 자유민주주의적 가치에 정박했다는 점에서 "혁명군인 역시 특별한 사람들은 아니었다"라고 실망감을 토로했다. 여기서 박정희와 군사정부는 자유민주주의로부터 벗어나지 못했다는 이유로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사상계』 지면에는 사회민주주의에 가까우면서도 독특한 견해가 표명되기도 했다. 정치학자 권윤혁[337]의 민족민주주의론은 사회민주주의에 4월 혁명 이후 제기된 민족주의적 열망을 결합시킨 담론이었다. 그의 논의는 민족의 이름으로 경제적 자유주의뿐 아니라 정치적 자유주의까지 부정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사회민주주의론과 달랐다. 그는 민족민주주의를 "1951년 이래 반공적인 고차의 새로운 민주주의로서 나타난 서구의 이른바 민주사회주의(democratic socialism)가 한국의 역사적, 사회적 제 조건의 제약에서 특수화되고 또한 한국화된 이념형태"라고 설명했다.[338] 다시 말해 민족민주주의란 민주사회주의를 한국 상황에 맞게 변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셈이다. 권윤혁의 글은 혁신계의 새로운 방향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검토할 가치가 있다.

권윤혁은 "자유민주주의(liberal democracy)"가 "서구산업자본 부르조와계급(자본가 계급)의 권익을 위해서 형성된 이데올로기인 것이요, 또한 그들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피로써 수호되고 있는 이데올로기"라고 보았다.[339] 그는 또한 "자유민주주의의 근본의 원리"가 "개인주의" 또는 "개인지상주의"라고 지적했다.[340] 그리고 개인주의는 "국가의 정치활동이 경제적 사회적 생활을 주도하는 부르조와지에 종속"되게끔 만들기 위한 이데올로기라고 파악했다.[341] 여기까지 보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사회민주주의적 비판 논

336) 최석채, "軍事革命이 남긴 足跡: 革命軍人 역시 특별한 사람들은 아니었다", 『사상계』 120호(1963. 4), 76쪽.
337) 권윤혁은 1975년 최태민이 설립한 대한구국선교단 부설 조국통일문제연구원의 부원장을 맡았다. 『사상계』에서 사회민주주의 정당의 필요성을 피력하던 이방석 또한 여기에 참여하여 정치분과를 담당했다. "구국선교단 부설 통일문제연 창립", 『경향신문』, 1975. 10. 31.
338) 권윤혁, "民族民主主義: 理念과 主導勢力의 確立", 『사상계』 107호(1962. 5), 92쪽.
339) 위의 글, 86쪽.
340) 위의 글, 87쪽.

리와 다르지 않다. 그러나 권윤혁은 여기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하기 시작한다. 기존의 사회민주주의 옹호론이 사회적 정의를 위해 자유민주주의를 넘어서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달리 그는 자유민주주의가 후진국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배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후진성과 특수성에 근거해 권윤혁은 자유민주주의를 "용감하게 청산"할 것을 요청했다.[342] 그는 한국에서 여러 병폐를 야기한 "자유민주주의의 근본원리인 공리적 개인지상주의와 또한 그것과 결부된 사대주의를 이 땅에서 뿌리 뽑"자고 했다.[343] 한국의 미래를 굳이 서구적 가치에 정박시키려는 시도는 사대주의일 뿐이라는 주장이다. 그가 제시한 대안은 민족민주주의였다.

과감한 제안에 비해 민족민주주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은 대단히 추상적이다. 권윤혁은 민족민주주의를 "각종각색의 사회적 기능을 지니는 각계각층의 민족의 구성원은 민족사회의 창조적인 발전에 민주주의적으로 참여할 평등하고도 자유로운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는 것을 그 근본이념으로 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344] 또한 그는 국가의 역할을 "민족정기에 입각하여 자유권의 남용과 재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모든 구성원의 본래적인 그 개성과 또한 전 국토의 자연자원을 남김없이 발굴하기 위하여 계획화된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345] 권윤혁은 민족의 지지를 바탕으로 시민사회에 적극 개입하는 국가를 구상한 것이다. 사회적 자유주의의 목표와 유사하게 "구성원의 본래적인 개성"을 "남김없이 발굴한다"는 내용이 민족민주주의의 목표에 포함된 것도 흥미롭다. 권윤혁은 오해를 피하기 위해 민족민주주의가 "공산주의의 이데올로기를 엄격히 배격하는 것"이며,[346] "민족국가 지상주의를 그 슬로간으로 하는 파씨즘과 정면적으로 대립하는 주의주장"이라고 했다.[347]

권윤혁은 한국에서는 "밑으로부터 이룩되도록 모든 것을 자유방임하면" 민주주의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했다.[348] 후진국의 민주화는 "민족의 포부

341) 위의 글, 87쪽.
342) 위의 글, 89쪽.
343) 위의 글, 91쪽.
344) 위의 글, 91쪽.
345) 위의 글, 91쪽.
346) 위의 글, 91쪽.
347) 위의 글, 92쪽.

와 심원한 세계관에 밑받침된 새로운 민주주의 이념에 입각하여 정신혁명을 단행"함으로써만 가능하다고 보았다.[349] 그는 이를 가능하게 할 세력으로 지식인의 역할을 강조했다. 지식층을 중요하게 간주했다는 점에서 『사상계』의 다른 논자들과 다를 바 없어 보이지만, 그들이 지향해야 할 방향은 자유민주주의가 아니었다. 한국에는 부르주아 계급이 존재하지도 않을 뿐더러 대중들은 구습에 젖어 있기에 자유민주주의가 가능하지 않으며, 자유민주주의 자체가 한국이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사회 체제도 아니라는 것이 권윤혁의 판단이었다. 그는 만하임이 말한 계급편향성을 갖지 않는 지식인을 그 주도 세력으로 염두에 두었다. 합리적 지식인과 계급적 불평등을 소거한 대중이 민족의 이름으로 결합하는 사회를 한국의 이상적인 미래상으로 그린 것이다.

권윤혁이 주장한 민족민주주의는 사회민주주의와 많은 부분 유사하지만 민족의 이름으로 개인을 완전히 흡수하려 했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었다. 민족민주주의론은 공공선의 이름으로 자유주의의 완전한 폐기를 요청하는 담론이었다. 공공선과 개인의 자유를 조화시켜야 한다는 문제의식보다는 공공선, 즉 민족 이익에 압도적 우위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한국적 특수성이라는 차원에서 정당화되었다.[350] 혁신계의 탈자유주의적 전환은 1964년 창간된 『청맥』에서 더욱 정교하게 나타나게 된다.

3. 『청맥』의 반(反)자유주의적 민족주의

『청맥』은 1964년 8월 창간되어 1967년 6월호를 마지막으로 종간되었다. 잘 알려져 있듯 『청맥』은 통일혁명당의 선전선동 사업의 일환으로 발간된 것이었다. 그러나 통혁당 관련자들 외에도 여러 지식인과 언론인들이 글을 실었으며, 특히 신진 연구자들의 새로운 시각이 담긴 글도 적지 않았

348) 위의 글, 94쪽.
349) 위의 글, 95쪽.
350) 권윤혁의 민족민주주의론이 1년 후 박정희가 주창한 민족적 민주주의에 영향을 주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민족민주주의론의 많은 부분은 박정희에 의해 현실에서 구현되었다. 박정희는 권력 기반이 강화된 이후 서구식 자유민주주의가 한국에는 부적합하다는 전제에서 민족정기를 강조하며 자유주의적 가치들을 제거했다. 박정희는 자유주의를 대신하여 지도자와 대중의 합일을 강조했다.

다(황병주, 2009). 물론 편집방향은 통혁당에 관여한 인사들이 설정했지만, 대부분의 글은 통혁당의 존재를 알지 못했던 지식인들에 의해 집필되었다. 내용만 본다면 냉전 체제를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참신한 관점의 잡지로 평가할 수 있다.

『청맥』은 미소 냉전 체제에 구애된 반공주의에서 벗어나 민족의 관점에서 정치, 경제, 외교, 문화를 모색하는 데 주력했다. 여기에는 4월혁명 이후 고조되었다가 5·16쿠데타로 가라앉은 통일론이 영향을 주었다. 『청맥』은 4월혁명을 계기로 나타난 민족주의적 통일론을 재급진화하는 방향을 택했다(이동헌, 2012: 6). 다른 한편, 아시아 민족주의의 부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흔적도 볼 수 있다. 반둥에서 고창된 제3세계의 저항적 민족주의 담론이 『청맥』에서 재현되고 있었다(김복순, 2020: 238-239).

> 다원화하는 국제권력, 남북문제에서 자기 몫을 주장해 마지않는 신생국가군의 발언권이 드높은 세계환경 속에서, 우리가 재발견하고 재출발해야 할 좌표는, 우리가 그 어느 열강의 대행자도 아니라는 주체의식의 확립, 그리고 우리가 다름 아닌 「아시아」 사회의 「못 가진 나라」군의 일원이라는 자각을 투철히 불러일으키는 데에 있다.[351]

인용문은 『청맥』의 입지를 간명하게 요약하고 있다. 『청맥』은 동서문제 — 냉전진영론 — 에서 탈피하여 남북문제 — 제3세계 민족주의 — 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담론에서 '자유'와 '민주' 개념은 부차적 위상을 가질 뿐이었다.

『사상계』가 자유민주주의를 준거로 박정희 정부를 비판했음에 반해 『청맥』의 담론은 결을 달리했다. 『청맥』의 지식인들이 보기에 한국에서 운위되는 자유와 민주는 모두 서구의 것을 그대로 이식한 이질적 수입품일 뿐이었다. 따라서 자유민주주의는 서구에서처럼 작동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입장을 가장 적극적으로 표방한 것은 『청맥』의 주간을 맡았던 김질락이었다. 그는 한국에서 "자유는 이제금 새로운 제국주의의 진열장에 나열된 마네킹"에 불과할 뿐이며, 서구적 자유를 모방하는 것은 "우리의 주장을 포기하고 남의 것을 선망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352] 그는 "우리가

351) 임방현, "도전받는 한국의 좌표", 『청맥』 제2권 제2호(1965. 3), 81쪽.
352) 김질락, "조국은 금치산자", 『청맥』 제1권 제4호(1964. 12), 33쪽.

배운 민주주의는 아메리카니즘 바로 그것"이라고 하여 민주주의 역시 민족적 토대를 결여하고 있다고 보았다.[353]

1962년 5월 『사상계』에서 '민족민주주의'를 주창했던 권윤혁은 1965년 5월 『청맥』에서 "민주적인 민족주의"를 언급하기도 했다. 주요 내용은 『사상계』에서 개진했던 민족민주주의론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한국은 식민지적인 경제구조, 전근대적 요소의 잔존으로 인해 자유민주주의가 왜곡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자유주의적 요소를 제거하고 그 자리에 민족주의를 심자는 것이 그의 변치 않는 논지였다.[354]

이처럼 『청맥』은 민족주의를 최고의 가치로 삼아 다른 이념과 제도들을 평가하는 담론을 산출했다. 박정희 정부에 대한 평가도 물론 민족주의에 입각했다. 『청맥』에는 박정희가 쿠데타와 1963년 선거에서 민족주의를 표방한 것에 희망을 가졌다는 표현이 자주 발견된다. "민족의식의 각성을 촉구한 민족적 민주주의나 민족 주체성 확립의 구호는 확실히 민족사의 발전에 일보 전진"이었다는 것이다.[355] 『청맥』은 야당의 자유민주주의를 사대주의로 몰아붙이고 민족적 특수성을 강조한 박정희의 민족적 민주주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것이다. 자유민주주의가 사대주의적 풍토 속에서 왜곡되었다는 박정희의 주장과 『청맥』이 자유민주주의를 바라보는 관점은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청맥』은 한일협정 국면에서 박정희 정부가 민족적 민주주의의 약속을 파기했다고 평가했다. 『청맥』에서 한일협정은 무엇보다 경제적 종속의 문제였다. 국교가 정상화되면 "우리나라는 다시 한 번 일본의 방대한 상품과 소비시장이 되거나 그 개척의 발판이 될 것"으로 전망되었다.[356]

『청맥』의 '자유' 담론에서 특징적인 것은 빈곤으로부터의 탈피를 자유보다 우선시했다는 점이다.[357] "굶으며 자유만을 구가할 수 없다는 건 인간의 생리"이며,[358] "허기진 백성들에겐 주리는 자유보다 창자를 채우는 한 쪼각의 빵이 아쉬웁"다는 것[359]이 『청맥』, 특히 통혁당 관련자들의 입장

353) 김질락, "누구의 나라인가", 『청맥』 제2권 제9호(1965. 11), 14쪽.
354) 권윤혁, "민족지도이념의 모색", 『청맥』 제2권 제4호(1965. 5).
355) "[권두언] 민족교육은 사치가 아니다", 『청맥』 제3권 제3호(1966. 5), 10쪽.
356) "[권두언] 나무를 심자", 『청맥』 제2권 제3호(1965. 4), 13쪽.
357) 물론 논자마다 차이가 있다. 그러나 『청맥』이 "'빵/자유'라는 이분법을 거부"했다는 평가(김복순, 2020: 239)는 과도해보인다.
358) 김진환, "창간사", 『청맥』 창간호(1964. 8), 9쪽.

이었다. 자유민주주의보다 산업화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논리라고 할 수 있다. 이 점 또한 박정희가 군정시기 내세웠던 산업화 우선론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청맥』과 박정희의 차이는 산업화의 방식에 있었다. 『청맥』의 지식인들은 외원에 의한 경제성장이 종속으로 귀결될 것으로 예측했다. 그 대안은 내포적 공업화에 의한 자립경제 구축이었다. 이러한 논의를 주도한 것은 박희범이었다. 그는 "오늘날 후진국의 자립경제는 단순한 국제수지의 균형 그것보다도 자주적 공업화 즉 내포적 경제성장(내향적 공업화)를 꾀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라고 하여 내자 동원에 의한 생산력 배양을 관건으로 보았다.[360]

『청맥』의 산업화 담론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통일을 산업화의 첩경으로 제시했다는 점이다. 『청맥』은 권두언을 통해 "우리의 빈곤과 후진성을 초극하는 첩경은 경제개발5개년계획에 앞서 민족통일5개년계획이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그 이유로 "우리에게 주어진 자연지리학적 제 여건이 제구실을 다 할 때 우리도 우리 땅에서 남들과 같이 배불리 잘 살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361] 통일을 통해 한반도의 자원을 총체적으로 동원할 수 있을 때 외원에 종속되지 않는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희범 또한 "우리가 서둘러야 할 긴급한 과제는 한일외교보담도 통일에 대한 모색"이라고 하여 내포적 공업화의 선결과제가 통일에 있다고 보았다.[362]

『청맥』은 자유민주주의가 한국의 후진성 속에서 올바르게 정착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외원에 의한 산업화는 민족적 종속으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대안이 될 수 없었다. 그렇다고 내자 동원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 없다는 것은 군정 기간 화폐개혁에서 겪은 시행착오로 이미 검증된 바였다. 대안은 통일이었다. 통일은 민족주의적 당위이자, 정치적으로는 동서 냉전맥락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었고, 경제적으로는 종속 없는 발전을 위한 전제조건이었다.

『사상계』는 한일협정 국면에서 일본을 경계하는 담론에도 반공주의를 준거로 삼았다. 한일협정 국면을 경과하면서 『사상계』 또한 민족주의적 성향으로 견인되는 양상을 보였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김건우, 2009: 79),

359) "[권두언] 조국을 통곡한다", 『청맥』 제1권 제3호(1964. 10), 10쪽.
360) 박희범, "변혁을 위한 새 방안", 『청맥』 제2권 제9호(1965. 11), 29-30쪽.
361) "[권두언] 조국을 통곡한다", 『청맥』 제1권 제3호(1964. 10), 11쪽.
362) 박희범, "우리경제는 기로에 있다", 『청맥』 제2권 제4호(1965. 5), 29쪽.

『사상계』의 민족주의는 식민지 기억을 소환하는 수준을 넘어서지 않았다. 이 시기 『사상계』의 비판 담론에는 자유민주주의와 민족주의가 결합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청맥』의 담론에서는 민족주의가 궁극의 심급에 있었다.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민족주의에 의해 상대화되었다. 한국의 특수성 속에서 자유와 민주도 재고되어야 했다. 『사상계』가 지식인과 학생의 분투를 요망하는 데서 벗어나지 못한 것과 달리 '저항주체로서의 민중' 담론도 『청맥』을 통해 배양되고 있었다(황병주, 2009). 『청맥』은 민족과 민중을 주체로 자유민주주의를 넘어서는 급진적 담론을 예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청맥』은 분배의 문제를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사상계』에서 사회민주주의 정당의 필요성을 역설하던 이방석이 『청맥』에서도 그 논조를 이어가기는 했지만 그 외에 자유와 평등의 조화를 추구하는 글은 찾기 어렵다. "정치상으로는 개인자유에 있어 복리(福利)평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363]이 발견되기도 하지만 예외적이다. 이는 『청맥』이 계급 간의 불평등 문제보다는 국가 간의 불평등, 즉 남북문제를 부각하는 데 집중했기 때문이었다.

『사상계』가 자유주의에 입각한 비판 담론을 지속적으로 산출한 데 반해, 『청맥』은 자유민주주의를 미국에 의해 강제된 가치로 보고 배제하는 태도를 보였다. 『청맥』의 지식인들은 자유민주주의가 현실화될 수 있는 조건도 갖추어 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유를 기치로 한 담론은 기만적이거나 공허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청맥』은 4월혁명 이후 대두한 민족주의적 요구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응하면서 새로운 길을 가고 있었다.

『청맥』은 민족주의를 중심으로 자유민주주의와 반공주의를 모두 넘어서고자 했다. 그러나 저항 담론으로서 『청맥』의 민족주의는 『사상계』의 자유민주주의를 대체하기 어려웠다. 통일혁명당 사건에서 보이듯 반공주의를 부정한 민족주의 노선은 무엇보다 위험했으며, 대중과 지식인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 또한 『청맥』은 자유민주주의를 외래의 것으로 배척하면서 통일지상론 외에 뚜렷한 정치적 전망을 보여주지 못했다. 한국의 후진성과 자유민주주의 외래성을 대비한 『청맥』의 입장은 본질적으로 박정희와 다르지 않았다.

---

363) 김영두, "한국정치의 새 구도", 『청맥』 제2권 제9호(1965. 11), 39쪽.

제4절 자유를 위한 동원, 동원을 위한 자유

1960년대 『사상계』에서 자유민주주의론은 박정희에 의해 촉발되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정의는 분명치 않았다. 이런 모호함으로 인해 '자유민주주의' 개념에는 포괄적 지향이 부여될 수 있었다. 『사상계』 지식인들은 '자유민주주의' 개념을 통해 경제적 자유를 제외한 자유주의적 가치의 준수와 민주주의의 복원을 요구했다. 박정희가 약속한 자유민주주의는 정부 비판의 준거로도 유용했다.

박정희가 민정이양 약속을 어기고 이후에 자유주의적 가치들을 훼손함에 따라 정권교체는 자유민주주의 회복의 첩경으로 여겨졌다.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정권교체가 필요하고, 정권교체를 위해 자유주의적 권리들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논리로 나가면서, 자유민주주의와 정권교체는 동일시되었다.

1. 정치적 준거로서 자유민주주의

박정희에 의해 자유민주주의론이 촉발되기 이전에 『사상계』에서 자유민주주의는 냉전 자유주의의 맥락, 즉 반(反)전체주의적 민주주의라는 의미로 주로 사용되었다. 4월혁명의 의의가 "자유민주주의의 회복"으로 평가되기도 했으며,[364] 당시 활성화된 통일론과 관련하여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통일만이 바람직하다는 글이 실리기도 했다.[365] 자유민주주의는 정치적 자유와 민주적 절차를 보장하는 정치체제라는 의미와 반(反)전체주의적 이념과 제도, 즉 반독재와 반공을 표방하는 정치적 입지를 포괄적으로 나타내는 개념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개념 사용의 이론적 맥락은 다를지라도 한태연이 자유민주주의를 '자유주의+민주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한 것과 크게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1961년까지 '자유민주주의' 개념은 자주 사용되지 않았다. 앞서

364) 현승종, "새로운 學生運動의 方向", 『사상계』 93호(1961. 4), 127쪽.
365) 조순승, "國土統一의 可能性", 『사상계』 83호(1960. 6) 158쪽; 현승종, "새로운 學生運動의 方向", 『사상계』 93호(1961. 4), 128쪽.

언급했듯 박정희가 5·16쿠데타를 '자유민주주의' 개념을 이용해 정당화하면서 『사상계』에서도 자유민주주의가 자주 언급되기 시작했다. 또한 이 시기에 1950년대 초반에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던 연구자들이 『사상계』에 합류하여 새로운 사상적 흐름을 소개하기 시작하면서,[366] '자유민주주의' 개념에 대한 인식 수준 또한 한 차원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냉전 자유주의의 틀에서 벗어나 박정희가 유행시킨 '자유민주주의' 개념을 재고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사상계』에서 '자유민주주의' 개념은 다소 모호하게 사용되었다. 이 시기 『사상계』의 자유민주주의론을 가장 잘 집약한 표현은 "자유민주주의가 정확히 무엇인가에는 정론(定論)이 없다"는 말이다.[367] 그럼에도 자유민주주의를 부르주아 이데올로기로 규정한 혁신계 담론을 제외하면, 『사상계』에 나타난 자유민주주의론에는 느슨하게나마 일치하는 부분이 있었다.

자유민주주의에 긍정적 가치를 부여한 논자들은 대부분 경제적 자유를 제외한 개인 자유의 보장을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으로 보았다. 이는 휴머니즘적 자유론의 입장에서 이해된 자유민주주의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 자유민주주의는 "경제적 기본권 이외의 기본적 인권에 대해서는 원칙으로 공공의 복리에 의한 제한은 허용될 수 없"는 체제를 의미했다.[368] 이들은 사회적 자유주의의 입장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도 "경제적 성질을 가진 기본권은 공공의 복리의 이름에 의해 적어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는 충분히 제한"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했다.[369] 『사상계』 주간이었던 양호민 또한 자유민주주의를 "복수정당제도, 언론, 출판, 결사의 자유, 자유선거제도를 가지고 있는 정치제도"라고 규정하고,[370] 자유민주주의가 경제적으로는 사회주의적 요소와도 결합될 수 있다고 보았다.[371]

---

366) 이문휘 선생과의 이메일 인터뷰 답신(2021. 1. 4).

367) 박준규, "自由民主主義: 自由民主主義의 確立을 위한 힘과 慈愛의 兼備", 『사상계』 107호(1962. 5), 52쪽.

368) 김남신, "새 憲法과 基本權의 明文化", 『사상계』 110호(1962. 8), 76쪽.

369) 위의 글, 76쪽.

370) "[좌담회] 政黨政治·政爭의 도가니: 韓國政黨政治의 오늘과 내일", 『사상계』 118호(1963. 3), 96쪽, 양호민 발언.

371) 양호민은 사회민주주의 정당의 제도권 진입에 관심이 있었고, 1960년 7월 총선에 사회대중당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장준하선생20주기추모문집간행위원회 편, 1995: 25). 그러나 그는 자유민주주의를 사회민주주의의 대립 개념으로 보는 혁신계의 관점을 따르지 않았다.

민주당 출신 정치인이었던 박준규는 이런 입장을 체계적으로 표명했다. 그는 우선 “자유민주주의는 자유무역 또는 자유기업을 절대원칙으로 하는 고전적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동의어”라고 주장하는 좌파의 규정을 “고질적 통념”이라고 반박했다.[372] 그는 “현대 자유민주주의는 결코 자유방임주의 및 고전적 자본주의와 동일어가 아”니기에, “자유민주주의 체제 아래서도 정부를 적극적인 수단으로 생각하고 계획성 있는 강력한 정치를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373] 박준규는 4월혁명이 시대적 과제로 “실직, 기아, 빈곤의 위기” 극복을 제기했다며, 한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지향해야 할 방향이 “민주복지국가”라고 규정했다.[374]

휴머니즘적 자유론의 입장에서 자유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헌법적으로 보장하지만, 경제적 자유는 공공복리, 즉 실직, 기아, 빈곤의 극복을 위해서는 제한할 수 있는 것으로 정의되었다. 자유민주주의는 복지국가를 포괄하는 서구의 국가 이념으로 이해되었다. 정작 박정희는 자유민주주의를 반공주의적 의미로 사용했지만, 혁신계를 제외한 『사상계』 지식인들은 이를 자유주의적 권리와 연관지어 규정하고자 했고, 서구의 복지국가를 그 지향점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자유민주주의 개념에 대한 그 이상의 합의는 없었다. 자유민주주의를 반공주의의 틀에서 벗어나 이해하기 시작했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다소 모호했다. 자유민주주의는 개념 규정에서 다른 개념들에 비해 “광범하고 자유로운 것”이었으며, “정치적 이데올로기로서는 가장 비체계적인” 것이었다.[375] 『사상계』 지식인 다수는 “자유민주주의가 깊은 뿌리를 박도록 되어가야 한다는 점에서는 이론(異論)이 없”었지만, 자유민주주의는 아직 “우리 사회의 현실에 적응될 수 있는 구체적인 우리의 이데올로기로 발전”되지 못한 상태였다.[376]

이처럼 『사상계』 지식인들은 ‘자유민주주의’ 개념을 통해 자신들이 원하는 국가의 이상을 제시하려 했다. 그들은 자유민주주의의 보편타당성을

372) 박준규, “自由民主主義: 自由民主主義의 確立을 위한 힘과 慈愛의 兼備”, 『사상계』 107호(1962. 5), 56-57쪽.
373) 위의 글, 57쪽.
374) 위의 글, 63쪽.
375) 오병헌, “現代 이데올로기의 性格: 理念과 非合理的인 要素가 混在하는 現代政治에서”, 『사상계』 107호(1962. 5), 34, 37쪽.
376) 위의 글, 38-39쪽.

긍정하면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나름의 정의(定義)를 내리고, 정부가 그 정의에 합당한 방향으로 나갈 것을 주문하는 형식으로 '자유민주주의' 개념을 활용했다. 박정희가 자유민주주의를 약속했다는 점 또한 빠지지 않고 거론되었다. 이러한 담론이 반복되면서 자유민주주의 자체는 위반할 수 없는 약속이 되었다. 자유민주주의는 그 구체적 내용이 채워지지 않은 채 당위적 지향으로 제시되었다.

2. 자유민주주의와 정권교체론

쿠데타 세력의 혁명공약이 4월혁명 이후 『사상계』의 국가 구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것은 앞에서 언급한 대로다. 이는 『사상계』 지식인 다수가 5·16쿠데타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된 요인 중 하나였다. 하지만 이후 두 집단이 대립하게 되는 요인 또한 혁명공약에 들어있었다. 혁명공약의 마지막 구절인 "이와 같은 우리의 과업이 성취되면 참신하고도 양심적인 정치인들에게 언제든지 정권을 이양하고 우리들 본연의 임무에 복귀할 준비를 갖춘다"는 약속이 과연 지켜질 지가 문제였다.

장준하는 쿠데타 직후 발행한 『사상계』 1961년 6월호 권두언에서 쿠데타를 "부패와 무능의 무질서와 공산주의의 책동을 타파하고 국가의 진로를 바로잡으려는 민족주의적 군사혁명"이라고 상찬했지만 글 마지막에는 "최단시일내에 참신하고 양심적인 정치인에게 정권을 이양한 후 쾌히 그 본연의 임무로 돌아간다는 엄숙한 혁명공약을 깨끗이, 군인답게 실천"할 것을 요구했다.[377] 실제로 헌팅턴 데이먼(Huntington Damon) 주한 미공보원장은 6월 12일에 작성한 비망록에서 장준하가 5월 26일에 만났을 때보다 군사독재가 지속될 것을 우려하며 "심각하고 긴장된" 모습을 보였다고 기록을 남겼다(국사편찬위원회 편, 2002: 260). 다른 한편 최고회의의 "분과위원장들은 좋은 사람들"이라며, 특히 당시 최고회의기획위원장 고문으로 위촉된 "유진오에 대한 신뢰"를 보였다고도 기록했다(국사편찬위원회 편, 2016: 187). 장준하는 쿠데타 세력이 『사상계』에 친화적인 지식인을 등용하는 데 기대를 보인 반면, 군부의 정치적 야심이 만만치 않을 것을 직감하고 경

377) 장준하, "[권두언] 5·16革命과 民族의 進路", 『사상계』 95호(1961. 6), 34-35쪽.

계하기 시작했다. 장준하는 1961년 6월부터 불안과 기대가 병존하는 심리로 군사정부를 주시하고 있었다.

박정희는 민정이양 시점을 1963년 여름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박정희는 물밑으로 선거를 준비하고 있었다. 1962년 6월경부터 군사정부 측 여러 인사들로부터 박정희 의장의 대선 출마론이 거론되었다(도진순·노영기, 2004: 87). 『사상계』 지식인들의 분화도 이 때 본격화되었다. 쿠데타 세력이 군으로 복귀하지 않고 선거를 통해 정권을 연장하려는 시도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지식인들은 『사상계』 지면을 통해 군사정부에 대한 비판을 적극적으로 펼치게 되었다.

1962년 10월 편집위원회 개편으로 전열을 정비한 『사상계』 지식인들은 자유민주주의를 확립하는 길이 민정이양에만 있다고 주장했다. 박정희가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한다고 한 만큼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선거를 시행하고, 평화적으로 권력을 이양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자유민주주의"가 "명실상부한 것으로 정치적 공동생활의 산 원리가 되기 위해서는 앞으로의 민정이양 과정이 민주주의의 원리·원칙에 엄격히 부합"해야 한다는 것이다.[378] 이처럼 박정희가 표방한 자유민주주의를 공정 선거, 평화적 정권교체와 연결지는 논의는 1963년 박정희의 권력 연장책을 비판하는 담론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박정희의 대선 출마가 유력해지면서 『사상계』의 핵심 과제는 선거에 의한 정권교체로 모아졌다.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는 "국민의 자유로운 선거에 의한 정부조직과 정권의 평화적 교체"였다.[379] 이는 '자유민주주의'의 복원이라는 명분으로 집약되었다. "신생 한국이 표방하는 정치체제는 분명히 자유민주주의"이며, 여기서 "벗어난 여하한 정치체제건 이를 배격할 의무감"이 있다는 것이다.[380]

『사상계』는 민정 이양을 위한 선거에서 박정희의 당선을 저지하기 위해 많은 지면을 할애했다. 자유민주주의는 박정희를 공격하는 담론의 요체였다. 정치적 자유도 보장하지 않으면서 "소위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한다는 것은 타기할만한 허위요 기만이요 협잡"이며 "그러한 족속들이 정권을 잡게

378) 신상초, "民間政府냐 民主政府냐: 軍政에서 民政으로의 質的變化를 注視한다", 『사상계』 115호(1962. 12), 45쪽.
379) 윤형섭, "韓國政治는 非論理인가?", 『사상계』 121호(1963. 5), 49쪽.
380) "編輯後記", 『사상계』 123호(1963. 7), 424쪽.

되는 날 한국 민주정치의 전망은 구태의연히 암담할 것"이라는 말은 이를 잘 보여준다.[381] 함석헌 또한 "여당은 독재주의를 취하는 대신 이들은 자유민주주의를 내세웠다. 이것이, 이 자유민주주의라는 제도야말로 지금 단계에 있어서 역사의 새 싹"이라고 하여 자유민주주의를 근거로 야당 지지의 이유를 밝히기도 했다.[382] 자유민주주의를 국정의 방향으로 설정한 것은 박정희였지만, 자유민주주의는 정권교체로만 달성될 수 있는 것으로 상정되었다. 그러나 1963년 선거는 박정희와 공화당의 승리로 귀결되었다.

1967년 5월 대선이 다가오면서 『사상계』는 다시 한 번 선거를 통한 평화적 정권교체에 총력을 기울였다. 장준하는 1966년 8월 권두언에서 박정희 정부에 의한 자유민주주의의 훼손을 지적하고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평가절하하며 "평화적 정권교체를 통해서 잘못된 이정표를 시정하고 개혁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383] 정권교체에 대한 절실함은 "우리는 정미년(丁未年)을 정권교체의 해로 확립하기로 다짐하고 총궐기할 것을 제언한다"는 1967년 1월호 권두언의 한 구절에 선명하게 표현되었다.[384]

『사상계』는 평화적 정권교체가 "오직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확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385] 하지만 정권교체가 절대적 가치로 제기되면서 자유주의적 제도 또한 정권교체를 위한 수단으로 간주되기도 했다.

> 결국 정치적으로 볼 적에, 언론, 출판, 결사, 집회의 자유가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되지만, 이것도 요약해 볼 것 같으면 결국은 정부를 선출하기 위해서, 자기의 대표를 선출하는, 자치행위를 하기 위해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386]

인용문에 따르면 정치적 자유는 결국 공정한 선거를 보장해주기 때문에 중요하다. 자유민주주의와 정권교체는 동일시되는 것을 넘어 위상이 뒤바뀐 것이다. 정치적 자유는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할 것이기에 '진리'에 따르는 선택을 유도할 것이고, 이는 정권교체로 귀결될 것이라는 생각이었다. 자유

---

381) 한기식, "韓國의 一點半政黨論: 第3共和에 있어서의 政黨政治의 展望", 『사상계』 121호(1963. 5), 123쪽.
382) 함석헌, "새 혁명: 싸움의 目的은 참 이김에 있다", 『사상계』 126호(1963. 10), 59쪽.
383) 장준하, "[권두언] 또 다시 8·15를 맞으면서", 『사상계』 160호(1966. 8), 15쪽.
384) "[권두언] 政權交替의 民主傳統을 세우자", 『사상계』 165호(1967. 1), 14쪽.
385) "[권두언] 抗爭의 달 3月에 부친다", 『사상계』 167호(1967. 3), 9쪽.
386) "[대담] 選擧法是非", 『사상계』 161호(1966. 9), 186쪽, 양호민 발언.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 정권 교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권 교체를 위해 자유민주주의가 필요하다는 논리다.

『사상계』 지식인들은 정권교체에 따라 '양심적인 위정자'가 헌법에 합치되게 법률을 정상화하고 법적용의 자의성을 제거한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낙관했다. 『사상계』는 1967년 2월호에 "저항의 자세를 적극화하자"는 제목의 권두언을 실어 "준엄한 저항과 심판을 내리려는 결단"에 의해서만 "민족사의 전진"이 가능하다고 설파했다.[387] 이 시점에서 "저항과 심판"이 의미하는 것은 정권교체를 위한 투표였다. 정권교체가 최상의 가치로 설정되면서 다른 모든 가치들은 그에 맞추어 재평가되었다.

자유민주주의와 정권교체를 동일시하면서 박정희 정부를 비판하는 담론은 3선개헌을 전후한 시점에 다시 집중되었다. 연구 자료에서 1964년부터 1970년 5월 폐간까지 '자유민주주의' 개념은 139회 사용되었는데, 그 중 1968년부터 1970년 5월까지 기간에 90회가 등장한다.[388] 박정희가 1967년 선거 승리로 통치 기반을 확고히 하고, 3선개헌을 도모하는 시점에 이르러 자유민주주의가 다시 『사상계』 지면으로 호출된 것이다. "5·16 군사정권 이후 자유민주 체제는 단절되었다"라는 평가는 이 시기 박정희 정부에 대한 비판 담론의 핵심을 간명하게 보여준다.[389] 3선개헌은 "자유민주에의 반역"이었다(김삼웅 편, 2001: 102).[390]

> 민족중흥의 유토피아는 조국근대화로 분장되고 자유의 범람을 거부한 '위대한 실증(實証)'의 남발은 "민주정신의 월식"으로 공약(空約)되었다. 이 집권자의 허위에 도전하는 유일한 정치신조는 무엇인가? 목적적인 자유민주주의적인 질서이지만 그것은 단절된 숫자로 표시된 미래상은 아니다. 국민대중의 새로운 참여구조를 창조해가던가 그렇지 않으면 현상유지에 얽매인 길을 택하느냐가 문제다. 기존권력질서의 유지를 위한 것 아니라면 새로운 권력질서의 창조는 평화로운 정권교체의 윤리와 논리를 앞세워야 할 것이다.[391]

---

387) "[권두언] 抵抗의 姿勢를 積極化하자", 『사상계』 166호(1967. 2), 9쪽.
388) 특히 1969년에 『사상계』는 빈사상태에 빠져 있어 게재된 글의 수 자체가 전성기의 1/3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자유민주주의'는 25회 나타났다.
389) 김재준, "學園의 解放을!: 히틀러는 言論과 學園과 宗敎를 抹殺했다", 『사상계』 205호(1970. 5), 141쪽.
390) 3선개헌반대 범국민투쟁위원회, "역사 앞에 선언한다", 1969. 7. 17.
391) 황활원, "編輯後記", 『사상계』 193호(1969. 5).

인용문에서 보이듯 『사상계』가 3선개헌 국면에서 제시한 자유민주주의는 "평화로운 정권교체"와 연동된 과제였다. 김영삼 신민당 원내총무는 『사상계』에 투고한 글에서 "자유민주주의의 원 바탕은 장기집권을 안 하고 독재를 안 하고 부패를 안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392] 3선개헌은 "일인의 장기집권에 의한 반(半)독재"로 규정되었고, 그 상태에서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정권교체는 도저히 이룩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되었다.[393] 박정희 정부는 "마음 한 구석에 혹시 선의의 독재라는 사명감이 있었을지는 몰라도 자유민주주의의 관념은 조금도 없는" 집단으로 규정되었다.[394] 이처럼 3선개헌 국면에서 '자유민주주의'는 1963년, 1967년과 마찬가지로 정권교체의 문제와 동일시되었다. 3선개헌은 정권교체를 불가능하게 할 '장기집권', '독재'로 가는 길로 인식되었다. 3선개헌을 앞두고『사상계』에서 '자유민주주의' 개념이 빈번히 등장한 것은 이러한 위기의식에서 비롯되었다.

'자유'와 '민주'를 갈구하는 담론들이 지향하는 목표는 정권교체였다. 헌법이 아무리 자유주의적 요소들의 불가침을 선언하고 있다 하더라도 "누가 어떻게 권력을 장악해서 누구를 위해 어떤 식으로 행사하느냐 하는 것은 심히 중대한 문제"라는 점은 경험을 통해 확인된 바였다.[395] 1969년 12월과 1970년 1월에 야당의 대선후보로 꼽히던 김영삼과 김대중의 글이 『사상계』 지면에 오른 것도 1971년 선거를 염두에 두었기 때문일 것이다.

중요한 점은 『사상계』가 자유민주주의를 운위하면서도 국가 권력의 축소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권력 구조의 변화보다는 통치자의 교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박찬표(2008: 174-175)는 1948년 이후 한국 정치를 규정하는 세 가지 층위를 자본주의, 분단체제, 권위주의라고 보았다. 권위주의 정치 세력은 이 세 가지를 모두 유지하고자 했고, 급진 세력은 세 가지 모두에 부정적이었다. 반면 자유주의 세력은 자본주의를 부정하지 않았으나 권위주의에는 저항했다. 또한 1970년대까지 자유주의 세력은 반공주의적 성향을 권위주의 통치 집단과 공유했다. 따라서 권위주의

392) 김영삼, "院內 極限鬪爭의 戰略: 改憲案은 國會를 通過하지 못했다", 『사상계』 198호(1969. 10), 36쪽.
393) 신태악, "3選改憲의 違憲性에 관한 小考", 『사상계』 197호(1969. 9), 38쪽.
394) 부완혁, "[권두언] 哲學없는 擧事의 行方: 用語의 革命과 理想社會의 失踪", 『사상계』 205호(1970. 5), 16쪽.
395) 한상범, "政治人의 條件: 政治權力의 운전자로서 政治人의 理想型을 추구한다", 『사상계』 202호(1970. 2) 92쪽.

정부와 자유주의적 저항세력이 격돌하는 지점은 국가 권력의 성격에 있었다. 그러나 비판적 지식인들은 국가 권력의 성격이 통치자에 의해 좌우된다고 인식했다. 그들에게는 정권교체만이 국가 권력을 민주화하는 길이었다.

자유민주주의의 적은 강한 국가가 아니라 독재자로 규정되었다. 정권이 바뀌면 민주주의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으로 낙관되었다. 어떤 국가인가보다는 어떤 통치자인가가 더 중요했다. 현대 국가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방대한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었다.

3. 자유주의적 동원 담론: 4월혁명의 재현

앞서 보았듯 1963년 이후 『사상계』는 대중에 대한 계몽보다는 박정희의 집권을 막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박정희 정부는 반민주이자 반민족으로 규정되었다. 박정희 정부를 절대 악(惡)으로 규정하면서 『사상계』는 '정의'의 편임을 자부했다(마상윤, 2016: 194). 자유민주주의를 이루는 방법은 평화로운 정권교체에 국한되지 않았다. 4월혁명을 재현하는 것도 자유민주주의를 복원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 이러한 담론은 특히 한일협정 국면에서 두드러졌다.

1964년 3월 장준하는 야당에서 결성한 대일굴욕외교반대범국민투쟁위원회의 지도위로 선정되어 적극적인 반박정희 투쟁에 나서게 되었다(장세진, 2013: 55-56). 중앙정보부가 장준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게 된 것도 이 때부터였다. 장준하는 한일회담 반대 연설에서 박정희 정부에 의한 자유민주주의의 훼손을 고발하고 박정희의 친일 경력 및 남로당 경력과 한일회담의 맥락을 연결짓고자 했다(고상만, 2015: 132-133). 회담 반대의 명분이 민족적 '굴욕'에 있었던 만큼 이 시기 『사상계』의 비판 담론에는 민족주의적 명분이 강하게 나타났다(장세진, 2013: 64-65). 하지만 민족주의를 최고의 가치로 삼아 자유민주주의까지 상대화했던 『청맥』의 지식인들과 달리 『사상계』는 자유민주주의를 보편타당한 정치 체제로 보는 관점을 버리지 않았다. 한일협정 국면의 주된 준거는 민족주의였지만 자유주의 또한 직접 행동을 요구하는 담론의 핵심을 이루었다.

『사상계』가 그 자체와 그 집단의 모든 명운을 일체 바쳐가며 기르고 키워오던 자유와 민권은 지금내로 또는 외로 부닥치는 험난한 파도에 휘몰리어 난파직전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새로운 결의와 각오로써 자유민권의 전열을 재정비 강화하고 이 땅의 자유민권을 위한 새로운 전투를 시작할 때가 된 것으로 압니다.[396]

『사상계』는 이처럼 4월혁명의 기치였던 자유와 민권을 호출했다. 또한 4월혁명을 지식인에 의한 혁명으로 규정했듯 지식인과 학생에 의해 항쟁의 불길이 커지기를 바랐다. "학생들과 지식인에게 있어서 정치적 의식을 고도로 유지"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존엄이 무참하게 짓밟히는 현실에 대해서" 저항해야 한다는 것이다.[397] "자유나 민주주의는 증여되거나 강요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스스로가 자각적으로 획득하는 능동적인 자율성의 산물"이며, "헌정사는 바로 국민이 스스로가 장만한 곡식을 거둬들여 문서에 성문화하는 과정"으로 규정되었다. 자유와 민주주의는 법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힘에 의해 쟁취되어야 하는 것이었다.[398]

이러한 담론들은 당시 『사상계』 지식인들이 1964년 한일회담을 둘러싼 국내정세를 4월혁명 직전의 상황과 유사하게 인식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실제로 『사상계』는 1964년 4월 권두언을 통해 5·16쿠데타를 4월혁명의 부정으로 규정하고, "민권투쟁의 불멸의 기념일인 4·19를 맞이하여, 깨끗한 민족적 양심에서 우리는 한·일관계를 투시하고 마음에 각오하는 바 있기를 모든 국민에게 촉구하여 마지 않는다"고 하여 4월혁명의 기억을 직접 소환하기도 했다.[399] 자유는 다시금 저항과 동일시되었다.

박정희 또한 한일회담 반대투쟁이 정권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으로 비화되는 것을 경계했다.

재론할 것 없이 정권의 평화적 교체는 자유민주국가의 지상과업이라고 믿습니다. 학생의 데모나 혹은 무력으로 인하여 또다시 정변이 일어난다면 국가의 장래는 진실로 염려되는 바입니다.[400]

---

396) 장준하, "[권두언] 또 다시 『思想界』의 發刊精神을 더듬으며", 『사상계』 135호(1964. 6), 32쪽.
397) 김진만, "韓國-나의 韓國: 知識人과 政治人", 『사상계』 135호(1964. 6), 65쪽.
398) "[권두언] 自由民權의 길: 制憲節을 맞이하면서", 『사상계』 136호(1964. 7), 27쪽.
399) "[권두언] 아아! 4·19의 榮光은 어디로?", 『사상계』 132호(1964. 4), 27쪽.
400) 박정희, "시국수습에 관한 대통령교서", 1964. 6. 26.

많은 격변이 있었지만 4월혁명에서 6·3까지 시간적 거리는 4년에 불과했다. 학생시위에 계엄령으로 과민반응한 것은 인용문에서 보이듯 4월혁명의 재현 가능성을 감지했기 때문이었다. 또한 대학과 언론에 집중적인 조치를 취하게 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 『사상계』는 4월혁명의 성공을 지식인, 언론, 학생들의 합작품으로 규정했다. 따라서 4월혁명의 재현을 막기 위해서는 그들을 침묵시키는 것이 관건이었다.[401] 계엄과 함께 언론검열과 휴교가 개시되었을 뿐더러 해엄 직후 박정희 정부는 학원보호법과 언론윤리위원회법 제정을 시도하여 상시적으로 대학과 언론을 규제,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자 했다.

박정희 정부가 대학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규제하려는 시도에 맞서 『사상계』는 두 자유를 기본 권리로서 옹호하는 글을 다수 게재했다. 1964년 '자유' 개념과 공출현한 개념들의 빈도 순위를 보면 '언론'이 세 번째, '대학'이 일곱 번째, '학원'이 여덟 번째였는데, 이는 당시 상황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 하겠다. 언론과 대학은 4월혁명의 재현을 위한, 또는 재현을 막기 위한 정치적 거점이었다. 박정희 정부의 억압에 대항해 언론의 자유, 대학의 자유가 시급한 과제로 제기되었다.

언론의 자유와 대학의 자유는 헌법적 권리로서 주장되었다. 자유는 법에 의해 보장되지 않았다. 계엄과 그 이후의 조치들은 이승만 정부 말기에서처럼 언론과 학원의 자유가 법률에 의해 언제든 제약될 수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했다. 따라서 자유의 문제는 헌법과 법률의 괴리, 법률과 집행의 괴리로 진단되었다.

>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이란 과연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냐라고 묻는다면, 그것에 대답하기에는 헌법의 규정은 너무나 추상적이어서, 그것은 해석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신축성을 가지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위정자의 양심 여하에 따라서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상으로 또 다른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생각할 수도 없으리만큼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국민의 기본적 자유를 억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즉 일반적으로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입법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402]

401) 군정 시기부터 대학에는 YTP(Youth Thought Party: 靑思會)라는 극우 비밀 프락치 조직이 활동했다(임대식, 2003: 312-313).

위 인용문의 필자는 “계엄의 해제 직후에 집권자가 언론윤리위원회법이라는 것을 제정하여 이른바 언론파동을 일으켰으며, 또 소위 학원보호법안이라는 것을 만들어 학원의 자유를 침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염려가 결코 피해망상적인 신경과민이 아니었”다고 덧붙였다.[403] 헌법적 기본권의 준수는 결국 “위정자의 양심”에 달린 것일 뿐이기에 그 양심을 제어할 수단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기본권의 침해는 제도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 이러한 논리에서는 결국 ‘양심적인 위정자’로의 교체만이 자유를 수호하는 길이 될 수밖에 없었다. 동원이 제도나 체제가 아닌 정권교체를 지향한 것은 이러한 사고방식에서 자연스러웠다.

4월혁명의 재현을 요청하는 담론은 1967년 6·8 부정선거 규탄 국면에서 되풀이되었다. 1967년 6월 8일 치러진 총선에서 민주공화당은 전체 의석의 2/3을 넘어서는 당선자를 냈다. 개헌선을 넘기기 위해 숱한 선거부정이 있었고 이는 3·15 부정선거를 연상시켰다.[404] 『사상계』 1967년 7월호에 수록된 서울대 문리대 학생회 선언문에서도 “3·15 부정선거의 끔찍한 말로가 먼 옛날의 이야기는 아니며 자유와 정의를 절규하며 쓰러져간 4·19의 기수들이 쟁취해 놓은 민주주의의 승리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고 하여 4월혁명의 재현을 암시하고 있다.[405]

장준하는 박정희 정부를 “새로운 체제의 독재”로 규정하고 박정희 정부의 통치 양식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념”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406] “박정권이 지금까지의 집권태도로서, 계속 민권의 존중을 저바리고 새로운 체제의 독재를 연장시”키려 하는 시도가 자유민주주의의 훼손을 가져왔다는 것이다.[407] 『사상계』는 “만일 대의정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새로운 역사를 쟁취해야 할 것”이라고 하여 그 방법이 반드시 평화적인 데 국한되지 않을 것임을 암시했다.[408]

---

402) 현승종, “試鍊의 憲政 1年을 보내며: 憲法과 政治 그리고 社會와 責任”, 『사상계』 141호(1964. 12), 42쪽.
403) 위의 글, 42쪽.
404) “[권두언] 一千萬 有權者를 우롱하는 자 과연 누구냐?”, 『사상계』 170호(1967. 6), 8-9쪽.
405) “서울대학교 문리대 학생회 선언문”, 『사상계』 171호(1967. 7), 91쪽.
406) 장준하, “[권두언] 머리를 숙이라 民權 앞에”, 『사상계』 174호(1967. 10), 9쪽.
407) 위의 글, 9쪽.

1963년 이후 『사상계』는 박정희 정부를 절대악으로 규정하며 자유민주주의를 준거로 동원의 정치에 몰두했다. 그것은 선거 승리를 위한 동원일 수도 있었고, 4월혁명의 재현을 위한 동원일 수도 있었다.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는 절박감은 점점 거칠게 표현되었다.

>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인내에 인내를 거듭한 나머지 만부득이한 최후수단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후진국에서 저항, 혁명의 자유, 권리가 너무나 빈번히 악용되는 것을 경고하여야 하는 동시에 그 원천적 말살흉계도 이를 극력 반대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민주주의 최후선 사수나 남용 방지의 책임이 다 그 나라 지성인의 소임이 없었다는['없'은 오기로 보임: 인용자] 것을 무엇보다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409]

인용문은 부완혁의 글이다. 그는 직접적으로 박정희 정부를 겨냥하지는 않고 서구의 자유주의적 저항권을 설명하면서 "혁명의 자유"를 언급했다. 물론 그 현실적 맥락은 명확했다. 서구 자유주의론 속에 자신의 주장을 담음으로써 필화를 피하되 메시지는 분명하게 전달하고자 한 것이다. "반란 그 자체는 불법한 것이지만 그것이 자유에 대한 비료적 역할을 한다"는 주장이야말로 부완혁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일 것이다.[410] 선거를 통한 정권교체의 전망이 어두워지면서 직접 행동을 언급한 것이다.

1963년부터 『사상계』는 자유민주주의 담론을 통해 끊임없이 정권교체를 위한 동원을 요구했지만 개발주의의 흡입력을 이겨낼 수 없었다. 『사상계』 지식인들의 기본 태도는 "민중의 편에서 그들을 사상적으로 일깨워주고 지켜야 한다"는 것이었다(이문휘, 1995: 162). 『사상계』는 대중들의 구체적 삶에 착목하기보다는 정권교체의 당위성을 이해시키는 데 주력했다. 추상적인 계몽주의로 인해 『사상계』 지식인들의 자유주의는 지식인과 학생을 넘어서 대중에게까지 확장되지 못했다.

박정희와의 지난한 투쟁 과정에서 『사상계』는 선악의 구도를 명확히 하고 정권교체를 '절대선'으로 규정했다. 여기에는 휴머니즘적 자유론을 견

---

408) "[권두언] 野黨의 登院에 즈음하여", 『사상계』 175호(1967. 11), 4쪽.

409) 부완혁, "反知性人論: 暴君放伐論, 抵抗叛亂權 및 民主革命權의 史的 考察", 『사상계』 196호(1969. 8), 66쪽. 필자명은 부완혁의 호인 '봉래(蓬萊)'로 되어있다. 부완혁은 『사상계』를 인수한 후 권두언은 자신의 이름으로 내고, 그 외의 글을 실을 때는 '봉래'를 필명으로 썼다.

410) 위의 글, 65쪽.

지한 지식인들의 역할이 컸다. 그들은 자유민주주의를 정의와 불의의 문제로 치환했다. 자유민주주의가 추상적인 과제인 반면 불의한 정권의 교체는 선명한 목표일 수 있었다. 정권교체는 선악의 문제로서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사명으로 제시될 수도 있었다. 이는 박정희 정부에 대항해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멍에를 지고 방방곡곡에 우리의 결단을 전파하고 민중의 운동을 조직하고 실천"할 것을 요청하는 종교적 동원 담론으로 나타나기도 했다(김삼웅 편, 2001: 113).[411] 불의를 물리치고 정의를 세우는 데는 어떠한 수단도 용납될 수 있었다.

이 시기 비판적 지식인들은 자유민주주의를 정권교체와 동일시함으로써 이후 민주화 운동의 구도를 설정했다. 물론 자유민주주의를 이렇게 협소하게 이해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박정희의 장기 집권에 있다. 권위주의 통치가 강성화되고 정권교체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를 정교화하는 것은 무의미했다. 오히려 복지국가를 미래의 목표로 구상했던 지식인들은 양심적인 위정자로 통치자를 교체할 수 있다면 정부의 역할이 클수록 더 많은 선을 행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한국의 자유주의는 제도나 체제 변화보다 정권교체로의 동원을 정당화하는 이념으로 고착되었다.

4. 동원의 좌절과 대중에 대한 환멸

동원이 좌절될 때마다 『사상계』 지식인들은 대중의 낮은 민도를 비난했다. 자유민주주의론을 통한 동원의 한계를 자성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주장에 호응하지 않는 대중의 수준을 지적했던 것이다. 물론 밀이 "정신적으로 성숙한 사람에게만" 자기 결정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했던 것(Mill, 2010: 33)처럼 지적 자격을 자유의 조건으로 제시한 것은 자유주의의 오래된 경향이었다. 하지만 『사상계』는 기대와 다른 사태가 벌어지면 지나칠 정도로 대중의 무지에 그 원인을 돌렸다. 이는 1963년 이래 '자유' 담론이 휴머니즘적 자유론의 입장을 지녔던 논자들에 의해 주도된 데 따른 것으로 볼 수

411) 3선개헌반대 범국민투쟁위원회, "민족사적 소명을 자각하자: 전국의 신앙인들에게", 1969. 8. 15.

있다. 대중의 지적, 도덕적 수준에 대한 비난은 지식인들의 '자유' 담론에서 '자유'가 '진리'의 문제틀로 제시된 것과 무관치 않다.

『사상계』는 한일협정 반대 투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종결된 1966년 1월에 권두언을 통해 "우리는 불굴의 민족으로 성장해 가야"하며, "진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아무리 패배의 고배를 마신다고 하여도 더욱 힘을 집결하면서 전진하여야 한다"고 다짐했다.[412] '진리의 실현'이라는 문제설정은 결국 지식인을 특권화하여 다시금 반정부 투쟁을 위한 결집을 이루는 상태를 상상한 데서 비롯되었다. 1966년 3월 권두언에서 장준하는 "나라의 이익을 지키고 국민의 복리를 북돋우는 일에 날로 냉담하여만 가는 우리의 이 어두운 현실에, 새로운 빛을 퍼 부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선각자들의 자발적인 민족운동에만 있는 줄 안다"고 하여 지사적 지식인의 역할을 강조했다.[413] 이러한 담론들은 지식인들이 엘리트주의에 입각해 자유주의를 수용한 데서 비롯되었다.

한일협정 이후 『사상계』 지식인들의 대중에 대한 불신을 가장 충격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은 당시 고려대학교 법정대 교수였던 이문영의 글에서 발견할 수 있다.

> 우리 국민이 좀 더 책임 있는 자유를 향유하려면 우리 중 많은 사람은 우선 선거권도 포기하여야 하며(책임있는 민주주의를 발전시킨 영·미국에서 오랫동안 제한선거를 하였듯이) 국회에는 고무신, 막걸리, 정종, 밀가루표 등을 손님에게 기부하여 국회의원이 된 깡패같은 국민대표가 제거되어야 한다.[414]

국민은 정치적 판단력도 부족하고, 매표행위에도 취약하므로 자격을 두고 선거권을 제한해야 "책임 있는 자유를 향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의제가 지식인들이 원하는 결과, 즉 '진리'를 산출하는 방향으로 작동하지 않을 때는 근대 민주주의 원칙의 일부가 폐기되는 편이 낫다는 논리다. 간략히 말해 낮은 민도에는 제한된 권리만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당시 『사상계』 지식인들의 절망감과 조급함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다.

대중의 문제는 "시민정신, 특히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실증적, 과학적으로

412) "[권두언] 새 해를 맞이하면서", 『사상계』 155호(1966. 1), 27쪽.
413) 장준하, "[권두언] 또 다시 3·1節을 맞으며", 『사상계』 57호(1966. 3), 27쪽.
414) 이문영, "公務員腐敗 20年史", 『사상계』 57호(1966. 3), 170쪽.

생활하는 태도"의 결여,[415] "전통에 추종하려는 타성" 등으로 표상되었다.[416] 근대적 시민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데서 자유는 방종으로 흐르거나 권력 앞에서 포기된다. "자유는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도록 행사"되어야 하나 시민의식이 부재한 사회에서 자유는 사적인 영역에서는 방종으로 향하고, 공적 영역에서는 무기력하다는 것이다.[417]

이러한 담론은 1967년 선거에서도 되풀이되었다. 『사상계』 지식인들에게 1967년 선거 결과는 분노와 함께 허탈감을 안겨주었다. 개헌선을 넘기기 위해 부정이 있었던 것은 분명했지만, 1963년 선거보다 박정희와 공화당이 더 많은 득표를 한 것 또한 사실이었다. 『사상계』 지식인들은 선거 결과를 두고 유권자의 선택을 비난했다. 『사상계』는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필요충분조건인 시민양심을, 국민은 아직도 돈 그리고 권력유혹과 바꿀 수 있는 민도에서 방황하고 있"다고 하여 대중들이 빈곤하고 정치의식이 부족한 까닭에 매표 유혹에 쉽게 넘어갔다고 판단했다.[418] 유권자들에게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이 있었다면 선거 결과가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사상계』는 권두언을 통해 또 다시 집권 세력을 승인함으로써 반민주적인 "죄업을 가능하게 한 국민의 죄책은 결코 일대(一代)로 끝나지 아니한다"고 분노를 표하기도 했다.[419]

"자유민주주의적 헌법의 원칙"에는 미치지 못하는 "국민의 자유의식 부족"이 문제로 언급되기도 했다.[420] 그러나 이를 극복할 뾰족한 방법도 없었다. 자유민주주의를 추동할 계급적 요소가 결여되었다는 진단 하에 지식인과 학생들의 분투를 요망할 뿐이었다. 대중들의 정치적 무관심 또한 문제로 지적되었다. "무관심의 비활동성은 지배계층에게 유리한 실제적인 효험을 안겨줌으로서 민주주의 반동화에의 공헌하고 있"으며, "정치에서의 무관심은 팟쇼적인 인자를 잉태할 전주곡"이라는 것이다.[421] 차기벽은 "경제적 발전을 이루는 데 상당히 성공하고 있"는 것에 비해 집권세력이 "정치적 독주

415) 백현기, "近代市民의 精神的 特質", 『사상계』 163호(1966. 11), 39쪽.
416) 현승종, "理想的인 市民像", 『사상계』 163호(1966. 11), 43쪽.
417) 위의 글, 43쪽.
418) "5·3選擧와 政治意識: 朴政權式 「公明選擧」의 評價問題", 『사상계』 169호(1967. 5), 28쪽.
419) "[권두언] 造花의 民主主義엔 열매가 없다", 『사상계』 169호(1967. 5), 9쪽.
420) 정일향, "憲政20年에 대한 評價", 『사상계』 190호(1969. 2), 54쪽.
421) 최영, "現代政治意識에서의 無關心", 『사상계』 171호(1967. 7), 47쪽.

와 사회적인 빈익빈·부익부의 양극화 현상을 빚어내어 자유와 정의의 실현에는 크게 실패"한 결과 씨니시즘이 만연했다고 보았다.[422] 대중들이 정치적 효능감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서 정치에 대한 무관심과 냉소를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들은 무관심과 냉소의 조건을 탐색한다는 점에서 대중의 무지를 일방적으로 질타하는 것보다는 진일보한 담론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정치 상황이 대중의 비정상적 선택에서 비롯되었다고 본다는 점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사상계』 지식인들은 자유주의 담론을 활용해 대중들을 동원하여 박정희 정부에 대항하고자 했다. 그러나 동원이 실패로 돌아가자 '자유의 진리'를 깨닫지 못한 대중들을 몰아붙였다. 지식인들은 좌절감과 분노를 대중에게 투사하여 해소하려 했다. 대중의 미숙함이 실패의 원인으로 간주되었다. 대중은 늘 지식인의 지도가 필요한 존재일 뿐이었다. 이러한 담론은 지식인들이 지시한 방향에 대중들이 따르지 않을 때 더욱 격렬한 어조를 띠었다.

자유에 방향성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은 사회적 자유주의에서도 나타나지만 한국의 지식인들은 그 방향을 지식인만이 알 수 있다고 보았다. 지식인만이 공공선과 자유의 방향을 제시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한국에서 자유주의적 비판 담론은 지식인의 엘리트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대중은 낮은 민도에 얽매인 존재였다. 1963년 이후 정권교체에 대한 절박감은 대중에 대한 조울증적 태도의 반복으로 나타났다.

『사상계』는 정권교체의 당위성을 설파하는 데 주력했다. 그러나 『사상계』 지식인들의 자유주의는 지식인과 학생을 넘어서는 동원 논리로 확장되지 못했다. 이는 대중의 구체적 삶의 모습에 관심을 기울이기보다 자유의 방향성을 논하며 추상적인 계몽주의로 일관한 데 기인했다. 이러한 한계는 비판적 지식인들이 민중과의 합일을 시도하는 1970년대부터 조금씩 극복되어 갈 것이었다.

---

422) 차기벽, "政治人의 價値觀", 『사상계』 177호(1968. 1), 41-42쪽.

제5장 결론

제1절 연구 결과 요약

한국에서 자유주의 담론은 역사적으로 식민지, 분단과 전쟁, 미국 주도의 냉전체제라는 구조적 제약 속에서 그 내용이 규정되었다. 식민지 경험은 두 가지 차원에서 해방 이후 한국 자유주의 담론에 영향을 미쳤다. 하나는 개인보다 국가와 민족의 자유를 우선시하는 사고방식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했다. 또한 식민지 하에서 저항 이념으로서 사회주의가 번성하게 되면서, 해방 이후 자유주의를 표방한 지식인들도 평등주의적 지향을 보이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조건은 해방 이후 한국의 자유주의 담론이 공공선을 중시하는 사회적 자유주의 또는 복지국가론에 가까운 성격을 보이게 된 배경이었다.

분단과 전쟁, 지구적 냉전의 전개로 인해 반공주의는 한국 자유주의 담론의 한계선으로 작용했다. 물론 반공주의는 자유주의뿐 아니라 『청맥』의 운명에서 보이듯 민족주의의 한계선이기도 했다. 반공주의는 권위주의 정부의 무기이기도 했지만 4월혁명의 저항 담론에서 보았듯 지배 세력에 대한 비판 담론의 일부이기도 했다. 자유의 보장은 공산주의와 구별되는 한국의 정체성이어야 했고,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확보하는 방법이기도 했다. 자유를 부정하는 것은 반공 태세를 약화시키는 행위와 같다는 논리에서 냉전 자유주의는 저항 담론으로 표출될 수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 자유주의 담론의 특징으로 권위주의 정부에 저항하면서 동시에 균분을 요구했다는 점을 꼽았다. 이러한 특성은 국가를 필요악으로 간주하는 고전적 자유주의의 입장에서는 나올 수 없다. 서구에서 자유주의는 자유의 적을 새롭게 규정하면서 혁신되었다(문지영, 2011: 21). 자유의 주적은 처음에는 국가였지만(고전적 자유주의), 20세기 초반에는 빈곤이었고(사회적 자유주의), 냉전에 접어들면서 공산주의로 변화했다(냉전 자유주의). 해방 이후 한국에서는 이 세 가지가 모두 강력한 자유의 적이었다. 그러나 빈곤으로부터의 자유를 위해 국가의 개입이 필요했고, 공산주의로부터 자유를 수호할 구심도 국가일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지식인

들은 국가로부터의 자유를 주장하기보다 빈곤 탈피와 반공 투쟁을 수행할 수 있는 공정하며 강력한 국가를 요청하는 경향을 보였다. 강한 국가와 개인의 자유, 생존권을 조화시킨다는 구상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이 시기 자유주의 담론에서 공통된 것이었다.

물론 1950년대 민주당 신파가 보여주었듯 강한 국가를 부정하면서 고전적 자유주의에 입각해 저항 담론을 견인하려는 노력 또한 있었다. 이러한 주장의 배경에는 1955년 민주당 창당이라는 정치적 상황 맥락이 있었다. 민주당 신파는 자유당 및 혁신계와 구별되는 정체성을 만들고자 경제적 자유의 확대를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 신파의 자유경제론은 이론적, 사상적 기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승만과 자유당의 물적 토대를 제거하려는 정치적 동기에서 제기된 것이었다. 그들은 정작 4월혁명으로 집권하게 되자 국가에 의한 복지와 계획을 강조하고 자유경제론에서 탈피하려 했다(박태균, 2007: 307-313).

『사상계』에서는 1950년대에 경제적 자유에 관한 견해차를 중심으로 자유주의를 상이하게 이해하는 입장들이 경합했다. 그러나 1960년대에 박정희 정부에 대한 협력과 저항의 갈림길에서 지식인들이 분화되면서 자유주의적 저항 담론의 주축은 휴머니즘적 자유론으로 정리되었다. 1963년부터 본격화된 『사상계』의 전환은 군사정부에 대한 장준하의 입장 선회와 그에 대한 박정희 정부의 공식적, 비공식적 탄압이 맞물리면서 증폭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장세진, 2013: 50-51). 저항 세력의 핵심은 장준하, 함석헌, 김재준으로 대표되는 한신 계열로서 이들의 휴머니즘적 자유론은 사회적 자유주의, 기독교적 정신주의, 문화적 민족주의에 입각해 있었다(김건우, 2003: 235-236 참조). 이들은 국가로부터의 자유를 요구하기보다 정권교체를 통해 양심적 통치자가 국가를 장악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회복의 관건이라고 보았다.

이들은 1950년대와 1960년대 초에는 봉건적 유제의 청산을 위한 근대화를 목표로 정신적 갱신을 요구했다. 그러나 박정희 정부를 악으로 규정하고 전면적인 투쟁에 돌입하면서 정권교체를 위한 동원과 참여는 종교적 정의를 실천하는 일로 의미 부여되었다. 현대 국가가 공동체의 통합과 생활의 안정을 위해 방대한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에는 이의가 없었다. 특히 『사상계』 지식인들은 한국의 후진성에 비추어볼 때 국가가 경제성장과 재

분배를 주도해야 한다고 여겼다. 이는 강한 국가에 대한 열망과 도덕적 평등주의 원칙에 근거한 요청이었다.

문제는 국가를 운영하는 통치자의 양심이었다. 지식인들은 통치자의 자질이 높고 양심이 올바르다면 강한 국가가 오히려 더 많은 자유를 가져올 수 있다고 믿었다. 통치자의 성격에 따라 국가의 성격도 변화한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국가 권력의 폭과 깊이를 문제삼기보다는 정권교체에 모든 명운을 걸었다. 이러한 입장에서 한국의 자유주의 담론은 권위주의 통치자에 저항하면서도 국가 개입에 의한 균분을 동시에 요구하는 특징을 보였다.

이처럼 한국 자유주의 담론의 특성은 구조적 요인과 상황적 맥락, 우연적 요소들이 결합하면서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박정희 정부 시기에 휴머니즘적 자유론이 비판 담론의 중핵을 차지하면서 정권교체와 국가에 의한 균분을 동시에 추구하는 한국 자유주의 담론의 특성이 두드러졌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한국 지식인들의 자유주의 담론에는 강한 국가에 대한 열망, 방향성 있는 자유에 대한 지향, 도덕적 평등 의식이 결합되었다.

1970년대 이전까지 한국 자유주의 담론의 또 다른 특징으로 언급할 수 있는 것은 엘리트주의라고 할 수 있다. 자유주의가 관용을 강조하는 이유 중 하나는 천재적인 개인의 창의력이 공동체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보기 때문이다(Mill, 2010 참조). 이런 점에서 자유주의는 어느 정도 엘리트주의적 함의를 갖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지식인들은 대중을 불신하면서 계몽과 동원의 대상으로만 간주하는 성향을 지속적으로 보였다. 자유주의를 지지할 부르주아 교양 시민의 부재를 지사적 지식인의 리더십으로 대체하면서, 대중의 역할은 그에 호응하는 것으로 한정했다. 이는 근대화, 부국강병, 정권교체 등 집단적 목표에 자유주의가 종속될 때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특정 목표로 대중을 동원하겠다는 열망이 개인의 자유 보장이라는 원칙에 앞설 때 지식인은 조급해진다. 이러한 조급증은 대중에 대한 계몽과 동원의 열정으로 나타나다가 대중에 대한 원망과 환멸로 급전하기도 한다. 동원에 의한 정권교체를 최고의 가치로 삼았던 1963년 이후의 『사상계』에서 조울증적인 논조가 반복된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사상계』는 지식인 리더십에 순종하는 주체를 형성하고자 했다. 적극적 자유론에 따라 지식인이 지시한 공공선을 지향하는 행위가 자유로 규정되었다. 『사상계』가 강조한 정신적 개조는 공공선에 대한 각성을 의미했

다. 물론 공공선은 상황 맥락에 따라 변화했다. 레지스탕스, 후진성 극복을 위한 근로의욕, 정권교체 등 『사상계』는 국면마다 다른 초점을 가진 공공선을 제시했고, 대중들의 각성을 촉구했다. 엘리트주의를 바탕으로 한 자유주의는 유순한 대중을 요구했다. 그러나 현실의 대중은 그러하지 않았다.

『사상계』의 자유주의 담론은 구조적 요인과 상황적 맥락에 영향을 받으며 변화했다. 하지만 『사상계』를 중심으로 한 지식인들은 박정희 정부와의 투쟁을 통해 한국의 정치에 또 다른 상식을 창출했다. 정권교체와 자유민주주의를 동일시하는 인식이다. 이는 1963년부터 본격화되어 지속되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민주정부 10년'으로 규정하는 담론들은 이러한 사고방식이 오늘날에도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권위주의 정부가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면서 정권교체는 민주화 운동의 절실한 과제였다. 또한 보수정당이 권위주의 계승 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이러한 인식은 오늘날에도 어느 정도 설명력을 갖는다고도 볼 수 있다. 하지만 누가 집권하는가에 대한 관심이 어떤 민주주의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대체하면서 한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정체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라고 하겠다.

제2절 연구의 의의와 한계

한국에서 자유주의에 대한 연구는 반공주의와의 연관에 주목하는 방향에서 제기되는 경우가 많았다. 즉, 자유주의가 반공주의와 동일시되면서 지배담론으로 전개되는 양상을 비판적으로 서술한 것이다. 하지만 한국 자유주의가 정치적 비판 담론으로서 역할을 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연구 성과들 또한 적지 않게 축적되었다. 이 연구는 한국 자유주의 담론의 성격에 주목하면서 담론의 내용 변화에 초점을 두었다. 그 분석 과정에서 자의성을 최대한 배제하기 위해 내용분석 등 정량적 방법을 함께 사용했다. 자유주의적 저항 담론의 논리가 무엇이었으며, 왜 그러한 담론이 나타나게 되었는지를 밝히는 데 기여하고자 했다.

『사상계』 연구에서 경제적 자유와 관련된 입장들을 검토한 글은 많지 않다. 주제의 측면에서 이 연구가 기여한 바가 있다면 1950년대 『사상

계』에 경제적 자유와 관련된 다양한 입장들이 존재했다는 점을 밝히고, 그 중 휴머니즘적 자유론에 근거한 입장들이 1960년대 후반부터 국가 개입에 의한 생존권 보장 담론으로 재등장하게 되었다는 점을 언급한 데 있다. 기존 연구들이 『사상계』 지식인들의 균열 지점을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관점에서 주로 찾았던 데 반해, 이 연구에서는 경제적 자유와 관련된 입장 차이까지 함께 감안해야 당대 지식인들의 지형을 더 분명하게 포착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사상계』의 자유민주주의에 관한 연구들은 적지 않지만, 정작 '자유민주주의' 개념 자체에 천착한 연구들은 드물다. 자유민주주의는 박정희에 의해 보편화된 개념이었다. 지식인들은 이에 대응하면서 자유민주주의 개념에 포괄적인 기대지평을 담고자 했다. 자유민주주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합의가 존재하기 전에 자유민주주의가 절대화되었고,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박정희 정부와의 투쟁을 거치면서 자유민주주의는 정권교체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이처럼 자유민주주의론이 제기된 맥락과 전개 과정을 포착했다는 데 이 연구의 또 다른 의의가 있을 것이다.

휴머니즘의 견지에서 제안된 균분의 문제의식은 정서적 공감을 얻을 수는 있었지만 이념적, 정책적 견고함을 결여하고 있었다. 다른 한편 민주주의와 정권교체를 동일시하는 담론은 지속적인 영향력을 발휘했다. 1998년 『사상계』 지식인들이 그토록 염원하던 정권교체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분배의 문제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다. 오늘날 한국 자유민주주의의 풍경은 1950년대와 60년대를 경과하면서 형성된 저항적 자유주의 담론의 정서적, 도덕적 호소력과 이념적, 정책적 한계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 연구는 『사상계』의 지식인들을 자유주의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괄호를 쳐두고 담론에만 집중했다. 하지만 자유주의 담론을 산출하던 지식인 중 상당수가 박정희 정부와 협력을 택했다는 점은 담론 연구의 한계를 느끼게 한다. 예를 들어 1950년대 『사상계』에서 자유경제론을 주장했던 김영선은 1969년 3선개헌반대투쟁위원회에서 활발히 활동하면서 반박정희 투쟁에 앞장섰으나, 그 이듬해인 1970년 통일원장관으로 발탁되었다. 1965년 정치교수로 낙인찍혀 해임된 황산덕 또한 1974년 법무부장관으로 임명되었다. 『사상계』에 많은 글을 게재했던 신상초 또한 유신정우회 국

회의원이 되었다. 많은 사람들을 “허무하게 한” 전향이었다.[423] 이들의 전향은 담론 연구만으로 당대 지식인들의 지향을 포착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담론, 행위, 정체성의 괴리에 착목하지 못한 점은 이 연구가 갖는 큰 한계 중 하나다. 공식적 담론으로 포착되지 않는 지식인들의 욕망에 주목할 때, 이 연구에서 분석한 담론들은 또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실증성을 높이기 위해 개념에 대한 내용분석에서 출발하여 담론분석으로 나가는 방향을 취했다. 그러나 개념, 담론, 사상은 같은 것이 아니다. ‘자유’ 개념을 많이 사용했다고 자유주의 담론이 아니며, 위에서 말한 것처럼 자유주의자가 아니어도 자유주의적 언사를 거듭할 수 있다. 특히 개념에서 담론으로 연결시키는 방법론이 명확하지 않아 내용분석과 담론분석이 다소 괴리된 방식으로 제시되었다. 이런 부분들은 더 많은 고민을 통해 향후 연구에서 개선해가도록 하겠다.

423) 김진현 전 장관과의 인터뷰(2021. 1. 13). 김진현은 당대 지식인들의 행위를 이념적, 사상적 동기보다는 권력욕과 출세욕의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고 했다.

부록: 의미연결망 분석

이 연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상계』 및 대통령연설문에 대한 의미연결망 분석도 수행했으나, 논의를 산만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 본문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여기서는 의미연결망 분석 결과를 본론에서 주장한 내용들과 연관지어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의미연결망 분석은 사회연결망 분석 기법을 가져온 것이다. 사회연결망 분석이 인간 또는 조직 간의 관계를 분석하듯, 의미연결망 분석은 텍스트 내의 키워드, 개념 간의 관계를 분석한다. 문장 또는 단락 내에서 개념이 공출현한 경우 개념 간의 직접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김용학·김용진, 2016: 269).

의미연결망 분석에 수반하는 것으로 중심성 분석이 있다(이하 중심성 분석 설명은 김용학·김용진, 2016: 제6장; 차민경·권상희, 2015: 96-97 참조). 중심성 분석에는 연결중심성(degree centrality), 근접중심성(closeness centrality), 매개중심성(betweenness centrality), 아이겐벡터 중심성(eigenvector centrality) 등이 있다. 간략히 말해 연결중심성은 노드 간의 직접 연결정도를 측정한다. 연구에 적용한다면 '자유' 개념을 포함해 다른 개념들과 공출현한 빈도가 많을수록 값이 높게 나타날 것이다. 근접중심성은 간접적 연결까지 측정하여 연결망에서의 영향력을 보여준다. 개념 간의 직접 연결이 많지 않더라도 핵심 개념에 연결이 집중되어 있으면 근접중심성이 높게 나타날 수 있다. 매개중심성은 노드 간의 매개역할 수행 정도를 측정한다. 매개중심성 값은 개념 간의 중개역할이 많은 개념에 높게 나타나게 된다. 마지막으로 아이겐벡터 중심성은 연결중심성의 영향력에 더해 간접경로를 통한 영향력을 합하여 전체 연결망 내의 영향력을 측정한다. 영향력이 높은 노드들과 많은 관계가 있을수록 아이겐벡터 중심성이 높아지며, 따라서 아이겐벡터 중심성이 높은 개념은 전체적인 의제설정 영향력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분석 대상이 되는 내용은 『사상』, 『사상계』 전권과 이승만 대통령, 유신 이전 박정희 대통령 연설문에서 '자유' 개념이 사용된 모든 문장이다.[424] 대통령 연설문의 경우 디지털화되어 있기 때문에 손쉽게 문장을 수

집할 수 있으나, 『사상』 및 『사상계』, 박정희 최고회의의장 연설문은 전체 텍스트를 읽으면서 직접 문장을 찾아내어 손수 입력해야 했다. 따라서 누락된 내용이 약간은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전체 분량이 많기 때문에 실수에 의한 누락이 있다 하더라도 분석의 대체적 결론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분석에 사용한 프로그램은 KrKwic과 UCINET이다. 주요 개념 목록을 작성하여 입력하면 KrKwic을 통해 '자유' 개념이 사용된 각각의 문장에서 해당 개념들의 공출현(co-occurrence) 빈도 매트릭스를 얻을 수 있다(박한우·Leydesdorff, 2004). 공출현 빈도 매트릭스를 기본 자료로 연결망 분석 프로그램을 활용한 의미연결망 분석을 수행할 수 있었다.

분석 대상 개념은 각 텍스트에서 빈도가 높은 단어들 중 관형사, 부사, 대명사('그', '우리' 등), 조사는 제외하고 명사(名詞)만을 대상으로 했다. 또한 분석을 위해 개념 수를 적정하게 선정할 필요가 있다. 개념이 너무 많은 경우 크게 의미 없는 개념까지 포함될 수 있고, 너무 적은 경우에는 분석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특정 시기에만 높은 빈도로 나타나는 개념을 포착하기 어렵다. 이 연구에서는 각 자료별 개념 수로 50~60개 정도가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분석 대상 개념의 최소 빈도를 정했다. 『사상』 및 『사상계』의 경우 200회 이상 출현한 개념 60개, 대통령 연설문에서는 80회 이상 출현한 개념 56개를 선정했다.

본 연구의 텍스트에 사용된 개념들은 '자유' 개념과 연관되어 있다는 속성을 공유하고 있는데다 텍스트의 분량이 많기 때문에 거의 모든 개념들이 낮은 빈도로라도 상호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원 자료를 가지고 중심성 분석을 해 본 결과 노드의 연결 양상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근접중심성과 매개중심성 측정이 의미가 없었다. 또한 연결중심성과 아이겐벡터 중심성은 연결 빈도에 강하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단순 빈도 측정 결과와 별 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중심성 분석을 유의미하게 하기 위해 약간의 조작을 가했다. 낮은 빈도의 연결은 연결되지 않은 것으로, 즉 공출현 빈도를 '0'으로 조작했다. 이는 연결망 시각화에도 유효하다. 조작 전에는 1회라도 공출현했으면

---

424) 본론과 마찬가지로 『사상』 및 『사상계』에서 외서나 외신 번역, 해외 이론과 해외 사례 소개, 문학 작품은 제외했다.

연결망이 발생하기 때문에 거의 모든 개념 간의 연결이 나타났다. 반면 낮은 빈도를 0으로 처리하면 개념 간의 연결망을 조금 더 간결하게 파악할 수 있다.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최소 공출현 빈도는 해당 자료에 나타난 '자유' 개념 빈도의 0.5%로 했다. 『사상』 및 『사상계』 전체 자료는 63회 이하, 『사상계』 1기는 15회, 2기는 21회, 3기는 26회 이하, 이승만 연설문 7회, 박정희 연설문 11회 이하 빈도는 모두 '0'으로 처리했다. 이러한 조작을 통해 개념 간에 비중 없는 연결이 삭제됨으로써 일정 빈도 이상의 연결만이 의미를 갖게 된다.

1. 『사상계』에 대한 의미연결망 분석

<표 부록-1> 『사상계』 1기 중심성 분석 결과

	연결중심성		근접중심성		매개중심성		아이겐벡터		빈도
순위	개념	값	개념	값	개념	값	개념	값	
1	경제	4158	사회	0.714	사회	159.683	경제	0.697	경제
2	사회	2461	경제	0.667	경제	87.583	사회	0.406	사회
3	국가	2147	민주/국가	0.652	국가	64.383	민주	0.353	법
4	민주	2079			민주	62.279	국가	0.343	국가
5	법	1996	법	0.645	법	56.595	법	0.320	민주
6	개인	1249	정치	0.594	정치	24.876	통제	0.264	개인
7	정치	1244	개인	0.583	민족	16.093	정치/개인	0.226	정치
8	통제	1173	국민	0.577	국민	14.951			사상
9	국민	1059	사상	0.571	개인	11.445	국민	0.183	국민
10	보장	928	통제	0.561	통제	11.419	보장	0.168	인간
11	사상	843	보장/인간/	0.556	공산	7.690	사상	0.161	보장
12	평등	607			사상	7.336	평등	0.137	평등
13	인간	577	민족/공산	0.550	인간	3.277	인간/사람	0.120	사람
14	공산	546			세계	2.810			통제
15	언론	504	생활	0.541	언론	2.591	자본	0.108	세계
	자유	11725		0.938		876.309		1.000	

『사상계』 1기 중심성 분석 결과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경제' 개념

이 빈도와 연결중심성에서 ‘사회’ 개념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값을 보였지만, 근접중심성과 매개중심성에서는 ‘사회’ 개념이 ‘경제’ 개념보다 높은 값을 기록했다는 점이다. 이는 ‘경제’ 개념이 ‘사회’ 개념에 비해 특정한 개념들에 연결망이 집중된 정도가 많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경제’ 개념을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폐쇄적인 의미연결망을 갖는 담론군이 존재했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눈에 띄는 것은 ‘통제’ 개념이 빈도순위에 비해 중심성 순위가 높게 나왔다는 점이다. 『사상계』 1기 자료에서 ‘통제’ 개념은 ‘경제’ 개념과 471회 공출현했다. 『사상계』 1기에서 ‘통제’ 개념은 경제 부문에서의 국가 통제를 의미하는 데 주로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통제’ 개념은 핵심 개념들, 특히 『사상계』 1기에 가장 중요한 개념인 ‘경제’와 높은 강도의 연결망을 가졌기에 빈도에 비해 높은 중심성 값이 산출되었다. ‘자본’ 개념 또한 빈도순위가 18위인데 비해 아이겐벡터 중심성이 높게 측정되었는데, 이 또한 ‘경제’ 개념과의 연결망이 강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사상계』 1기 중심성 분석에서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경제’ 개념과 집중적인 연결망을 갖는 ‘통제’, ‘자본’ 개념이 빈도에 비해 높은 영향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난 점이다. ‘경제’ 문제의 중요성이 높았으며, 상대적으로 폐쇄적인 담론을 구성했다는 것이 『사상계』 1기 ‘자유’ 담론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표 부록-2> 『사상계』 2기 중심성 분석 결과

	연결중심성		근접중심성		매개중심성		아이겐벡터		빈도
순위	개념	값	개념	값	개념	값	개념	값	
1	민주	4300	민주	0.833	민주	240.372	민주	0.503	민주
2	사회	3813	사회	0.811	사회	208.171	경제	0.499	경제
3	경제	3760	경제/국가	0.690	경제	99.060	사회	0.470	사회
4	정치	2446			정치	73.684	정치	0.323	법
5	국가	2437	정치	0.682	국가	68.160	국가	0.317	정치
6	국민	2088	국민	0.659	국민	49.813	법	0.279	국가
7	법	1939	법	0.606	한국	17.208	국민	0.267	국민
8	개인	1306	한국	0.583	법	12.944	개인	0.209	언론
9	언론	1117	개인	0.577	언론	6.909	언론	0.172	개인
10	체제	960	언론	0.566	개인	6.060	체제	0.152	한국
11	한국	947	체제	0.561	시민	3.343	계획	0.146	인간
12	보장	863	정부/미국	0.550	공산	3.210	보장	0.144	체제
13	계획	834			미국	2.883	한국	0.140	공산
14	자본	734	민족/공산/제한/혁명	0.545	민족	2.202	발전	0.125	보장
15	공산	710			체제	2.131	자본	0.121	계획
	자유	16184		1.000		680.389		1.000	

『사상계』 2기에서도 ‘경제’ 개념은 ‘사회’ 개념보다 높은 빈도를 보였지만 아이겐벡터 중심성을 제외한 모든 중심성에서 ‘사회’ 개념보다 낮은 값을 보였다. 이는 1기와 마찬가지로 ‘경제’ 이슈가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영역에서 논의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계획’ 개념은 연결중심성과 아이겐벡터 중심성은 높게 나온 반면, 근접중심성과 매개중심성은 빈도에 비해 떨어지는 것으로 산출되었다. 이는 ‘계획’ 개념이 핵심 개념인 ‘경제’에 집중적으로 연결된 반면, 그 외 다른 개념과의 의미연결망은 존재하지 않거나 강도가 약한 데 기인한다. 빈도순위가 19위인 ‘자본’, 21위인 ‘발전’ 개념 또한 ‘경제’와의 연결성이 높았기 때문에 아이겐벡터 중심성이 높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사상계』 2기에서는 ‘법’ 개념의 매개중심성이 빈도에 비해 낮게 측정되었다. 이는 ‘법’ 개념이 상대적으로 다양한 이슈들과 연계되어 있지 않다

는 점을 드러낸다. 『사상계』 2기에 '법' 개념은 이승만 정부 말기 헌법정신의 파괴를 규탄하는 내용과 군사정부 이후의 헌법 개정 문제에 집중되어 사용되었다. 따라서 다양한 분야의 법률문제가 검토되었다기보다는 상대적으로 헌법 질서의 회복이라는 목표에 제한된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민족' 개념은 빈도순위로는 22위지만, '역사', '독립', '운동' 개념을 핵심 개념들과 연결하면서 상대적으로 높은 근접중심성과 매개중심성을 보였다. 이 시기에 '민족' 개념은 4월혁명과 5·16을 민족사적 사건 계열 속에서 파악하는 담론에서 많이 등장했다는 특성이 있다.

특기할 만한 점은 '시민' 개념의 높은 매개중심성이다. '시민' 개념의 경우 빈도순위는 37위이지만 '자유', '민주', '사회', '경제', '국가', '인간' 등의 핵심 개념과 '평등', '근대', '학생'의 주변 개념을 연결함으로써 높은 매개중심성을 나타냈다. '시민' 개념은 4월혁명을 전후하여 자주 언급되었다. 저항주체로서 '시민'이 호명되었고, 4월혁명 이후에는 자유를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지탱할 '시민사회'의 형성이라는 문제의식이 『사상계』에 뚜렷이 등장했다(한영현, 2014: 128). '시민' 개념은 이러한 논의 속에서 다양한 개념들과 연관되었던 것이다.

『사상계』 2기의 중심성 분석 결과에서 특징적인 점을 정리해보자. 먼저 '경제' 개념의 중심성은 '민주' 개념에 비해 낮았지만 여전히 높은 순위에 위치했으며 '경제' 이슈는 1기와 마찬가지로 독자적인 영역을 갖추고 있었다. '법' 개념 또한 헌법질서의 회복이라는 문제에 집중되었다. '시민'과 '민족' 개념은 4월혁명의 맥락 속에서 다양한 이슈들에 사용되어 높은 매개중심성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이후 '시민'에 대한 호명은 부각되지 않는 반면, '민족'에 대한 호명은 더욱 강화된다는 점은 1959~62년의 기간이 예외적이며 과도기적이었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표 부록-3> 『사상계』 3기 중심성 분석 결과

	연결중심성		근접중심성		매개중심성		아이겐벡터		빈도
순위	개념	값	개념	값	개념	값	개념	값	
1	민주	6354	민주	0.857	민주	284.243	민주	0.632	민주
2	정치	3893	정치	0.779	정치	161.083	정치	0.424	국민
3	국민	3686	사회	0.723	사회	114.244	국민	0.421	정치
4	사회	3393	국가/국민	0.667	국민	56.371	법	0.386	법
5	법	3284			국가	55.025	사회	0.362	사회
6	국가	2789	법	0.638	법	45.521	국가	0.313	국가
7	언론	1880	경제	0.606	경제	42.552	언론	0.269	언론
8	경제	1674	언론	0.577	언론	14.287	보장	0.198	경제
9	보장	1445	보장	0.571	보장	6.865	경제	0.188	보장
10	권리	1019	권리	0.566	민족	6.858	민족	0.141	민족
11	민족	980	공산	0.561	공산	5.167	권리	0.130	대학
12	공산	959	한국/민족/미국	0.556	미국	5.054	선거	0.125	한국
13	한국	860			공산	5.167	대학	0.123	선거
14	선거	814			권리	4.123	한국	0.118	공산
15	체제	804	체제	0.550	한국	3.747	공산/권력	0.116	정부
	자유	18421		1.000		678.126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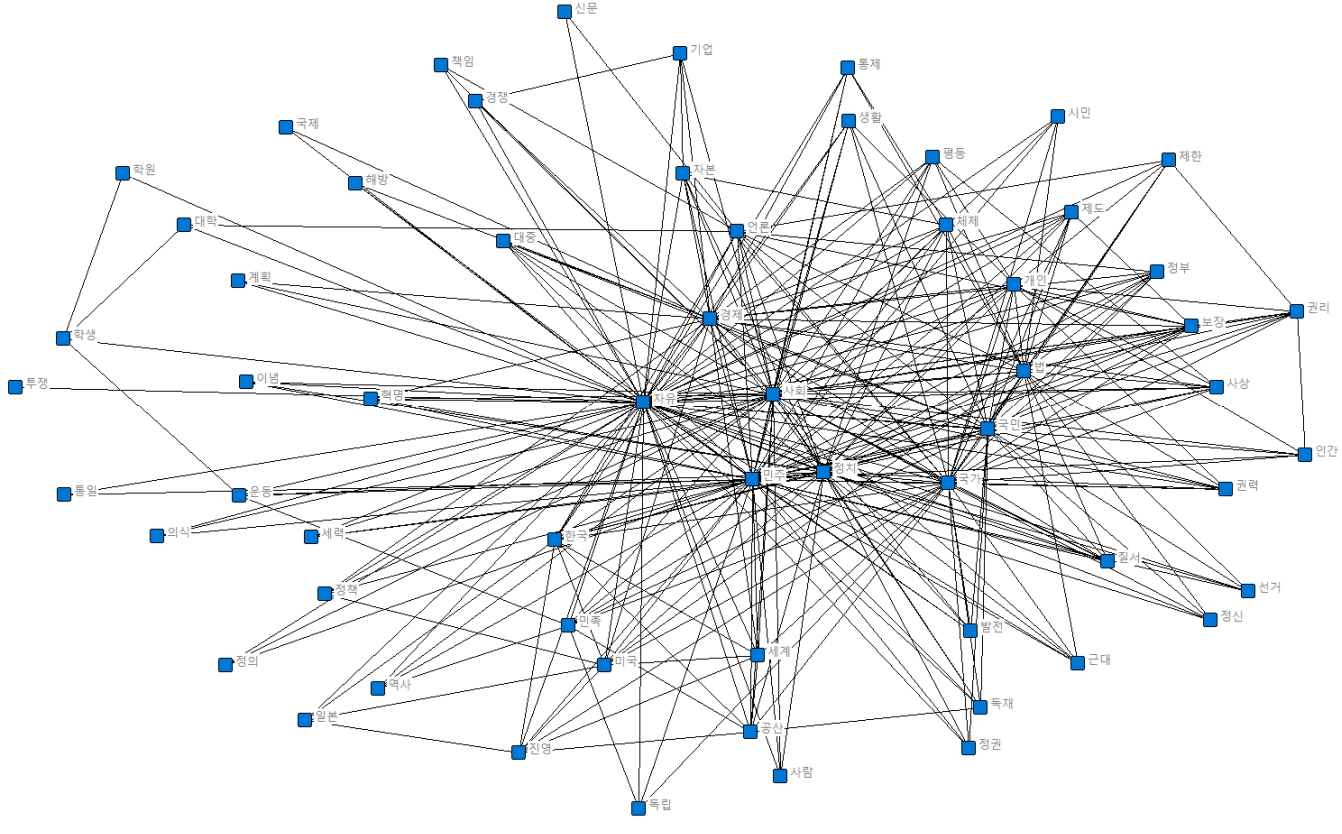
『사상계』 3기의 중심성 분석 결과를 보면 '국민' 개념이 빈도순위에서는 '정치' 개념보다 높았지만, 중심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근접중심성과 매개중심성 값이 큰 차이로 역전되어 있다. '정치' 개념이 국내외의 여러 이슈 및 다양한 주체 개념과 함께 사용되었던 데 반해 '국민' 개념은 정치적 동원을 위한 호명에 상대적으로 집중되어 있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사상계』 3기에 대한 중심성 분석에서 가장 의외의 결과를 보여준 것은 '권리' 개념이다. '권리' 개념은 빈도순위에서 24위를 차지했지만 연결중심성, 근접중심성, 아이겐벡터 중심성에서 10~11위에 올랐고, 매개중심성은 14위였다. 이는 핵심 개념들에 대한 연결망이 잘 구축되어 있으며 그 강도 또한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권리' 개념은 빈도는 많지 않지만, 박정희 정부의 '자유' 훼손에 비판적으로 대응하는 담론을 이루는 개념으로서 높은 중심성을 갖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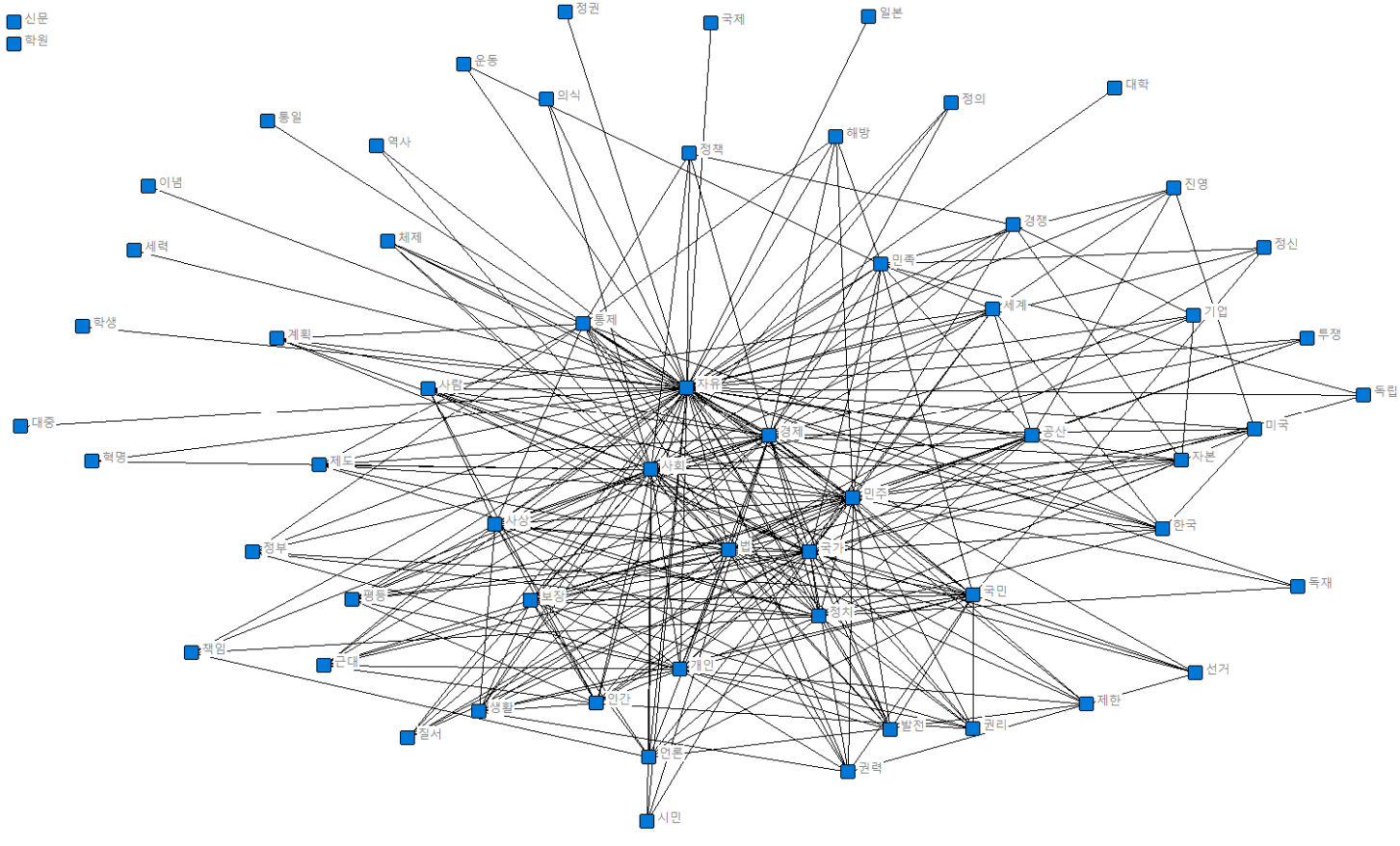
‘대학’ 개념은 빈도순위는 11위였으나 중심성 분석에서는 모두 상대적으로 낮은 값을 보였다. 이는 ‘대학’이 억압의 대상이자 저항의 중심으로 자주 언급되었지만 ‘대학의 자유’라는 이슈에만 집중되어 사용되었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다. 즉 ‘자유’ 개념과의 연결망은 강하지만 그 외의 연결망은 넓지도 강하지도 않다는 것이다.

『사상계』 3기에는 대체로 ‘정치’와 ‘권리’를 함축하고 있는 개념들이 중심성의 상위를 차지했다. 이는 권리의 침해에 맞서 정치적 동원으로 맞서고자 했던 『사상계』 3기의 지향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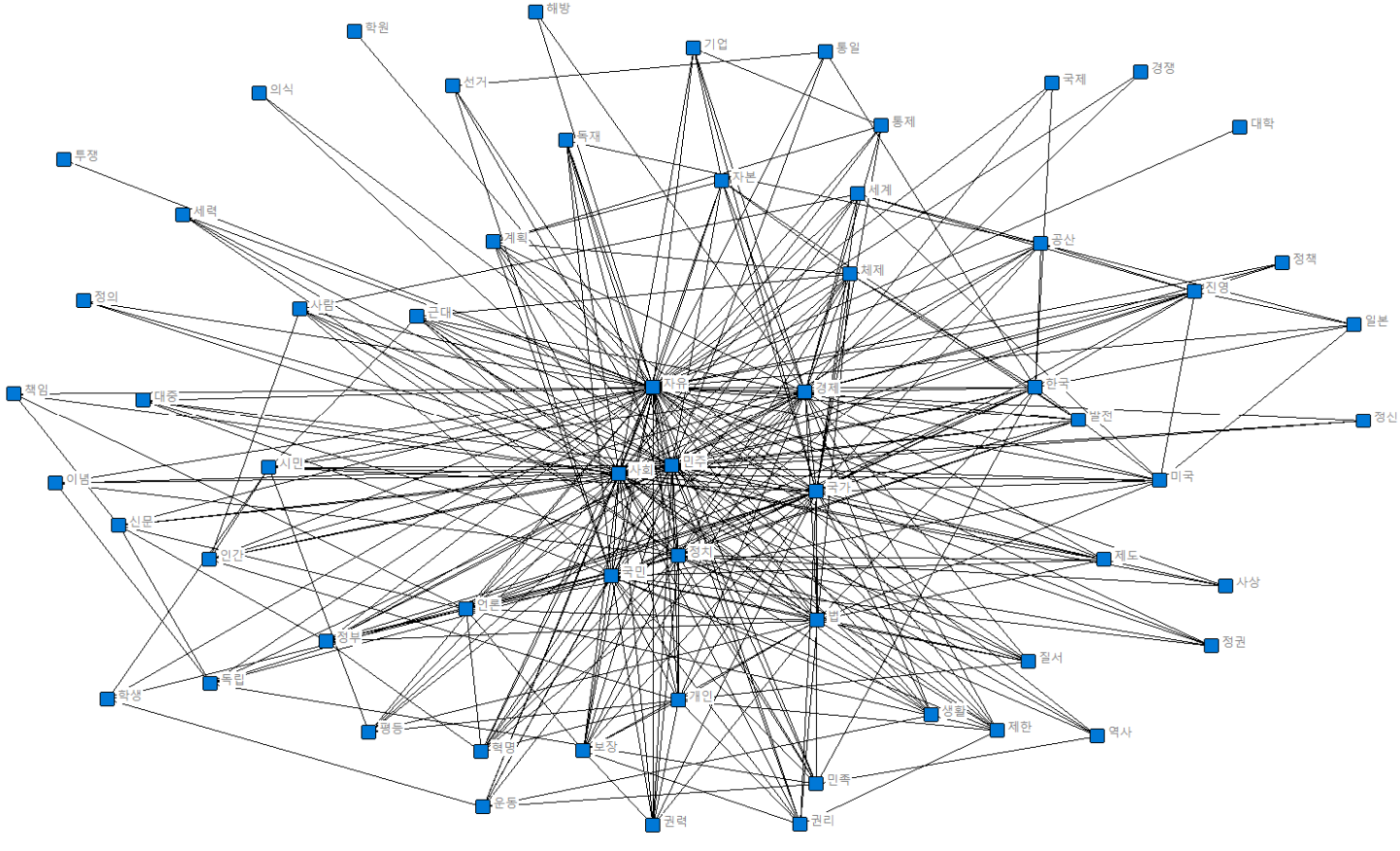
<그림 부록-1> 『사상계』 전체의 의미연결망 시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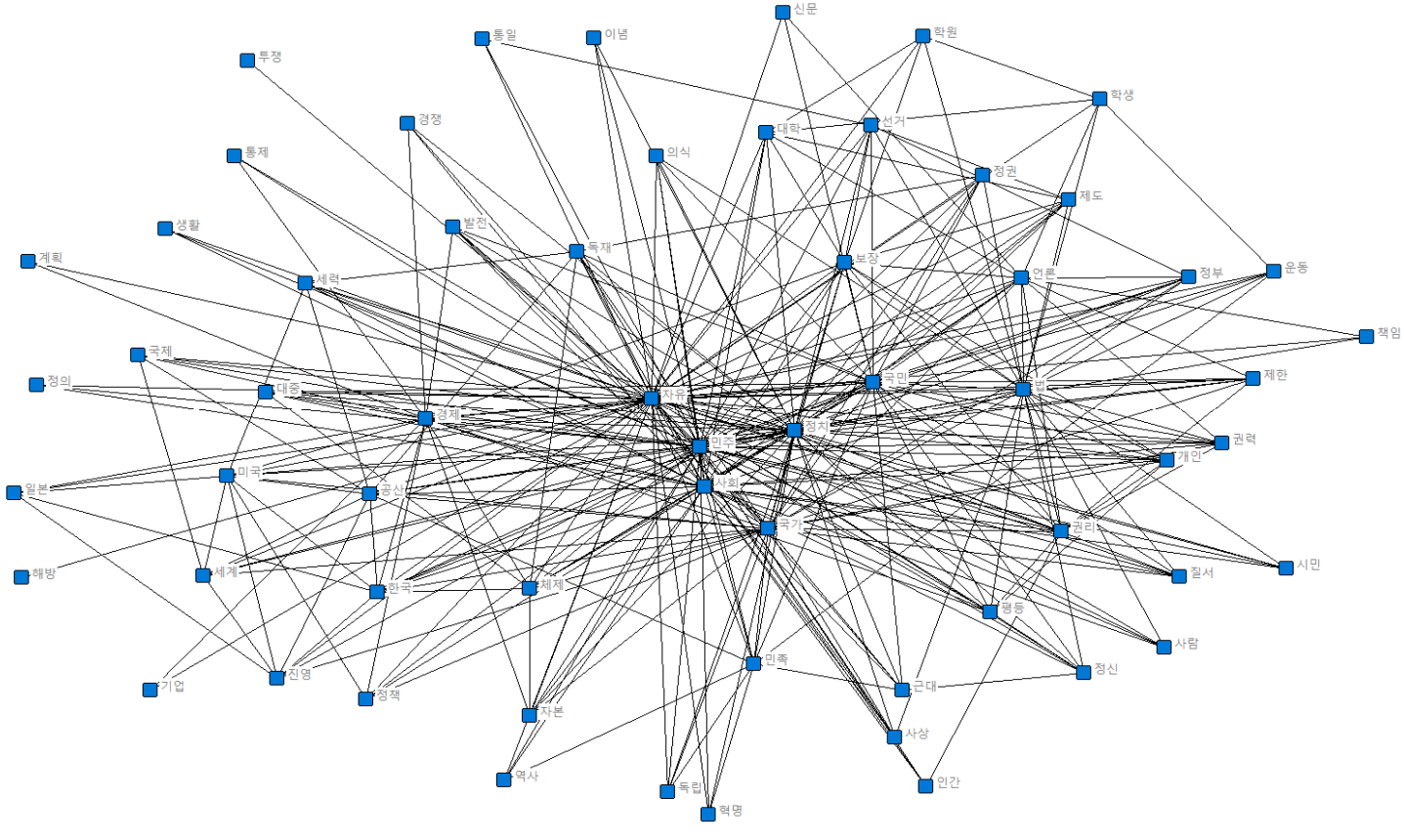
<그림 부록-2> 『사상계』 1기의 의미연결망 시각화



<그림 부록-3> 『사상계』 2기의 의미연결망 시각화



<그림 부록-4> 『사상계』 3기의 의미연결망 시각화



2. 대통령연설문에 대한 내용분석과 의미연결망 분석

<표 부록-4> 대통령 연설문에서 '자유' 개념과 공출현한 개념의 빈도순위

순위	전체		이승만		박정희	
	개념	비율	개념	비율	개념	비율
1	세계	23.9%	세계	30.3%	평화	23.6%
2	공산	21.6%	국가	26.6%	세계	19.5%
3	국가	18.5%	공산	25.5%	공산	19.0%
4	평화	17.0%	사람	19.7%	국민	18.4%
5	국민	15.2%	민주	13.3%	민주	14.4%
6	민주	13.9%	정부	12.3%	국가	12.9%
7	한국	10.8%	한국/미국	12.1%	민족	12.3%
8	침략	10.4%			침략	11.8%
9	민족	10.4%	국민	10.6%	번영	11.0%
10	사람	9.3%	보호	9.9%	아시아	10.9%
11	아시아	8.1%	독립	8.9%	월남	10.5%
12	정부	7.7%	침략	8.5%	한국	9.9%
13	우방	7.3%	민족	7.5%	우방	9.3%
14	미국	7.3%	평화	7.2%	노력/조국	7.6%
15	번영	6.8%	통일	6.3%		

※ 비율은 '자유' 개념의 빈도로 각 개념의 빈도를 나눈 값
(이승만=1,504, 박정희=2,201)

두 대통령 모두 냉전적 맥락에서 '자유' 개념을 주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표 부록-4>는 이승만과 박정희 모두 '자유' 개념을 냉전 진영론의 맥락에서 사용한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승만과 박정희 시대의 관제 자유가 반공과 동일시되었다는 점이 그대로 드러난다. 따라서 두 대통령의 '자유' 개념은 큰 틀에서는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자유'의 주체와 관련된 부분은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승만은 '사람'을 '국민'보다 훨씬 자주 사용한 반면, 박정희는 '국민'과 '민족'을 앞세웠다. 이는 언어적 습관에 따른 결과일 수도 있지만, 이승만이 최소한 연설문에서는 비교적 자유주의적 가치를 존중했던 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박정희는 자유주의적 가치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거부감을 갖고 있었

던 데 비해 이승만은 그렇지 않았다. 최소한 말과 글로는 그러한 가치들을 언급하고 인정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반면 박정희는 냉전 개발 동원체제를 갖춰가면서 집단주체를 호명할 필요성을 느꼈기에 국민과 민족을 불러냈을 뿐 쿠데타 직후를 제외하면 자신의 통치를 자유주의 담론으로 정당화하려 하지 않았다. 이는 '자유' 개념이 포함된 복합 개념의 빈도를 통해서도 볼 수 있다.

<표 부록-5> 대통령 연설문에서 '자유' 개념이 포함된 주요 복합 개념의 빈도

복합 개념	전체		이승만		박정희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자유민주	115	3.1%	6	0.4%	109	5.0%
자유국가	233	6.3%	195	13.0%	38	1.7%
자유세계	278	7.5%	142	9.4%	136	6.2%
자유우방	158	4.3%	7	0.5%	151	6.9%
자유진영	87	2.3%	11	0.7%	76	3.5%
자유선거	17	0.5%	10	0.7%	7	0.3%
자유경제	8	0.2%	0	0.0%	8	0.4%
자유경쟁	4	0.1%	0	0.0%	4	0.2%
자유권(리)	127	3.4%	125	8.3%	2	0.1%

※ 비율은 '자유' 개념의 빈도로 각 개념의 빈도를 나눈 값

본문에서 언급했듯 박정희는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했다. 특히 쿠데타 이후 군정 기간 중에 박정희는 국내외의 의구심, 특히 미국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를 자주 언급했다. 반면 이승만은 '자유민주주의' 개념을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

냉전 진영론적 복합 개념의 사용은 둘 모두에게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다만 선호하는 표현이 이승만은 '자유국가'와 '자유세계'였고, 박정희는 '자유우방'과 '자유세계'였다는 차이를 보일 뿐이다. <표 부록-5>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박정희는 '자유아시아(아세아)'라는 표현도 자주 사용했다(53회). 이는 중국의 핵무장, 월남전 참전 등의 주제와 주로 연관되었다.

복합 개념과 관련하여 이승만과 박정희의 가장 큰 차이는 '자유권(리)'에 대한 빈도에 있다. 앞서 언급했듯 이승만의 통치 양식을 자유주의적이었다고 할 수는 없으나, 최소한 연설문 상에서는 '자유권'을 옹호하는 태도를 보

였다. 이는 이승만 집권기에는 '자유'가 통치자와 『사상계』 지식인들의 공통 준거였지만, 박정희 시기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준다. 박정희는 안보와 개발로 자신의 통치를 정당화하는 데 주력했다. 박정희는 반공과 개발로 국민을 동원하는 담론에 '자유' 개념을 수단적으로 사용했다.

이승만과 박정희의 차이만큼 저항 세력의 대응도 달라져야 했다. 『사상계』가 강한 영향력을 발휘했던 4월혁명이 '자유와 민권'이라는 기치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자유'가 보편적인 가치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박정희 시대에는 그렇지 않았다. 박정희는 '자유'에 근거한 정치인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자유와 경제성장이 양자택일로 제시된 상황에서 '자유'를 위한 동원은 확장성을 갖지 못했다. 박정희 시대에 권위주의적 색채가 짙어지면서 '자유'의 문제는 어느 덧 "소수 사람이나 알아듣는 잇슈"가 되어가고 있었다.[425] 1960년대의 『사상계』의 자유민주주의론이 지속적으로 한계에 부딪히게 된 데는 '자유'에 대한 인식의 변화 또한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의미연결망 분석을 통해 이승만과 박정희의 연설문에서 나타난 '자유' 담론의 차이점을 자세히 살펴보겠다.

425) 장이욱, "大學의 魂을 哭한다: 소위 「政治敎授」波動을 보고", 『사상계』 153호(1965. 11), 35쪽.

<표 부록-6> 이승만 연설문 중심성 분석 결과

	연결중심성		근접중심성		매개중심성		아이겐벡터		빈도
순위	개념	값	개념	값	개념	값	개념	값	
1	세계	2379	공산/국가	0.812	공산	134.079	세계	0.592	세계
2	국가	2291			국가	116.853	국가	0.568	국가
3	공산	2128	세계/사람	0.789	사람	109.631	공산	0.534	공산
4	사람	1684			세계	92.966	사람	0.409	사람
5	민주	1352	민주	0.718	민주	45.167	민주	0.323	민주
6	정부	1074	한국	0.675	한국	30.991	정부	0.270	정부
7	보호	976	정부/보호	0.667	정부	22.912	미국	0.245	한국/미국
8	한국	935			보호	12.798	보호	0.242	
9	미국	904	독립	0.644	미국	11.468	한국	0.239	국민
10	독립	800	국민/미국	0.636	국민	10.641	국민	0.214	보호
11	국민	797			침략	9.097	침략	0.200	독립
12	침략	741	통일	0.629	독립	8.808	독립	0.198	침략
13	권리	595	침략	0.622	민족	6.009	평화	0.156	민족
14	통일	563	평화/민족	0.615	평화	5.970	민족	0.153	평화
15	법	562			희생	5.310	법	0.152	통일
	자유	6533		0.966		458.053		1.000	

‘세계’ 개념은 ‘자유’ 개념이 사용된 이승만 연설문의 문장에서 가장 많이 발견된 개념이지만, 매개중심성은 4번째였다. 반면 ‘공산’ 개념의 근접중심성과 매개중심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승만의 ‘자유’ 담론에서 공산주의가 여러 개념들을 매개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공산주의가 ‘자유’ 개념의 맥락을 설정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권리’ 개념의 빈도순위가 16위, ‘법’ 개념의 빈도순위가 17위였다는 점에서 연결중심성 순위에 ‘권리’ 개념이 13위, ‘법’ 개념이 15위에 있는 것은 빈도순위와 큰 차이가 없다고 하겠다. 그럼에도 ‘권리’ 개념이 이승만 연설문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연결중심성을 가진 개념 중 하나였다는 점 자체가 중요하다. 앞서 언급했듯 이승만은 박정희에 비해 ‘권리’ 개념을 원칙적 수준에서나마 강조했다. 박정희 연설문에서 ‘권리’ 개념은 빈도순위에서 42위였다는 점은 두 대통령의 사상적 배경의 차이를 보여주는 대목이라 하겠다.

이승만은 지구적 냉전 체제를 배경으로 ‘자유’ 개념을 사용했다. 공산주

의는 ‘자유’ 담론의 의미를 전체적으로 묶어내는 개념이었다. 그럼에도 이승만은 국내의 ‘자유’를 말할 때, ‘사람’의 ‘권리’로서 비교적 자유주의에 충실한 의미를 담고자 했다. 그러나 이승만에게 자유란 궁극적으로 세계적 차원의 냉전이 열전으로 전환되고, 그 전쟁에서 ‘자유세계’가 승리할 때 현실화될 수 있는 것이었다.

<표 부록-7> 박정희 연설문 중심성 분석 결과

	연결중심성		근접중심성		매개중심성		아이겐벡터		빈도
순위	개념	값	개념	값	개념	값	개념	값	
1	평화	3175	국민	0.903	국민	116.300	평화	0.507	평화
2	공산	2681	평화	0.848	공산	78.842	공산	0.433	세계
3	국민	2626	공산	0.836	평화	78.014	세계	0.422	공산
4	세계	2435	세계	0.824	세계	60.048	국민	0.392	국민
5	침략	1833	국가	0.812	민주	55.006	침략	0.309	민주
6	민주	1807	민주	0.789	국가	47.689	국가	0.280	국가
7	국가	1802	민족	0.757	민족	36.254	월남	0.273	민족
8	민족	1673	침략	0.747	침략	28.931	민주	0.272	침략
9	월남	1471	한국/노력	0.718	사회	17.182	민족	0.262	번영
10	아시아	1369			경제	15.799	아시아	0.242	아시아
11	번영	1352	번영/우방	0.709	한국	14.790	번영	0.225	월남
12	한국	1262			우방	14.600	한국	0.214	한국
13	우방	1185	경제	0.691	번영	14.162	수호	0.209	우방
14	수호	1128	사회/아시아	0.683	보장	11.667	우방	0.200	수호
15	경제	1044			노력	11.468	안전	0.165	노력/조국
	자유	10839		1.000		266.850		1.000	

박정희 연설문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국민’ 개념의 근접중심성과 매개중심성이 가장 높다는 점이다. 이는 박정희 시대에 거의 모든 분야에서 ‘국민’이 호명되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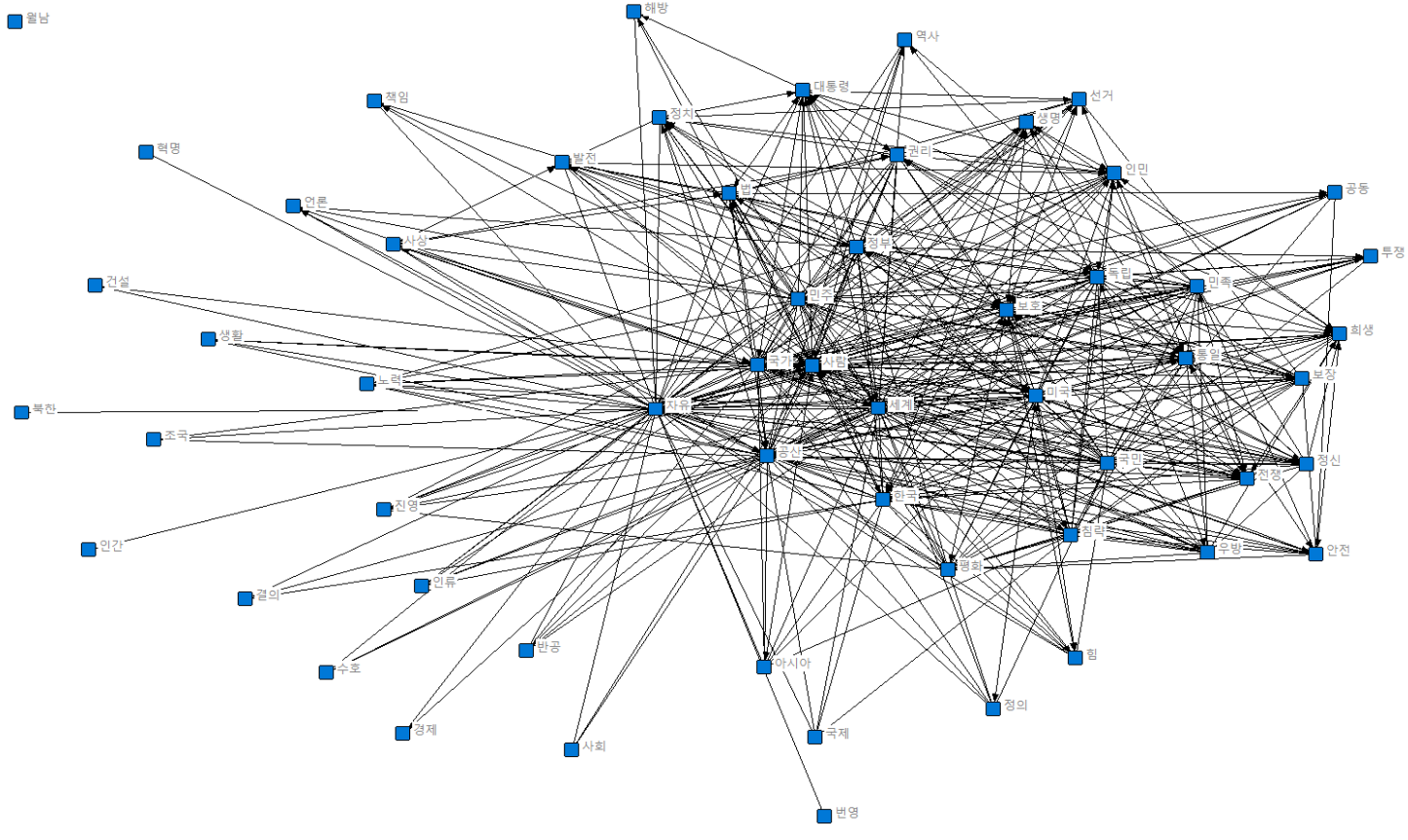
반면 ‘아시아’와 ‘월남’ 개념은 빈도에 비해 낮은 근접중심성과 매개중심성 값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아시아의 냉전과 열전 상황을 묘사하는데 두 개념이 집중적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개념의 사용이 특정한 맥락에 집중되어 주변적 개념들과 연결망이 많지 않은 경우 근접중심성과 매개

중심성이 빈도나 연결중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측정되는데 이는 이 두 개념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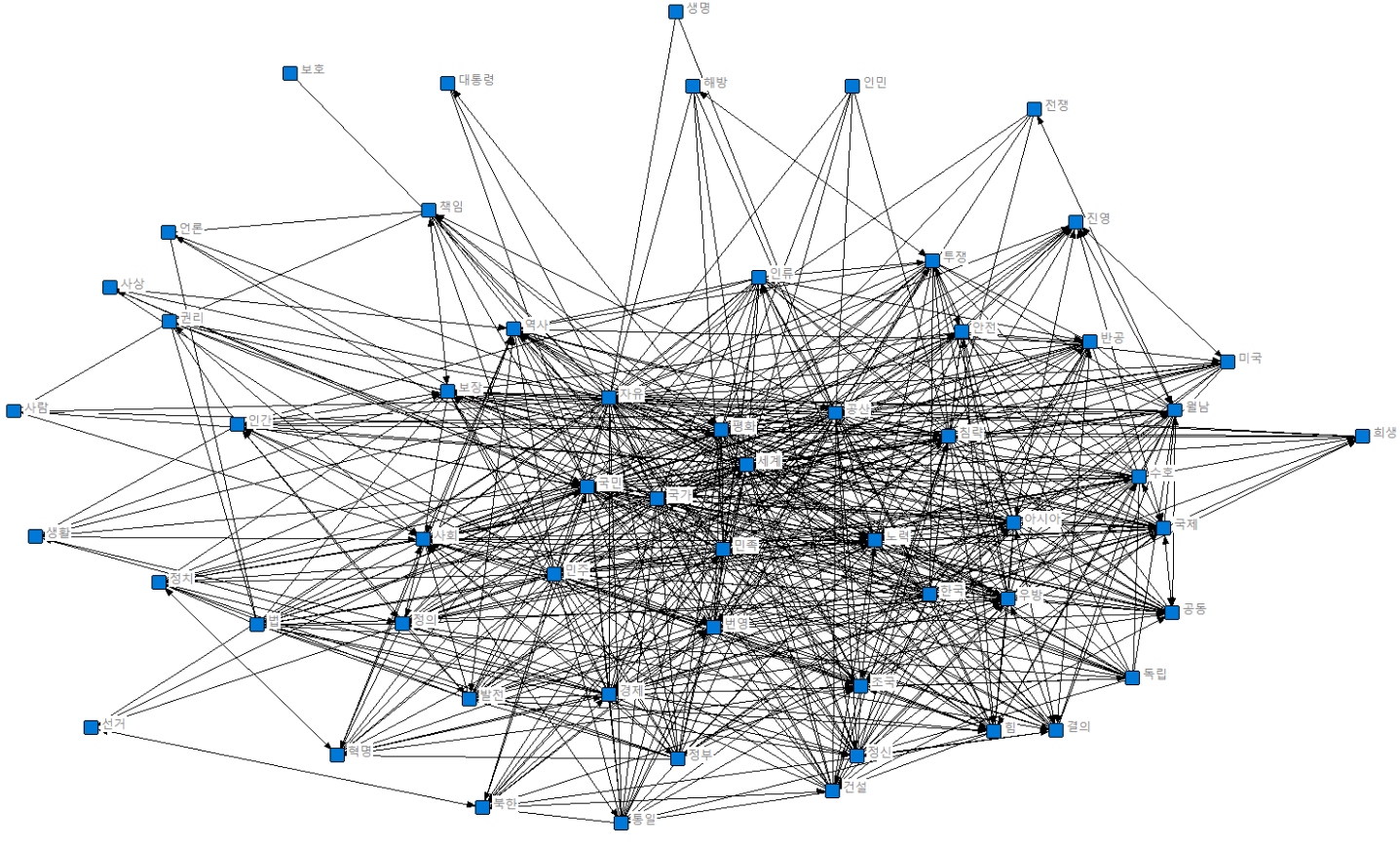
‘경제’ 개념은 빈도순위에서는 17위였으나 연결중심성은 15위, 근접중심성 13위, 매개중심성에서 10위에 위치했다. ‘사회’ 개념도 빈도순위에서는 18위였으나 근접중심성 14위, 매개중심성 9위였다. 두 개념 모두 이승만 연설문에서보다 빈도순위도 크게 높아졌고(이승만 연설문에서 ‘경제’는 49위, ‘사회’는 50위), 의미연결망에서 갖는 중심성 또한 크게 증가했다. 박정희 연설문 또한 전반적인 기조는 냉전 진영론과 체제 대결에 있었지만, ‘경제’와 ‘사회’ 또한 상대적으로 중요한 개념으로 다루어졌다. 이는 박정희가 ‘자유’ 개념을 근대화의 과제와 연동시킨 데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냉전은 여전히 박정희의 말 속에서 절대적인 규정력을 가진 것이었다. 그러나 이를 국내의 근대화 과제와 연결시키고 전방위적으로 ‘국민’을 호명하여 총력전적 동원으로 나아가도록 한 것이 박정희 연설문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부록-5> 이승만 연설문의 의미연결망 시각화



<그림 부록-6> 박정희 연설문의 의미연결망 시각화



한 가지 더 확인해 볼 것은 1960년 후반에 나타나는 박정희의 '자유' 담론 변화다. 1·21 사건, 푸에블로호 나포 사건이 있었던 1968년을 전환점으로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자유' 개념과 함께 사용된 개념들의 빈도와 중심성 분석 결과를 통해 1968년 전후의 담론 변화를 포착할 수 있다.

<표 부록-8> 1961~67년 박정희 연설문 중심성 분석 결과

	연결중심성		근접중심성		매개중심성		아이겐벡터		빈도
순위	개념	값	개념	값	개념	값	개념	값	
1	평화	2004	국민	0.889	국민	90.769	평화	0.442	세계
2	공산	1944	국가	0.862	공산	64.815	세계	0.434	평화
3	국민	1833	공산	0.848	국가	57.003	공산	0.428	공산
4	세계	1831	평화	0.824	민주	54.103	국민	0.373	국민
5	민주	1472	민족	0.812	민족	50.267	침략	0.316	민주
6	국가	1433	세계/민주	0.800	평화	40.287	민주	0.298	국가
7	침략	1388			세계	39.024	국가	0.297	민족
8	민족	1308	침략	0.767	침략	27.219	민족	0.274	침략
9	월남	1080	우방	0.747	우방	19.176	월남	0.269	아시아
10	우방	1037	한국	0.727	조국	18.598	아시아	0.239	한국
11	아시아	999	경제	0.718	한국	17.353	우방	0.231	우방
12	한국	979	번영/아시아	0.709	보장	16.616	한국	0.227	월남
13	번영	881			경제	16.493	수호	0.207	번영
14	수호	842	조국	0.700	수호	14.939	번영	0.197	수호
15	경제	793	수호	0.691	사회	14.472	반공	0.191	반공
	자유	8009		1.000		254.597		1.000	

<표 부록-9> 1968~72년 박정희 연설문 중심성 분석 결과

	연결중심성		근접중심성		매개중심성		아이겐벡터		빈도
순위	개념	값	개념	값	개념	값	개념	값	
1	평화	1172	평화	0.848	평화	111.391	평화	0.657	평화
2	국민	787	국민	0.812	국민	96.094	국민	0.435	공산
3	공산	751	공산	0.800	공산	81.871	공산	0.432	국민
4	세계	595	세계	0.767	세계	52.800	세계	0.375	세계
5	번영	498	번영	0.718	국가	38.845	번영	0.297	번영
6	침략	461	국가	0.709	북한	38.357	침략	0.276	침략
7	민족	408	노력	0.691	민족	37.291	월남	0.275	월남
8	월남	407	민족	0.683	번영	23.501	노력	0.251	아시아
9	노력	404	침략	0.675	노력	20.406	아시아	0.247	노력
10	국가/아시아	391	수호/발전	0.667	정신	19.688	민족	0.224	민족
11					침략	16.391	국가	0.222	국가
12	발전	354	민주/한국	0.659	발전	15.503	수호	0.215	민주
13	수호	353			한국	15.384	민주	0.197	북한
14	사회	339	사회/북한	0.651	민주	14.452	발전/북한	0.191	수호
15	민주	326			수호	13.836			조국
	자유	2830		0.966		291.903		1.000	

전반적으로 1961~67년의 기간과 1968~72년의 기간에 큰 틀의 변화는 없었다. 그럼에도 두 가지에 주목해볼 수 있다. 첫째는 ‘민주’ 개념의 중요성이 하락한 것이다. 4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박정희 연설문에서 ‘자유민주주의’ 개념은 군정 기간에 집중적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본다면 박정희는 ‘자유’ 개념을 ‘민주’ 개념과 함께 말하기보다 ‘평화’와의 관계 속에서 더 자주 언급했다. 1968년 이후에는 이러한 경향이 더욱 분명해졌으며 ‘번영’ 개념 또한 ‘민주’ 개념보다 자주 등장했다. 1968년 이후 ‘자유’는 ‘평화’와 ‘번영’을 위해 유보되어야 할 것으로서 그 가치가 저락했다. 박정희 연설문에서 평화는 안보를, 번영은 개발과 경제성장을 의미했다. 1960년대 후반부터 공식적으로 안보와 개발이 자유보다 우선시되는 가치로 표명되는 양상을 보였다.

둘째는 ‘우방’ 개념이 1968년 이후 중요하게 언급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우방’ 개념은 군사적, 경제적 원조를 제공하는 ‘자유세계’ 내의 국가, 그 중

에서도 미국을 지칭하는 것이었다. 1960년대 후반 미국이 원조 축소를 선언한 상황에서 박정희는 더 이상 ‘자유우방’의 후원에 입각하지 않고 독자적인 생존을 모색했다. 위기는 권력 기반 강화를 위한 기회이기도 했다(최민석, 2018). 이러한 상황 변화에 따라 박정희는 ‘자유’ 개념을 ‘민주’ 개념과 분리시키고, 자유주의적 가치들을 담론 내에서도 지워갈 수 있었다.

참고문헌

1. 자료

『사상』(1952. 8 ~ 1952. 12).
『사상계』(1953. 4 ~ 1970. 5).
『새벽』(1954. 6 ~ 1960. 12).
『신천지』(1946. 2 ~ 1954. 10).
『청맥』(1964. 8 ~ 1967. 6).

국사편찬위원회 편(2002), 『미국소재 한국사 자료 조사보고, 1. NARA 소장 RG 59·RG 84 외』, 국사편찬위원회.
국사편찬위원회 편(2016), 『미국소재 한국사 자료 조사보고, Ⅵ』, 국사편찬위원회.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http://db.history.go.kr/).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대통령연설문(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 http://www.pa.go.kr/).
대한민국 외무부(1959), “경향신문폐간에 따른 근거 법률[군정법령제88호]”, 국가기록원 소장 문서.
대한민국 정부(1961), “박정희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 미국 방문, 1961. 11. 12 - 25”, 국가기록원 소장 문서.
대한민국 정부(1962),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
박정희(1965), 『국가재건최고회의의장 대통령권한대행 박정희장군담화문집』, 대통령비서실.
박정희(1961), 『지도자도: 혁명과정에 처하여』, 국가재건최고회의.
박정희(1962), 『우리 민족의 나갈 길』, 동아출판사.
박정희(1963), 『국가와 혁명과 나』, 향문사.
박정희(1971), 『민족의 저력』, 광명출판사.
한치진(1948), 『행동민주주의: 속민주주의원론 권5』, 조선문화연구사.

이문휘 선생과의 이메일 인터뷰 답신(2021. 1. 4).
김진현 전 장관과의 인터뷰(2021. 1. 13)

2. 논문 및 단행본

강명희(2014), “20세기 전반기 한국 자유주의의 형성과 굴절”, 『인문논총』 제71권 제4호, 229~267쪽.
강정인(2008), “민주화 이전 한국 자유주의의 이념적 특성과 발현양상에 대한 고찰”, 『아세아연구』 제51권 4호, 115~147쪽.
고지혜(2016), “『사상계』 신인문학상과 1960년대 소설의 형성”, 『우리문학연구』 49집, 161~197쪽.
국순옥(1994),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란 무엇인가”, 『민주법학』 8권, 125~165쪽.
권보드래(2009), “실존, 자유부인, 프래그머티즘: 1950년대의 두 가지 ‘자유’ 개념과 문화”, 『아프레걸 사상계를 읽다: 1950년대 문화의 자유와 통제』, 동국대학교출판부, 61~104쪽.
권보드래(2011), “『사상계』와 세계문화자유회의: 1950-1960년대 냉전 이데올로기의 세계적 연쇄와 한국”, 『아세아연구』 제54권 2호, 246~288쪽.
김건우(2003), 『사상계와 1950년대 문학』, 소명출판.
김건우(2009), “1964년의 담론 지형: 반공주의, 민족주의, 민주주의, 자유주의, 성장주의”, 『대중서사연구』 제22호, 71~90쪽.
김건우(2017), 『대한민국의 설계자들: 학병세대와 한국 우익의 기원』, 느티나무책방.
김경숙(2018), “『사상계』의 편집양식과 담론연구(Ⅰ): 『사상』 ~ 1959년까지의 『사상계』를 중심으로”, 『민족문화논총』 제70집, 73~106쪽.
김동춘(2018), “한국형 신자유주의 기원으로서 반공자유주의: 반공국가, 발전국가와 신자유주의의 연속성”, 『경제와사회』 제118호, 240~276쪽.

김득중(2009), 『'빨갱이'의 탄생: 여순사건과 반공 국가의 형성』, 선인.
김명임(2015), "자유의지와 실천의 문제: 『사상계』에 나타난 기독교 관련 글을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제38집, 227~257쪽.
김미란(2012), "『사상계』와 아카데미즘, 그리고 '학술적인 것'에 대한 대중적 인식의 형성 방식: 1953~1960년까지를 중심으로", 『대중서사연구』 제28호, 193~234쪽.
김보현(2003), "『사상계』의 경제개발론, 박정희 정권과 얼마나 달랐다?: 개발주의에 저항한 개발주의", 『정치비평』 10권, 345~380쪽.
김보현(2004), 『박정희정권기 경제개발: 민족주의와 발전』, 갈무리.
김복순(2013), "학술교양의 사상형식과 '반공 로컬-냉전지(知)'의 젠더: 1950년대 『사상계』를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제29호, 73~125쪽.
김복순(2020), "『청맥』에 나타난 리저널리즘의 탈냉전지(知)와 트랜스내셔널/로컬의 젠더: 특집 및 권두언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제50호, 225~270쪽.
김삼룡(2012), "독일 기본법에서의 민주적 질서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공법연구』 제41집 제2호, 249~287쪽.
김삼웅(2009), 『장준하 평전』, 시대의창.
김상태(2008), "1950년대~1960년대 초반 평안도 출신 『사상계』 지식인층의 사상", 『한국사상과 문화』 제45집, 201~232쪽.
김수자(2004), "이승만의 일민주의 제창과 논리", 『한국사상사학』 제22집, 437~471쪽.
김영록(1992), 『내 삶의 이야기』, 어학사.
김용학·김영진(2016), 『사회연결망 분석』 제4판, 박영사.
김윤태(2012), 『한국의 재벌과 발전국가: 고도성장과 독재, 지배계급의 형성』, 한울아카데미.
김일영(2000), "이승만 정부에서의 외교정책과 국내정치", 『국제정치논총』 제39집 3호, 243~262쪽.
김일영(2008), "현대 한국에서 자유주의의 전개과정: 헌법규범과 헌법현실의 괴리와 극복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29집 2호, 375~413쪽.

김종필(2016), 『김종필 증언록 1』, 중앙일보 김종필증언록팀 엮음, 와이즈베리.
김준현(2009), “1940년대 후반 정치담론과 문학담론의 관계: 『신천지』에 나타난 ‘민족’과 ‘민족문학’ 기호를 중심으로”, 『상허학보』 27, 51~84쪽.
김진기(2005), “반공에 전유된 자유, 혹은 자유주의”, 『상허학보』 15, 157~193쪽.
김진기(2013), “손창섭 소설과 『사상계』”, 『한국어문학』 제84집, 327~364쪽.
김효재(2015), “1950년대 종합지 『새벽』의 정신적 지향(1)”, 『한국현대문학연구』 46, 245~299쪽.
김형아(2005), 『유신과 중화학공업: 박정희의 양날의 선택』, 신명주 옮김, 일조각.
나연준(2019), “이동화의 민주사회주의와 시민적 근대성”, 『한국근현대사연구』 제90집, 187~224쪽.
나인호(2002), “독일 개념사와 새로운 역사학”, 『역사학보』 제174집, 293~328쪽.
노명식(2011), 『자유주의의 역사』, 책과함께.
노종호(1995), “나에게 사상계가 의미하는 것”, 장준하선생20주기추모문집간행위원회 편,『광복50년과 장준하: 장준하선생20주기 추모문집』, 209~214쪽.
도진순·노영기(2004), “군부엘리트의 등장과 지배양식의 변화”, 『1960년대 한국의 근대화와 지식인』, 선인, 59~105쪽.
마상윤(2016), “자유민주주의의 공간: 1960년대 전반기 『사상계』를 중심으로”, 『한국정치연구』 제25집 제2호, 175~200쪽.
문지영(2011), 『지배와 저항: 한국 자유주의의 두 얼굴』, 후마니타스.
박명규(2009), 『국민·인민·시민: 개념사로 본 한국의 정치주체』, 소화.
박명규(2018), “탈식민주체의 형성과 분열: 민족개념의 변용과 전유”, 하영선·손열 공편, 『냉전기 한국 사회과학 개념사』, 대한민국역사박물관, 141~185쪽.
박세일(2008), “공동체자유주의: 이념과 정책”, 박세일·나성린·신도철 공편,

『공동체자유주의: 이념과 정책』, 나남, 219~278쪽.
박찬표(2007), 『한국의 국가 형성과 민주주의: 냉전 자유주의와 보수적 민주주의의 기원』, 후마니타스.
박찬표(2008), “한국 자유민주주의의 초상: ‘민주주의 과잉’인가 ‘자유주의 결핍’인가”, 『아세아연구』 제51권 4호, 148~181쪽.
박태균(2007), 『원형과 변용: 한국 경제개발계획의 기원』, 서울대학교출판부.
박한우·Loet Leydesdorff(2001), “한국어의 내용분석을 위한 KrKwic 프로그램의 이해와 적용: Daum.net에서 제공된 지역혁신에 관한 뉴스를 대상으로”,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 6, No. 5, pp. 1377~1387.
서병훈(1993), ““우리는 이제 모두 사회주의자?”: 사회적 자유주의 또는 신자유주의”, 『사회비평』 제9호, 47~92쪽.
서병훈(1996), “공공선 자유주의: 토마스 힐 그린의 정치사상”, 『한국정치학회보』 29집 4호, 89~114쪽.
서중석(2004), 『이승만의 정치 이데올로기』, 역사비평사.
신진욱(2011), “비판적 담론 분석과 비판적·해방적 학문”, 『경제와사회』 제89호. 10~45쪽.
신진욱(2020), “세대불평등 담론의 정치적 계보와 의미론: ‘386’ 담론의 구조와 변화에 대한 비판적 담론분석, 1990~2019년”, 『경제와사회』 제126호, 407~442쪽.
오병수(2012), “냉전시기 胡適의 반공 민주주의 노선의 형성: 중국 자유주의의 이념화 과정(1941~1953) 시론”, 『동양사학연구』 제118집, 231~279쪽.
윤상현(2013), “『사상계』의 근대 국민 주체 형성 기획: 자유주의적 민족주의 담론을 중심으로”, 『개념과 소통』 제11호, 47~83쪽.
윤상현(2019), “『사상계』의 시기적 변화와 ‘개인’ 개념의 양상”, 『인문논총』 제49집, 153~180쪽.
윤해동(2018), “‘냉전자유주의’와 한국 정치의 ‘탈자유주의적’ 전환: 이승만과 박정희를 중심으로”, 『동북아역사논총』 59호, 106~149쪽.
이근식(2001), “자유주의와 한국사회”, 이근식·황경식 편, 『자유주의란 무

엇인가』, 삼성경제연구소, 13~75쪽.
이기형(2006), “담론분석과 담론의 정치학: 푸코의 작업과 비판적 담론분석을 중심으로”, 『언론과 사회』 14권 3호, 106~145쪽.
이나미(2000), “「독립신문」에 나타난 자유주의 사상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논문.
이동헌(2012), “1960년대 <청맥> 지식인 집단의 탈식민 민족주의 담론과 문화”, 『역사와 문화』 24호, 3~29쪽.
이만갑(1995), “국토건설사업과 장준하선생”, 장준하선생20주기추모문집간행위원회 편, 『광복50년과 장준하: 장준하선생20주기 추모문집』, 100~107쪽.
이문휘(1995), “문화강연회 기치를 높이 들고”, 장준하선생20주기추모문집간행위원회 편, 『광복50년과 장준하: 장준하선생20주기 추모문집』, 157~163쪽.
이봉범(2010), “잡지 『신천지』의 매체 전략과 문학”, 『한국문학연구』 39집, 199~267쪽.
이상록(2007), “1960~70년대 비판적 지식인들의 근대화 인식: 『사상계』·『씨올의 소리』·크리스찬 아카데미 진영을 중심으로”, 『역사문제연구』 제18호, 215~251쪽.
이상록(2010), “『사상계』에 나타난 자유민주주의론 연구”, 한양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이상록(2020),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사상계』』,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이수상(2014), “언어 네트워크 분석 방법을 활용한 학술논문의 내용분석”, 『정보관리학회지』 제31권 제4호, 49~68쪽.
이용성(1997), “『사상계』의 지식인과 잡지이념에 대한 연구”, 『출판문화연구』 제5권 제1호, 55~72쪽.
이용성(2003), “1960년대 비판적 지식인 잡지 연구: 『사상계』의 위기와 『창작과 비평』의 등장을 중심으로”, 『한국학논집』 제37집, 193~214쪽.
이철순(2011), “미국의 자유주의 전통과 한국 정치세력에 대한 정책(1945-60), 『국제정치연구』 제14집 2호, 77~105쪽.

이철호(2013), “『사상계』 초기 서북계 기독교 엘리트의 자유민주주의 구상: 김재준의 에밀 브루너(Emil Brunner) 신학 수용과 「바비도」 재독”, 『한국문학연구』 45집, 53~80쪽.
이하나(2012), “1950~60년대 반공주의 담론과 감성 정치”, 『사회와 역사』 제95집, 201~241쪽.
임대식(2003), “1960년대 초반 지식인들의 현실인식”, 『역사비평』 통권 65호, 301~336쪽.
장규식(2011), “미군정하 흥사단 계열 지식인의 냉전 인식과 국가건설 구상”, 『한국사상사학』 제38집, 245~285쪽.
장규식(2014), “1950~70년대 ‘사상계’ 지식인의 분단인식과 민족주의론의 궤적”, 『한국사연구』 167호, 289~339쪽.
장세진(2013), “‘시민’의 텔로스(telos)와 1960년대 중반 『사상계』의 변전: 6·3운동 국면을 중심으로”, 『서강인문논총』 38집, 43~83쪽.
장세진(2018), “사라진 중도 자유주의의 상상력: 염상섭의 『효풍』을 통해 본 ‘중간파(남북협상파)’의 행방”, 『숨겨진 미래: 탈냉전 상상의 계보 1945~1972』, 푸른역사, 18~58쪽.
장은주(2012), “한국 진보적 자유주의 전통의 민주적-공화주의적 재구성”, 『사회와 철학』 제23집, 251~288쪽.
장준하선생20주기추모문집간행위원회 편(1995), 『광복50년과 장준하: 장준하선생20주기 추모문집』.
전상숙(2010), “4·19와 장면정부의 수립: 『사상계』의 당대 정치담론을 통해 본 재고찰”,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32집 1호, 41~74쪽.
전인권(2006), 『박정희 평전: 박정희의 정치사상과 행동에 관한 전기적 연구』, 이학사.
정문상(2013), “1950년대 전반 대만자유주의자의 자유주의 모색: 『自由中國』 논설 분석을 중심으로, 『중국근현대사연구』 제60집, 265~295쪽.
정승현(2017), “이승만과 한국 자유주의: 중기 사상을 중심으로”, 『현대정치연구』 제10권 제1호, 255~286쪽.
정영진(2015), “1950년대 지식인의 자유주의 담론 연구: 『사상계』를 중심으로”, 『사회와 철학』 제29집, 157~184쪽.

정용욱(2004), “5.16쿠데타 이후 지식인의 분화와 재편”, 『1960년대 한국의 근대화와 지식인』, 선인, 157~185쪽.
정용화(2006), “근대적 개인의 형성과 민족: 일제하 한국자유주의의 두 유형”, 『한국정치학회보』 제40집 제1호, 5~23쪽.
정진아(2012), “1950년대 후반~1960년대 초반 ‘사상계 경제팀’의 개발 담론”, 『사학연구』 제105호, 321~364쪽.
정태욱(2006), “해방 60년과 한국사회의 자유주의”, 『시민과 세계』 8, 335~357쪽.
정혜경(2011), “『사상계』 등단 신인여성작가 소설에 나타난 청년 표상”, 『우리어문연구』 39집, 579~609쪽.
정혜경(2013), “강용준 초기 소설과 『사상계』 ‘자유’ 담론”, 『현대문학이론연구』 55권, 279~301쪽.
정혜경(2016), “4·19의 장(場)과 『사상계』 신인작가들의 소설”, 『현대소설연구』 제62호, 371~403쪽.
조경란(2011), “1950년대 동아시아의 반공 자유주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재검토: 『자유중국』과 『사상계』의 대항담론 형성 가능성”, 『시대와 철학』 제22권 1호, 115~152쪽.
차민경·권상희(2014), “언론의 ‘창조경제’에 대한 의제설정 의미연결망 분석”, 『한국언론학보』 제59권 2호, 88~120쪽.
최민석(2018), “박정희 시대 추곡수매가 정책의 정치경제”, 『사회와 역사』 제120집, 121~152쪽.
최선웅(2013), “장덕수의 사회적 자유주의 사상과 정치활동”,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최선웅(2015), “1910년대 조선에서 자유주의의 두 가지 유형과 성격”, 『역사와 담론』 제75집, 93~130쪽.
최장집(1996), 『한국민주주의의 조건과 전망』, 나남출판.
최창근(2016), “1950년대 후반 ‘자유’의 해석을 둘러싼 갈등: 『사상계』에 실린 평론과 심사평을 중심으로”, 『어문논집』 제67집, 257~288쪽.
한영현(2014), “『사상계』의 시민사회론을 통해 본 젠더 인식”, 『한국민족문화』 50, 123~154쪽.
홍두승(2008), 『사회조사분석』 제3판, 다산출판사.

황병주(2008), “박정희 체제의 지배담론: 근대화 담론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황병주(2009), “1960년대 비판적 지식인 사회의 민중인식”, 『기억과 전망』 21호, 110~147쪽.

황병주(2015), “유신, 자본과의 공모 혹은 대결”, 『1970, 박정희 모더니즘: 유신에서 선데이서울까지』, 천년의상상, 31~44쪽.

Arblaster, Anthony(2007), 『서구 자유주의의 융성과 쇠퇴』, 조기제 옮김, 나남.

Babbie, Earl(2013), 『사회조사방법론』, 고성호 외 옮김, 센게이지러닝.

Berger, Peter L. and Thomas Luckmann(2013[1966]), 『실재의 사회적 구성』, 하홍규 옮김, 문학과지성사.

Berlin, Isaish(2014), 『이사야 벌린의 자유론』, 박동천 옮김, 아카넷.

Blyth, Mark(2002), *Great Transformations: Economic Ideas and Institutional Change in The Twentieth Century*, Cambridge University Press.

Bobbio, Norberto(1992),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문학과지성사.

Carley, K.(1993), “Coding Choices for Textual Analysis : A Comparison of Content Analysis and Map Analysis”, *Sociological Methodology* 23, pp. 75~126.

Cummings, Bruce(1999), “Webs with No Spiders, Spiders with No Webs”, *The Development State*, edited by Meredith Woo-Cumings, Cornell University Press, pp. 61~92.

Duriau, Vincent J., Rhonda K. Reger, Michael D. Pfarrer(2007), “A Content Analysis of the Content Analysis Literature in Organization Studies: Research Themes, Data Sources, and Methodological Refinements”, *Organizational Research Methods* 10(1), pp. 5~34.

Fairclough, Norman(2012), 『담화 분석 방법: 사회 조사연구를 위한 텍스트 분석』, 김지홍 옮김, 도서출판 경진.

Foulcault, Michel(1994), “자유의 실천으로서 자아에의 배려”, 『미셸 푸코의 권력이론』, 정일준 편역, 새물결, 99~125쪽.

Green, Thomas Hill(2004[1883]), 『윤리학 서설』, 서병훈 옮김, 한길사.
Hobhouse, Leonard Trelawny(2006[1911]), 『자유주의의 본질』, 김성균 옮김, 현대미학사.
Hobson, J. A.(1909), *The Crisis of Liberalism: New Issues of Democracy*, P. S. King & Son Orchard House.
Keller, Reiner(2011), "The Sociology of Knowledge Approach to Discourse(SKAD)", *Human Studies* 34, pp. 43~65.
Kim, Michael(2007), "The Discursive Foundations of the South Korean Developmental State: Sasanggye and the Reception of Modernization Theory", *Korean Observer* 38(3), pp. 363~385.
Koselleck, Reinhart(1998), 『지나간 미래』, 한철 옮김, 문학동네.
Laclau, Ernesto and Chantal Mouffe(2012), 『헤게모니와 사회주의 전략: 급진 민주주의 정치를 향하여』, 이승원 옮김, 후마니타스.
Locke, John(1996[1689]), 『통치론: 시민정부의 참된 기원, 범위 및 그 목적에 관한 시론』, 강정인·문지영 옮김, 까치.
Mannheim, Karl(2012[1929]), 『이데올로기와 유토피아』, 임석진 옮김, 김영사.
Mill, John Stuart(2010[1859]), 『자유론』, 서병훈 옮김, 책세상.
Müller, Jan-Werner(2008), "Fear and Freedom: On 'Cold War Liberalism'",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Theory*, 7(1), pp. 45~64.
Radosh, Ronald(2000), "The Legacy of the Anti-Communist Liberal Intellectuals", *Parisan Review* 67, pp. 550~567.
Doerfel, Marya L.(1998), "What Constitutes Semantic Network Analysis?: A Comparison of Research and Methodologies", *Connections* 21(2), pp. 16~26.
Sasada, Hironori(2014), 『일본 발전국가의 기원과 진화』, 한울아카데미.
Shklar, Judith N.(1989), "The Liberalism of Fear", *Liberalism and the Moral Life*, edited by Nancy L. Rosenblum, Harvard University Press, pp. 21~38.
Skinner, Quentin(2012), 『역사를 읽는 방법: 텍스트를 어떻게 읽고 해석

할 것인가』, 황정아·김용수 옮김, 돌베개.
Vierhaus, Rudolf(2014), 『자유주의: 코젤렉의 개념사 사전 7』, 라인하르트 코젤렉·오토 브루너·베르너 콘체 엮음, 공진성 옮김, 푸른역사.
Weiler, Peter(1982), *The New Liberalism: Liberal Social Theory in Great Britain, 1989~1914*, Garland Publishing, Inc.
Wisseman, Nicholas(2004), "Falsely Accused: Cold War Liberalism Reassessed", *The Historian* 66, no. 2, pp. 320~334.

Abstract

A Critical Analysis on the Liberal Discourse in Korea, 1945~1970

- focused on *Sasanggye* -

Choi, Min Seok
Department of Sociolog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focused on the distinct characteristic of the liberal discourse in Korea. Intellectuals who cherished liberalism protested against authoritarian rule and claimed fair distribution by state intervention at the same time. This characteristic could not be shown from the classic liberalism that regarded a state as a necessary evil. In the history of Western liberalism, 'liberty' was considered to be oppressed by states at first, by poverty in the early 20th century, and by communism after outbreak of Cold War. However, in Korea an authoritarian state, poverty and communism altogether threatened liberty just after the liberation from Japanese rule. A strong state was needed to fight poverty and communism. Korean intellectuals who favored liberalism desired to harmonize an impartial strong state with individual liberty and welfare. They thought that social liberalism(new liberalism) which originated from Britain would

correspond to their idea.

Social liberalism was accepted by some intellectuals in Japanese ruling period, but it could not has any real meaning in colonized Korea. But later on, it would be a realistic blueprint after Korean liberation. Especially, intellectuals who refused both capitalism and communism perceived social liberalism as an idea which compromise the Left and the Right, in other words, North Korea and South Korea. This project failed but social liberalism continued after Korean War.

Intellectual discourse about social liberalism could be found on academic magazine *Sasanggye* which was published from 1952 to 1970. Writing articles for *Sasanggye*, they prioritized mutual interdependency of individual and community, and affirmed only valuable freedom that accorded with 'veritas'. They regarded themselves as prophets and enlighteners for the public.

In 1950s, an economic system was the most important issue of the liberal discourse in *Sasanggye.* Based on social liberalism, arguments claiming restriction on economic freedom continued. But some intellectuals asserted that economic freedom should be enlarged for economic efficiency and reduction of state power. These conflicting opinions gradually converged in late 1950s when intellectuals sought ways to improve Korean economic structure for modernization. They concluded that a state plan was needed for the construction of more efficient economy. The state plan oriented to fight poverty was justified also by social liberalism and welfare state theory. In Korea, as an underdeveloped country, the role of welfare state was defined as rather development than redistribution.

However, as successful gross development caused inequality, intellectuals claimed that the state should guarantee existence right of the people. Intellectuals who resisted Park Chung Hee demanded the intervention of a moral state. It was social liberalism that

affected intellectuals asking a moral state. They took a strong state for granted but criticized Park's brutal morality.

However, *Sasanggye* coterie tried to mobilize masses to achieve a turnover of political power. Liberal democracy was the criteria in the discourse of mobilization and criticism. Defiant intellectuals thought that an authoritarian ruler, Park must be removed for the restoration of liberal democracy. On the other hand, liberal democracy was needed for mass mobilization. There was an ambiguous consensus about what liberal democracy really meant, but it was regarded as the most urgent objective. Resisting Park's long-term seizure of power, intellectuals regarded a political turnover as equivalent as liberal democracy.

After *Sasanggye* intellectuals diabolized Park's government, mobilization and participation for a political turnover was justified in religious mood. Yet, they had conviction that modern states should take massive roles for the integration of the nation and the welfare of individuals. Conscience and morality of the ruler mattered. They thought that the stronger the state was, the freer the individuals, under the moral government control. The nature of a state depended on the character of a ruler. Intellectuals had an aspiration for a strong state and a political turnover at the same time. That is the reason that *Sasanggye* coterie were absorbed in mass mobilization and indifferent to the intensity of state power.

keywords : *Sasanggye*, social liberalism, economic liberty, liberal democracy, Rhee Syngman, Park Chung Hee, cold war liberalism, developmentalism

Student Number : 2011-30054